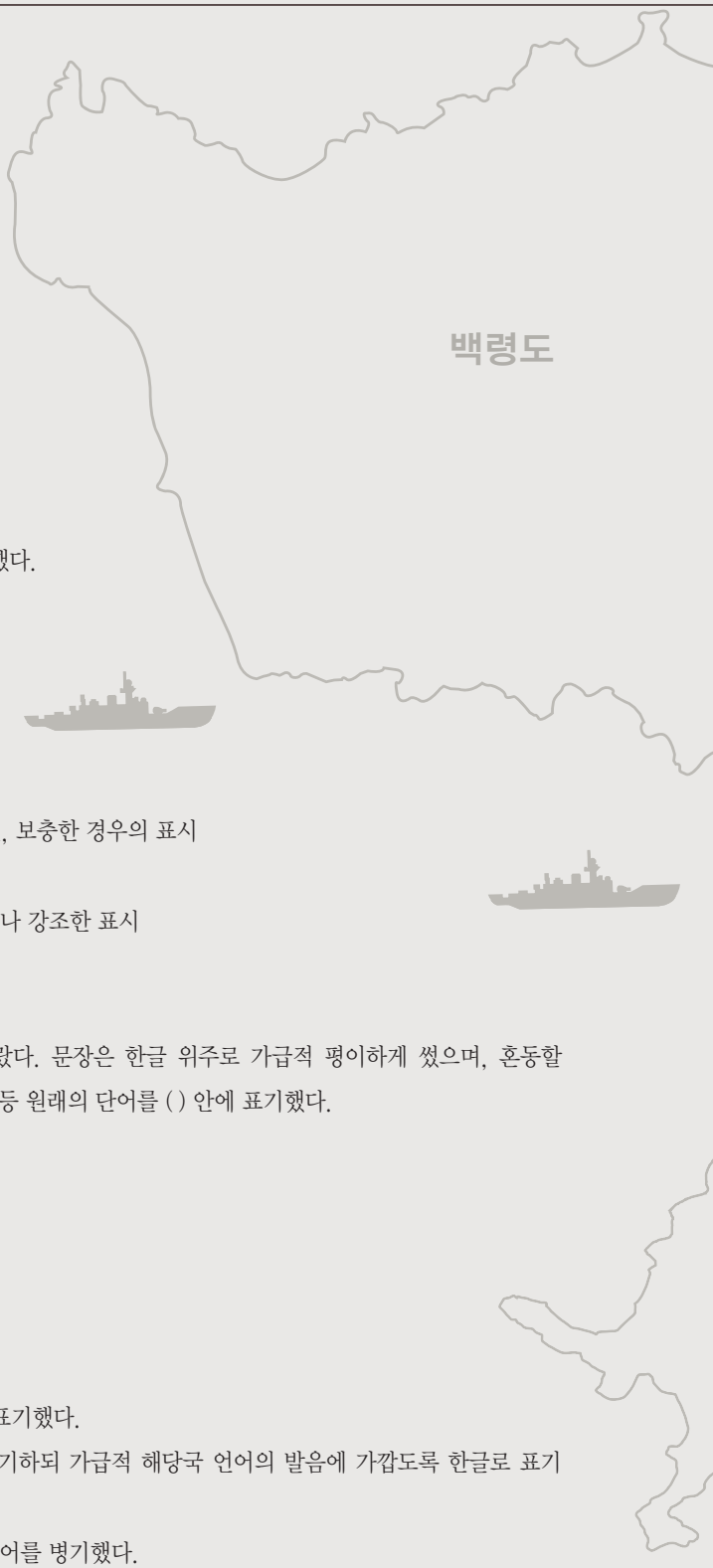
#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 정부




#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 · 절 · 항 · 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했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가, 나, 다, ……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 · 지명 · 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한 표시

   「 」 : 법령, 합의서, 특별조치 등 표시

   『 』 : 서명이나 신문매체 등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4. 일부 용어는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1) 천안함 피격사건 : 피격사건에 중점을 둔 표현

   (2) 천안함 사태 : 포괄적 의미로 사용

   (3) 「5 · 24조치」 : 5월 24일 발표된 대북조치

   (4) 민 · 군 합동조사단 : 합동조사단(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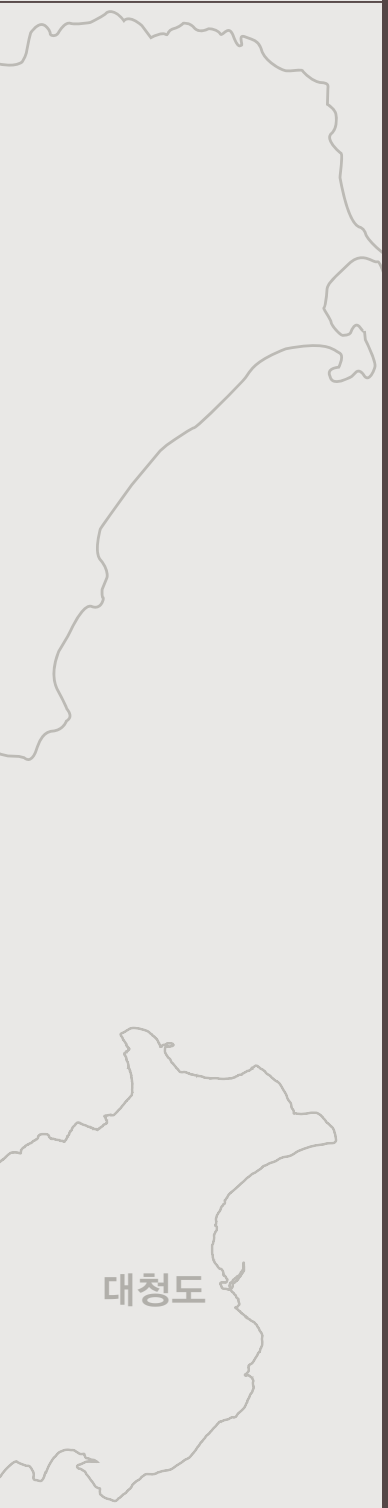
   (5) UN안전보장이사회 : UN안보리(병기)

5. 외국의 인명 · 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 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6.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 목 차

Contents

## 제 1 장
## 머리말

**머리말** 12

## 제 2 장
## 사건 발생과 초기 대응

**제1절 국내외 일반정세** 18
1. 한반도 주변정세
2. 남북관계

**제2절 서북해역의 작전환경 및 군사상황** 24
1. 백령도 해역환경 분석
2. 북한군 위협
3. 우리 군의 전력과 대비태세
4. 천안함의 제원 및 임무

**제3절 천안함 피격** 36
1. 사건 발생과 경과
2. 피격 시각과 위치

**제4절 초기 대응** 41
1. 상황보고 및 전파
2. 대북경계 조치 및 미상물체 추적
3. 생존자 구조
4. 대통령실 및 국방부 조치
5. 감사원 직무감찰 및 국방부 조치
6. 시사점

# 제3장
# 사후 조치 및 원인 규명

59


**제1절 탐색구조 및 인양작전** 60

1. 탐색구조작전
2. 함체인양작전
3.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
4. 시사점

**제2절 희생자 예우 및 보상** 96

1. 희생자 서훈 및 장례
2. 유가족 지원 및 보상
3. 희생자 추모사업
4. 시사점

**제3절 생존장병 관리** 112

1. 사건발생 후 조치
2. 시사점

**제4절 사건원인 조사** 115

1. 조사단 편성 및 활동
2. 침몰요인별 가능성 분석
3. 비접촉 어뢰 폭발 판단 근거
4.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 활동
5. 시사점

# 제 4 장
# 정부의 대응

147


**제1절 정부의 대응기조 및 조치** 148

1. 대응기조와 원칙
2. 정부의 조치

**제2절 국가안보태세 점검** 159

1. 국가안보기구 보강
2.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과 운영
3.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재편과 운영
3. 군사대비능력 강화

**제3절 대북조치와 북한의 반응** 165

1. 남북교류협력 중단
2. 대북 군사조치
3. 북한의 반응 및 정부의 대처

**제4절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 174

1.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전
2.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3. UN안보리 회부 이후
4. UN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이후

## 제5장 국민과의 소통 노력

191

**제1절 언론 공보** 192

1. 언론 및 공보 환경
2. 공보활동
3. 언론관련 조치
4. 언론보도 분석
5. 시사점

**제2절 국회 활동** 208

1. 국회 국방위원회
2. 국회 본회의
3.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4. 기타 활동
5. 시사점

**제3절 국민 설명** 221

1. 대국민 담화
2. 온라인 소통
3. 정책설명회
4. 시사점


## 제6장 맺음말

239

**맺음말** 240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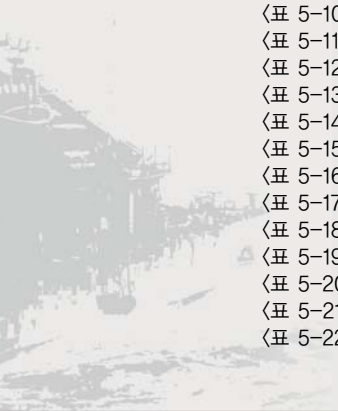
【부록 1】 천안함 제원 및 주요부 명칭
【부록 2】 천안함 전사 · 산화자 명단
【부록 3】 천안함 피격사건 상황일지
【부록 4】 정부 담화문 및 국제기구 성명서
【부록 5】 희생자 추모활동
【부록 6】 민 ·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문
【부록 7】 주요 의혹과 사실관계
【부록 8】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한의 언론보도
【부록 9】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주변 4국의 언론보도

## 그림 목차

〈그림 2-1〉 북한의 10대 강경조치 ····· 22
〈그림 2-2〉 백령도와 북한의 군사도발 ····· 25
〈그림 2-3〉 백령도 인근의 해저지형 ····· 27
〈그림 2-4〉 포 종류별 사정거리 ····· 28
〈그림 2-5〉 인천 해양경찰서의 경비구역 및 함정배치 현황 ····· 33
〈그림 2-6〉 피격 및 침몰 위치 ····· 39
〈그림 2-7〉 상황보고 전파도 ····· 42
〈그림 2-8〉 작전상황도 ····· 44
〈그림 2-9〉 속초함 사격상황 ····· 46
〈그림 2-10〉 현장 인명구조 상황도 ····· 49
〈그림 3-1〉 기름띠 추적 · 휴대용 음파탐지기를 이용한 탐색 ····· 62
〈그림 3-2〉 탐색 구역 ····· 63
〈그림 3-3〉 세분화된 탐색구역 ····· 64
〈그림 3-4〉 스쿠버잠수 구조작전 절차 및 단계 ····· 65
〈그림 3-5〉 함미 · 함수 침몰상태 ····· 69
〈그림 3-6〉 실종자 유실방지용 그물망 설치 ····· 70
〈그림 3-7〉 함미 안전지대 이동 경과 ····· 73
〈그림 3-8〉 함미 인양체인 결박 ····· 74
〈그림 3-9〉 함미 내 시신 수습 위치도 ····· 76
〈그림 3-10〉 함미 침몰해역 · 함수 표류구간 정밀탐색 구역 ····· 78
〈그림 3-11〉 해미래 이용 해저 탐사 ····· 79
〈그림 3-12〉 함수 인양체인 결박 ····· 80
〈그림 3-13〉 천안함의 구조 및 탄종별 탑재 위치 ····· 83
〈그림 3-14〉 방제구역 및 영향해역 ····· 84
〈그림 3-15〉 잔해물 탐색구역 ····· 86
〈그림 3-16〉 형망어선 이용 잔해물 수거 작업도 및 채택된 증거물 ····· 88
〈그림 3-17〉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작업도 ····· 89
〈그림 3-18〉 쌍끌이 저인망어선 운용구역 ····· 89
〈그림 3-19〉 쌍끌이 저인망어선 작업구간 ····· 92
〈그림 3-20〉 기뢰의 종류 ····· 128
〈그림 3-21〉 조류속도와 계류기뢰 ····· 128
〈그림 3-22〉 육상조종기뢰(MK-6) 형상 및 제원 ····· 130
〈그림 3-23〉 삼각대에 설치된 육상조종기뢰(MK-6) ····· 130
〈그림 3-24〉 일반적인 어뢰의 구성 ····· 130
〈그림 3-25〉 폭발 가능위치 ····· 137
〈그림 3-26〉 충격파 및 버블효과 ····· 138
〈그림 3-27〉 CHT-02D 어뢰 설계도와 증거물 크기 비교 ····· 139
〈그림 3-28〉 북한 잠수함(정) 외해 침투 시 예상 침투로 및 조류 속도 ····· 141

# 표 목차

〈표 2-1〉 천안함 침몰 경과 ····· 37
〈표 2-2〉 천안함 피격 시각 추정 근거 ····· 39
〈표 2-3〉 초기 인명구조 상황 ····· 48
〈표 2-4〉 국방부 · 합참 통합위기관리반(TF) 편성 ····· 53
〈표 3-1〉 탐색구조 · 인양작전 단계 및 참가전력 ····· 60
〈표 3-2〉 백령도 해역의 기상 및 조류 ····· 61
〈표 3-3〉 일자별 수작업 횟수 및 증거물 수거 · 채택 결과 ····· 91
〈표 3-4〉 분향소 · 추모관 운용 및 조문인원 현황 ····· 101
〈표 3-5〉 천안함 46용사의 국민적 애도와 관련된 기록물 현황 ····· 104
〈표 3-6〉 연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 ····· 108
〈표 3-7〉 생존자 현황 ····· 112
〈표 3-8〉 생존장병 안정화프로그램 편성 ····· 113
〈표 3-10〉 민 · 군 합동조사단 편성 ····· 116
〈표 3-11〉 침몰요인 ····· 122
〈표 3-12〉 함체 초음파 검사 결과 ····· 124
〈표 3-13〉 어뢰의 탐지방식과 특성 ····· 131
〈표 3-14〉 채택된 증거물 감정 현황 ····· 134
〈표 3-15〉 사건 당일 감지된 지진파 및 음파 측정 결과 ····· 135
〈표 3-16〉 미국팀의 천안함 폭발 유형판단 실험 결과 ····· 136
〈표 3-17〉 사건 당일 조류 및 조위도 ····· 140
〈표 3-18〉 CHT-02D 실물사진 및 제원 ····· 141
〈표 4-1〉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 151
〈표 4-2〉 대통령실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 ····· 152
〈표 4-3〉 천안함 사태 관련 부처·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주요 협조사례 ····· 154
〈표 4-4〉 천안함 사태 후 개선된 국가위기상황 시 보고체계 ····· 160
〈표 4-5〉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 내용 ····· 162
〈표 4-6〉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현황 ····· 166
〈표 4-7〉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 168
〈표 5-1〉 제대별 군 공보조직과 임무 ····· 193
〈표 5-2〉 언론관련조치 회의체 현황 ····· 204
〈표 5-7〉 국방부 보고 및 국방위원회 질의 내용 ····· 209
〈표 5-8〉 국방위원회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210
〈표 5-9〉 국회 본회의 질의 의원 및 내용 ····· 212
〈표 5-10〉 본회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213
〈표 5-11〉 합동조사단 현안 보고 및 특별위원회 질의 내용 ····· 216
〈표 5-12〉 특별위원회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217
〈표 5-13〉 각 당 지도부 설명 현황 ····· 218
〈표 5-14〉 국회의원 군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 지원 현황 ····· 219
〈표 5-15〉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정부의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 ····· 223
〈표 5-16〉 찾아가는 홍보전략 ····· 224
〈표 5-17〉 다음 아고라에 대한 국방부의 주요 대응 현황 ····· 225
〈표 5-18〉 '동고동락' 주요 게재 현황 ····· 227
〈표 5-19〉 '군화신꼬' 주요 게재 현황 ····· 228
〈표 5-20〉 '열혈국방' 주요 게재 현황 ····· 229
〈표 5-21〉 천안함 피격사건 정책설명회 주요 현황 ····· 234
〈표 5-22〉 대상별 안보 투어 프로그램 ····· 235



백령도

제 1 장

# 머리말

# 머리말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 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천안함(초계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다.

천안함 피격 직후, 해군 제2함대사령관은 서풍-I[1]을 발령하여 서북 해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해군은 적 공격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우발사태에 대비한 초동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양경찰 함정과 관공선의 협조 하에 본격적인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했다.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해군은 침몰 시 함수(艦首)와 함미(艦尾)로 분리된 천안함의 함체탐색과 생존자 구출을 위하여 탐색구조작전을 실시했다. 3월 28일 22:31에 함미의 침몰위치를, 3월 29일 01:31에 함수의 침몰위치를 각각 확인했으나 추가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없었다. 구조작전 도중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수중폭파팀) 요원 1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인명구조를 종결하고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했다. 4월 15일 함미가, 이어 4월 25일에 함수가 인양되어 제2함대사령부로 각각 이송되었다.

---

1) 서북 해역 및 도서에서 적 도발 시 발령하는 경계태세 1급에 해당하는 상황조치다. 이에는 위기조치반의 소집을 비롯하여 해군작전사령부 전력의 제2함대 증원과 서북 해역 전투초계전력을 증강하는 단계적 조치가 수반된다.

정부는 사건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학적 증거와 국제 공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4월 26일부터 민·군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함체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실시했다. 5월 15일에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용한 잔해물 수거작업을 통해 알루미늄 조각, 가스터빈 외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북한군의 잠수함 능력과 폭발지역에서 수거한 물품 등이 북한제 어뢰와 합치된다는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 의 정보분석과도 일치된 결과였다. 9월 10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를 발간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외교·통일·국방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안보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한부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현존하는 적의 위협능력에 대한 군사대비능력을 제고시켰다.

이후 정부는 G8 정상회담 등 3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비롯한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외교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6월 4일 '천안함 사태' 의 해결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그 결과 UN안보리에서는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 하고,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깊은 우려' 와 동시에 '사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어 '천안함46용사'

로 명명하고 전사 처리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생존자에게는 재활과 안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정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은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주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귀중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국가안보상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지혜와 제반 역량을 모아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와 안전' 을 위한 국가안보태세를 견실히 다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백령도

제 2 장

# 사건 발생과 초기 대응

제1절_국내외 일반정세
제2절_서북해역의 작전환경 및 군사상황
제3절_천안함 피격
제4절_초기 대응

# 제 1 절 | 국내외 일반정세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국내외의 안보환경은 미·중 갈등의 가시화, 북핵 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정세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후계자세습체제 구축과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요인을 막기 위해 연이은 대남 강경노선을 취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 1. 한반도 주변정세

천안함 사태 이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통의 이해에 따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미국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도 대외정책에서 일방주의 보다는 동맹국 및 우방과의 대화를 강조하여 갈등 대신에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국·중국 간에 전략·경제대화가 2009년 7월 처음 열렸고,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협정을 추진했으며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중단하는 등 '관계 재설정' 노력을 진행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과의 갈등도 생겨나게 되었다. 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국의 구글(Google)

사 해킹,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주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또한 중국은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지속하여 그들의 경제적 생존 기반을 제공해 왔으며,[2]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외교적 고립도 완화시켜 주었다.

일본에서는 2009년 8월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정권이 '대등한 미·일 관계'의 기치를 내세워 미일동맹의 변화를 추구했다.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신방위조약에 서명한 이래, 미일동맹은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안보의 기축으로 건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으로 양국의 동맹관계가 이완되고 있었다.

제1차 미 · 중전략경제대화 대표단(2009. 7)

이러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핵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핵 보유를 통해 김정일 체제는 물론 후계체제를 유지하거나 생존의 안전판으로 삼고자 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 및 체제 보장이라는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미국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다자회담을 통해 해

2) 북한의 대외 무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3%(2005)에서 73%(2008)로 확대되어 왔으며, 대북 투자도 자원 개발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하려 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체인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北京)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답보를 거듭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국' 을 선언하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2007년 「2·13합의」 와 「10·3합의」 에 따라 2008년 6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가 이루어지고,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 으로부터 해제를 발표하여 일시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미국과 양자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데 이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을 강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은 2009년 4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합의,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3] 재검토회의를 통한 핵 비확산체제 강화 등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었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었다.



## 2.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하여 한반도에 비핵·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시켜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3000」 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고 개성에서 근무하는 우리 기관인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인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4월부터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강경대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 「비핵·개방·3000」 폐기 등을 전제조건으로

3)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UN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정식 비준했고, 북한은 1985년 12월 가입했다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지만,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다. 그후 2003년 1월 북한은 핵개발문제로 재차 탈퇴를 선언했다.

내세우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북한의 강경태도는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진상조사 등 우리 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한층 수위를 높여 전개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조치와 도발행동을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후계세습 구축과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요인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10월부터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위협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단,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상주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9년 들어서도 북한은 '전면대결태세 진입',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빌미로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3회(3. 9, 13~15, 20)에 걸쳐 차단했다. 또한 북한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를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136일 동안(3. 30~8. 13) 강제로 억류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고조와 강경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급기야 2009년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조치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또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09년 하반기부터 이전과는 다른 대남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를 우리 측으로 인도하고,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의 특사조의단 파견을 비롯하여 적십자 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우리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에 부분적으로 호응해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근본적인 것이 아닌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와의 상호존중의 관계 정립보다는, 과거 방식의 남북관계로 복원하기를 기도한 것으로써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전술적인 변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4]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이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수행하던 우리 함정에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대청해전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여 우리 함정과 어선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림 2-1〉 북한의 10대 강경조치

2010년 들어 북한 군부의 군사적 위협과 강경조치들은 보다 강화되었다. 1월 15일 국방위원회는 우리 언론이 보도한 북한 내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시비로 "남조선 본거지를 날려버리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을 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월 25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5]

4)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동해 및 서해에 설정한 경계선이다.
5) 키 리졸브는 1976년에 시작된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다. 2002년부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 대해 핵 억제력 등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김정일은 대청해전 후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 16일에는 서해상 지·해·공군 합동화력시범훈련에 참관하여 실전적인 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 이어서 북한군은 제4군단 예하 포병 및 해안포를 동원하여 1월 27일부터 3일간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300~400여 발을 발사했다.

한편 북한은 3월부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주장하면서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합의·계약 파기 및 부동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끝내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부동산을 동결·몰수하는 등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

이렇듯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 아래 북한은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금번 천안함 도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이 지속적으로 취해 온 강경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2 절 | 서북해역의 작전환경 및 군사상황

북한은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을 해 오고 있다. 우리 군은 해군 제2함대와 이 해역에 배치된 해병대를 주축으로 통합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군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왔다. 대청해전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역을 경계하고 있었다.

## 1. 백령도 해역환경 분석

### 가. 백령도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km, 북한의 장산곶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다. 백령도는 원래 황해도 장연군에 속해 있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경기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후 남북 간에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래 20년간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서해 5도 주변수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도발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침범과 적대행위로 인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 해상교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수십 년에 걸쳐 피로써 지켜온 우리의 영토이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군은 이를 변함없이 확고하게 수호해 오고 있다.

〈그림 2-2〉 백령도와 북한의 군사도발

Tip

## NLL의 설정 배경과 의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협정」은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 양측간의 영해에 대한 입장차이로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설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Mark W. Clark)은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 동·서해에서 우리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3해리 영해를 고려하여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와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위치상 38도선 이남으로 6·25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기간은 물론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도 우리측이 관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반도 주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엔군과 한국군 해·공군력의 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NLL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1973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인정·준수해 왔다. 그러나 1973년 북방한계선을 대규모로 침범한 소위 '서해사태'를 일으킨 이후 북한은 "유엔군측이 서해 5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그 주변수역은 북한의 연해, 관할수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편으로는 제1,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서해 5도 주변수역을 자기측 영해라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무력도발과 억지 주장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다. 향후 정전체제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남북 간에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은 존중·준수되어야 한다.

## 나. 해역 분석

2010년 3~4월의 백령도 해역의 기상은 예년과 달리 저온과 함께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는 등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3월 24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백령도 해상의 기상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였다. 시베리아 부근의 대륙성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이날 12:00를 기하여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오전까지 전 해상에 강풍(북서~북동풍 25~35노트)과 함께 3~4m의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는 기상통보 제14호가 발표되었다.

3월 25일은 서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제17호가, 백령도 기지에 강풍주의보 제30호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해를 경비 중이던 함정들이 피항(避港)했다.

- 풍랑주의보 제17호 : 서해 전 해상, 3월 25일 12:00 ~ 26일 06:00
- 강풍주의보 제30호 : 서해 5도, 3월 25일 19:10 ~ 26일 06:00

사건 발생일인 3월 26일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였으나, 해상은 전일 발표된 풍랑주의보 영향으로 야간까지 파도가 높게 일었다.[6] 야간에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20~25노트로 불었고 파고는 2~2.5m이었으며 월광은 78%였다.

백령도 연안해역의 평균 수심은 44m이며, 천안함 작전해역의 최저 수심은 8.6m이다. 천안함 피격 위치와 함미 침몰 위치의 수심은 47m이고, 함수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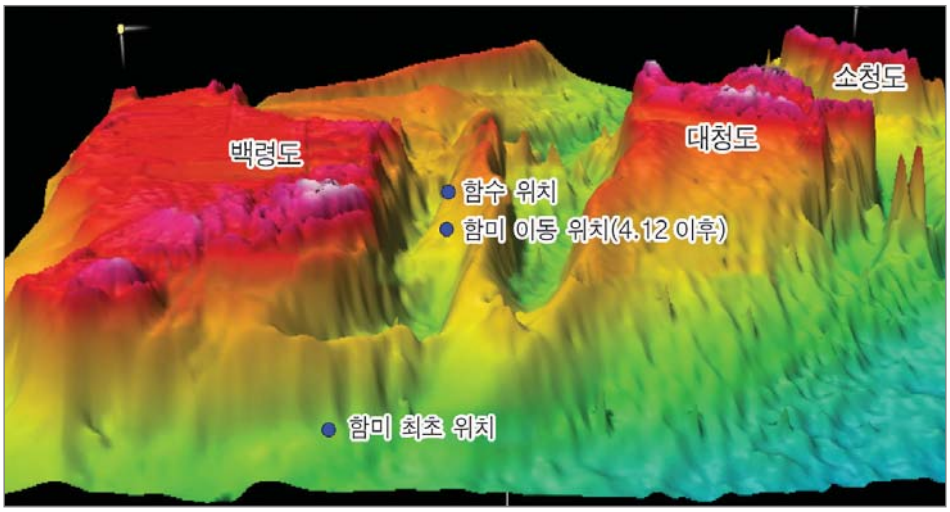
천안함 침몰 해역에는 게통발, 폐어망, 암반 등의 수중 장애물이 있다.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백령도 인근 해역의 수심 17~34m에 인공어초[7]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해역의 수심이 최대 4~5m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해군 탐색구조단 및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의 탐색 결과, 이들 장애물은 최소 17m 이상의 해저에 위치하고 있어 천안함의 흘수(2.88m) 고려 시 항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며, 특히 천안함 기동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백령도 해역의 저질(底質)은 대부분 모래질 펄로 형성되어 있어 물이 탁하며, 수중

6) 백령도 어선들은 3월 26일 오전 일시적 기상호전으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오후부터는 출항이 통제되었다.
7) 인공어초는 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공어초는 바다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투입하여 어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 해역에서 그물을 끌게 되면 그물이 찢어지게 된다.

가시거리가 30cm 미만이어서 수중 물체의 육안식별이 제한된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는 70여m의 해저골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 유속이 강하다.

〈그림 2-3〉 백령도 인근의 해저지형 (출처 : 한국해양연구원)




조류는 일반적으로 해안선에 평행하여 밀물은 북향, 썰물은 남향으로 흐르고 유속은 평균 3~5노트, 최고 5.3노트(최저유속 0.3노트)이다. 조석(潮汐)은 1일 2회 약 6시간 간격으로 밀물과 썰물이 교대로 발생한다. 조석 간만의 차이는 조금 시에 0.3m, 사리 시에 최대 4m이나 조금과 사리 사이의 유속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8] 천안함 침몰 당시(3. 26. 21:22 경)는 조금 기간의 저조시기로 조위(潮位)[9]는 0.7m이고, 유속은 남동 2.89노트였다.

당시 백령도 인근 해역의 작전환경이 피아 해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파고와 강풍을 동반한 기상은 수상 및 상륙함정의 작전을 제한시키지만, 잠수함(정) 활동은 파고 및 강풍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백령도 연안 가까이에는 일부 수중 장애물이 있었으나 수상함정의 안전 기동에는 제한을 주지 않는다.

8) 조금은 조석 간만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를, 사리는 가장 클 때를 말한다.
9) 조석현상으로 변화하는 해면의 높이

셋째, 큰 조석 간만의 차이, 빠른 조류, 탁한 물로 인한 수중 시계의 제한 등은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에 영향을 주지만 극복 불가능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아군의 대잠탐지 및 수중활동을 제한한다.

넷째, 조류속도는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운용 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기뢰부설 시에는 정밀부설을 위해 저속운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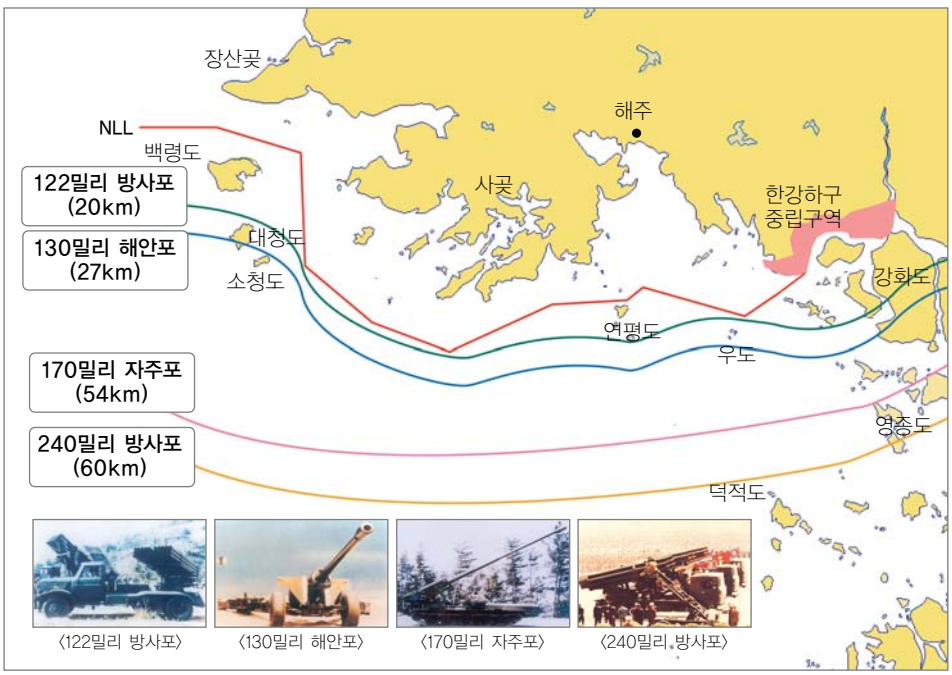
## 2. 북한군 위협

서북해역에서 우리 군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한 전력은 제4군단의 포병전력, 서해함대사령부의 전투함정 및 지대함유도탄, 그리고 공군 제3비행사단의 전투기 및 지대공유도탄이다.

북한 지상군은 제4군단의 장사정포, 방사포, 해안포 등이 우리 서북도서와 해군 함정에 대해 기습적인 포격도발이 가능하다. 포 종류별 사정거리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포 종류별 사정거리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 함대사령부가 편성되어 있다. 남포에 있는 서해 함대사령부는 수개의 전대 예하에 잠수함(정)을 포함한 수십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해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서북도서와 해군 함정에 대해 공격이 가능한 황해도 해안 일대에 실크웜(Silkworm)을 포함한 다수의 지대함유도탄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다수의 소형함정과 잠수함(정)으로 해상교통로 차단, 대함공격, 특수전부대 침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함정의 노후도가 심하고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투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통해 우리 함정과의 직접적인 대결에서의 전력 차이를 인식하고, 잠수함(정) 등 은밀하고 기동성을 갖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 해군은 로미오급, 상어급을 포함한 중·소형 잠수함과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등을 운용하고 있다.[10]

로미오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연어급 잠수정

기상이 좋은 상태에서 북한의 잠수함(정)이 기지에 정박하거나 해상에 부상하여 활동할 경우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이용하여 북한 잠수함(정)의 활동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안개·해무·구름이 짙게 끼거나 북한 잠수함(정)이 수중으로 기동하면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이탈이 확인되어도 기상이 불량하거나 수중으로 잠항 시는 실시간 추적이 제한된다.

북한 해군은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直走)어뢰, 음향 및 항적추적어뢰 등 다양한 종류의 어뢰를

10) 한·미 군사정보 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정)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잠수함(정) 크기에 따라 '로미오급'(R class), '상어급'(Sang-O class), '연어급'(Yono class)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버블제트 효과'[11]를 노리는 근접신관을 사용하는 어뢰를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어뢰의 속도는 30노트 이상으로 백령도 해역의 유속(최대 5.3노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MIG-21 전투기

서북해역에서 상황 발생 시 북한 공군은 우리 서북도서에 대한 직접공격 또는 북한군 지상 및 해상전력에 대한 지원전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백령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근접해 있어 북한군 항공기가 공중으로 은밀하게 기습공격을 해 올 경우 우리 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백령도에서 북한의 최 근접 기지까지의 거리가 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작전환경 측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우리보다 북한의 육지에 더 근접해 있는 서북해역은 북한군의 지상화력과 해 · 공군 전력의 운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우리 서북도서 및 해역에서 작전 중인 경비함정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군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은 과거 세 차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우리 함정과의 교전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으며, 2010년 들어 특정 도서지역에 대한 합동화력훈련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지 · 해 · 공군 합동훈련을 통해 합동전력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북해역에서 교전이 발생할 경우 합동전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 3. 우리 군의 전력과 대비태세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 등 서북 5개 도서는 북한의 위협을 조기 경보하는 전초기지이며 전시 공세적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

11) 버블제트 효과(Bubble Jet Effect)란 기뢰나 어뢰 등의 폭발 시 생기는 가스 버블(거품)이 팽창→수축→재 팽창→붕괴→제트충격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체(船體)를 부러뜨리고 물기둥을 수면 위로 분출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4절 3항 참조

다. 이 지역을 방어하는 우리 군의 주요 부대는 해군 제2함대 · 제6해병여단 · 연평부대이며 이들 부대와 공군전력, 해양경찰이 통합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 제2함대의 임무는 관할해역을 방어하고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 해중 및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함대의 주요 전력은 전투함, 해상작전헬기(LYNX), 지대함유도탄(하푼) 등이다.

초계함

LYNX 헬기

P-3C 해상초계기

호위함 · 초계함 · 고속정 등이 서북해역에 대한 해상 경계임무를 수행하며, 4~6월 및 9~11월 꽃게 조업기간과 경계 취약시기에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일부 함정이 증강된다. 해상작전헬기와 해상초계기(P-3C)는 조기경보, 대수상함 및 대잠수함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대함유도탄은 적 함정의 해상도발 시 종심타격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해군의 대잠능력은 1980년대 초계함(PCC) · 호위함(FF) · 구축함(DDH)[12] 등이 도입되고, 1990년대 기동성이 우수한 해상작전헬기(LYNX), 광 해역을 탐색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선배열 예인소나체계[13]를 탑재한 구축함(DDH) 등이 운용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수상함을 이용한 대잠수함작전은 그 특성상 북한 잠수함과 접촉하기 이전에 먼저 탐지될 가능성이 높고, 잠수함의 잠항 시는 탐지가 어려우므로 작전수행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한 대잠수함작전은 서북해역의 작전종심이 짧고 북한 연안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작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북한 전투기의 위협으로 제한이 따른다.

12) 초계함(PCC : Patrol Combat Corvette)은 연안경계 및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배수량 1,000톤 내외의 군함이고,
호위함(FF : Frigate)은 선박이나 선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1,500~3,000톤급 군함이며,
구축함(DDH : Destroyer Helicopter)은 대함 · 대잠 · 방공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3,000~8,000톤급 군함이다

13) 선배열 예인소나체계(TASS : Towed array SONAR System)란 수상함 등에서 음향탐지기가 달린 케이블을 수중에 넣고 예인하는 방식으로 수중표적을 탐지하는 장비로 장거리 표적탐색에 주로 사용된다.

제6해병여단과 연평부대의 임무는 서북 5개 도서(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들 부대는 평시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해상작전 시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평시 경계를 위해 제6해병여단과 연평부대는 해안 감시레이더, 열영상관측장비(TOD)[14], 영상감시장비 등의 감시 및 탐지장비와 해안포, K-9자주포 및 대포병레이더, 방공무기 등의 타격전력을 통합운용하고 있다.

TOD

K-9 자주포

AN/TPQ-37 대포병레이더

공군은 우리의 영공방위를 위해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북 해역 및 도서에 대한 적의 공중도발에 대비하여 공대함 타격전력, 공대지 타격전력, 조명기, 헬기 탐색구조전력이 비상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는 북한군의 동계작전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방공비상대기 전력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F-15K 전투기

CN-235 조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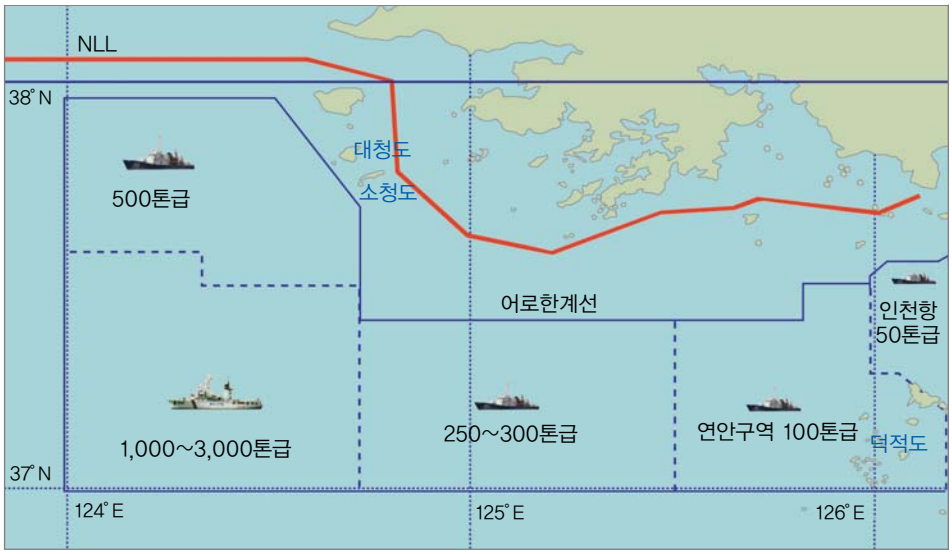
HH-47 탐색구조헬기

인천 해양경찰서의 임무는 서북해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 관리,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제 등이다. 이를 위해 경비함정을 해역별 특성에 맞게 톤급별로 배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공선이 어업지도 및 단속, 조업어선 통제와 보호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4) 열영상관측장비(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 물체가 가진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 물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로 감시·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동·식물은 물론 각종 물체까지도 식별이 가능한 장비이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해양 경비함정들은 사건 현장과 약 23.3㎞ 떨어진 대청도 근해에서 500톤급(501함)이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1,000톤급(1002함)이 소청도 서남방에서 경비임무를, 250톤급 1척이 덕적도 서방의 어장을 보호하는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었다.

〈그림 2-5〉 인천 해양경찰서의 경비구역 및 함정배치 현황




우리 군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의 보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대청해전 이후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및 제2함대사령부에서는 북한군의 해안포사격, 무월광(無月光) 취약시기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경계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경계강화 기간이 장기화되자 합참에서는 북한군의 특이활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부대운용과 경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2월 18일 경계강화를 해제했다. 그 이후 북한선박의 미식별 첩보와 해상 기상불량에 따른 제2함대사령부 차원의 경계강화 지시는 수차례 하달되었다.

대청해전 이후 합참은 북한군의 도발양상 대응과 관련한 전술토의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1월 하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해안포 및 장사정포 사격을 가해 오자, 우리 군은 북한군의 해안포 · 장사정포 · 지대함유도탄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군의 잠수함(정)에 대한 대비태세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 또한 당시 “북한군의 모선 및 잠수정 일부가 기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합참으로부터 전파되었으나,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평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서북해역의 경비전력은 백령도 근해에 천안함이,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해역에 호위함 및 초계함이 경비임무와 조업어선들의 어로 통제 · 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대청도 고속정 기지에는 고속정 편대가 긴급출동 대기 중이었다. 그리고  해양경찰함과 관공선이 외해와 근해에서 어업지도 및 단속, 조업어선 통제 ·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4. 천안함의 제원 및 임무

천안함은 1988년 건조된 1,200톤급 초계함(PCC)으로 전장 88m, 전폭 10m이고, 최고속력 32노트, 항속거리 4,000NM(7,400km)이며, 디젤과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했다. 그리고 대함미사일, 함포, 폭뢰, 어뢰, 음파탐지기 등으로 무장했다.[15]

천안함(PCC-772)

15) 천안함의 제원 및 주요부 명칭은 부록 1 참조

피격 당일 천안함은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의 수상 물체와 잠수함(정), 북한군 유도탄 및 해안포, 항공기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상적인 해상경비와 어로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안함은 3월 25일 발효된 서해 풍랑주의보로 25일 14:00부터 26일 06:00까지 작전해역을 이탈해 대청도 동남방으로 피항했다. 기상이 호전되자 26일 06:00경 기동을 시작하여 08:30경 작전해역에 복귀, 정상적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20:00에 당직 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에 임하였으며 기타 인원은 휴식 및 정비 중이었다.

천안함은 북한군의 감시 및 타격수단으로부터 차폐를 제공해 주는 백령도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령도에 근접하여 작전기동 중이었다. 함장은 부임 후 서북해역에서 총 16회에 걸쳐 출동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해역의 작전환경에 익숙한 상태였다.

# 제 3 절 | 천안함 피격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피격되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채 침몰됐다. 사건 초기에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기초로 한 언론브리핑과 보도로 인해 천안함 피격 시각과 위치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정확한 피격 시각과 위치가 밝혀지게 되었다.

## 1. 사건 발생과 경과

천안함(PCC-772)은 북서쪽으로 6.7노트 속도로 기동하면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 26일 21:22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피격되었다.

천안함 침몰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함체는 폭발과 함께 두 동강으로 절단되었고 함미가 먼저 침몰되었다.[16] 정전과 동시에 함체 일부 격실에 기름과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되었다.

침몰 당시 승조원 104명 가운데 야간 당직근무자 29명이 함교 등에 위치하여 정상근무 중이었고, 함장과 기관장 등 비근무자는 평상 근무복이나 간편복 차림으로 각자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하고 있었다.

16) 2010년 4월 7일 공개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기록에는 3월 26일 21:24:18부터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천안함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좌측 후미에서 꽝! 꽈~아앙!(1~2초간)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cm~1m 정도 떴다가 우측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천암함 함장(해군 중령 최원일)은 "당시 폭발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채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승조원의 도움으로 21:30경 탈출하여 외부 좌현 갑판으로 나왔으며, 이때 내기장[17]이 '함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 보고했다. 함미 쪽을 확인하니 연돌 이후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약한 기름 냄새가 났다. 승조원이 모여 있는 함수 부분이 우현으로 90도 기울어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

함미는 폭발 후 5분여 동안 목격되었으나 함장이 갑판으로 나올 때 이미 침몰했기 때문에 부표(浮標)[18] 설치 등의 조치를 미처 하지 못했다. 22:15에 인천 해양경찰-501함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함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표 2-1〉 천안함 침몰 경과

| 일 | 시 | 내 용 |
|---|---|---|
| 3. 26 | 21:22 | 천안함, 백령도 서남방에서 피격 |
| | 21:24 | 21:24:18부터 함수와 함미 분리 |
| | 21:28 | 함미 완전 침몰 |
| | 21:58 | 해군 고속정 3척 현장 도착, 인명구조 시작 |
| | 23:13 | 해양경찰-501함 등에 의해 승조원 58명 구조(천안함에서 이함) |
| 3. 27 | 13:37 | 함수 완전 침몰 |

해양경찰-501함에서 내려진 고속단정이 천안함에 접근할 때 천안함 함수는 오른쪽으로 90도로 기울어 약 2/3가 침수되었고, 장병들은 좌현 포대 및 조타실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3월 26일 23:13경 승조원 58명이 최종적으로 천안함에서 구조된 후, 천안함은 침몰 속도가 빨라져 23:50경에는 함정번호인 '772' 가 보이는 함수 부분만 수면상 5~7m 가량 보이는 상태로 조류에 의해 동남쪽으로 표류하면서 침몰해가고 있었다. 3월 27일 02:25경 해양경찰-501함이 천안함 침몰지역 부근에 부표를 설치했다. 함수가 완전히 침몰된 시각은 27일 13:37으로 추정되었다.

17) 가스터빈실 담당부사관
18)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

## 2. 피격 시각과 위치

천안함이 피격된 시각은 2010년 3월 26일 21:22경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초로 발표한 천안함의 피격 시각은 3월 26일 21:45이었다. 27일 00:23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 이기식)이 "26일 21:45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아(我) 함정의 선저가 원인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에 있어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언론에 최초 브리핑했다.

이처럼 합참은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유선전화로 보고받은 시간인 21:45을 피격 시각으로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회 보고 및 언론 발표 시에는 3월 27일 10:00에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서면으로 정정보고한 21:30을 기준으로 했다. 그 후 다시 25분, 22분으로 정정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키웠다. 피격 시각에 대한 혼선은 사건 초기 급박한 상황 하에서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그대로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피격 시각에 대한 수정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 3월 27일 03:22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의 지진파 감지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를 받은 후, 27일 06:30 합참에 동 지진파 자료를 보냈다. 하지만 합참은 피격 시각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지진파 자료를 접수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불과 9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지진파 발생 '시각 추정'의 의미보다는 단지 '폭발사고' 자체를 확인해 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고, 예하부대에서 보고한 시간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다.

그 후 피격 시각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을 때 합참은 지진파 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참고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지진파 자료가 피격 시각을 확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고 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합동조사단은 4월 1일 TOD 화면 전체 분량을 공개하면서 21:22경으로 정정했고, 4월 7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격 시각이 21시 21분 57초로 최종 확인되었다.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근거는 표 2-2와 같다.

사건 당시의 TOD 동영상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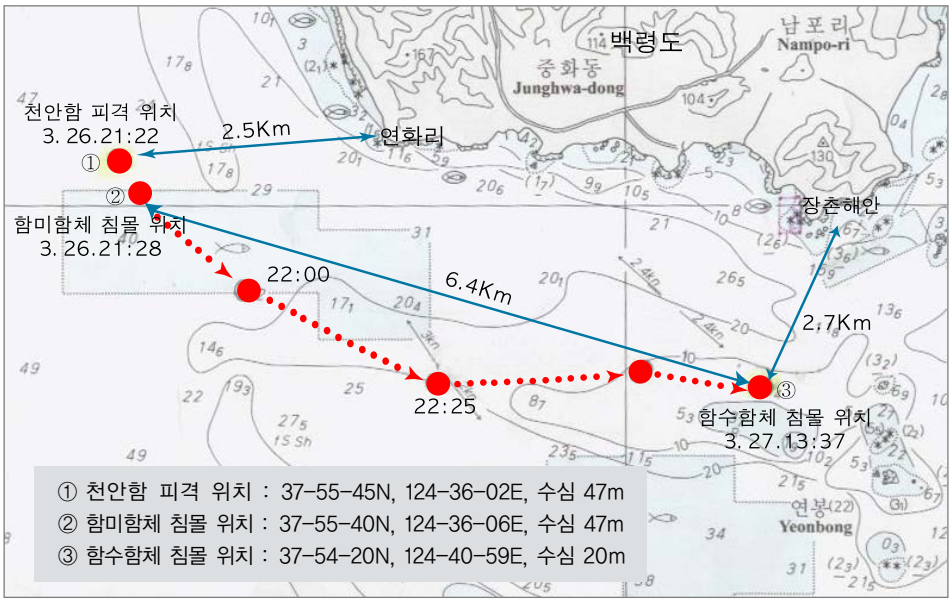
〈표 2-2〉 천안함 피격 시각 추정 근거

① 해안 초소 TOD에 녹화된 시각 – 21:23경
②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19]상의 천안함 발신신호 중단 시각 – 21:21:57
③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의 지진파 감지 시각 – 21:21:58
④ 천안함의 마지막 국제상선망 교신 시간 – 21:19:30~21:20:03
⑤ 백령도 초병의 관측(폭 20~30m, 높이 100m의 흰색 섬광불빛) 시각 – 21:23
⑥ 천안함 승조원(상병)의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 시각 – 21:21:47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피격되었다. 피격 후 완전히 분리된 함미와 함수는 약 6.4km 떨어진 위치에서 각각 완전 침몰되었다.

피격 위치는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으로만 발표되었으나, 4월 7일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상 천안함이 자신의 위치 송신을 중단한 21:21:57 위치로 백령도 서남방 2.5km(37-55-45N, 124-36-02E)로 발표되었다.[20] 어뢰가 폭발하며 발생하는 폭음과 섬광으로 인해 백령도 해안 초병들이 이를 주목하게 되었으며, 당시 비록 야간이었지만 일부 관측이 가능했다.

〈그림 2-6〉 피격 및 침몰 위치




19) 한국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20) 전술지휘통제체계의 전시화면에서 천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시각은 21:25:03이며, 이 때 천안함은 피격 시(21:21:57)보다 650m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격 시각과 위치에 대한 논란의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천안함으로부터의 위치 송신이 중단된 이후에도 동일한 침로 · 속력으로 실제보다 약 3분간 더 기동한 것처럼 전시되는 전술지휘통제체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3월 29일 천안함 함미는 사건 발생지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함수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함미 침몰지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4km 떠밀려와 완전히 침몰했다.

침몰된 함미 부분은 4개의 수밀구역[21]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함미 부분의 40%를 차지하는 디젤기관실이 폭발과 동시에 침수됨에 따라 급격히 침몰되었다. 그러나 분리된 함수는 7개 수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함미에 비해 침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1) 선박이 파괴되어 침수될 때 일부분만 침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침수되지 않도록 내부를 여러 개의 격벽으로 갈라 막은 구역

# 제 4 절 | 초기 대응



피격 이후 상황보고 및 전파, 제2함대사령부 · 합참 등의 초기 대응조치,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된 미상물체에 대한 추적 과정, 생존자 구조, 청와대 · 국방부 등의 조치 경과를 차례로 정리했다.

## 1. 상황보고 및 전파

피격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은 상황보고 · 생존자 구조 · 대북 경계조치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3월 26일 21:22경 피격된 후 천안함으로부터 제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보고된 시각은 21:28이었다. 피격 당시 승조원들은 폭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폭발과 동시에 함정의 전원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린 천안함 포술장은 21:28 휴대전화로 제2함대사령부 상황장교에게 "좌초, 폭발음이 났고 침몰 중이다. 구조가 필요하다"는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2함대사령부 상황반장은 대청도에 있던 고속정 편대에 긴급출항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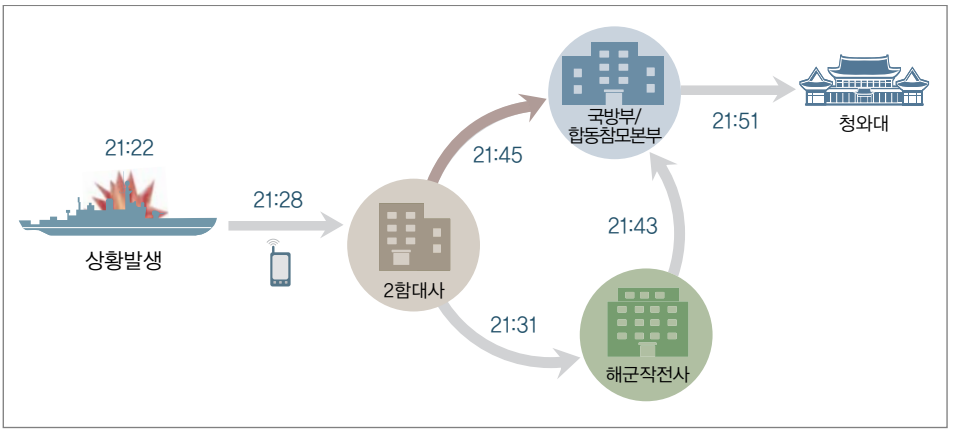
제6해병여단 방공포 제33진지에서 26일 21:15경 큰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하자 여단 지휘통제실에서 방송망을 이용하여 전 부대에 확인한 결과 다른 초소에서는 청취한 사실이 없어, 이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소음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차후 판명되었다. 그러나 해안 제6소초에서 21:23경 TOD로 천안함을 관측하였고 동 시간대에 해안 제247초소의 초병이 높이 100m의 하얀 섬광을

2~3초 간 관측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해작사·합참 등으로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침몰상황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21:31에, 합동참모본부에는 21:45에 보고했다. 해작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합참에 21:43에 보고했다.

21:50경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해군 대령)은 합참 해상작전과 담당장교로부터 휴대전화로 '천안함 침수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했다. 21:51경 청와대 위기상황센터(공군 중령)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육군 중령)에 천안함 상황을 문의하자 합참에서 청와대에 정식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소요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에는 22:05에 통보되었다.

〈그림 2-7〉 상황보고 전파도(3. 26)




또한 어뢰에 의한 피격 여부는 초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천안함 통신장과 레이더기지 무선병이 26일 21:51~52 침몰 사유에 대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고 교신했고, 21:53 이를 문자정보망을 통해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했다. 22:32~42 동안 천안함 함장과 제22전대장이 통화하면서 "어뢰에 맞은 것 같다"는 내용을 확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적 잠수함정의 실체와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제한되었던 까닭에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격상황은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청와대 등에 적시에 보고되지 못했다. 더욱이 피격상황 및 원인 추정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으며 유관기관 사이에도 상황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2. 대북경계 조치 및 미상물체 추적

### 가. 아군의 초기 대응조치

초동조치 기간은 천안함이 피격된 시점부터 속초함의 미확인 물체에 대한 격파사격 등을 포함한 대잠탐색과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구조될 때까지이다.

#### 1) 제2함대사령부 및 해 · 공군작전사령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침몰원인은 불확실했지만 인명 구조와 더불어 대북 경계조치 및 북한의 공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제2함대사령부는 3월 26일 21:28 천안함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먼저 21:30 대청도에 전개 중인 고속정 2개 편대에 구조지시를 내리고, 21:31 속초함에도 백령도 서방으로 신속히 기동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어서 인천해양경찰서에 구조지원을 요청했다. 21:45에는 서북해역 및 도서지역에 적 도발 시 가장 강도 높은 경계태세인 '서풍-I'을 발령했고, 21:53 공군작전사령부에도 구조전력을 요청했다. 21:57에는 적 도주로 차단 및 탐색작전을 위해 '대잠경계태세 A'를 발령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천안함 폭발음 청취와 함체가 손상되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적 수중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속초함만으로는 대잠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 중이던 왕건함을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제2함대사령부에 경비함으로 하여금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대한 대잠 탐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속초함과 뒤를 이어 출동한 청주함을 각각 북방한계선 인근과 대청도 하단에 배치하여 적 도주로 차단, 대잠탐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개된 함정들은 27일 08:00까지 대잠탐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수중물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잠상황을 고려하여 소나(SONAR)가 장착된 링스(LYNX) 헬기와 해상초계기(P-3C)의 출격을 지시했다. 링스 헬기는 기지에서 26일 22:20 출발하여 23:20 현장에 도착했고, 해상초계기 1대는 26일 23:07 기지를 이

륙하여 23:50경 현장에 도착하여 백령도 서방해역의 대잠경계를 강화했다. 제6해병여단은 26일 21:57 K-9 자주포 및 발칸 포대 등 모든 작전요소를 비상 대기시켰다.

한편 공군작전사령부는 26일 21:53 해군 연락장교를 통해 "해군 함정 한 척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밑에 구멍이 생겨 좌초 중이므로 함정 승조원 구조를 위해 공군 탐색구조 전력을 긴급 출동시켜 줄 것"을 요청받았다. 같은 시각에 합참으로부터 '서풍-I' 발령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군작전사령부는 즉시 북한의 공중 상황을 확인했으나 활동 중인 항적이 단 한 대도 없었고 그 징후도 없었다. 해상에서도 특이한 상황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해군 연락장교를 통해 북한과의 교전이나 별다른 활동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림 2-8〉 작전상황도(3. 26~27)

공군작전사령부는 해군의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 및 조명기를 지원하기 위해 탐색구조헬기(HH-47, 60) 2대와 조명기를 출동시켰다. 또한 북한의 공중도발에 대비하

고, 해군 링스 헬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KF-16 2대를 26일 22:43에 출동시켰다. 이어 27일 00:15에는 F-15K 2대를 출격시켰다.

### 2) 합동참모본부

합참 지휘통제실 해군 상황장교는 26일 21:43~44에 해군작전사령부 상황반장으로부터 "천안함 선체 파손으로 침수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제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현 시각(21:45) 천안함 선체 파손으로 침수 중이며 서풍-I 발령"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합참 상황팀장 및 상황장교들은 사전에 지정된 각 작전사령부와 전파대상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했으며 22:05에는 긴급조치조 17명을 소집했다. 그런데 이상의 합동참모의장에게는 지휘통제반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22:11에 뒤늦게 보고했다.

각 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의 '서풍-I' 발령에 따라 서북해역 우발상황 대비지침에 의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합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22:30 유선회의를 통해 당시 상황이 '연합위기'를 선포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주관으로 위기관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양 작전참모부장은 공조회의를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22:42 합참 지휘통제실로 복귀한 합참의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연합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을 비롯해 공군작전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협조하여 가용한 공군헬기를 해군작전사령부로 작전통제할 것, 침몰원인 분석을 위한 전력 및 전문인력을 사전에 준비하여 날이 밝아오는 대로 즉각 투입할 것 등을 지시했다.

23:10 합참의장은 해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가 참가한 통합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인명구조작전에 가용한 전력을 통합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가용한 정보자산을 즉각 투입할 것과 탐색구조작전을 위한 작전지침을 구체화하여 하달할 것 등을 지시했다.

27일 01:36 합참은 적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강화지시」를 팩스를 이용해 각 작전사령부에 하달했으며 03:30 재차 전파했다.

## 나. 속초함의 미상물체 추적작전

천안함 침몰 남방해역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속초함은 3월 26일 21:31 제2함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백령도 서방으로 전속력으로 기동하여 22:40 천안함 침몰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천안함 침몰로 해상 및 대잠경계태세가 A급으로 격상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22:55 속초함은 사격통제레이더 상에 백령도 북방으로부터 시속 약 40노트(74km)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탐지했다. 속초함에는 대공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탐색레이더로 해상표적 및 저고도 공중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다.

속초함 함장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북상하는 미식별 접촉물이 천안함을 공격하고 난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적 함정으로 판단하여 제2함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76밀리 함포 2발을 경고사격한 후, 23:00부터 23:05까지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그림 2-9〉 속초함 사격상황

당시 속초함은 표적까지의 거리가 9.3km임을 고려하여 유효사거리가 12km인 76밀리 함포로 135발을 발사했다. 23:11 미식별 고속접촉물이 장산곶 육상에서 소실됨에 따라 속초함의 추적 작전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레이더 상에서 함정과 새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미확인 물체가 과연 북한

의 반잠수정인지 혹은 새떼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잠수정이나 새떼 모두 레이더 상에서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동 속도 역시 시속 70~80km로 함정과 비슷해 분간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속초함장은 미확인 물체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정확한 식별보다는 이를 제압 및 격파하기 위한 사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상황종료 후 속초함과 제2함대사령부는 레이더 상에 포착된 '미식별 표적'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떼로 판단했다.[22] ① 소실된 표적의 속도가 40노트 이상이었다는 점과 당시 파고 2.5m의 기상 상태에서 북한 공작모선이나 반잠수정은 고속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②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되었고 수시로 속도가 달라졌던 점, ③ 전자광학추적장비(EOTS)로 확인한 결과 잠수함(정) 등이 고속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이 식별되지 않고 분산된 점 형태를 띠었던 점, ④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곳이 장산곶 육상이었던 점 등이다.

## 3. 생존자 구조

생존자 확인 및 구조를 위한 조치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해군 고속정과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 등에 의해 구조되었다.

제2함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고속정 편대와 속초함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21:32 제2함대사령부에서 구조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501함과 해양경찰-1002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고속정 편대와 함께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전을 실시했다. 또한 제2함대사 연락장교는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인천-214호와 인천-227호 선장에게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 중이니 구조하는 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최원일)은 구조함이 오기 전까지 작전관에게 함 내부에 갇힌 승조원 구출을 지시하고 부장에게 인원 파악과 구조함 접근 시 함에서 내릴 수 있는 곳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해군 고속정에서 1명을 구조했다. 이후 1시간 18분 동안 어업지도선에서 2명, 해양경찰 함정에서 55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22) 과거 제2함대 해역에서 2009년 11회, 2010년 사건 발생 이전까지 4회의 새떼 접촉상황이 발생했다. 새떼는 불빛과 큰 소리에 의해 흩어지지만, 76밀리 비예광탄 사격은 새떼가 흩어질 정도의 위협이 되지 못했다.

제2함대사령부의 출동 지시를 받은 고속정 제235편대(참수리-322, 339, 359)와 제233편대(참수리-323, 352)는 즉시 출항하여 21:58, 22:10에 각각 현장에 도착했다. 참수리-322정에서는 천안함 함수 부분을 3인치 홋줄[23]로 묶었다. 천안함 작전관이 22:20 고속정의 인명구조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수리-322정으로 뛰어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참수리-322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에 고속정에 의한 인명구조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해양경찰로 하여금 인명구조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월 26일 21:32 제2함대사령부 상황실로부터 긴급지원 요청을 받고, 501함과 1002함을 출동시키면서 이를 해양경찰청에 보고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2:06 천안함 침몰상황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에 보고하고, 청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본청 상황실에서 광역위성 통신망을 통해 해경 함정의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해양경찰-501함은 21:35 18.9노트(약 35㎞)의 최대속력으로 백령도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함장은 사건현장의 파고가 2~3m인 점을 감안하여 501함이 직접 인명구조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으로 기동하면서 고속단정(RIB : Rigid-hulled Inflatable Boat)에 의한 구조작전 준비와 승조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표 2-3〉 초기 인명구조 상황(3. 26) (단위 : 명)

| 시 각 | 구조 사항 | 계(58) |
|---|---|---|
| 22:28 | 해군 고속정, 1명(추락자) 구조 | 1 |
| 22:43 | 501함 1번 단정 1차, 포대 앞에서 12명 구조<br>501함 1번 단정 2차, 포대 뒤에서 7명 구조 | 19 |
| 23:08 | 어업지도선 227호, 2명 구조 | 2 |
| 23:02 | 501함 1번 단정 3차, 포대 뒤에서 12명 구조 | 12 |
| 23:20 | 501함 1번 단정 4차, 구명벌에서 12명 구조 | 12 |
| 23:35 | 501함 1번 단정 5차, 구명벌에서 12명 구조 | 12 |

22:15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501함은 38분부터 고속단정(RIB) 2척을 이용하여 천안함에 접근했다. 1번 고속단정이 함수 제41포대 앞에 모여 있던 승조원 12명을 구조하여 22:43경 501함으로 후송 조치했다. 이어서 포대 뒤의 7명을 구조하여 인근 해군 고속정에 인계했다. 23:08경 어업지도선 인천-227호가 2명을 구조하여 백령

23) 홋줄 : 배를 묶을 수 있는 밧줄.

도 용기포항으로 이송했다.

23:02경 1번 고속단정이 포대 뒤편에 있던 12명을 구조하여 해양경찰-501함에 이송시켰고, 함체가 거의 침몰직전 상태에서 구명벌[24]에 남아 있던 24명도 23:20~35에 12명씩 나누어 구조함으로써 58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완료했다. 이들 가운데 함장, 부장, 작전관, 전투정보관 등은 해양경찰-501함에서 23:50 참수리-322정으로 옮겨 탄 후 구조자와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2함대사에 보고하고, 3월 27일 06:00까지 천안함 침몰해역 부근의 수색작전에 참여했다.

〈그림 2-10〉 현장 인명구조 상황도

한편 해양경찰이 구조한 55명 중 현장에서 고속정에 인계했던 7명을 제외한 48명 가운데 출혈환자와 목부상 환자는 해양경찰-501함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중상자들은 헬기편으로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외에 나머지 승조원은 성남함에 탑승하여 3월 27일 13:10 평택항에 도착했다.

24) 구명벌 : 팽창식 구명 뗏목(life raft).

해군 고속정에 인계되는 생존장병

Tip

**천안함 대원들은 서로 살리려 했다!**

침몰된 천안함에서 승조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했다. 해양경찰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천안함의 함미는 이미 바다 속으로 잠겨버렸고, 함수도 오른쪽으로 90° 기울어진 상태에서 반 이상이 가라앉아 있었다.

출입문이 천장에 위치해 있었고 전원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생존 승조원들은 하반신 경련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서 모 하사를 옮기는 등 수색조를 편성해서 함내에 남아있는 인원을 찾아냈다.

일부 승조원들은 포탑 등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 보다 부상당한 동료들을 먼저 구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미에 갇힌 전우들의 희생이 많아 아쉬움이 컸지만, 함수의 침수율이 9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살리려 애써, 58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

## 4. 대통령실 및 국방부 조치

### 가. 청와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국방비서관실은 즉시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했다. 동시에 위기상황센터로부터도 보고를 받은 외교안보수석은 21:51

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 받고 외교안보수석에게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22:10경 대통령실장이 위기상황센터 상황실에서 상황 파악을 하는 중에 대통령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사건발생 개요, 생존자 및 실종자 현황, 구조전력 등을 최초로 보고받았다. 이후 외교안보수석, 국무총리실장,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상황실에 도착하여 제1차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합참의장은 상황 지휘를 위해 국방부에 대기했다.

제1차 외교안보장관회의는 피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26일 23:30경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인원구조 현황 및 실종자 구조를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했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였으나, 사건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은 날이 밝은 후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07:30에 2차 회의를 위기상황센터에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3월 27일 03:22 위기상황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피격 발생시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 '3월 26일 21:22경, 백령도 지역에 대한 지진파 탐지 · 분석 자료'를 보고 받았다. 위기상황센터 근무자는 지진파 탐지 · 분석 자료를 위기상황팀장에게 보고하고, 06:30경 합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합참 지휘통제실에 팩스로 보냈다.

제2차 외교안보장관회의는 3월 27일 07:30에 열렸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 통일부 ·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 합참의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 정무 · 홍보수석 등 관련 비서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원인파악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정당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에 사건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각 기관장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 나. 국방부

국방부는 평시 위기관리를 위해 국방정책실 요원을 합참 지휘통제실에 위치시켜 일일 국내 · 외 정세 및 군사상황을 확인하여 국방정책실 주요 직위자 및 위기관리요원에게 전파 ·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책상황 당직을 운용하고 있다.

3월 26일 국방부 정책상황당직근무자는 21:50경 천안함 침몰 상황을 최초 인지하여 21:55경 국방위기관리 담당장교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파한 후, 22:07경에는 국방정책실장 · 정책기획관 등 11명에게 "21:45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아군 초계함 파공침수. 구조활동 진행 중. 북한 특이동향 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최초 상황을 보고 및 전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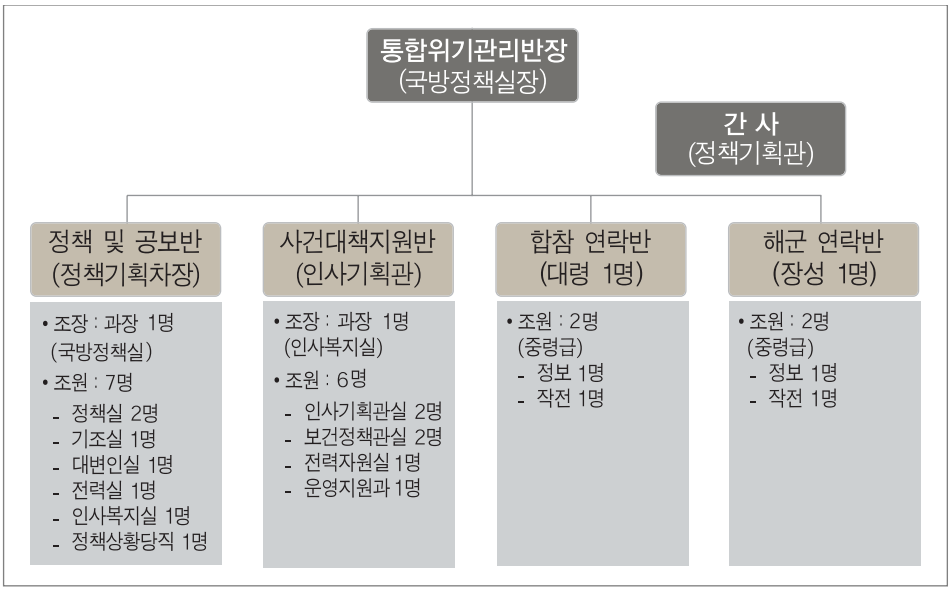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2:14경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천안함 침몰 관련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상황조치 과정에서 장관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장관은 22:25경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승조원 구조를 위해 구조함 투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후, 23:3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초 상황을 보고했다.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당시 국방부 위기관리기구는 22:30경부터 국방부 위기관리 담당과장이자 긴급대응 요원인 방위정책과장과 위기관리 필수요원들이 최초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전파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실장급과 합참 본부장 이상으로 편성된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05:40경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장관 주관으로 개최되어 천안함 침몰 및 승조원 구조작전 상황을 평가하고 국방부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후 4월 30일까지 운영된 위기관리위원회는 '초계함 침몰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1일 1~2회씩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방안을 강구했다. 이 상황평가회의는 기상 및 북한군 동향(합참), 현장 지원사항 보고에 이어 토의 및 훈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월 28일부터 국방부 위기관리기구는 〈표 2-4〉와 같이 '국방부 · 합참 통합위기관리반(TF)'으로 편성되어 4월 4일까지 운영되었다.

〈표 2-4〉 국방부 · 합참 통합위기관리반(TF) 편성




'통합위기관리반(TF)'은 1일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하면서 초계함 침몰 관련 국내 · 외 제반 동향과 관련 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요소의 노력을 통합 · 조정 ·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장관이 주관한 '초계함 침몰 관련 상황평가회의'에 주요 조치, 향후 상황관리 등을 보고했다.

이와 같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초기 초동조치로부터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원인 규명 조사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탐색구조작전 및 함체 인양, 희생자 예우 및 보상, 사건 원인 조사, 언론공보 조치를 수행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 5. 감사원 직무감찰 및 국방부 조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군의 상황보고 지연, 사건 발생시각 번복 등 초기 대처과정에서의 혼선으로 군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4월 20일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함 침몰 이후 합참, 해작사 등 관련 부대가 수행한 지휘보고 및 초동조치를 포함한 군 대응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감사요원 29명을 투입하여 휴일 없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당초 5월 19일까지 계획되었으나, 추가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장하여 감사인원 10명이 투입되어 실시되었다.

감사는 청와대의 국가위기상황센터,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해양경찰, 해작사 및 관련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사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상황보고 · 전파,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대응 조치와 구조활동, 그리고 자체조사 및 언론대응 등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자료 은폐 의혹 등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다만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었으므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투준비태세 · 상황보고 및 전파 · 위기대응 조치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는 2회에 걸쳐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장성인사 반영 등 적시성이 필요한 사항은 6월 9일에, 제도개선사항 및 구조활동 관련 지적사항은 8월 20일 국방부에 통보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 25명에 대하여 직접 징계요구를 하는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인사법」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동료애와 사명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탐색 · 구조임무를 수행한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팀(UDT)과 해난구조대(SSU)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황보고 및 전파 부실로,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그리고 합참에서는 제2함대사로부터 사건 당일 21:45경 천안함 침몰 상황을 보고 받고도 합참의장에게 22:11, 국방부장관에게 22:14에야 보고하는 등 보고가 지연되었으며, 이후 보고과정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폭발음 청취' 등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긴급상황의 최초보고를 구두로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긴급상황 보고 ·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위기대응 조치 부실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여야 하는데도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였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위기조치기구의 요원들이 응소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 응소하는 등 기강이 해이했다.

또한 2008년 이후 긴급 상황은 해군관련 상황이 대부분인데도 합참의 위기대응 담당 지휘관이 육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해군관련 상황 대처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고 지휘통제반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상황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 과정이 '태만 · 허위 · 조작 · 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와 절차, 규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 대상자 25명 중 전 합참의장 등 2명을 6월 말~7월 초 전역조치하였고, 6월 23일 군 장성 인사에서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은 전보 등 인사조치를 했다. 또한 11월 15일 및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제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군작전사령관 ·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 천안함장 등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했다.

## 6. 시사점

### 가. 대비태세

서북해역을 방어하는 주요 부대는 해군 제2함대 · 제6해병여단 · 연평부대이며, 이외에 공군전력과 해양경찰이 통합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의 보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영해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되었다.

대청해전 직후에 열린 합참 전술토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양상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을 통해 우리 함정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어뢰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적 잠수함(정)의 도발양상을 검토한 합참은 2010년 1월 하순 대응지침을 해군작전사령부와 제2함대사령부에 하달했다.

그런데 2010년 2월 18일 합참에서는 "적의 특이한 침투 · 도발 징후가 없다"는 판단 아래 강화된 경계태세를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제2함대사는 서북해역에서 강화된 경계태세 아래 운용되던 함정을 감소시키고 평시 대비태세로 전환했다. 해작사와 제2함대사는 서북해역에서 적 잠수함의 공격 가능성을 상정한 추가적인 전력증강, 기동속도의 증가, 함정 운용구역의 확대 등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기존 해상전 위주의 작전 방식을 유지했다. 즉 대청해전 이후 적의 주된 위협이 유도탄과 해안포로 판단되었으므로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초계함 등을 추가로 운용하거나 해상초계기의 초계범위를 북쪽으로 확대하는 등 대잠능력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격 직전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의 공격 징후에 대한 대비태세도 소홀했다. 2010년 3월 23일부터 30일 간 북한 해군 제11전대의 상어급 잠수함, 연어급 잠수정, 예비모선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에 제2함대사령부 정보실에서는 모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 및 예비모선 수 척이 미식별 되었다는 정보를 발령했다.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출입항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지하고 미식별 상황에 따른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 미흡과 이에 따른 대비 소홀로 경계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피격되었다.

## 나. 초동조치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하여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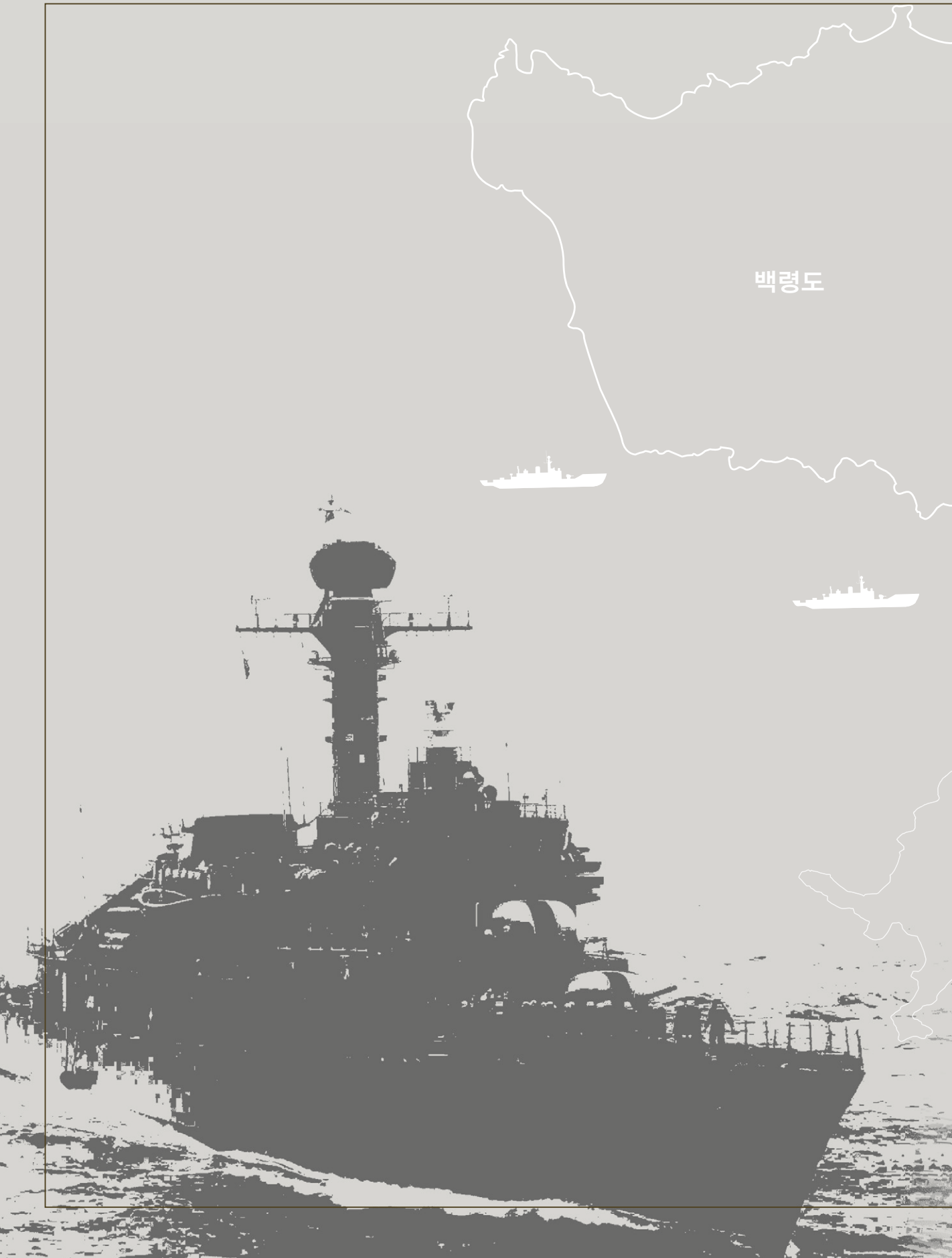
첫째,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 천안함과 제2함대사령부에서는 최초보고 시 발생 원인을 누

락했고, 보고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데 23분이 걸렸다.

둘째, 피격 직후 우리 군의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했다. 합참은 긴급조치조를 즉각 소집했으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은 1시간 경과 후 소집됨으로써 초기대응 및 위기조치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되어 초동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국방부 통합위기관리반도 국방부 관련부서 및 합참 등을 장악하여 위기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침몰원인이 단순 침몰사고인지 아니면 북한군 공격에 의한 것인지 판단에 혼선이 있었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나머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의 초기 작전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보전략의 부재는 해명에 급급한 언론대응 방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생존자 구조나 침투한 잠수정 추적 등 군사작전을 전개하는데 필수 요소인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최초보고로 혼선을 야기했으며, TOD 영상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탐지 분석자료 등이 충분히 공유되거나 활용되지 못했다.

넷째, 초기 인명 구조단계에서 구조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생존자 58명 가운데 55명을 구조했고, 구조된 승조원에 대한 응급조치도 적시에 실시했다. 천안함 장병들도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전우에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양보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긴급한 상황을 벗어났다. 그러나 당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함정은 고속단정(RIB)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를 구조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해군에서는 해양경찰에 요청하여 27일 02:25경 침몰하는 함수 위치에 부표를 설치했으나 빠른 조류에 의해 부표가 유실되어 이후의 인명구조 작전에 차질을 초래했다.


백령도

제 3 장

# 사후 조치 및 원인 규명

제1절_탐색구조 및 인양작전
제2절_희생자 예우 및 보상
제3절_생존장병 관리
제4절_사건원인 조사

# 제 1 절 | 탐색구조 및 인양작전

천안함 침몰 이후 긴박하게 전개된 탐색구조 및 함체인양작전은 국민 모두의 염원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각종 조치사항이 강구되면서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표 3-1〉과 같이 3단계로 수행되었다.

〈표 3-1〉 탐색구조 · 인양작전 단계 및 참가전력

| 단계 | 탐색구조작전 | 함체인양작전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 |
|---|---|---|---|
| 기간 | 3. 27~4. 3(8일간) | 4. 4~4. 25(22일간) | 4. 26~5. 20(25일간) |

| | | |
|---|---|---|
| 참가전력 | 해군 | 해난구조대(SSU) 112명, 수중폭파팀(UDT) 등 83명 |
| | | 광양함 · 평택함, 옹진함 · 양양함 · 김포함 · 고령함, 독도함 등 36척 |
| | | 헬기 등 항공기 11대 |
| | 육군 | 특전사 특수임무대대 33명, 헬기 4대 |
| | 공군 | 헬기 등 항공기 5대 |
| | 미국 해군 | 잠수사 · 폭발물처리반 25명, 샐버함 등 함정 6척 |
| | 정부 기관 | 중앙119구조대 등 11명, 해경함정 등 10척 |
| | 민간 업체 | 인양크레인 · 탑재바지선 각 2척, 작업크레인 · 바지선 각 2척 |
| | 민간 단체 | 한국구조연합회 잠수사 등 37명 |
| | 기타 | 형망어선 · 쌍끌이어선 등 |

## 1. 탐색구조작전

천안함 침몰 이후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한 탐색구조작전은 함수가 침몰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 동안 수행되었다. 탐색구조작전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해상 · 수중탐색에 돌입한 해난구조대(SSU)[25] 및 수중폭파팀(UDT)[26], 구조함(ATS)[27]인 광양함·평택함, 소해함(MSH)[28]인 옹진함 · 양양함을 비롯 해양조사선 이어도호와 미군의 구조함 샐버(Salvor)함도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 등의 구조대도 합류했다.

작전은 천안함의 함체가 함수(艦首)와 함미(艦尾)로 분리되어 침몰된 백령도 남쪽과 서남쪽 연안에서 수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궂은 날씨와 수중(水中)의 시계 제한, 빠른 유속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3월 28일 22:31에 함미를 식별한 데 이어 29일 01:31에 함수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30일 UDT의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실신해 후송, 치료 중에 사망하는 추가희생도 있었다. 그럼에도 구조대원들은 적극적인 수중탐색을 계속해 4월 3일 18:07에 함미의 절단면에서 실종자 중 한 명인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

구조작전 경과를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은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면서 "실종자의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해 4월 3일 21:45에 구조작전의 중단을 요청했다. 구조작전 지휘부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을 존중하여 다음날인 4월 4일부터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했다. 탐색구조작전 기간 중 백령도 해역의 기상과 조류의 상황은 〈표 3-2〉와 같다.

〈표 3-2〉 백령도 해역의 기상 및 조류(2010. 3. 27 ~ 4. 3)

| 일자 | 날씨 | 파고 (m) | 수온 (℃) | 유속 (knot) | 정조시간 |
|---|---|---|---|---|---|
| 3. 27(토) | 대체로 맑음 | 2~3 | 3 | 1.4 | 00:30, 06:40, 12:50, 19:10 |
| 3. 28(일) | 대체로 맑음 | 1.5 | 3.9 | 2.8 | 01:20, 07:30, 13:40, 19:50 |
| 3. 29(월) | 대체로 맑음 | 1.5 | 3.9 | 1.3 | 02:00, 08:20, 14:30, 20:30 |
| 3. 30(화) | 대체로 흐림 | 1 | 3.9 | 2.5 | 02:40, 09:00, 15:10, 21:10 |
| 3. 31(수) | 흐리고 비 | 2 | 5.3 | 5.3 | 03:20, 09:40, 15:40, 21:50 |
| 4. 1(목) | 구름 많음 | 2.5 | 4.2 | 1.8 | 04:00, 10:20, 16:20, 22:20 |
| 4. 2(금) | 맑음 | 2 | 4.2 | 4.3 | 04:40, 10:50, 17:00, 23:00 |
| 4. 3(토) | 맑음 | 1.5 | 4.2 | 4.3 | 05:10, 11:30, 17:40, 2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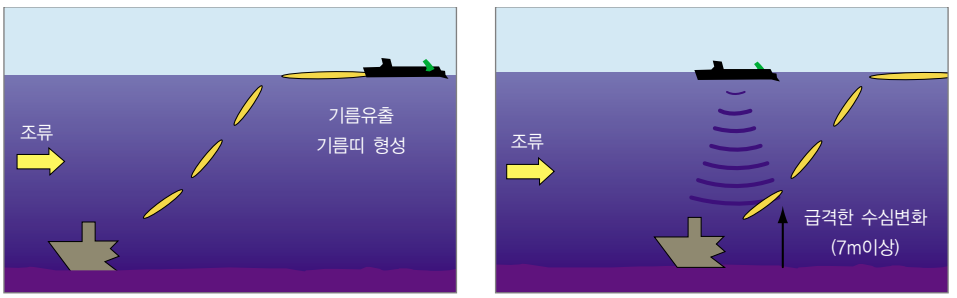
25) 해난구조대(SSU, Ship Salvage Unit) :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해난(海難)구조 목적의 특수 잠수부대

## 가. 함수 · 함미 탐색

침몰된 천안함의 함체를 탐색해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은 해난구조 전담부대인 제55전대 선발대가 3월 27일 오전 10시경 백령도에 도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해난구조대(SSU) 60명과 폭발물처리반(EOD)[29] 8명으로 편성된 선발대의 구조요원들은 백령도 장촌해안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후 사건 현장 해상정찰에 이어 13:30부터 해상 및 수중탐색에 돌입했다.

천안함의 함체는 침몰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초 폭발 시 함체가 함수와 함미로 양분되어 함미 부분은 백령도 서남쪽에서, 함수 부분은 부력(浮力)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백령도 남쪽에서 각각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강한 조류에 의해 침몰된 함체의 위치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함체가 침몰된 해역을 2개 구역으로 설정해 구조작전에 착수했다.

〈그림 3-1〉 기름띠 추적 · 휴대용 음파탐지기를 이용한 탐색




27일(토) 오후 13:30부터 〈그림 3-1〉과 같이 기름띠를 따라 구조요원들의 수중탐색이 시작되었으나 사건해역의 작전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작전해역의 유속은 최대 5노트[30], 수온은 3℃ 정도였으며 수중(水中) 시계는 30㎝ 전방의 물체도 식별이 어려웠다. 특히 1구역으로 설정된 백령도 서남방은 수심 47m, 파도, 너울, 강한 조류 등으로 잠수사의 해저탐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2구역으로 설정된

---

26) 수중폭파팀(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 : 해군에 소속되어 수중폭파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
27) 구조함(ATS, Salvage and Rescue Ship) : 해상에서 조난당한 함정과 승무원을 구조하는 함정
28) 소해함(MSH, Mine Sweeper Hunter) : 항만 · 수로에 대한 기뢰를 탐색해 소해(掃海)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29) 폭발물처리반(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30) 유속 5노트(knots, 이하 kts) : 수중에서 유속에 의한 저항은 공기저항의 약 14배에 해당된다. 따라서 3~4노트 정도의 유속이라면 태풍이 불 때 빌딩의 옥상에서 혼자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 압력으로 인해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 고(故) 한주호 준위가 실신했던 해역의 당시 유속은 그보다도 빠른 5.3노트였다.
31) 사조묘 : 바다 밑 바닥의 물체를 건져 올리기 위한 갈고리를 말한다.
32) 현장지휘소(TAC-CP) : Tactical Command Post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19:00까지 7개조 35명의 잠수사가 3차례의 수중 탐색을 계속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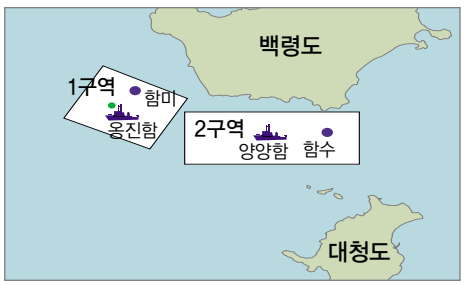
사조묘

28일(일)부터는 증원된 해난구조대와 해군 특수전여단의 수중폭파팀(UDT) · 육군 특전사 구조팀 · 중앙119 구조대 · 한국구조연합회 구조대 등 민 · 관 · 군 잠수요원이 대거 참여했다. 이에 따라 06:51부터 19시까지 교대로 수중탐색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수중폭파팀이 기름띠를 발견한 후 휴대용 수중음파탐지기(SONAR)를 이용해 탐색 및 식별을 계속하는 한편, 사조묘[31]를 예인하면서 탐색활동을 계속했다.

이날(28일) 오후 14:30에는 진해에서 출항한 광양함(구조함)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대의 모함(母艦) 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중탐색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어 성인봉함(LST)이 14:44에 도착해 현장지휘소(TAC-CP)[32] 임무를 시작하고, 다음날인 29일 10:20에는 미군의 구조함(샐버함)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실종자 구조를 위한 연합작전에 돌입했다. 또한 육 · 공군 헬기를 이용해 진해로부터 평택을 경유하여 백령도에 잠수사 60명을 증원했으며, 함수 · 함미 침몰장소에 각각 30명씩 배치했다.

이와 같이 가용전력을 적극 투입해 해상 및 수중 탐색을 계속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종자 대부분이 침몰된 함체 내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중 탐색작전은 침몰된 함수 · 함미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기름띠를 추적하던 수중폭파팀(UDT)이 28일 19:57에 함수를 식별하고 위치부표를 설치했다. 그에 앞서 15:37에 민간어선(해덕호)이 어군탐지기로 함미 침몰예상 구역에서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기뢰탐색함의 무인기뢰처리기로 확인한 결과 오래 전에 침몰되어 조패류가 부착된 미확인 선체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탐색 구역




이어 21:30에 옹진함(소해함)이 현장에 도착해 〈그림 3-2〉와 같이 함미탐색에 착수했으며 22:31경 수중 음파탐지기로 함미를 식별하고 위치부표를 설치했다.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120m 지점이었다.

함수 침몰위치에 설치된 부표(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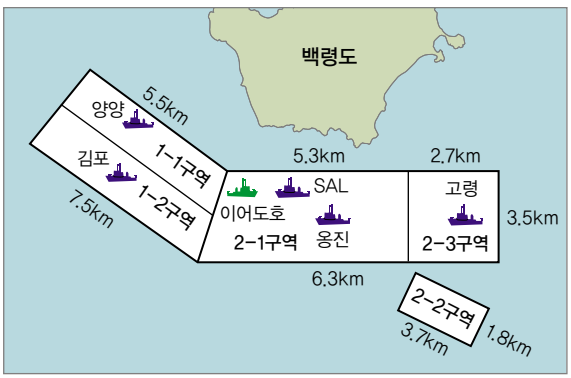
29일(월) 00:43에는 양양함(소해함)이 현장에 도착해 함수탐색을 시작했으며, 01:31에 수중폭파팀이 위치부표를 설치한 지점에서 함수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이와 같이 함수 · 함미 함체가 모두 식별됨에 따라 구조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인명구조작전

천안함의 함미와 함수가 모두 식별된 29일부터는 함체의 침몰위치를 중심으로 인근 해역의 해상 · 수중탐색으로 실종자와 잔해물을 발견하기 위한 구조작전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작전에는 광양함, 평택함, 미군 샐버함 등의 구조함과 해군의 SSU · UDT는 물론 육군특전사 · 중앙119 · 한국구조연합회 구조대 등 민 · 관 · 군 잠수요원이 투입되었다.

〈그림 3-3〉 세분화된 탐색구역




3월 29일에는 옹진함 · 양양함에 이어 김포함과 고령함이 추가로 참가했다. 미 샐버함도 3월 30일부터 참가했다. 4월 2일에는 해양조사선 이어도호가 참가해 인명구조 및 탐색작전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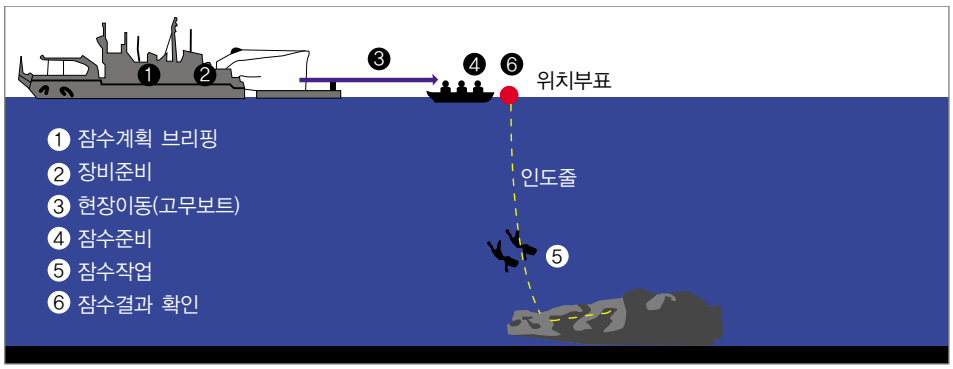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많은 작전요소들이 투입됨에 따라 이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는 1구역(함

미)과 2구역(함수)으로 구분되어 있던 작전지역을 〈그림 3-3〉과 같이 다시 세분해 1-1구역에는 양양함, 1-2구역에는 김포함, 2-1구역에는 옹진함과 미국의 샐버함, 2-2구역과 2-3구역에는 고령함을 각각 배치했다. 이어도호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해저 정밀탐색을 위해 함미와 함수 부근 1 · 2구역 전반과 천안함의 기동로를 따라 해저를 촬영하며 탐색작전을 계속했다.

잠수사의 잠수구역도 수심을 고려해 부대별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SSU가 제1구역의 함미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UDT는 제2구역의 함수를 담당했다.

함미 침몰구역의 수심은 47m로 스쿠버(scuba) 잠수한계인 40m를 초과했고, 또한 강한 조류로 인해 구조함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그러나 구조팀은 신속한 실종자 탐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림 3-4〉와 같이 스쿠버 잠수기법으로 수중탐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림 3-4〉 스쿠버 잠수 구조작전 절차 및 단계




29일 1구역의 함미 탐색은 SSU 9개조 19명과 한국구조연합회 민간인 잠수사 3명이 교대로 잠수를 계속해 3인치 인도줄을 설치한 후 망치로 함체를 두드려 반응을 살폈으나 내부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 이어 휴대한 공기(실린더 1통)를 주입한 후 함체의 절단상태를 확인했다. 이날부터 수중탐색을 같이 하기로 했던 한국구조연합회 민간인 잠수사 3명은 빠른 조류와 시계불량 등으로 잠수가 곤란하다며 철수했다.

이날 2구역의 함수탐색은 UDT를 중심으로 11개조 23명이 수중탐색을 계속해 인도줄을 설치하고 함미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에서 생존자 유무를 확인했다. 이어 함수의 절단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내부진입을 시도해 함장실 앞 외부 출입문을 식

별할 수 있었으나 함체 내부 접근로에 구조물이 엉켜있는 등 위험물이 많아 진입에는 실패했다.

30일(화)에는 1구역의 함미 탐색을 위해 SSU 8개조 16명과 중앙 119구조대 2명이 교대로 잠수를 계속해 함체를 식별하고 내부진입을 시도했으나 함수와 같이 위험물이 많아 실패했다. 2구역의 함수 탐색은 UDT를 중심으로 7개조 15명이 잠수를 계속해 함장실 외부출입구에 위치부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어 인도줄을 따라 안내줄[33]을 설치하고 좌현의 함미 출입구를 개방해 공기(실린더 2통)를 주입했다. 이때 확인한 함수는 함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함체가 좌현방향 15~20도 경사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함수 구역에서 수중탐색 중이던 UDT의 한주호 준위가 실신해 미군 구조함 (샐버함)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에 사망하면서 추가 희생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주호 준위의 사망을 계기로 UDT가 전담하고 있던 2구역의 함수 탐색에도 SSU를 추가로 증원해 SSU와 UDT가 혼성으로 탐색을 계속하도록 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실종자 구조현장 방문(2010. 3. 30)

이날 대통령이 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해역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 부근으로 경호상 안전문제가 있었음에도 헬기와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현장을 방문해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 및 구조대원과 실종자 가족을 격려했다.

33) 인도줄과 안내줄 : 잠수요원의 잠수작전 경로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줄을 말한다. 통상 잠수요원의 안전과 수중작전의 용이성을 위해 하잠(descend)줄→인도(lead)줄→안내(guide)줄 순으로 설치 · 운용한다. 천안함의 탐색 및 구조작전에 대한 언론보도는 이 같은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1일(수)부터는 기상이 악화되어 4월 1일(목)까지 이틀 동안 수중 탐색을 중지해야 했다. 이 기간에 탐색팀은 구조 · 인양관계관 실무회의 및 인양준비 대책회의를 열어 도상연습을 계속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어 4월 2일(금)에는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함미구역에서 4개조 8명이 잠수 탐색을 재개했다. 이때 함미와 연결되어 있던 인도줄은 손상되고 안내줄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탐색팀은 절단부위에 있던 인도줄을 좌현 견시대(見視臺)로 옮겨 설치한 후 함장실 출입구에 위치부표를 설치하려 했으나 강한 조류로 인해 실패했다.

한편 민간 저인망어선 제98금양호가 실종자 탐색작전에 참가했다가 어장 및 어망 훼손 등의 문제로 철수했다. 그 후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금양호가 이날 21:13경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백령도 서남쪽 34.6마일(56㎞) 해점(海點)에서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한 금양호가 침몰하면서 선장과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된 사고였다.

4월 3일(토)에는 함미구역에서 7개조 14명이 2차에 걸친 잠수 탐색으로 함체의 주갑판 상부1층(O-1deck)에서 함체의 찢긴 부위(2m)를 발견한 후 내부진입을 시도했으나 다수의 케이블이 엉켜있어 실패했다. 이에 안내줄을 재설치한 후 좌현 함미 출입구로 진입을 재시도 했으나 주변에 부유(浮遊)물체들이 많아 진입할 수 없었다. 다만 절단면 부근의 승조원식당을 확인한 결과 식당 내부가 해수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최초로 '원 · 상사식당' 부근 절단면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인양 후 독도함으로 이송해 확인한 결과, 착용하고 있던 전투복 상의의 명찰과 천안함의 생존자들에 의해 고(故) 남기훈 상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4]

남기훈 상사의 시신 발견과 이에 앞서 한주호 준위의 전사를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은 4월 3일 21:45경 "생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구조작업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구조작전의 중단을 요청했다. 구조작전 지휘부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을 존중해 인명구조작전을 중단하고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했다.

34) 국방부와 해군은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된 4월 3일 18 : 07부로 실종자 46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실종된 용사 전원에 대해 1계급씩 추서진급을 결정했다.

## 2. 함체인양작전

천안함의 함체를 인양하기 위한 작전은 함미 인양에 착수한 4월 4일부터 함수를 인양 · 이송한 4월 25일까지 22일 동안 수행되었다. 작전은 민간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민 · 군 합동으로 함미를 먼저 인양하고 이어 함수를 인양하기로 했다. 인양 여건이 더 어려웠던 함미를 먼저 인양하기로 한 것은 실종자 대부분이 함미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15일(목) 13:12에 함미를, 4월 24일 12:15에 함수를 인양해 다음날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하면서 함체인양작전을 종료했다. 실종자는 함미에서 39구, 함수에서 1구 등 총 40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6명은 산화(散華)[35]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들의 건의에 따라 유해수색작전을 종료했다.

### 가. 인양 가능성 판단 및 준비단계

해군은 침몰된 천암함의 함수 · 함미 위치가 각각 확인된 3월 29일부터 함체 인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양 가능성을 판단하고, 인양준비-인양 · 탑재-이송 등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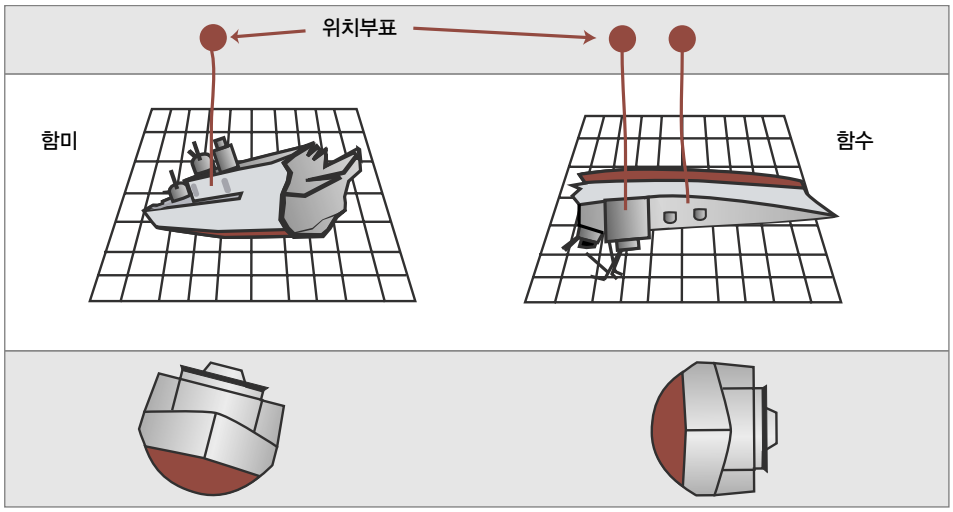
#### 1) 제1단계 : 인양준비

해군은 전력분석평가단에서 분석한 함수 · 함미의 절단부위를 반영해 인양중량 산출과 함께 인양 가능성을 판단했다. 3월 29일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함수 및 함미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함수와 함미로 분리된 곳은 가스터빈실과 디미스트(demist)[36] · 연돌로 연결되는 함체의 중간부분이었다. 침몰된 함수는 〈그림 3-5〉와 같이 우현으로 약 90도 정도 기울어져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였다. 식별을 위한 위치부표는 함장실 출입문과 절단면 부근에 설치했다. 함미부는 좌현으로 약 20도 기울어져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였다. 위치부표는 좌현 함미 출입문에 설치했다.

35) 산화(散華) : 사전적 의미는 꽃처럼 떨어진다는 뜻으로 전사자를 미화하는 말이다. 해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6명의 실종자를 「군인사법」 제40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화자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36) 디미스트(demist) : 가스터빈엔진의 공기흡입구로 이물질 제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5〉 함미 · 함수 침몰상태




해군본부 전력분석평가단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인양 가능성을 판단했다. 먼저 인양력 판단을 위해 침몰된 함수 · 함미에 해수가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가 바다 밑 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따라서 인양력은 '만재중량 + 뻘 영향 – 부력'을 고려해 함수 · 함미 각각 1천 톤 내외로 산정되었다.

요구되는 인양력이 군이 보유한 구조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민간인이 보유한 해상크레인과 탑재용 바지선(barge ship) 등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오염에 대비한 방제계획도 수립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참수리357정'[37]과 '서해훼리호'[38] 구조작전 사례를 검토하면서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어 구비해야 할 체인 · 와이어 · 샤클 등 인양장구류의 소요와 해상크레인, 함체탑재용 바지선 등의 규격과 소요를 분야별로 구체화했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천 톤급과 3천 6백 톤급 해상크레인 각 1척, 3천 톤급 바지선 2척, 기타 예인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규격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개의 해상구난 전문업체를 선정해 각각 함수 · 함미의 인양을 전담해 주도록 요청했다.

37) 참수리357정 : 한 · 일 월드컵의 결승전과 3-4위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 함정의 기습사격으로 우리 해군의 고속정인 참수리357정(170톤)이 격침되었다. 후에 인양되었으며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38) 서해훼리호 : 1993년 10월 10일 서해 위도(전라북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정기여객선. 이 사고로 승선인원 362명 중 292명이 사망했다.

### 2) 제2단계 : 인양 및 탑재

인양 및 탑재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은 세부절차를 적용해 준비했다.

첫째, 해저에 위치한 함체에 인양용 체인을 결박(결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상크레인을 인양위치에 고정시켜 함미(함수) 함체를 바로 세운 후 인양용 체인을 결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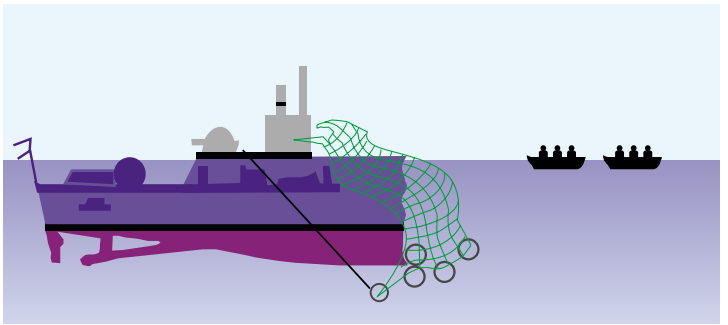
둘째, 함체에 결박된 체인을 해상크레인과 연결해 인양한다.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한다.

셋째, 인양된 함체를 바지선에 탑재한 후 유도탄 · 어뢰 · 폭뢰 등 폭발물과 탄약을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한다.

한편 함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유실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함체인양 중에 절단부분이나 개방된 출입문 또는 해치(hatch)[39] 등을 통해 내부의 실종자 시신이 외부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체가 침몰된 해역은 빠른 조류와 함께 제한된 수중 시계로 인해 시신이 유실될 경우 회수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따라서 함체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면에 그물을 설치하고 외부출입구는 폐쇄해야 했다. 이를 위해 군 및 민간업체 잠수사를 각각 2명씩 4명을 투입했다. 유실방지용 그물은 〈그림 3-6〉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그림 3-6〉 실종자 유실방지용 그물망 설치



39) 해치(hatch) : 갑판의 승강구 또는 뚜껑
40) 투묘(投錨) :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무르는 상태를 말한다.

### 3) 제3단계 : 이송

이송은 바지선에 적재된 함체를 백령도 남쪽의 현장으로부터 평택항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송용 바지선과 함께 해상크레인을 평택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동 간 안전을 위해 호송대를 편성해 운용하고 현장보존과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 나. 함미 인양

함미 인양은 크게 6단계로 수행되었다. ① 인양을 위한 와이어 및 체인 결박단계 ② 1차 인양 후 안전지대 이동단계 ③ 2차 인양 후 바지선 탑재단계 ④ 시신수습단계 ⑤ 제2함대사령부 이송단계 ⑥ 함미 침몰해역 정밀탐색단계다.

### 1) 와이어 · 체인 결박단계

함미 인양에 참가할 2천 톤급 해상크레인 '삼아2200호'가 4월 4일 11:30에 현장에 도착한 후 투묘(投錨)[40]했다. 다음날인 5일 07시에는 소형크레인 '유성호(150톤급)'와 소형 바지선 '태준호(300톤급)'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12:05부터 민간잠수사 5개조 10명이 2차에 걸친 잠수작업으로 함미 좌현 어뢰발사대에 인도줄을 추가로 설치한 후 함체탐색을 시작했다. 이때 연돌 및 상부갑판의 일부가 함체에서 이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일(화)에는 기상이 악화되어 작전을 중단하고 피항했다. 다음날인 7일(수) 오전에 유성호와 태준호가 현장에 복귀하고 오후에는 SSU와 UDT에 의한 해상탐색에 이어 민간잠수사 6개조 12명이 2차에 걸친 잠수로 함미 끝단에 위치부표를 설치했다. 그때 기관조종실에서 1구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SSU 5개조를 긴급 투입해 수습한 후 독도함으로 이송했다. 수습된 시신은 김태석 상사로 확인되었다.

8일(목)에는 민간잠수사 5개조 10명의 2차에 걸친 잠수작업으로 함미 추진축 부분에 와이어 연결을 위한 유도줄을 설치하고 함체를 탐색했다. 그때 함미 스크루 부분에 해저로부터 1m 정도 공간이 있어 굴착작업 없이 체인설치가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SSU 2개조 4명이 2차에 걸친 잠수로 실종자를 탐색하는 한편, 절단면 노출 부위에 안전로프를 보강했다.

9일(금)에는 06:20에 바지선 '현대오션킹15001호'(3,000톤급)가 현장에 도착해 인근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이어 민간잠수사의 잠수작업으로 함미 추진축 부근에 와이어 연결을 위한 유도줄을 설치해 체인과 연결했다. 이어 오후에 인양크레인 '삼아2200호'의 작업으로 함미 추진축 부근에 1번 인양체인을 설치했다.

10일(토)에는 1번 인양체인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2번 인양체인을 준비했다. 이어 11일(일) 2번 인양체인 준비를 계속해 12일 15시에 설치를 완료한 후 인양을 준비했다.

체인 3 ½인치

샤클 3 ½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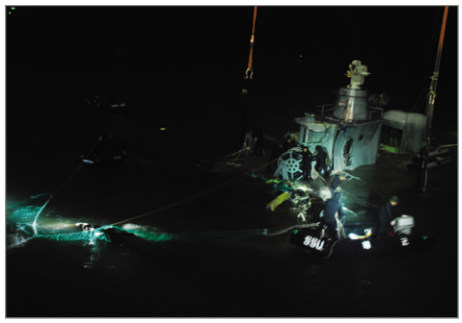
와이어 로프 2 ½인치



### 2) 안전지대 이동단계

4월 12일(월) 15시까지 2번 체인이 설치되었지만 야간의 강풍과 파도로 인해 체인이 절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미를 수심이 얕고 조류의 영향도 적은 안전해역으로 옮긴 후 재 인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함미를 안전해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41]

함미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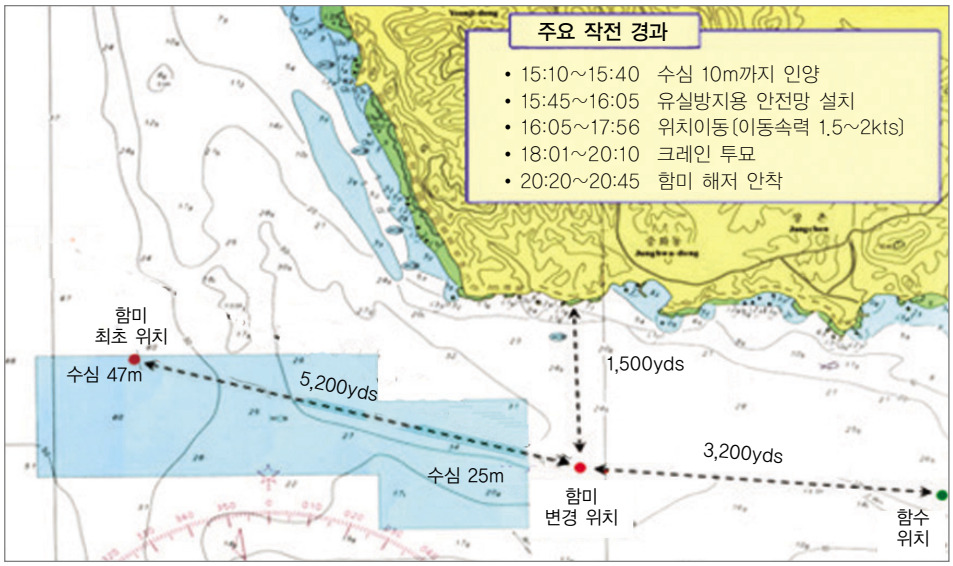
함미 그물망 설치

함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단정 4척, 고무보트 16척, SSU 70명, UDT 25명이 현장에 집결 대기했다. 이어 15:40에 함미의 상부구조물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SSU가 함미 절단면에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추적레이더 표

피 등의 부유물을 회수했다.

16:05에 함미를 견인한 해상크레인이 〈그림 3-7〉과 같이 함미 침몰장소에서 동남방으로 5,200야드(2.6마일), 백령도 남쪽 1,500야드 지점으로 이동해 17:56에 계획된 해역에 도착했다. 이어 SSU에 의한 유실방지 그물망을 재점검한 후 20:45에 함미를 수심 25m 지점 해저에 안착시켰다.

〈그림 3-7〉 함미 안전지대 이동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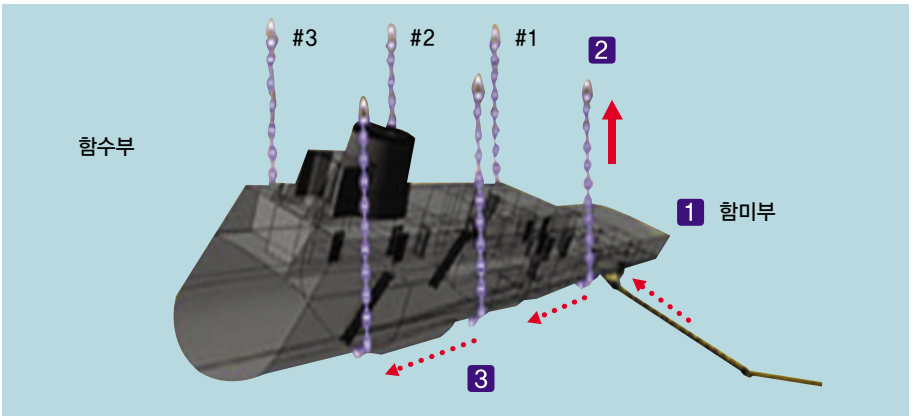

### 3) 인양 · 바지선 탑재단계

함미를 안전지대로 옮기면서 봤더니 함미의 무게가 950톤을 훨씬 넘을 것 같았다. 이에 따라 함미에 3번째 인양체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인양대책을 보완한 후 날씨를 고려해 15일 경에 인양하기로 우선 결정했다.

13일(화)은 기상 악화로 인양을 중단했다. 이어 14일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이날 오후 함체를 해저로부터 5~10m 정도 상승시킨 후 〈그림 3-8〉과 같이 3번 인양체인 설치를 완료했다. 17:30에 탑재 바지선 '현대오션킹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투묘했다.

41) 함미를 최초 인양했던 13일 오후에 바지선에 적재하지 못한 이유는 수중이동은 부력에 의해 적은 힘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수면 위로 인양은 표면장력과 함께 가득 차있는 해수로 인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재 인양하기로 했다.

〈그림 3-8〉 함미 인양체인 결박




1 함미 추진축 부근에 유도줄을 밀어 넣어 체인 한 가닥 연결(굴착 불필요)

2 1번 체인 이용, 함미 뒷부분을 들어서 함저와 해저 사이 공간 확보(인양크레인 이용)

3 함미부 함저의 확보된 공간으로 #2, #3 체인을 함수부 방향으로 밀어 넣어 설치





15일(목) 탐색인양전단장 등 124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09시부터 인양크레인에 의해 인양을 시작했으며 중간에 유실방지 그물망을 점검한 후 09:32에 함미 주갑판을 수면 위로 인양했다.

함미를 수면 위까지 올린 모습

이어 09:44부터 SSU 45명과 배수펌프 22대에 의해 배수작업을 시작했다. 배수를 마친 후 12:08에 점검한 함미의 무게는 최초 추정했던 것과 같은 950톤으로 확인되었다. 외관상 기름이 유출된 흔적은 없었으며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그물

망의 상태도 양호했다.

함미를 바지선에 올린 모습

12:21부터 함미를 바지선에 탑재하는 단계에 착수해 13:12에 탑재를 완료했다. 이어 함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을 설치했다. 14:38에는 통로개척조와 전기사, 무장안전팀이 인양 이후 최초로 함미에 진입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함미에 설치되었던 각종 무장 및 탄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15:03에 철수했다.

함미 내부의 1차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었지만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었다. 특히 가스터빈실 주변은 충격으로 약화되어 가스노출 가능성이 있었으며 자이로실[42], 소자실[43], 비상통신기실은 축전지 등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 15:22까지 통로개척 및 작업등 설치를 완료한 후에 철수했다.

### 4) 시신수습 및 후송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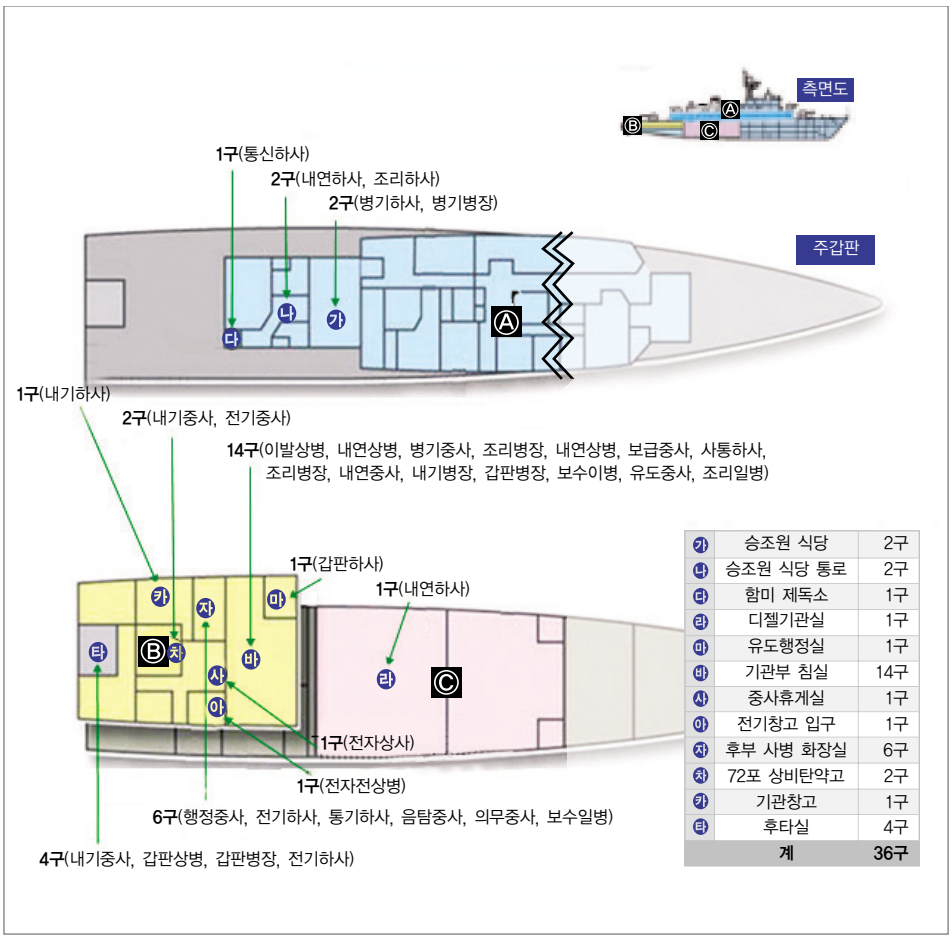
15시 22분에 함미 내부의 안전상태가 확인됨에 따라 헌병과학수사팀과 실종자가족 대표 4명이 함체 내부로 진입해 내부상태를 확인한 후 15:35에 철수했다. 뒤이어 15:41에 수색조 및 시신수습조가 진입해 23:06까지 시신 36구를 수습한 후 수색작전을 마쳤다.

42) 자이로실 : 함정의 침로(針路)를 지정해주는 장비가 배치된 곳으로 배전반, 분전반 등이 함께 위치해 전기스파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43) 소자실 : 함정의 자기장(磁氣場) 왜곡을 방지해주는 장비가 배치된 곳으로 소자실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자기의 왜곡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수습된 시신은 바지선 주위에 대기하고 있는 고무보트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이용해 인근에 있던 독도함으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시신을 세부 수습한 후 임시 안치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헬기를 이용해 제2함대사령부 의무대로 후송했다.

시신의 신원은 대부분 천안함 생존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실종자가 착용하고 있던 전투복 또는 근무복 명찰에 의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하고 있던 전자제품 등의 소지품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림 3-9〉 함미 내 시신 수습 위치도




| | | |
|---|---|---|
| 가 | 승조원 식당 | 2구 |
| 나 | 승조원 식당 통로 | 2구 |
| 다 | 함미 제독소 | 1구 |
| 라 | 디젤기관실 | 1구 |
| 마 | 유도행정실 | 1구 |
| 바 | 기관부 침실 | 14구 |
| 사 | 중사휴게실 | 1구 |
| 아 | 전기창고 입구 | 1구 |
| 자 | 후부 사병 화장실 | 6구 |
| 차 | 72포 상비탄약고 | 2구 |
| 카 | 기관창고 | 1구 |
| 타 | 후타실 | 4구 |
| | 계 | 36구 |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제2함대사령부 의무실에서 정밀 검안했다. 시신검안에는 제2함대사령부 헌병대대장, 수사관, 법의학 군의관 등 21명이 참가했다. 이때 시신검안서 및 화장동의서를 준비해 유가족의 서명을 받았다.

### 5) 이송단계

함미가 바지선에 탑재된 직후 탑재상태를 점검한 결과 거치대 일부가 파손되어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20시부터 21:30까지 용접작업으로 거치대를 정비했다. 그 사이에 함미를 적재한 바지선을 중심으로 초계함과 고속정 1개 편대, 인양크레인으로 호송단을 구성했다. 이어 22:45에 함미를 탑재한 바지선이 평택항을 향해 출발했다.

이동 간 속도는 평균 3.5노트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탑재함체의 결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기적으로 조임작업을 계속하면서 이동했다. 특히 바지선은 파고에 대한 적응력이 낮기 때문에 2m 이상의 파고가 예상되거나 시작될 경우 즉시 피항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함미를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는 모습

함미를 탑재한 바지선은 호송단의 안내를 받아 다음날인 17일(토) 19:20에 평택항 제2함대사령부에 무사히 도착했다. 총 20시간 35분 정도가 소요되어 최초 예상했던 40시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한 셈이었다.

### 6) 함미 침몰해역 정밀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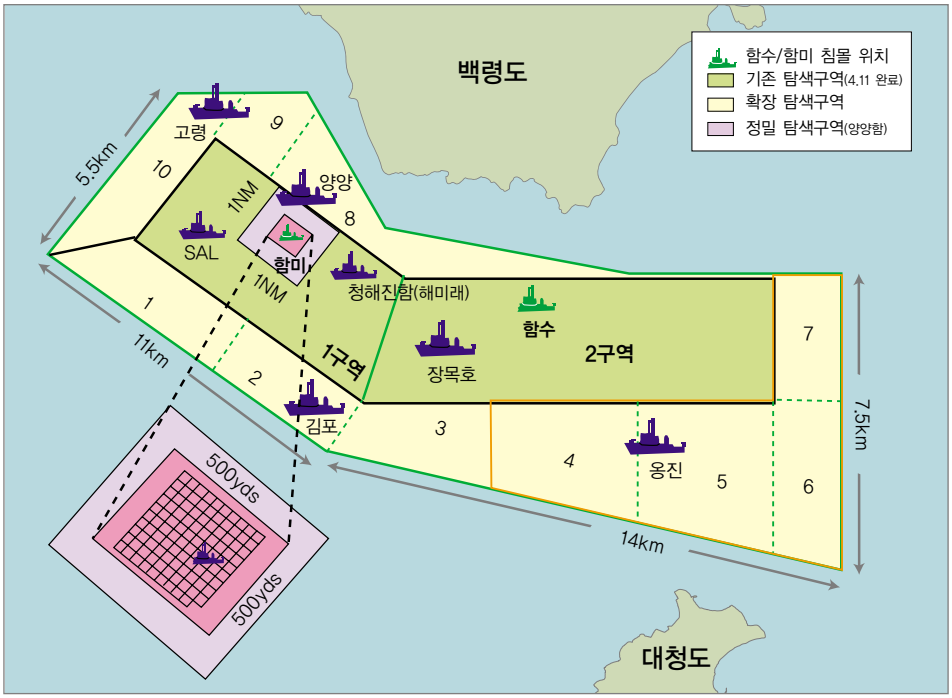
4월 12일(월), 함미가 안전지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림 3-10〉과 같이 함미 침몰해역과 함수가 침몰직전까지 표류했던 구간에 대한 정밀탐색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양양함 · 옹진함 · 김포함 · 고령함이 투입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조사선 장목호와 무인탐사기 '해미래'(Hemire)[44]가 참가했으며, 미국의 샐버함도 참가했다.

양양함은 14일부터 16일까지 폭발원점 부근을 탐색했으며, 청해진함은 15일부터 25일까지 무인탐사기 해미래를 이용해 폭발원점 기준 500×500야드 구역을 정밀

44) 해미래(Hemire) :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무인잠수정으로 '바다의 미래'라는 뜻이다. 해저 6,000m까지 잠수하여 심해(深海)의 지질 · 생태계 연구와 자원탐사 및 극지연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잠수정이다.

탐색했다. 김포함은 15일부터 21일까지 확장 1~3구역을 탐색하고, 옹진함은 확장 4~7구역을, 고령함은 확장 8~10구역을 각각 탐색했다. 한편 해양조사선 '장목호'는 17일부터 21일까지 함수·함미가 침몰된 해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면서 해저 촬영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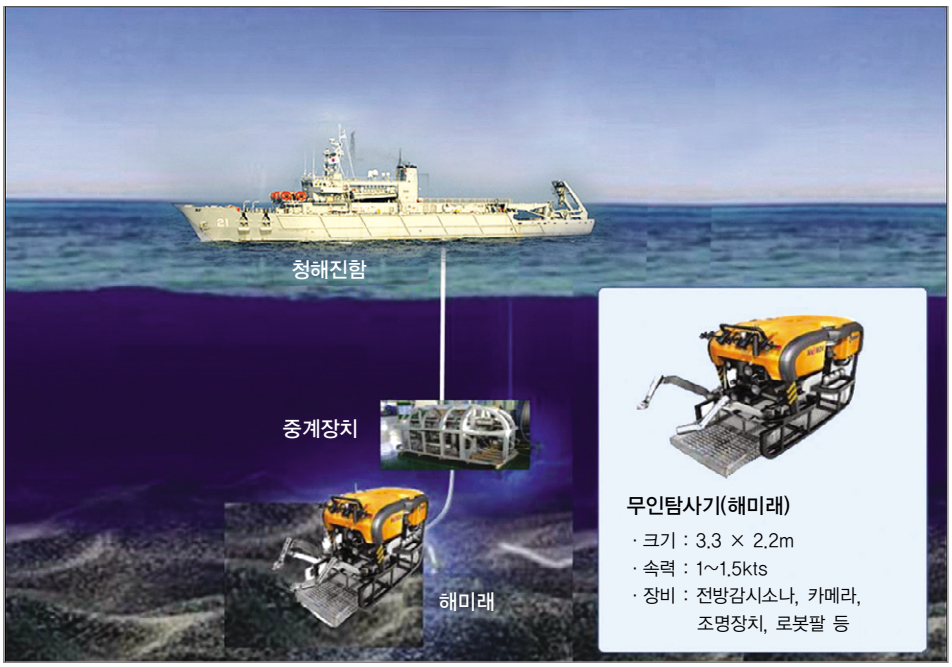
〈그림 3-10〉 함미 침몰해역·함수 표류구간 정밀탐색 구역




이상과 같은 탐색작전으로 20일(화) 01:31에 양양함이 가변심도음탐기(VDS)[45]를 이용해 함체에서 분리된 연돌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이어 청해진함이 투입되어 〈그림 3-11〉과 같이 무인탐사기 '해미래'를 이용해 폭발원점 부근을 집중적으로 탐사해 연돌의 구체적인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

45) 가변심도음탐기(VDS : Variable Depth SONAR) : 선박의 밑 부분에 고정 부착된 음파탐지기(SONAR)와 달리 소나의 송수신기를 예항(예인)하면서 운용 심도를 변경해 탐지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소나를 말한다.

〈그림 3-11〉 해미래 이용 해저 탐사




확인된 연돌은 민간업체의 잠수사와 장비가 투입되어 22일 13:52부터 인양을 시작했다. 이어 인양작업 중 21:21~30에 연돌 내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제6해병여단 의무실에서 박보람 하사로 확인된 시신은 다음날인 23일 07:27에 헬기를 이용해 제2함대사령부 의무대로 후송되었다.

## 다. 함수 인양

함수 인양은 4월 5일부터 22일까지 인양을 위한 와이어와 체인을 설치하는 결박단계, 23일부터 25일까지 인양 및 이송단계로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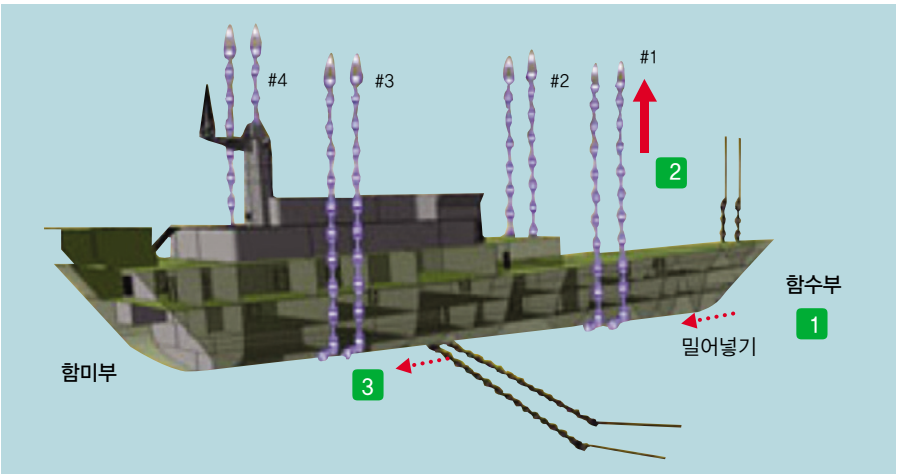
### 1) 인양 와이어 · 체인 결박단계

함수 인양에 참가하기 위해 4월 5일 07:00까지 인근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소형크레인 '중앙호'(120톤급)와 소형 바지선 '월미호'(300톤급)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민간잠수사 9개조 18명이 2차에 걸친 잠수로 해저에 있는 함수를 정밀 탐색했다. 그 때 함수의 앞부분은 해저와 함체 사이에 5㎝ 정도의 공간이 있

었으나 함수의 뒷부분은 70~80㎝ 정도가 해저의 뻘에 묻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6일(화)은 기상악화로 중앙호와 월미호가 대청도 근해로 피항했다. 다음날인 7일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민간잠수사 8개조 16명이 2차에 걸친 잠수로 체인유도용 와이어 2가닥을 설치했다. 이어 8일 민간잠수사 4개조 7명의 잠수로 함수가 묻힌 뻘을 관통하는 세 번째의 체인유도용 와이어를 설치했으나 장력(張力)이 과다 발생해 와이어를 절단한 후 체인을 회수했다. 한편 이날 13:36에 함수를 인양할 해상크레인 '대우3600호' (3,600톤급)[46]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중앙호 및 월미호와 함께 피항했다.

〈그림 3-12〉 함수 인양체인 결박




1 함수부에 유도줄 두 가닥을 밀어 넣은 후 체인 두 가닥 연결 (굴착 불필요)

2 1~2번 체인으로 함수부를 들어 함수부 함저-해저 사이의 공간(약 4m) 확보

3 함수부 함저의 확보된 공간으로 3~4번 체인을 함미부 방향으로 밀어 넣어 설치

9일(금) 오후 크레인과 바지선이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18:30부터 21:50까지 민간잠수사 2개조 4명이 잠수해 함수 앞부분에 바닥 뻘을 관통하는 체인유도용 와이어를 설치했다. 그러나 또 다시 과다한 장력이 발생해 최초 설치했던 1인치 굵기의 와이어를 3인치로 교체했다.

46) 함수 인양크레인 '대우3600호' 투입 : 최초 해군은 대형 인양크레인 1척을 임대해 함미를 인양한 후 이어 함수를 인양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분리된 천안함의 함체 인양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인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양크레인 1척을 추가로 임대하도록 지휘했다.

10일(토) 12:17부터 계속된 민간잠수사 6개조 10명의 2차에 걸친 잠수로 〈그림 3-12〉와 같이 인양체인 결박을 시작했다. 11일은 민간잠수사 7개조 12명의 3차에 걸친 잠수로 유도줄에 걸린 대공쌍안경 1개와 41포 포대 출입문 1짝을 인양했다. 12일은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잠수 중이던 민간잠수사를 철수시켰다.

### 2) 인양 및 이송 단계

4월 22일(목)까지 함수 인양을 위한 4가닥의 체인이 모두 설치됨에 따라 23일부터 인양작전에 돌입했다. 이날 08:00에 고무보트 14척을 투입해 함체의 주변 해역에서 실종자 및 부유물을 탐색한 후 10:45에 함체 바로세우기를 완료했다.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 그물망 2개를 설치했다.

24일(토) 08:00에 함수 인양을 시작하면서 배수펌프를 확인하는 등 배수와 방제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함체 인양을 시작하자 별도의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고도 함체 좌현 하단의 균열된 부분으로 자연 배수가 되었다. 따라서 밀폐된 일부 격실만 배수가 필요했다. 배수 작업을 마친 후 10:22에 함수탑재용 바지선 '현대프린스호' (3,000톤급)가 현장에 진입해 계류위치를 조정했다.

11:33에 바지선의 위치조정을 완료한 후 탑재를 시작했다. 12:15에 탑재를 완료한 후 함체 외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유류유출 흔적은 없었다. 12:30에 사다리 및 안전줄을 설치한 후 실종자 수색 및 채증요원 46명[47]이 함체내부로 진입했다. 14:15에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박성균 하사로 밝혀졌다. 수습된 시신은 제6해병여단을 거쳐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되었다.

배수

실종자 시신 수습

47) 채증(증거물 채택)요원 : SSU 23명, 합조단 7명, 실종자 가족 5명, 헌병 9명, 공보요원 2명 등 46명으로 편성되었다.

함체 내부에 적재된 유류는 유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한 후 제거하기로 했다. 16:00에는 유가족을 동반해 2차 정밀 수색했다. 이어 바지선에 함체를 고정시킨 후 인양크레인을 분리시켰다. 24일 19:33에는 함수를 탑재한 바지선이 제2함대사령부로 이동을 시작해 25일 21:47에 도착함으로써 함체인양작전이 종료되었다.

함수를 인양하는 모습



## 라. 탑재무장 안전성 검토 및 조치

함체 인양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탑재무장별 안전성을 검토해 탄종별,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했으며, 탄종별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에 따라 점검했다.

첫째, 하푼유도탄[48]은 발사대 장착 형상으로 해저에서 자연폭발 할 가능성이 없었다. 인양 후 발사대 · 발사관 볼트 결합상태를 재확인하고 발사관 외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상이 없었다.

둘째, 미스트랄유도탄[49]은 발사 후 일정시간(1.4초) 이상을 비행한 후 비행 중력 15G(중력의 15배) 이상 도달 시에만 무장(Arming)되므로 해저침수 상태로는 무장이

48) 하푼유도탄(Harpoon Missile) : 적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함정에 장착된 대함미사일이다.
49) 미스트랄유도탄(Mistral Missile) : 적의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 함정에 장착된 대공미사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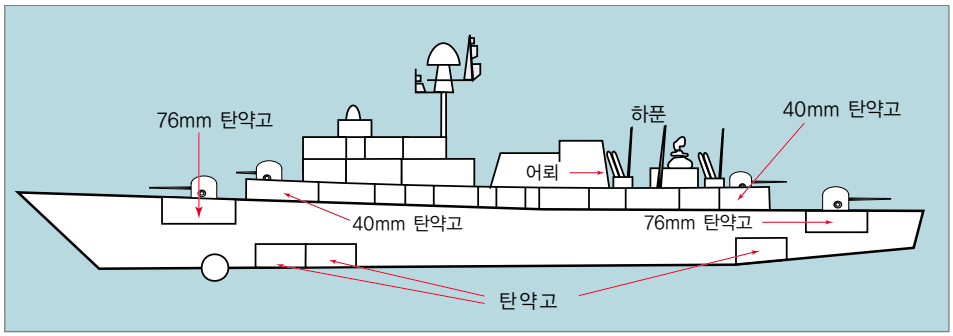
불가능했다. 따라서 폭발 가능성도 없었다. 인양 후 확인한 결과 저장고 시건장치 및 고정볼트 잠금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저장고 외부의 손상도 없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셋째, K744어뢰(국산 경어뢰, 일명 청상어)[50]는 발사전원(AC 115V)이 차단되어 있어 발사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전지동작을 위한 해수유입구 개방용 당김줄을 발사관에 연결하지 않아 충격에 의해 어뢰가 비정상적으로 이탈되더라도 작동 가능성은 없었다. 인양 후 확인한 결과 발사대 · 발사관 볼트 등의 결합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발사관 외부의 손상도 없었다.

넷째, MK9폭뢰[51] 역시 무장조건 및 폭발조건을 고려해 볼 때 폭발 가능성이 없었다. 인양과정에서 크레인작업 중에 폭뢰 투하대 위에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했으며, 투하대에서 폭뢰를 제거할 때까지 탄약의 고정상태를 유지했다.

다섯째, 기타 탄약의 인양 시에도 유의사항을 적용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림 3-13〉 천안함의 구조 및 탄종별 탑재 위치




## 마. 방제계획 및 조치

침몰 당시 천안함은 경유 143,600ℓ 와 소량의 윤활유 및 폐유 등 총 148,900ℓ 의 유류를 적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재 유류가 유출될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었기 때

50) 어뢰(魚雷) : 함정, 잠수함 또는 항공기에 탑재해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 운용되며 중(重)어뢰와 경(輕)어뢰로 구분된다.
51) 폭뢰(爆雷) : 항공기 또는 수상함이 수중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중 폭탄을 말한다.

문에 긴급방제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해군 18척, 해양경찰청 방제정 2척, 해양환경관리공단 3척, 옹진군에서 통제하는 어선 10척 등 총 33척의 함정 및 선박을 투입하고 기름회수기 6대, 오일펜스 3,850m, 기름흡착포 3,252kg을 준비해 방제작전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는 사건발생 직후인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방제정을 투입해 해상방제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4월 14일 함미 인양 전날과 4월 23일 함수 인양 전날에는 해군과 함께 방제대책수립 협조회의를 개최해 축적된 방제관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제대책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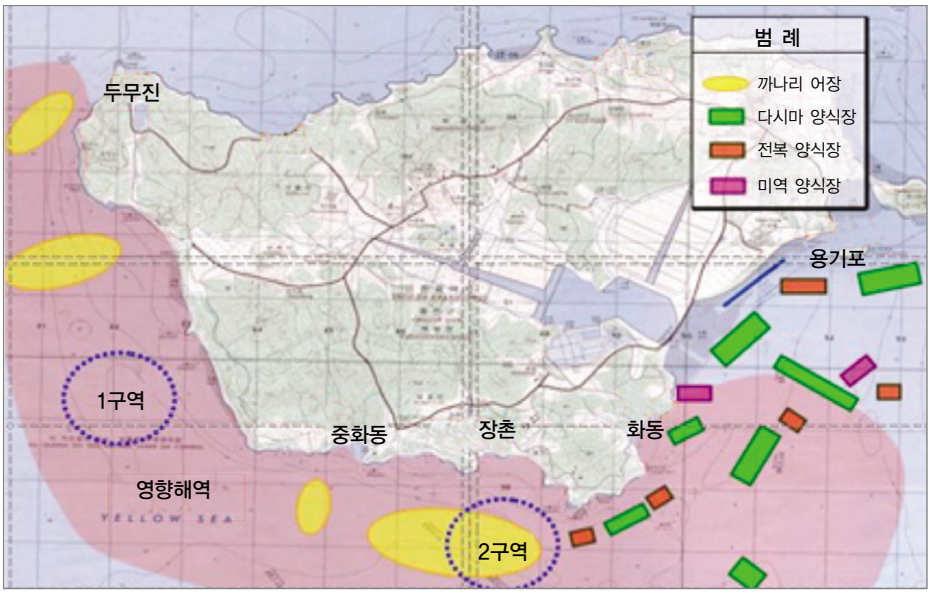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방제와 관련된 자료, 유류확산방지프로그램 산출자료와 해양오염방제 핸드북 등을 제공해 해군의 효과적인 방제계획 수립과 시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파견된 '환경5호'는 4월 16일 함미의 3개 연료탱크에 적재된 연료유 45톤을 인양현장에서 넘겨받아 연료누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함수에 적재된 연료유와 유성혼합물 등 117톤은 함수가 평택항으로 이송된 후 환경5호에 옮겨 실었다.





〈그림 3-14〉 방제구역 및 영향해역



### 바. 후속조치

해군은 천안함사건 후속처리를 위해 '전비품 손망실위원회'를 개최해 천안함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를 손 · 망실처리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은 2010년 6월 30일부로 해군의 장비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사격통제장비, 함포, 유도탄 발사장치 등 함체 부착 장비류는 합동조사단의 원인분석 및 함정조사 완료 후 함체와 함께 손 · 망실처리함으로써 안보전시용으로 활용하거나 폐품으로 처리했다. 기술검사에서 사용가 판정을 받은 탄약은 교탄으로 소모하고 사용불가로 판정된 탄약 · 유도탄 · 어뢰는 폐처리했다.

## 3.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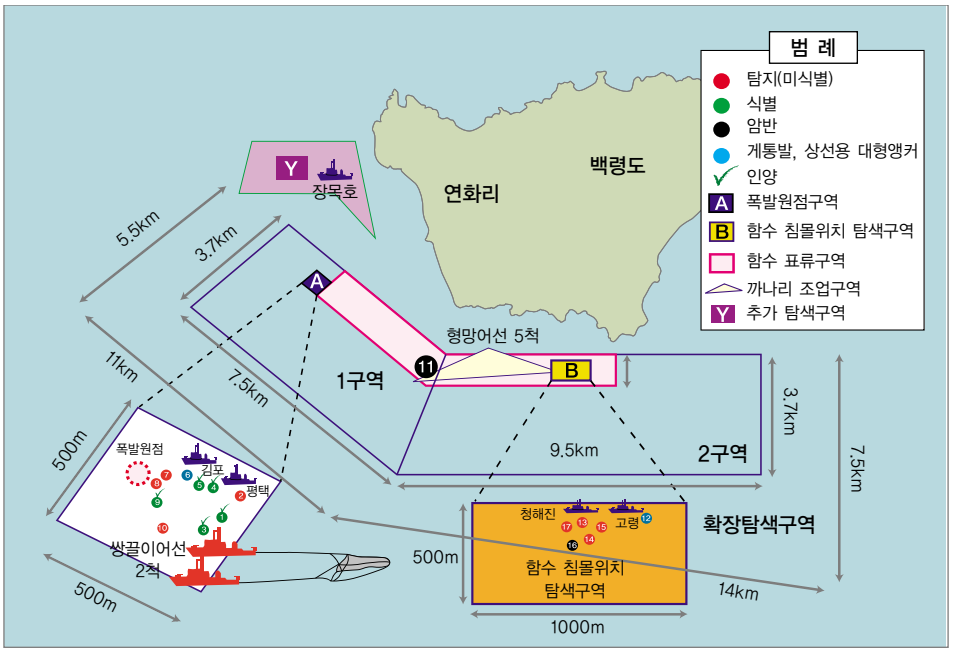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은 함체로부터 분리된 잔해물과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탐색 · 수습하면서 천안함의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25일간 2단계로 수행되었다.

그중 제1단계는 소해함과 구조함을 투입해 잔해물 위치를 정밀탐색한 후 인양하는 것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수행되었다. 동시에 형망어선 5척을 투입해 해저의 미세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제2단계는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이용해 잔해물과 증거물들을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행되었다.[52]

잔해물 탐색인양작전 구역은 〈그림 3-15〉와 같이 폭발원점 근해를 A구역으로, 함수침몰 근해를 B구역으로, 추가 확장구역을 Y구역으로 설정해 소해함 및 구조함을 민간어선과 함께 운용했다. 이때 어민들의 까나리 조업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밀 탐색했다.

52) 형망어선과 쌍끌이어선 : 형망어선은 해저에 서식하는 피조개 · 꼬막 · 바지락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바닥에 써레와 같은 쇠갈퀴가 부착된 그물을 이용해 해저를 긁는 방식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어선이다. 쌍끌이어선은 형망어선과 같은 방식의 그물을 사용하지만 그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통상 두 척의 어선이 하나의 그물을 양쪽에서 끌어 해저를 훑는 방식으로 해산물을 채취한다.

〈그림 3-15〉 잔해물 탐색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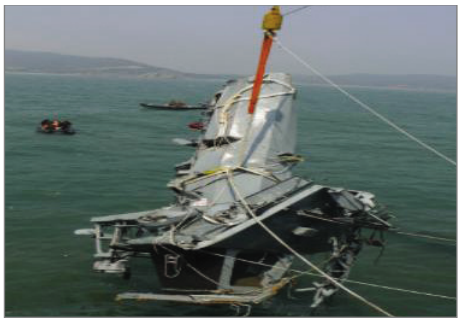

## 가. 소해함 · 구조함의 함체 잔해물 수거

함체의 잔해물 인양작전은 소해함 및 구조함을 이용해 비교적 규모가 큰 함체의 잔해물을 탐색한 후 잠수사와 크레인을 투입해 인양하는 것으로 주로 폭발원점인 A구역과 함수가 침몰된 B구역에서 운용되었다. 작전에는 소해함 3척(고령 · 김포 · 옹진함)과 구조함 3척(평택 · 청해진 · 미 샐버함)이 참가했으며, 성인봉함(상륙함), 고속단정 등 5척과 해양조사선 장목호, SSU 73명이 합류했다.

수거 및 인양 절차는 ① 소해함 음탐탐색 ② 탐지된 잔해물에 부표설치 ③ 구조함에 의한 식별 ④ 잠수사에 의한 수거 등 4단계로 수행했다. 그에 따라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51개조 101명의 잠수로 유도탄 · 마스트 · 발전기 · 가스터빈 보호격실 덮개 · 5m 지주 · 계단손잡이 등을 수거 및 인양했다. 또한 가스터빈이 붙어있는 함저를 식별하고 인양을 시도했으나 자체의 인양능력(무게 약 30여 톤)을 초과해 민간 인양업체에 의뢰해 인양했다.

주요 인양물

하푼 유도탄



마스트

잔해물탐색작전 수행 중에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간·만조 현상으로 인한 빠른 조류, 짧은 잠수시간 등으로 투묘하고 있던 구조함이 주묘(走錨)[53]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한된 수중환경에도 불구하고 작전요원들은 스쿠버잠수를 통해 인양을 계속했다. 잔해물 인양작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강도 높은 작업으로 작전요원 중에서 9명의 잠수병 환자가 발생했으며, 주요 인양물이 수거된 5월 10일을 기준해 잠수인원이 56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후속조치를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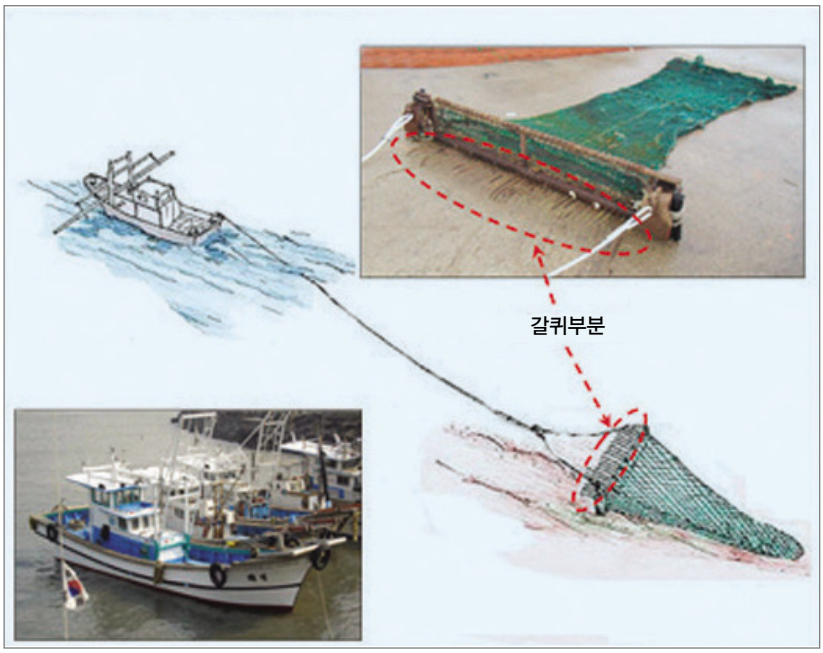
## 나. 형망어선 이용 잔해물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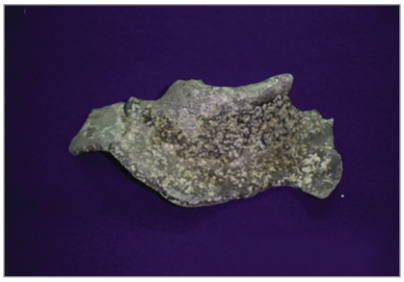
천안함의 침몰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인의 형망어선을 이용해 해저의 미세한 잔해물을 인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형망어선 5척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14일간 운용했다.

형망어선 운용방법은 〈그림 3-16〉과 같이 입구에 철 갈퀴가 부착된 어망을 어선이 끌어 해저의 잔해물이 그물 안으로 유입되도록 한 후 어선의 갑판 위로 끌어올려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형망어선은 알루미늄 조각, 해저시료 약 10kg 등의 수거물을 인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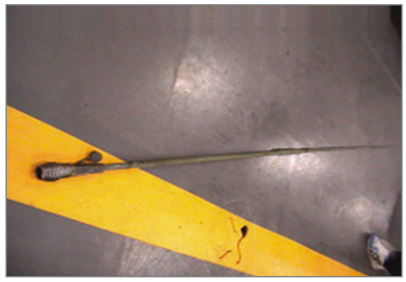
53) 주묘(走錨) : 해저에 투하된 닻이 조류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해 끌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3-16〉 형망어선 이용 잔해물 수거 작업도 및 채택된 증거물



알루미늄 조각(15×10cm)



VRC 무전기 안테나(길이 3m)



## 다. 쌍끌이 저인망어선 이용 잔해물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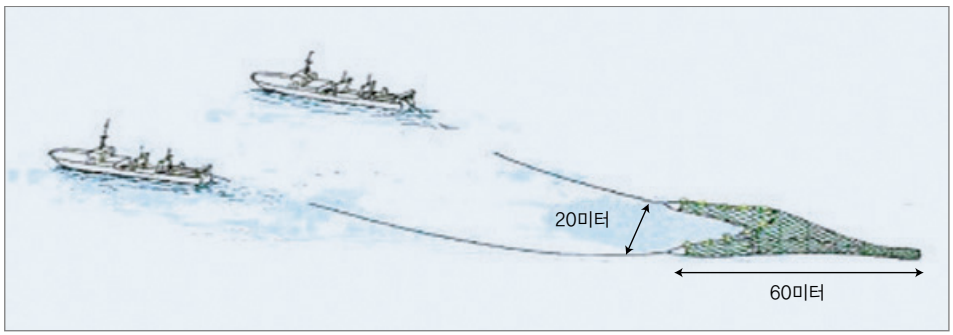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발원점 근해의 미세 잔해물 수거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민간인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운용했다. 이 작전에는 소해함 2척(김포 · 고령함), 해양조사선 장목호, 저인망어선 '대평11호'와 '대평12호'가 참가했다.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운용하게 된 배경은 과거 공군에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을 때 쌍끌이어선을 이용해 잔해물을 수거했던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54] 그 같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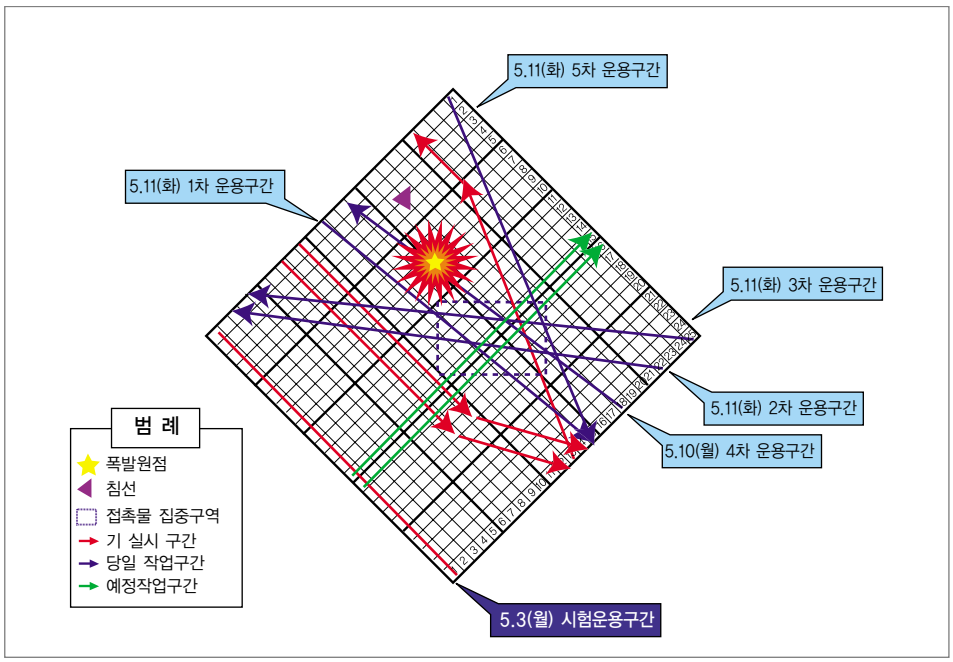
에 따라 부산 선적의 135톤급 쌍끌이어선 대평11호와 대평12호를 운용하게 되었다. 쌍끌이어선 측은 잔해물 수거를 위해 그물코가 5㎜이고 폭이 20m이며 길이가 60m인 특수그물을 별도로 제작했다. 또한 강한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그물에 매다는 무게의 추(錘)도 500kg에서 3톤으로 늘렸다.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운용방법은 먼저 소해함이 선도해 어망 예인구역을 안내하면 소해함의 뒤를 이어 어선 두 척이 〈그림 3-17〉과 같이 입구가 약 20m 정도인 저인망 그물을 끌어 해저를 훑는 방식으로 해저의 잔해물들이 그물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17〉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작업도




〈그림 3-18〉 쌍끌이 저인망어선 운용구역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운용해역은 〈그림 3-18〉과 같이 폭발원점을 중심으로 가로 · 세로 500m의 구획을 선정해 25개 격자로 구분했다. 또한 1일 단위 작업구역을 설정해 누락되는 구간이 없도록 했다. 강한 조류로 인해 어선의 어군탐지기로 해저의 그물망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해군 소해함의 지원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수거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쌍끌이 저인망어선에는 선원들과 함께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채증팀과 UDT통제요원이 승선해 운용을 통제했다. 어선별 승선 인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평11호(17명) : 선장, 선원(11), 해군 탐색인양단대장, UDT대대장, 조타상사(1), 합동조사단 채증요원(2)

② 대평12호(15명) : 선장, 선원(10), UDT요원(1), 조타상사(1), 합동조사단 채증요원(2)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작업 및 잔해물 수거방법은 먼저 두 척의 어선이 2~4노트 속력으로 이동하며 지정된 구간의 시작점에 그물을 내린다. 이어 지정된 축을 따라 그물을 끌어 해저의 채취물을 수거한 후 그물을 갑판 위로 끌어 올린다.

그물이 끌어올려지면 증거물 채택작업으로 민 · 군 합동조사단 채증팀과 UDT통제요원, 선원이 갑판에서 수거물을 1차 분류한 후 제6해병여단 제63대대 연병장에 설치된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켰다. 이어 분리수거장에서 육안 선별작업과 함께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후 합동조사단 채증팀에서 증거물로 판단되는 물체를 채증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기간 중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운용기간은 〈표 3-3〉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을 계획했으나 실제 운용일수는 8일간이었으며 총 43차례 운용으로 113점의 잔해물을 수거했다. 이중 어뢰 추진동력장치 등 23점을 증거물로 채택했다.

54) 공군의 쌍끌이어선 이용 사례 : 공군은 2006년 6월 7일 F-15전투기가 동해상 수심 372m에 추락했을 때와 2007년 7월 20일 F-16전투기가 서해상 수심 47m에 추락했을 때 대평수산에 의뢰해 특수그물을 이용한 3주간의 쌍끌이어선 작업으로 전투기 잔해의 대부분을 수거한 사례가 있었다.

〈표 3-3〉 일자별 수작업 횟수 및 증거물 수거 · 채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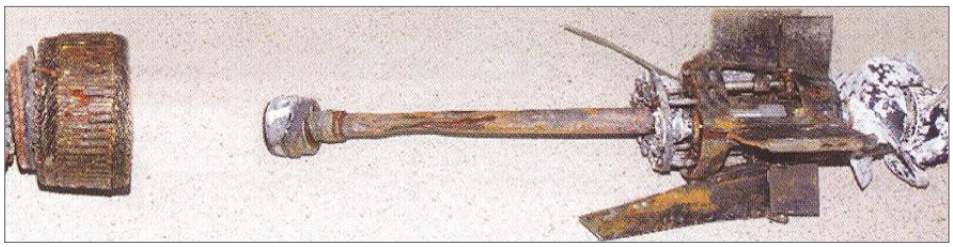
| 일자 | 작업횟수 (오전/오후) | 수거물 | 채택된 증거물 |
|---|---|---|---|
| 5. 10(월) | 0/3 | 알루미늄 조각 등 3점 | 의자커버 속 토양 등 2점 |
| 5. 11(화) | 3/2 | 알루미늄 조각 등 7점 | 알루미늄조각 등 7점 |
| 5. 12(수) | 3/4 | 철 구조물 등 10점 | 석면조각 등 4점 |
| 5. 13(목) | 3/5 | 전기레인지 등 24점 | 기관실바닥 금속조각 1점 |
| 5. 14(금) | 3/3 | 코팅된 도면 등 17점 | 기관실 계기판 금속조각 등 2점 |
| 5. 15(토) | 1/4 | 사무용 PC본체 등 35점 | 어뢰 추진동력장치 등 7점 |
| 5. 16(일) | 5/0 | 관 개폐기 등 14점 | |
| 5. 19(수) | 4/0 | 군용 망원경 등 3점 | |

수거물 · 증거물

알루미늄조각(1)

알루미늄조각(2)

알루미늄조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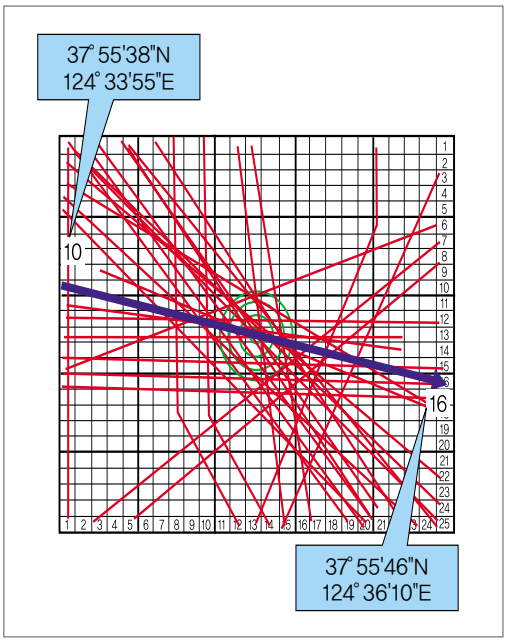
어뢰 추진동력장치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작업으로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쌍끌이어선 운용 6일째인 5월 15일 08:30경 〈그림 3-19〉와 같이 Y축 10번 격자에서 출발해 16번 격자방향으로 이동하는 30번째 수거작업을 시작해 09:23에 그물끌기를 종료했다.

09:25에 그물을 확인하던 대평11호 선원이 합동조사단 수사관에게 "그물 속에 이

상한 물체가 들어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어 수사관과 선원이 프로펠러 2개가 달려있는 물체를 확인했다.

〈그림3-19〉 쌍끌이 저인망어선 작업구간(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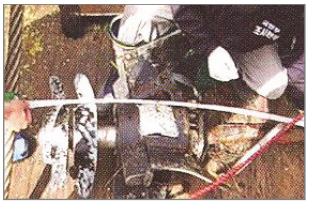

09:30에 어선에 함께 승선하고 있던 탐색인양단대장과 UDT 대대장이 2차로 확인했으며 09:31에 합동조사단 수사관의 현장감식을 통해 전장, 프로펠러 폭, 날개 길이 등을 부분별로 실측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09:36에 합동조사단 본부에 보고했다. 이후 09:38에 모터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발견해 어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측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09:40에는 탐색구조단장과 수행인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해 증거물을 확인했다.

09:50에는 합동조사단 증거물 채증팀장 등 3명이 현장에 도착해 09:55에 현장에서 정밀 검증했다. 10:05에 증거물 포장을 위한 모포 지원을 성인봉함에 요청하고, 10:15에 수령한 모포를 이용해 증거물을 1차 포장한 후 어선에 있던 비닐천막으로 2차 포장해 로프로 결박했다.

10:23에 합동조사단 채증팀장 등 2명과 포장한 선원 4명이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백령도 장촌항으로 운송했다. 이어 11:20에 제6해병여단 헬기장에서 공군헬기를 이용해 제2함대사령부로 출발했다. 13:20에 제2함대사령부에 도착했고 이어 13:40에 민 · 군 합동조사단 본부에 도착했다. 14:00부터 합동조사단장과 과학수사분과장이 증거물을 확인 후 15:00~16:30까지 정밀감식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체 내부에 '1번' 이라고 표기된 한글을 발견했다.

① 해저 수거물 인양

② 수거물 식별



③ 현장 감식

④ 증거물 포장

⑤ 헬기 이송

⑥ 정밀 감식

## 4. 시사점

### 가. 탐색구조작전

천안함의 함수가 침몰된 3월 27일부터 시작된 탐색구조작전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함께 기상 불량, 빠른 조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 · 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안 · 해상 · 수중 탐색을 위한 가용전력을 최대한 투입해 조직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비교적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대형크레인 2척을 투입해 함미와 함수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함체 인양 · 시신수습 등 사태의 조기해결에 기여했다. 반면 사후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었다.

첫째, 함수 침몰 전 부표설치와 초기 구조작전의 부적절한 대응이다. 사건 발생 후 함수는 3월 27일 14:00까지 노출된 상태로 있었다. 27일 02:25에 '해양경찰-501함' 이 부표를 설치했지만 유실되면서 함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아울러 사건발생 초기 치밀한 상황분석 없이 '69시간 생존가능성' 이 제시되면서 함체 인양이 지연되었으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구조작전을 강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희생자와 잠수병 환자가 발생했다.

둘째, 구조함과 소해함의 평시 운용체계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해군의 소해함과 구조함이 모두 진해에 대기하고 있어 상황접수 후 전방해역까지 항해하는데 장시간(20~40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적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데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탐색 · 구조를 위해 청와대로부터 국방부 · 합참과 해군본부 및 작전사령부, 그리고 현장의 역할분담 및 노력의 집중은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수직체계는 물론 대통령실 · 정부 부처 · 국방부 및 합참의 부서 간 횡적인 협조체제, 그리고 해양경찰청(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 해양조사원 · 해양연구원(국토해양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

넷째, 민간이 참여한 구조작전의 부작용도 있었다. 구조 및 인양작전 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인 구조작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탐색작전 지연 등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조작전 초기에 참가했던 민간인 쌍끌이어선도 작전 중 어장 및 어망 훼손 문제가 제기되면서 곧바로 철수해 자체 어로활동에 종사했다. 그 과정에서 철수했던 제98금양호가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언론과 직접 접촉해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 나. 함체인양작전

천안함의 함체인양작전은 깊은 수심과 유속 등 자연환경의 제한이 많았다. 그럼에도 해저 25m(함수) 및 47m(함미) 깊이의 악조건하에서 뻘과 암반을 극복하며 인양체인을 설치하는 등 고난도의 수중작업을 통해 함미와 함수를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구조자산의 종합적인 관리미흡으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어느 부서에도 민 · 관 · 군의 구조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용자산의 통합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요 기관별 구조장비의 불균형, 구조작전에 대한 상호이해 및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해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우수한 탐색 · 구조 인적자원(잠수인력 ·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양장비 능력은 1,550톤 이하 선박의 인양장구(lift bag)에 국한되었다. 반면 해경 및 민간은 소규모 해난사고에 대한 인양 및 예인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선박(4천 톤급 이상) 인양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한편 조선소 등은 대형 크레인 보유로 인양능력은 우수했지만 잠수장비 및 전문인력은 부족했다.

### 다. 잔해물인양작전

천안함의 함체 인양 후 잔해물인양작전을 통해 유도탄 · 마스트 · 발전기 · 가스터빈 보호격실 덮개 등 함체로부터 분리된 대부분의 잔해를 수거할 수 있었다. 또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형망어선, 쌍끌이어선 등을 이용해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수거된 증거물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제 2 절 | 희생자 예우 및 보상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최전방에서 작전 중에 희생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그들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고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장례를 위해 범국민적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으며 국민적 성원 속에 '해군장(海軍葬)'으로 엄수되었다. 유가족에게는 국민적 위로와 함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시민

## 1. 희생자 서훈 및 장례

### 가. 국민적 애도분위기 조성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직후부터 실종자 구출에 매진했던 정부와 군은 4월 3일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하면서부터 희생자의 장례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날 희생자의 시신이 인양되면

서부터 정부는 장례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영결식 당일인 29일을 '국가애도일'로 선포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중 전국을 대상으로 시민분향소 및 합동분향소를 운영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모게시판 및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3월 30일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가 사망하는 추가희생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 3일 열린 고(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계획했던 해군 작전사령관장(葬)에서 해군장(葬)으로 격상시켜 엄수되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정·관계 인사, 군 장병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거행되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고인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기로 했으나 국민과 언론은 광복장의 경우 고인이 전역할 때 수여가 예정된 훈격이라며 포상이 미흡함을 지적했다.[55] 이에 따라 해군은 4월 1일(목) '사망구분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으로 분류되어 있던 고인의 '사망구분'을 전사로 정정했다.[56] 이어 국무회의는 국방부의 건의를 기초로 고인의 공적을 심사해 충무무공훈장 추서를 결정했다.[57]

대통령의 고(故) 한주호 준위 조문

고(故) 한주호 준위 영현 봉송

이 같은 고(故) 한주호 준위의 장례와 서훈은 곧 이어 거행되는 천안함 실종자의 장례와 예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55) 보국훈장 : 보국훈장은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56) 고(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정정한 것은 「국방부 훈령」 '전·공사상자처리' 제4조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군본부에 전·공사상자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에 따라 제정된 「해군규정」 '전·공사상자 처리' 제6조에 근거한 결정이다.

57)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대해 「상훈법」 제13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포상업무지침」은 추서 서훈 대상을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

## 나. 희생자의 예우 및 서훈 결정

해군본부 인사근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망구분심사위원회'는 "천안함 실종자 모두가 4월 3일(토) 18:07에 전사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전사(戰死)' 결정은 천안함이 전투지역에 준하는 서해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침몰원인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사일시(4월 3일 18:07)는 천안함이 침몰한 후 최초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확인했던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58]

전사자에 대한 호칭은 '천안함46용사'로 결정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전투에 참전해 임무수행 중 전사한 군인에 대해 일반적인 존칭으로 '용사(勇士)'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군가' 및 '바다로 가자' 등의 군가에서 해군장병을 '바다의 용사'로 호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가'에서 자신들을 '천안함 용사'로 호칭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 동 위원회는 전사자 전원에게 1계급씩 추서(追敍)진급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병은 제2함대사령관이, 부사관은 해군참모총장이,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승인함으로써 전사자 모두는 4월 3일부로 전원 1계급씩 추서진급 되었다.[59]

반면 출동 당시 중사였던 고(故) 김태석 · 문규석 용사가 원사로 추서진급된 사실에 대해 2중진급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두 용사는 4월 1일부 상사 진급예정자였으며, 당시에는 생존을 전제로 탐색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에 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군인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지만 두 용사의 사례를 계기로 전사 또는 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대한 개선소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58) 동시사망 적용의 법적 근거 :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등의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59) 추서(追敍)진급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 '전사자 · 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규정 즉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그 신분에 응하여 진급시킬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에 따른 것이다. 추서진급의 세부시행은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제88조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은 장관(將官)급 부대장의 승인에 따른다"라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동 위원회는 전사자 전원에게 화랑무공훈장 수여를 국방부에 건의했다.[60] 국방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훈장 수여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 같은 '천안함46용사'의 예우는 정부와 군이 국민들의 정서를 수용하면서 관련법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반영한 결과였다.[61]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 다. 장례 준비 및 추모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범국가적인 구조작전에도 불구하고 46명이라는 큰 인명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6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과 장례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 대표는 4월 3일 실종자 중 1명이 함체 내에서 주검으로 확인되자 수색을 중단하고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4월 24일 함수가 인양된 후 실종자 6명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은 또 다시 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6명을 산화(散華)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희생자의 장례 준비는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 1) 장례 준비

장례 준비는 영결식 직전까지의 절차로 검안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순으로 엄수되었다. 사건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태극기가 덮인 영현낭에 모셔져 제2함대사령부 의무대로 후송되었으며 검안 후 준비된 가건물의 영안실에 안치되었다.[62] 그러나 시신을 냉동컨테이너에 장기 보관할 경우 탈수 및 변형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해군은 장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염습 및 입관

60) 무공훈장 :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61) 고 한주호 준위 및 천안함 46용사와 관련된 서훈 즉, '전사'와 무공훈장 수여에 대해 "여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62) 그동안 군의 장례식에서 태극기는 입관 후 관을 덮는데 만 사용해 왔다. 이는 시신 위에 태극기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국기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46용사의 경우는 영현낭 위에 태극기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따랐으며, 이는 군 장례의 새로운 관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을 설득했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와 학생 10명이 참가해 최대한 생존 시의 모습과 가깝게 시신을 복원하고 정복을 입혀 화장(化粧)했다. 이어 염습된 시신을 접견실로 옮긴 뒤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입관의식을 진행했다.

영현 봉안소 모습

다음 절차는 영결식을 거행한 후 시신을 화장(火葬)해 안장될 국립묘지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염습 및 입관이 조기에 시행됨에 따라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화장(火葬)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영결식 전에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의식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유가족의 요청을 존중하기로 했다. 화장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성남 · 수원 · 홍성 · 연기화장장 등 4개소에서 엄수되었다. 화장된 유골은 제2함대사령부에 설치된 봉안소의 유골함에 안치했다.



### 2) '국가애도기간' 및 '국가애도일' 지정

4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관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는 천안함 관련 희생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그 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애도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근조(謹弔)리본을 달고 검소한 복장을 착용했으며,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 애도의 날인 4월 29일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했으며 일반가정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영결식 당일에는 10:00부터 1분간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전 국민이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

### 3) 분향소 운용 및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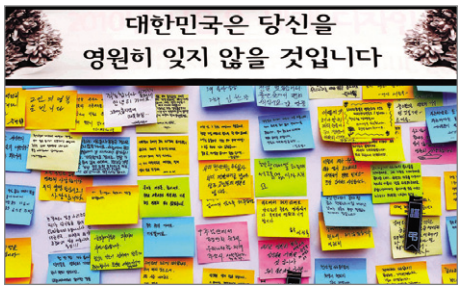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에 맞추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공무원뿐만 아니라 뜻있는 일반 국민도 희생장병을 조문(弔問)하고 추모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 민 · 관 · 군을 통합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자율적으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용기간은 장례기간에 맞추어 4월 25일 14:00부터 29일 17:00까지 5일간이었다. 분향소 · 추

모관 설치현황과 조문인원은 〈표 3-4〉와 같다.

〈표 3-4〉 분향소 · 추모관 운용 및 조문인원 현황

| 구 분 | 계 | 합동분향소 | | | | 시민분향소 | | | | 기타 |
|---|---|---|---|---|---|---|---|---|---|---|
| | | 소계 | 대표 | 현충원 | 지역 | 소계 | 서울 | 광역시·도 | 시·군·구 | |
| 분향소 (개소) | 340 | 91 | 1 | 1 | 89 | 52 | 1 | 17 | 34 | 197 |
| 인 원 (명) | 702,582 | 343,464 | 30,831 | 19,796 | 292,837 | 359,118 | 43,490 | 201,765 | 113,863 | – |

※ 인터넷 및 인트라넷 추모글 : 25만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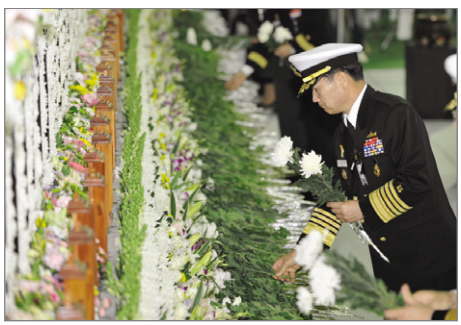



시민분향소 추모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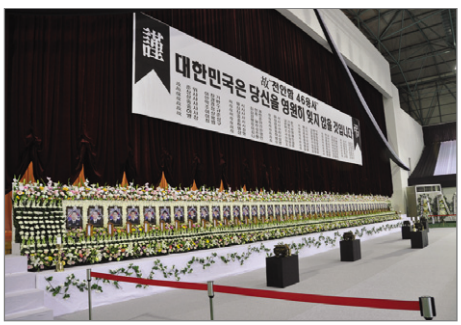
애도하는 학생들

## 라. 영결식

영결식은 4월 29일 10:00~11:30에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장례위원장으로 하여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유가족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 · 관계 주요인사, 국방부 · 합참 주요인사, 예비역단체, 해군 및 육 · 공군 · 해병대 장병, 천안함 자매학교 학생, 일반시민 등 2,400여 명이 참석해 엄수되었다.



해군참모총장 헌화




현수막 · 영정 배치

영결식을 종료한 후 안장식장인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안장식장 이동은 운구인원 138명과 유가족 2,167명이 리무진 2대(영현이송), 영정버스 4대, 유가족용 버스 82대, 예비버스 6대, 구급차 2대를 이용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 마. 안장식

안장식을 위해 먼저 국립대전현충원 사병3묘역에 천안함 희생자 합동묘역을 조성했다. 4월 23일 국무총리 주관의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면서 '천안함46용사'의 합동묘역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안장식은 4월 29일 15~18시에 국립대전현충원 앞 광장과 합동묘역으로 조성된 사병3묘역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장의위원장으로 유가족 및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수되었다. 이때 정·관계 주요인사, 국방부·합참 주요인사, 육·공군 역대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예비역단체, 해군본부 장성, 제2함대사령부 장병·군무원, 천안함 생존장병, 일반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영현봉송은 묘역까지 이동거리가 1km 정도나 되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 이동했다. 하관(下棺)은 영정을 봉송한 46명의 동료들이 맡았고, 허토(獻土)[63]에는 1위 당 3명 기준으로 유가족 138명이 참가했다. 성분(成墳)은 사전 배치된 의장대 46명과 현충원 집례요원 16명이 담당했다. 성분 후에는 자유롭게 헌화하는 것으로 안장식 순서를 모두 마쳤다.

'천안함46용사'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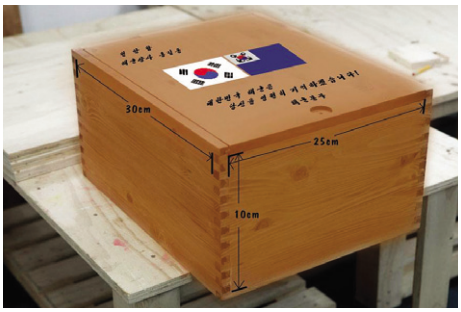
63) 허토(獻土) : 상제들이 하관 후 관 위에 흙을 한 줌씩 뿌리는 의식으로 흙을 바친다는 뜻의 헌토(獻土)가 올바른 표현이지만 관습적으로 허토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허토(獻土)로 표기했다.

## 바. 유품 전달

전사장병의 유품은 개인휴대 유품과 함체 내에서 수거한 유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개인휴대 유품은 천안함 생존자를 전사자와 1:1로 담당시켜 시신을 검안하면서 감식반과 협조해 수거했다. 함체 내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 유품은 함체 인양 후 합동조사단의 수색을 마친 후에 수거했다. 수거된 유품은 목록을 만들어 관리했으며 개인휴대 유물은 제2함대사령부 의무실에서, 함체에서 수거된 유품은 함체 옆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에서 각각 세척 · 건조시켜 유품보관용 목제함과 가방에 담아 보관했다.

유품의 전달은 개인휴대 유품과 함정 내부에서 수거된 유품으로 구분해 유족에게 인계했다. 그중 개인휴대 유품은 영결식 전에 제2함대사령부에서 대령급 장교와 전사자의 동기생이 배석한 가운데 천안함 함장 및 영관급 장교에 의해 유가족에게 개인별로 전달했다. 그때 전달자 및 배석자는 정복을 착용하고 유품함과 천안함 함장의 친서를 함께 전달하면서 전사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위로와 정성을 다해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함체 내부에서 수거된 유품은 영결식 후 유가족의 희망을 반영해 제2함대사령부 또는 자택을 방문한 영관급장교에 의해 전달되었다. 이때 천안함의 생존장병 중 고인과 가까웠던 장병이 배석했으며 세부 전달방법은 개인휴대 유품을 전달할 때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 개인휴대 유품 보관함 | 함체 내부 수거 유품 보관용 가방 |
|---|---|
|  | |
| • 재　질 : 적 송<br>• 내장재 : 붉은 빌로드천 이용 마감 | • 재　질 : 강화 플라스틱<br>• 형　식 : 가방 형식 |
| • 유품 보관함 뚜껑에 기념마크/문구 삽입<br>– 마크 : 태극기/해군기(동판 제작 부착)<br>– 문구 : 천안함 해군00 000 “대한민국 해군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해군본부” | |

장례가 끝난 후 국가기록원은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국방부 · 해외공관 · 지방자치단체의 방명록, 현수막 등 추모 물품, 사진과 문서 등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영구 보존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조의록 등 기록물 사본을 DVD로 제작해 6월 30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관련 기록물은 〈표 3-5〉와 같다.

〈표 3-5〉 '천안함46용사'의 국민적 애도와 관련된 기록물 현황(국가기록원) (단위 : 건)

| 총계 | 일반기록 | 시청각 기록물 | | 행정박물 | |
|---|---|---|---|---|---|
| | | 동영상 | 사진 | 조의록 | 기타 |
| 1,324 | 8 | 75 | 243<br>(9,951점) | 956 | 42 |



## 2. 유가족 지원 및 보상

### 가. 유가족 지원반 운용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대통령은 실종장병을 구조하는 것과 함께 실종장병의 가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3월 30일에는 최전방 접적지역의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을 면담하고 격려했다. 실종장병 모두가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는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에는 유가족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하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 시종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관심과 함께 국방부는 사건발생 직후 인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인사지원반을 편성해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유가족관리 및 생존장병관리를 지원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해서는 제도적 · 법률적 차원의 지원을 포함해 제공했다. 해군본부는 준장을 반장으로 하는 58명 규모의 유가족지원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근접지원을 제공하면서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 숙소를 제2함대사령부 영내의 내무반에 마련하고 식사는 사령부 해군1회관에서 유가족의 주문을 받아 지원했다.

이명박 대통령, 구조현장(광양함)에서 실종자가족 면담(2010. 3. 30)

유가족에 대한 의무지원을 위해 군의관 및 간호장교에 의한 1일 2회 건강상담과 함께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했고 필요시 외부 병원과 연계한 의료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대형셔틀버스 4대와 함께 소형버스 1대를 상시 배차해 유가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구조 및 인양작전 현장을 방문하게 될 때는 헬기와 함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조 및 인양작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상담, 법률상담, 은행 · 보험 · 금융 상담, 어린이 · 노인 돌보미 등을 적극 지원했다.

유가족 지원용 천막

## 나. 유가족과 신뢰관계 구축

유가족은 자신의 가족이 실종된 초조감과 사망(전사)이 확인된 후의 슬픔으로 감정이 격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오해나 불만을 해소하면서 그들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1가족당 전담안내 부사관 1명씩을 편성해 24시간 1:1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전담안내

부사관은 가급적 각각의 가족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나 선 · 후배, 동향 등의 친분관계를 가진 장병을 선발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게 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해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했으며, 실종장병의 구조와 인양, 후송 등 진행상황을 정기 및 수시로 브리핑하고 1:1맞춤형 지원요원을 통해 개별 브리핑도 적극 활용했다. 유족들의 오해와 불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유가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자극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했다. 예를 들어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장례 및 보상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또한 안내간부를 통한 조사행위를 자제해 안내간부를 감시요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로 늘려 그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추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기본원칙을 준수해 지원가능 사항과 불가능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 또는 "검토 후 알려 주겠다" 등으로 답변해 현장에서 거부하는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 다. 유가족 안정화 지원

해군은 천안함 희생장병의 장례를 마친 후에도 유가족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임무부서(TF)를 편성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해군본부 인사근무처 장교 · 부사관 각 1명으로 편성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 · 복지 · 법률 · 의무지원 및 안내를 계속하면서 유가족카페(천안함 유족코너)를 설치해 관리 · 운용하고 있다. 또한 현충일 등의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연말연시 등 연간 4회의 위로방문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해군은 유가족의 자활(自活)을 돕기 위해 희망에 따라 해군복지시설 직원 채

용 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해장학재단'을 설립해 유자녀가 대학에 진학 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해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국토해양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의 기업과 재단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64]

### 라. 국민성금 모금운동 및 보상

천안함 희생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표명은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켜 국민성금 모금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성금 모금운동에 앞서 국방부는 예하 공무원 및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되 해군은 기본급의 3%, 기타는 기본급의 0.5% 수준을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성금 모금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KBS와 기타 언론기관 등이 주관해 전개했다.

이 같은 모금으로 군내 성금 34억 3천7백만 원이 모금되어 고(故) 한주호 준위를 포함한 천안함 유가족 1가구당 5천만 원씩 총 23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머지는 같은 시기에 추락한 링스(LYNX)헬기 순직자의 조위금으로 6억 원, 천안함 유족 경비로 4억 8천7백만 원을 사용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국민성금은 395억 원이 모금되어 4차례에 걸친 이사회 소집결과 고(故) 한주호 준위를 포함한 천안함 유가족 1가구당 5억 원씩 총 23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모사업에 쓰도록 결정했다. 지급절차는 유가족 1가구별 대표수급권자를 지정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보하면 모금회에서 대표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64) 기업과 재단의 유가족 지원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개인출연재단인 해비치사회공헌 문화재단은 10가족 16명의 자녀 전원에게 연간 대학생 400만 원, 고등학생 120만 원, 중학생 80만 원, 초등학생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1가구당 1명씩 우선채용을 약속하면서 취업희망을 접수한 결과 총 34가족이 희망해 2010년에 5가족이 취업하고 나머지 29가족은 자녀의 성장 등을 고려해 향후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의 지급기준은 〈표 3-6〉과 같으며, 국민성금 및 일시금 지급액을 모두 합할 경우 유족 1가족 당 7억 5천만 원으로부터 9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표 3-6〉 연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

| 구분 | 연금(월) | 일시금 | | |
|---|---|---|---|---|
| | | 전사 | 공무상 사망 | 비고(차액) |
| 간부 | 141~255만원<br>(유족+보훈) | 3억 454만원~<br>3억 5,876만원 | 1억 4,109만원~<br>2억 4,744만원 | 1억 1,132만원~<br>1억 6,345만원 |
| 병 | 94만 8천원<br>(보훈) | 2억 2만원 | 3,650만원 | 1억 6,352만원 |

## 3. 희생자 추모사업



### 가. 추모재단 설립

해군은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7월 30일 추모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발기인은 유가족 대표 2명, 기부자 대표 2명, 해군 대표 2명 등 6명으로 구성했다. 기부자 대표로는 전경련 사회협력본부장, KBS 경영본부장을 선임하고 해군 대표로 해군발전연구위원과 인사처장을 선임했다. 사무국 인원은 유가족 중에서 2명, KBS 추천인원 1명 등 3명으로 했다.

현재까지 추모재단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차후 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고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6 · 25전쟁조차도 잊고 지내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부족한 전후세대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국방과 안보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위국헌신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나. 천안함 추모관 · 전시공원 건립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은 '천안함 추모관' 건립, 고(故) 한주호 준위 동상 건립, '천안함 전시공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고(故) 한주호 준위 동상 건립은 6억 원의 예산으로, 천안함 추모관 조성사업은 총 83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1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천안함 전시공원과 위령탑 건립은 국민성금 중 160억 원의 재원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된 천안함의 함체는 역사자료 및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반의 안정성과 배치공간 등을 고려해 제2함대사령부 영내 유류부두 호안에 거치대를 제작 설치해 하역된 천안함의 함체를 전시하고 있다. 해군은 거치된 천안함의 보존을 위해 '한국문화재보존과학협회'에 용역연구를 의뢰해 장기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모공원 조감도

## 4. 시사점

### 가. 희생자 서훈 및 예우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응조치는 국론의 결집 혹은 분열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동참으로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보상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애도 물결 속에서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희생자를 조문하는 등 국론결집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서훈과 보상은 과거 6 · 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대침투작전 참가 장병의 서훈 및 보상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전을 잠시 지원한바 있던 제98금양호가 자체 어로활동 중에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고에 대해서도 '의사상자'(疑死傷者) 추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공무상 사망 또는 순직한 희생자 보상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유사한 사례의 민간인 보상수준[65]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하곤 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직장병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8월 25일부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종전 중사1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3,656만 원)에서 상사18호봉 보수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9,072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2010년 기준 1억 5,279만 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수직무순직사망보상금'을 신설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65) 민간인 보상수준 : 현재 의사상자의 보상금은 2억 원을, 산재보상금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진강 사고의 경우 4억 5천~7억 2천만 원, 대구지하철 지하철 사고의 경우 3억 2천~8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 나. 유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아픔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유가족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탐색구조작전 중 추가희생이 발생하는 등으로 구조본부가 난관에 봉착해 있던 4월 3일 유가족은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구조작전 포기를 요청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6명에 대해 산화자 처리에 동의하는 등 어려운 시기마다 적극 협력함으로써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한편 해군은 유가족과 1:1의 지원요원을 편성했으며 지원요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사태수습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평시 상황에서 해군 함정의 피격 침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온갖 추측과 가설이 난무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당 및 단체들이 여론을 부추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유가족을 가슴 아프게 했다.

유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함께 사건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인 북한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했다. 국회의 추천으로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특정 위원은 조사에 적극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침몰원인을 왜곡하는 등 일부 언론, 친북성향의 각종 단체들이 쏟아낸 유언비어와 억측은 국민을 혼란케 했다. 심지어 4~5개 단체는 유가족에게 접근해 반정부투쟁에 나서도록 선동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가족이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6개월 후인 9월 24일 유가족협의회 자문위원인 L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 시점이 침몰 당시보다 더 힘든 상황임을 토로했다. "정말 북한의 어뢰공격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함께 "보상금에 대한 주변 인사들의 호기심도 유가족을 무척 힘들게 했다"고 고백했다.

국방부는 해군을 통해 유가족이 처한 입장을 확인해 대통령실과 정책적 교감을 유지하면서 유가족이 해군의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들은 유가족이 외부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정부와 군의 입장에서 사태수습에 앞장서는 데 크게 일조했다.

# 제 3 절 | 생존장병 관리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국민과 정부의 관심은 실종장병의 탐색 및 구조작전에 집중되었다. 그 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생존장병이 퇴원하자 해군은 늦게나마 생존장병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안정화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1. 사건발생 후 조치

천안함 침몰 후 58명의 장병이 사건현장에서 구조되었다. 이들 모두는 구조된 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정신적 · 신체적 치료를 받았다. 그 후 4월 7일 46명이 퇴원해 제2함대사령부 고속정생활관에 머물렀다. 그때부터 제2함대사령부는 의무대에 정신건강치료팀을 편성해 5월 20일까지 생존자를 대상으로 매일 회진 · 투약 · 상담을 계속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시에는 국군수도병원에 치료를 의뢰했다. 이어서 생존장병은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의 안정화프로그램과정에 입소해 2주간의 과정을 수료한 후 〈표 3-7〉과 같이 52명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에 재배치되고 6명은 전역했다.

〈표 3-7〉 생존자 현황(2010. 9. 30 현재) : 총 52명(전역자 부사관 1명, 병 5명 제외)

| 장 교 | | | 부 사 관 | | | | 병 | | | | |
|---|---|---|---|---|---|---|---|---|---|---|---|
| 소계 | 영관 | 위관 | 소계 | 원 · 상사 | 중사 | 하사 | 소계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7 | 2 | 5 | 36 | 9 | 8 | 19 | 9 | · | 3 | 3 | 3 |

## 가. 생존장병 안정화프로그램

생존장병 안정화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통한 건강한 근무자세 유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생존장병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형성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한편, 가족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안정화프로그램은 5월 24일~6월 4일까지 충무공리더십센터에서 합숙으로 시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3-8〉과 같이 2단계로 수행되었다. 그 중 1단계는 생존장병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심신수련활동, 상담심리 치료 등 11일 동안 진행되었다. 2단계는 가족을 동반한 치유로 가족상담, 행복증진 가족리더십 등으로 편성해 3일 동안 진행되었다.

〈표 3-8〉 생존장병 안정화프로그램 편성

| 구 분 | 내 용 구 분 | | 기 간 | 주 관 |
|---|---|---|---|---|
| 승조장병 치유 (11일간) | 리더십 함양 | 셀프 리더십(자기계발) 함양 | 1일 | 리더십센터 |
| | | 팀 리더십 함양 | 1일 | |
| | 심신 수련 활동 | 충무공 · 장보고 전 · 유적지 답사 | 2일 | |
| | | 명상치료 및 숲길 산책(2회) | 1일 | |
| | | 복지기관 봉사활동 | 0.5일 | |
| | | 자연 정화 활동 | 0.5일 | |
| | 상담 심리 치료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과 치료 | 1일 | 군의관 |
| | | 자기표출 · 자기성장 집단 상담 | 2일 | 전문기관 의뢰(*) |
| | | 사랑증진 집단 상담 | 2일 | |
| 가족동반 치유 (3일간) | 가족 상담(배우자) | | 2일 | 전문기관 의뢰(*) |
| | 행복증진 가족리더십(자녀 포함) | | 1일 | 리더십센터 |
| 비 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 | | | |

* 전문기관 : 한국발달상담연구소(소장 김정희, 한국집단상담학회 회장) 등

## 나. 추가적인 조치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생존장병을 환자군 및 고 · 중 · 저 위험군의 4개 등급으로 분

류해 입원 및 심리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변화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평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군병원 정신과를 특성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관리를 위해 의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전역 장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6개월까지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정결과에 따라 완치 시까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2. 시사점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었던 생존장병들에게 유발될 수 있는 각종 정신적·육체적 질환의 치유를 위해 안정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희생장병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군은 그동안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전시에 준하는 대형사건을 겪은 후 생존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화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마련된 안정화프로그램의 단점을 잘 보완해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Trauma)이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부상 및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상태를 말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 신체적인 손상 또는 생명의 위협을 겪은 이후 나타나는 일련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장애, 전장 스트레스 장애, 전투 피로증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같은 질환의 특징은 폐쇄성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발병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며 완치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 제 4 절 | 사건원인 조사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내 · 외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편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조사단을 개편해 민 · 군이 함께 참가하도록 하고 미국 등 외국인 전문가를 통합 편성해 민 · 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조사단장은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 1. 조사단 편성 및 활동

### 가. 민 · 군 합동조사단 편성

국방부는 3월 31일 82명으로 민 · 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4월 12일에는 외국인 24명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대신 한국인을 49명으로 줄여 〈표 3-10〉과 같이 총 73명으로 재편성했다. 그 대신 98명의 지원요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 · 군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돕도록 했다.

민 · 군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은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2일간 운용되었다. 기간 중 4차례(4.7, 4.16, 4.25, 5.20)의 공식적인 조사활동 발표가 있었으며, 6월 14일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목

표를 두었다. 세부 편성 및 운영중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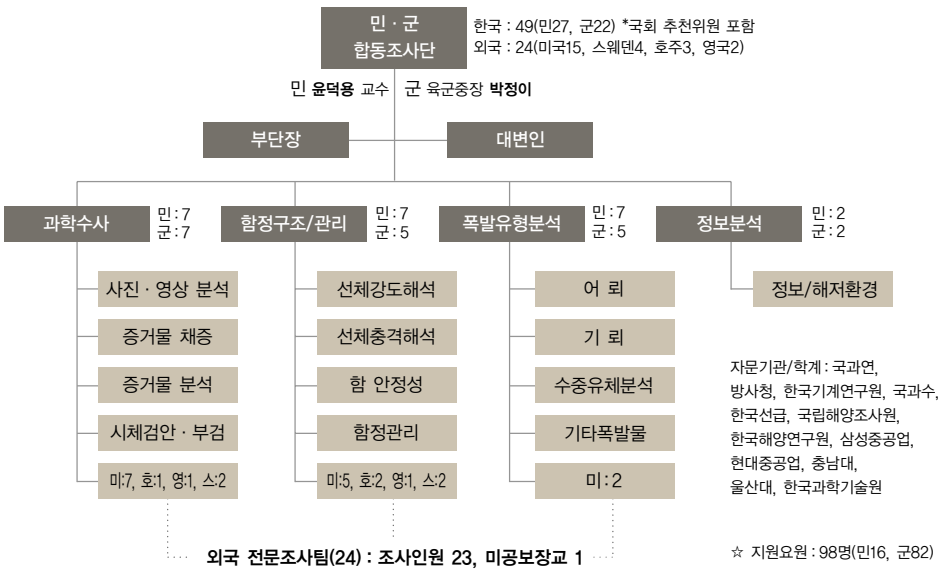
첫째,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 · 군 공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한다.

둘째,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 참여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한다.

셋째, 함체 인양 전과 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넷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으로 침몰원인을 규명한다.

〈표 3-10〉 민 · 군 합동조사단 편성




## 나. 분과별 활동

### 1) 과학수사분과

과학수사분과는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수사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방홍보원 등의 국내전문가 14명과 외국전문가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편성되었다. 세부분야는 사진 · 영상분석팀, 증거물채증팀, 증거물분석팀, 시체검안 · 부검팀 등 4개 팀으로 구분해 활동했다.

각 팀은 함미 인양 전까지 생존자 58명의 진술을 4차례에 걸쳐 청취했다.[66] 이를 기초로 침몰 전 함정 내부의 개인별 위치를 식별한 후 세부배치도를 만들었다. 이어 위치별로 개인별 부상 및 충격 상태를 확인해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열영상관측장비(TOD)의 녹화영상(DVR)을 시간대별로 검토했다. 이어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휴대전화 미소지자 8명을 제외한 96명에 대해 3월 26일 17시부터 24시까지 휴대전화 통화사실을 확인했다. 그 같은 확인과정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천안함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건이 21시 22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사진 · 영상분석팀은 함체가 수면으로 인양될 때부터 전 과정을 촬영하고, 현장채증팀과 함께 절단면, 내 · 외부 흔적 등의 증거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함체의 형상 및 흔적을 분석해 비폭발 요인, 내 · 외부 폭발요인 등의 침몰요인을 판단했다. 또한 천안함 내부에 설치된 영상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자료를 정밀분석했다.

증거물채증팀은 크게 해역 수거물, 함수 · 함미에서 채택된 증거물, 해저 수거물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중 파편으로 의심되는 금속조각, 폭약성분이 흡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 금속성분 및 폭약성분 검출에 필요한 증거물을 중점적으로 채택했다.

증거물분석팀은 증거물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증거물을 분석했다. 화학분석의 경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67]을 이용해 폭약의 성분을 검출했다. 물리분석의 경우 대조물에 의한 비교분석을 위해 북한의 시험용 어뢰 시편(試片) 3점, 천안함의 함체부위별 재질과 폭발부위인 가스터빈실 부품별 성분비 등을 확인했다.

66) 생존장병 증언청취 : 생존장병에 대한 증언청취는 3월 27일, 28일, 31일, 4월 1일 등 4차례에 걸쳐 과학수사분과의 전문가에 의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되었다.

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 :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 이온교환, 고속액체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체를 제외한 물질들을 분리한 후 '질량분석기'를 이용해 분리된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는 분석법이다.

이어 채택된 금속조각에 대해 '주사 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형 X선 분석법'[68]을 통해 채취된 금속의 재질을 분석했다. 확보된 시편성분과 비교해 관련성이 없는 금속은 배제하고, 어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성분으로 판단되는 금속은 계속 검토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계속했다.

시체검안 · 부검팀은 민 · 군 법의학요원이 합동으로 바지선 및 독도함에 위치해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을 지도했다. 그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검안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면서 침몰원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2) 함정구조 · 관리분과

함정구조 · 관리분과는 합참,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학계(울산대, 충남대), 조선소(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선급) 등 국내의 전문가 12명과 외국의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조사요원과 지원요원 3명으로 편성되었다. 세부 분야는 함체 기본강도해석, 수중폭발 함체충격해석, 함정의 안정성, 함정관리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활동했다.

함체 기본강도(强度)해석 분야는 최신 구조해석기법을 활용해 25~30년간 함정을 운용하는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해상상태(파고 10.06m)에서 천안함의 함체 구조강도와 안정성을 분석했다.

수중폭발 함체충격해석 분야는 수중폭발해석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인력 및 계측기를 활용해 함수 · 함미의 함체파손 및 변형 상태를 정밀 계측 · 분석했다. 폭발유형(폭약크기 · 폭발위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체구조에 대한 1차원 '휘핑(whipping)해석'[69]을 도입했다. 이어 폭발유형분석분과에서 도출한 폭발유형을 적용한 '3차원 수중폭발 함체충격해석'을 통해 천안함의 파괴경위를 공학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다.

함정의 안정성 분야에서는 천안함의 복원성 설계기준과 복원성능을 분석했다. 그 과정을 통해 천안함이 손상되지 않은 정상상태에서는 복원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68) 주사 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형 X선 분석법(SEM-EDX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 대상 시료에 전자를 주사 후 방출되는 전자의 파장을 분석, 그 결과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분석법으로 현미경을 이용해 시료에 함유된 원소성분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69) '휘핑'(whipping)이란 선박이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할 때 슬래밍, 청수 등 물결 또는 파도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함체의 과도한 상하진동을 말한다.

했다. 이어 함체가 절단된 후 함수 · 함미에 대한 각각의 복원성을 분석했다.

함정관리 분야는 천안함의 정비내역과 함체의 손상상태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 과정을 통해 함체 노후화로 인한 피로파괴(fatigue fracture)[70], 좌초(坐礁), 충돌 등 비폭발 원인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분석했다.

### 3) 폭발유형분석분과

폭발유형분석분과는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국내전문가 12명과 외국전문가 2명 등 총 14명으로 편성되었다. 세부분야는 어뢰, 기뢰, 유체분석, 기타 폭발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활동했다.

침몰 원인분석을 위해 함체 인양 전에는 탄약고 또는 연료탱크 폭발, 디젤엔진 및 가스터빈 등의 내부폭발 가능성을 정밀분석했다. 함체 인양 후에는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에 의한 수면 또는 수상폭발 가능성, 어뢰 또는 기뢰,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수중폭발 가능성 및 기타 급조폭발물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아울러 현장 확인 · 조사를 병행해 침몰원인을 분석했다.

그 과정을 통해 사용가능 무기체계를 어뢰와 기뢰로 압축했으며, 인양된 함체의 절단면과 흡착물질 분석, 함체절단 시뮬레이션 등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비접촉 수중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4) 정보분석분과

정보분석분과는 정보본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의 국내연구자 등 4명(민2, 군2)의 조사요원과 12명의 지원요원으로 편성되었다. 세부분야는 해양환경분석, 북한 도발형태 분석, 기술정보 분석, TOD 영상분석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활동했다.

침몰원인 분석을 위해 정보분석분과는 먼저 백령도 근해의 해저장애물(암초) 및 조류의 특성을 분석했다. 해저지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했으며, 조류는 군의 작전용 조류

70) 피로파괴(fatigue fracture) : 어떤 물체에 반복해서 힘을 가하는 동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균열이 발생해 절단되거나 또는 절단까지 이를 수 있는 파손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의 초과 또는 노후화에 의한 파손은 전형적인 피로파괴라고 할 수 있다.

예보체계를 이용해 분석 · 검증했다. TOD 영상분석은 사건 전 · 후로 구분해 정밀분석 했다. 북한의 유형별 도발 가능성 분석은 침투자산 및 무장별로 구분했다. 기술정보 분석은 천안함의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물 채택활동을 통해 과학수사분과를 지원했다.

## 다. 조사 활동 및 발표

### 1) 함체인양 전 조사활동 (3. 31 ~ 4. 14)

합동조사단은 함체 인양 전 분과별 조사활동으로 천안함의 작전경과 및 사건 발생 후 조치과정을 정밀분석하는 한편, 침몰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조사 · 분석했다.

그 중 내부적 침몰요인으로는 탄약고 · 연료탱크 · 엔진결함 등에 의한 내부폭발 요인과 함체 피로파괴 요인을 조사 · 분석했다. 외부적 침몰요인은 기뢰와 어뢰 폭발에 의한 요인과 함께 삼각파도 또는 암초에 의한 좌초, 외부물체와 충돌 등의 요인을 조사 · 분석했다.

한편 함체 인양 전까지 수집된 생존자의 피복류(근무복 등 9점)를 감정하면서 해상 및 백령도 해안에서 수집된 수거물 등을 대상으로 화재흔적을 조사했다.

### 2) 함미 인양 후 조사활동 (4. 15 ~ 4. 23)

합동조사단은 함미 인양 전 현장조사팀을 57명으로 편성해 4월 14일 현장의 독도함에 전개했다. 이어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됨에 따라 다음날인 16일 함미 인양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인양된 함체에 대한 정밀감식으로 29종 147점의 증거물을 채택했다. 또한 3차원 레이저 스캐닝으로 함미의 절단면을 감식했으며, 현장에서 채택된 절단부위 내장재 등 10점에 대해 화약류 및 알루미늄 성분 검출여부를 감정했다. 이때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함미의 손상부위를 정밀 측정해 손상위치를 계측하고 변형상태를 조사했다.

3) 함수 인양 후 조사활동 (4. 24 ~ 5. 19)

합동조사단은 함수 인양에 대비해 4월 23일 현장조사팀을 50명으로 편성, 백령도에 전개했다. 4월 24일 함수가 인양됨에 따라 현장조사 후 4월 25일 인양된 함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함미와 함수를 동시에 조사 · 분석하면서 함수 절단면에 대한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했고, 4월 26일 미국 측의 수중폭발 내충격(Hull whipping) 해석결과를 토의했다. 또한 모의실험 즉,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폭발물의 폭발위치와 위력을 분석했다.

4) 어뢰 추진동력장치 수거(5. 15)

5월 10일(월)부터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해저 정밀탐색을 계속하던 중 5월 15일(토) 어뢰 추진동력장치인 추진모터와 프로펠러 등을 수거했다. 수거한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북한이 제작한 어뢰의 설계도면과 크기 및 모양을 비교했다. 이어 추진동력장치와 천안함 함체의 흡착물질 성분을 분석했다. 또한 추진동력장치 뒤쪽 내부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를 2003년 포항 근해에서 습득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에 '4호'라고 쓴 표기방법과 비교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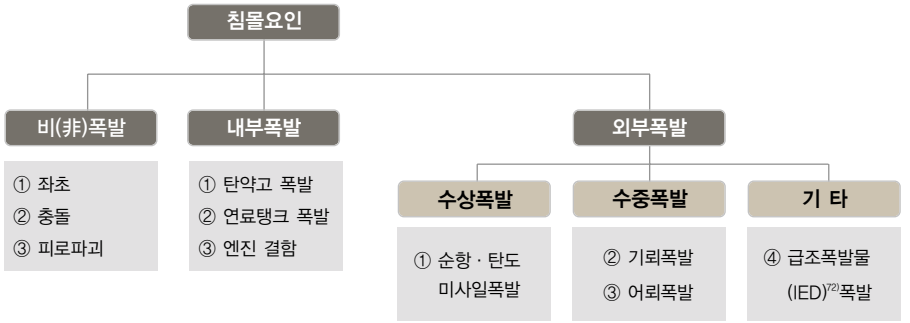
5) 조사결과 발표(5. 20)

5월 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내 ·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윤덕용 교수)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의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2. 침몰요인별 가능성 분석

조사활동은 분야별 · 단계별 조사 · 분석을 통해 천안함의 침몰요인을 〈표 3-11〉과 같이 비폭발, 내부폭발, 외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침몰요인별 분석은 국제해사기구(IMO)[71]의 분석틀을 적용했다.

〈표 3-11〉 침몰요인




## 가. 비(非)폭발

비폭발 침몰요인은 〈표 3-11〉과 같이 ① 좌초, ② 충돌, ③ 피로파괴 등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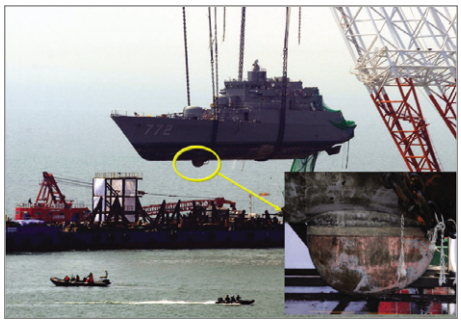
### 1) 좌초(坐礁)

'좌초'란 배가 암초 등에 얹혀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선박이 좌초로 손상을 입게 되면 선저부에 함정 길이방향으로 찢김(cutting)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양된 천안함의 함체 손상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좌초와 연관되는 함저부 길이방향 찢김현상이나 함체의 긁힘현상이 없었다.

함저부에 설치된 소나돔 및 프로펠러 등의 손상도 없었다. 인근해역에 암초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접촉 수중폭발 시 발생하는 함저 외판 패널의 소성처짐(dishing) 현상[73]이 관찰되어 암초 또는 다른 좌초 원인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71)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72)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
73) 소성처짐(dishing) 현상 : 폭발에 의한 충격파 압력과 버블(bubble)에 의한 압력으로 함체 내부의 종횡방향 구조재 사이의 외피(hull) 강판이 접시모양으로 휘는 현상을 말한다.



천안함 인양 시 소나돔

천안함 인양 후 프로펠러

### 2) 충돌

천안함이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접촉흔적 및 잔류물이 없었고 사건 당시 인근해역에서 활동한 선박도 없었다. 생존자 증언에도 충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반면 비접촉 수중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함저 파손형태와 보강판 패널(panel)의 소성처짐 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손상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함저 외판 패널의 소성처짐(디싱) 현상

### 3) 피로파괴(fatigue fracture)

천안함의 피로파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로 볼 때 함체구조에 균열 현상이 없었고, 피로파괴가 발생할 때 절단면에서 관찰되는 물결무늬 모양의 흔적(beach mark)이 없었다. 함체 부식률을 초음파로 조사한 결과 아래 〈표 3-12〉와 같이 3.22%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기타 피로파괴와 연관된 징후나 증언도 없었다. 반면 비접촉 수중폭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체 손상형태와 함저 보강판 패널의 소성처짐 즉 취성파괴

(brittle fracture)[74]현상이 관찰되어 피로파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표 3-12〉 함체 초음파 검사 결과

| 구 분 | 좌현(평균 두께 : mm) | | | 우현(평균 두께 : mm) | | | 함체 평균 부식률 (%) |
|---|---|---|---|---|---|---|---|
| | 건조 시 함체 두께 | 초음파 측정 두께 | 평균 부식률(%) | 건조 시 함체 두께 | 초음파 측정 두께 | 평균 부식률(%) | |
| 디젤 기관실 | 9 | 8.75 | 2.77 | 9 | 8.67 | 3.66 | 3.215 |
| | 11 | 10.59 | 3.72 | 11 | 10.63 | 3.36 | 3.54 |
| | 11 | 10.68 | 2.90 | 11 | 10.55 | 4.09 | 3.495 |
| | 15 | 14.59 | 2.73 | 15 | 14.61 | 2.60 | 2.665 |
| | | | 3.03 | | | 3.42 | 3.22 |

## 나. 내부폭발

내부폭발 침몰요인은 천안함의 내부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침몰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표 3-11〉과 같이 ① 탄약고 폭발, ② 연료탱크 폭발, ③ 엔진 결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1) 탄약고 폭발

천안함의 탄약고 폭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함체가 인양된 후 탑재탄약을 하역해 실셈한 결과에 의하면 유실된 탄약은 5.56mm 탄약, 소형폭뢰[75] 신관, 채프탄(R-BOC)[76]이었다. 상부갑판에 위치한 탄약들은 각각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해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각 탄약의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자폭가능성이 없으며, 자폭하더라도 노출부분에 국부적인 피해를 줄 수는 있으나 함체파괴는 불가능했다. 함저 부분에 저장된 함포탄은 폭약의 총량을 고려할 때 함체를 파괴할 수는 있으나 함수 또는 함미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함체 중앙을 절단할 가능성은 없었다. 이와 같이 함저부 및 탄약고에서 폭발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양된 탄약에 대한 실셈을 통해 40mm 및

74) 취성파괴(brittle fracture) : 어떤 재료가 소성변형(塑性變形)이 거의 없이 일으키는 파괴로, 예를 들어 유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깨지는 것처럼 단번에 일어나는 파괴를 말한다. 참고적으로 소성변형은 외부의 힘이 작용해 변형된 고체가 그 힘을 없애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변형을 말한다.

75) 항공기 또는 수상함이 수중의 잠수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수중 폭탄을 말한다.

76) 채프탄(R-BOC : Rapid Bloom Offboard Chaff) : 적의 유도탄 기만체계, 채프탄은 다량의 알루미늄조각(은박지)을 방출해 아군 함정의 단면적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공격해오는 적의 유도탄을 허위표적으로 유도해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장비다.

76mm 탄약 전량이 회수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탄약고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수된 40mm 탄약상자

회수된 76mm 탄약상자

### 2) 연료탱크 폭발

천안함의 연료탱크 폭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생존장병의 증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료탱크 폭발 시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인 화재나 불기둥을 보았다는 장병은 없었다.

함체 인양 후 조사결과 화재에 따른 그을음 흔적이나 연료탱크가 폭발한 흔적이 없었다. 함미의 탱크는 물론 적재했던 연료도 온전한 상태였으며, 함수 공급탱크 2개가 위쪽으로 솟아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의 변형이 없었다. 따라서 연료탱크 폭발은 가능성이 없었다.

### 3) 엔진 결함

천안함에는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이 장착되어 있다. 그중 디젤엔진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정상적인 창정비 지원으로 운행상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천안함은 저속 주행하고 있어 엔진 과부하의 위험성은 없었다. 또한 디젤엔진은 근본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엔진의 과부하로 인해 구성품의 파손과 파편의 비산은 가능하지만 엔진실 내부에 국한되므로 폭발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과 엔진 폭발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직전의 가스터빈실(CCTV 영상)

한편 천안함의 가스터빈 역시 내구연한은 경과되었지만 분해정비주기 대비 25% 운행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침몰 당시 가스터빈은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폭발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가스터빈의 구조적 특성상 폭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스터빈의 결함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은 있었지만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어 화재가 함체 절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스터빈은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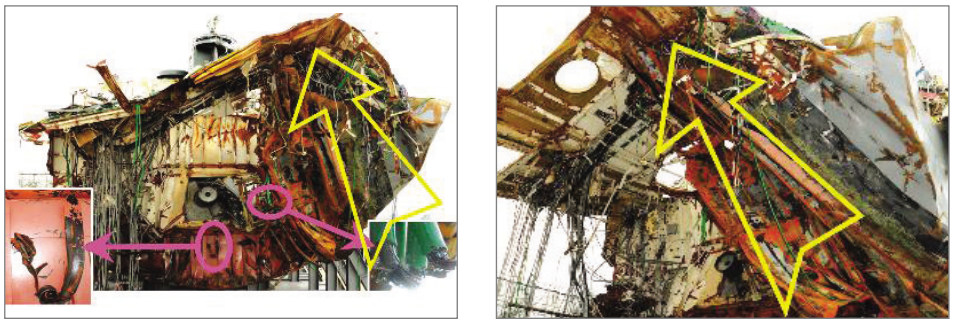


## 다. 외부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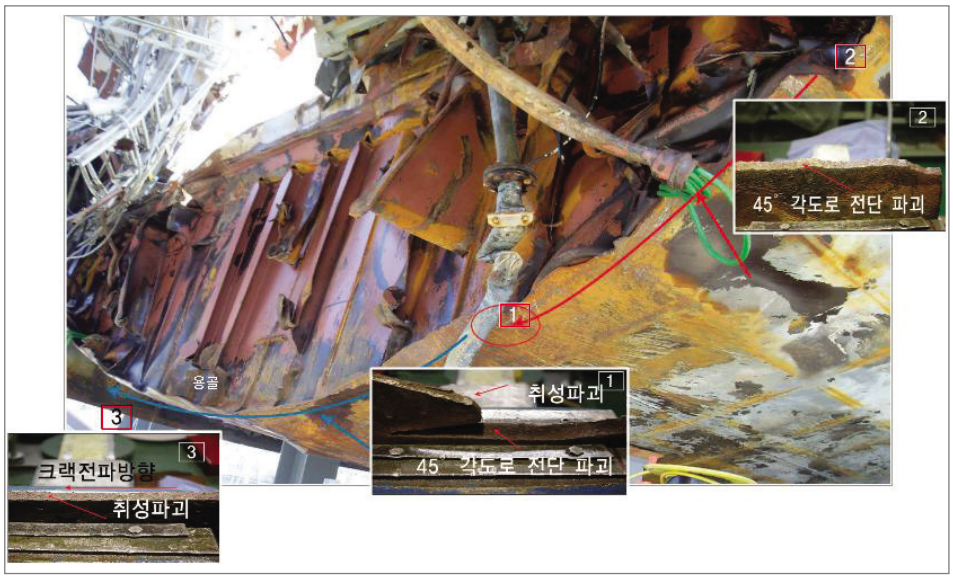
외부폭발 침몰요인은 천안함의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몰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표 3-11〉과 같이 ① 수상폭발, ② 수중폭발, ③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1) 수상폭발 : 순항 및 탄도미사일 폭발

수상폭발 수단으로는 순항(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함포 및 해안포 등을 들 수 있다. 천안함의 함체를 검사한 결과로 볼 때 휘어짐에 의한 손상은 비접촉 수중폭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흘수(吃水)선 상부 폭발 시 나타나는 파공(破空)이나 파쇄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흔적이나 상부갑판에서 공격무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 수상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언이나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안함의 침몰과 수상폭발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함미부분 좌현 함저 하단에서 우현 상부 방향으로 절단된 모습




천안함 절단면 파괴특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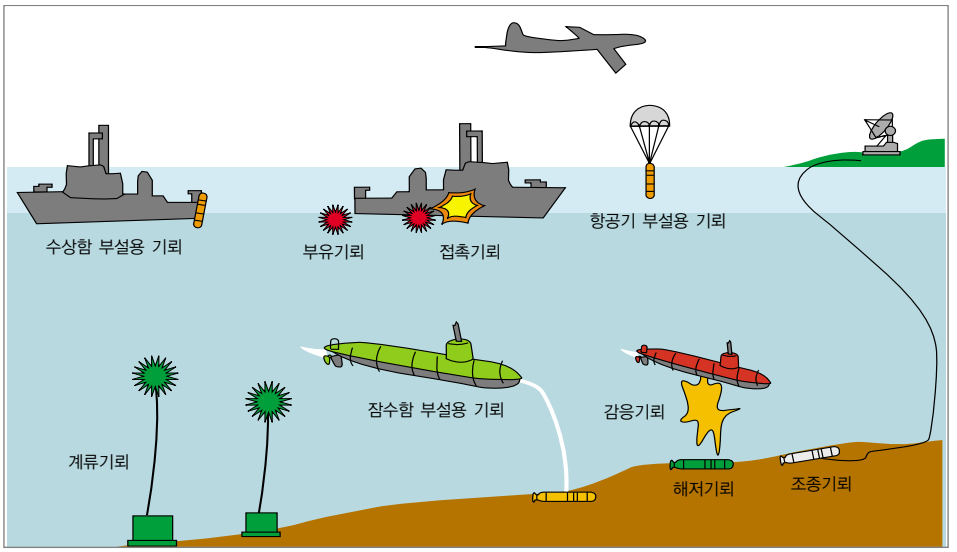
### 2) 수중폭발 : 기뢰(부유, 계류, 해저) 폭발

기뢰는 항만이나 해역에 대한 봉쇄 또는 방어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군무기체계 중 하나이며 '함정의 흘수선 밑이나 근처에서 폭발해 함정에 손상을 주는 무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뢰는 어뢰와 같이 선박의 가장 취약한 아래 부분을 공격하지만 타격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접근하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어뢰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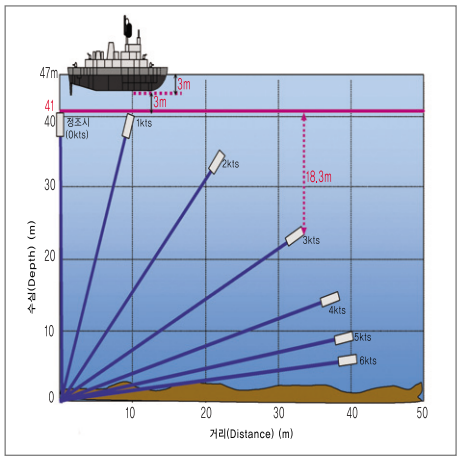
기뢰는 〈그림 3-20〉과 같이 부설수단에 따라 항공기 · 수상함 · 잠수함 부설용 기뢰로 구분되며, 부설위치에 따라 부유기뢰, 계류기뢰, 해저기뢰로 구분된다. 또한 접촉방식에 따라 접촉기뢰, 감응기뢰, 조종기뢰로 구분된다.

〈그림 3-20〉 기뢰의 종류




그중 천안함의 절단면을 고려할 때 해저의 감응기뢰 또는 해수면의 부유기뢰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계류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계류기뢰의 경우 천안함이 피격된 백령도 부근 해역과 같이 3~5노트의 빠른 유속, 4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 47m의 깊은 수심 등은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3-21〉 조류속도와 계류기뢰




〈그림 3-2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류 속도가 3노트였다고 가정한다면 계류기뢰가 정조(停潮) 시와 비교해 18.3m 아래로 눕게 되기 때문에 천안함과 접촉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일 천안함은 불규칙 항로를 유지하면서 사건발생 직전까지 동일 지점을 10회 이상 항해했음에도 이상이 없었다. 또한 계류기뢰가 폭발할 경우 남

게 되는 앵카 및 계류색(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접촉식 계류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수중폭발 :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원인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1970년대 후반 우리 해군이 백령도 인근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육상조종기뢰(MK-6)가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해군은 197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5개 도서 부근에 육상조종기뢰를 설치했다. 그 후 기뢰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해군은 1985년 말 도전선과 조종상자를 제거해 불능화시켰다. 따라서 육상조종기뢰의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군은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45명의 잠수요원을 투입해 일부의 기뢰 본체를 회수해 처리했다. 당시에도 그것은 단순히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뢰의 폭발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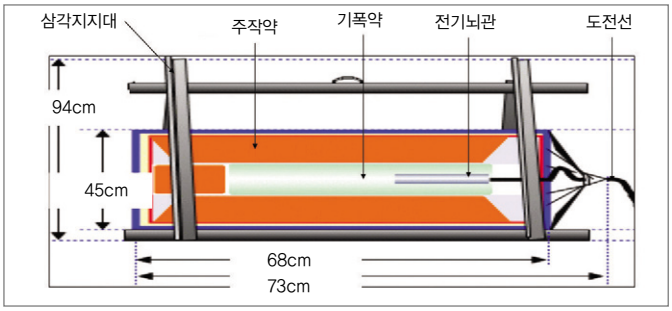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육상조종기뢰의 폭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폭발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수중폭발 관련 내충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과학적인 분석을 계속했다. 분석을 통해 사건이 발생했던 해역에 육상조종기뢰가 남아있었고 그 기뢰가 정상적으로 폭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심 47m에 있는 폭약량 136kg의 육상조종기뢰로는 함체의 절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저에 잔류하고 있던 전원공급용 도전선이 함정 스크루에 끌려와 폭발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도전선이 강철과 구리선으로 구성되어 쉽게 감길 수 없고 중량(10m 기준 6kg)이 무거워 해수면 부근까지 부상이 곤란하고, 폭발되더라도 스크루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함미부분이 정상 상태임을 감안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육상조종기뢰(MK-6)는 바닷물 속에 설치된 후 30년이 지난 사건발생 시점에서 자연기폭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폭발되더라도 폭약량(136kg)이 작아 47m의 깊은 수심에서는 함체를 절단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없었다. 도전선의 무게를 고려할 때 기뢰가 부상해 스크루에 감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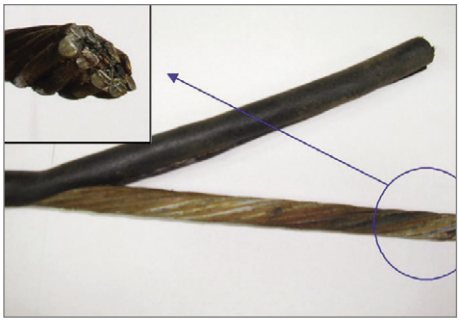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22〉 육상조종기뢰(MK-6) 형상 및 제원




- 길이 : 68cm
- 직경 : 45cm
- 무게 : 190kg
- 폭약량 : TNT 136kg

〈그림 3-23〉 삼각대에 설치된 육상조종기뢰(MK-6)



기뢰연결 도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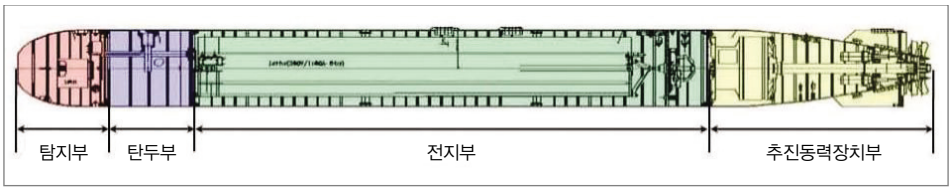
철제 삼각지지대 용접 후



### 4) 수중 폭발 : 어뢰 폭발

어뢰는 함정, 항공기 및 잠수함에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 운용되며, 중어뢰와 경어뢰로 구분된다. 어뢰는 〈그림 3-24〉와 같이 탐지부, 탄두부, 전지부(또는 연료부), 추진동력장치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4〉 일반적인 어뢰의 구성



어뢰의 구성품 중 탐지부는 어뢰가 수중에서 음향신호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는 장치로 수동방식과 능동방식이 있다. 탄두부는 목표물을 폭파시킬 수 있는 폭약이 내장된 부분이다. 전지부와 추진동력장치부는 어뢰의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기 추진방식과 엔진 추진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어뢰의 표적탐지방식은 〈표 3-13〉과 같이 직주방식, 음향탐지방식, 항적탐지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표 3-13〉 어뢰의 탐지방식과 특성

| 탐지방식 | | 특 성 |
|---|---|---|
| 직주방식 | | • 탐지기능이 없음<br>• 직진 또는 지그재그 궤적으로 주행 |
| 음향탐지 방식 | 수동 탐지 | • 표적함의 추진계통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분석해 탐지<br>• 수상함의 탐지에 주로 사용 |
| | 능동 탐지 | • 어뢰에서 신호를 발사해 표적함에서 반향되는 신호를 분석 탐지<br>• 잠수함 탐지에 주로 사용 |
| 항적탐지방식 | | • 표적함의 기동에 의해 발생되는 항적을 탐지<br>• 어뢰의 상부에 항적센서를 장착하고 음향신호를 송수신해 항적에서 산란되는 음향신호를 분석해 탐지<br>• 수상함의 항적탐지에 사용 |

그 중 직주방식은 탐지기능이 없는 충격신관을 주로 사용하며, 직진 또는 사전에 입력된 명령에 따라 지그재그 궤적으로 주행한다. 음향탐지방식은 수동탐지와 능동탐지로 구분되는데, 수동 음향탐지방식은 표적함의 추진계통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분석해 탐지하며 수상함 탐지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능동 음향탐지방식은 어뢰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표적함의 함체에서 반향되는 신호를 분석해 탐지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탐지에 주로 사용된다. 항적탐지방식은 수상함의 프로펠러 및 함체에서 발생되는 항적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어뢰폭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폭발물은 정확히 천안함의 함체 중앙으로 유도되어 가스터빈실 아래 좌현 3m에서 근접 폭발했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함체가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능성 있는 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음향 · 항적추적어뢰로 판단했다.[77]

## 3. 비접촉 어뢰 폭발 판단 근거

### 가. 형상 및 흔적 분석

천안함의 함체 형상 및 흔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위치, 폭발의 크기와 방향, 함체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했다.

① 인양된 함수와 함미의 전체적인 모양과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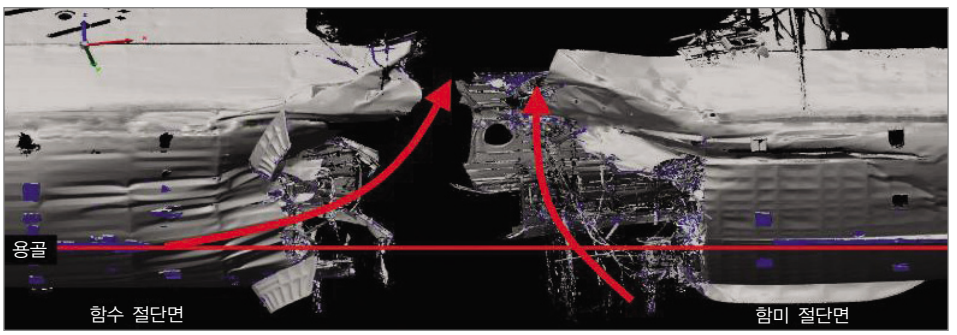
② 함체구조가 변형된 형상 및 절단면의 형태

③ 함체의 흔적, 즉 밀리고, 눌리고, 잘리고, 긁힌 것과 같은 미세한 흔적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함체 손상부위를 정밀계측해 분석한 결과, 충격파와 버블 효과로 인해 함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어 있었다. 외판 역시 급격하게 꺾여 있었고, 함체에는 파단(破斷)된 부분이 있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 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開口部) 주위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다. 절단된 가스터빈실의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다.








함수와 함미 절단부위에 대한 3차원 레이저 스캐닝

77) 천안함의 침몰원인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자살특공대(SDV, Seal Delivery Vehicle)에 의한 공격가능성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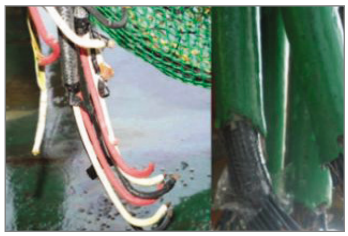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함수 · 함미의 함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강력한 수중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함정 내 · 외부의 표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수중 폭발의 전형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함정의 안정기(stabilizer)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이다. 둘째, 함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이다. 셋째,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이다. 넷째, 가스터빈실 함체에 나타난 구형(球形)압력의 흔적이다.

이상과 같은 흔적들은 수중 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함 안정기 압력 흔적

함저 수압 및 버블 흔적



열흔적 없는 전선 절단

구형 압력 흔적

## 나. 증거물 분석

채집된 증거물은 크게 해역 · 해저 수거물, 함체(함수 · 함미)에서 수거된 증거물 등 3가지로 구분해 확보했다. 그 중 1단계로 함미 인양(4. 15) 시까지 수거 및 확보한 생존자 피복, 해상수거물, 함미부위에서의 채택된 증거물 626점 중 219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로 옥토겐(HMX)[78] 2개소 12.63ng, 헥소겐(RDX)[79] 2개소 2.9ng을 검출했으며, 금속성분으로 알루미늄(Al)과 알루미늄합금 6점을 식별했다.

2단계로 함수 인양(4. 24)시까지 함수와 연돌 부위에서 수거된 증거물 98점을 분석해 HMX 10개소 123.83ng, RDX 4개소 67.69ng, TNT 2개소 11.7ng을 검출했다.[80]

3단계로 추진동력장치 및 가스터빈 인양(5. 19)시까지 발전기, 가스터빈실, 어뢰 추진동력장치 등에서 수거한 증거물 40점을 분석한 결과 HMX 16개소 391.45ng을 검출했다.

〈표 3-14〉 채택된 증거물 감정 현황

| 구 분 | 계 | 섬유류 | 금속류 | 합성수지 | 석면 | 토양 | 거즈 | 기타 |
|---|---|---|---|---|---|---|---|---|
| 계** | 357 | 33 | 67 | 31 | 34 | 42 | 96 | 54 |
| 금 속 | 164 | 7 | 67 | 11 | 3 | 25 | 35 | 16 |
| 폭 약 | 311 | 33 | 41 | 25 | 31 | 31 | 96 | 54 |

** : 중복된 숫자를 차감한 수치임

이와 같은 증거물 감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천안함은 HMX(28개소 527.91ng), RDX(6개소 70.59ng), TNT(2개소 11.7ng)가 혼합된 폭약이 들어있는 수중무기에 피격되어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생존 장병 증언 분석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에 1~2회의 폭발음을 청취했으며, 다수 인원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화염 · 불꽃 · 물기둥을 목격한 생존자 또는 화상환자는 없었다.

그 외에 골절 및 타박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 생존자 다수가 침몰원인을 어뢰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불빛을 목격하고 소음을 청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8) 옥토겐(HMX : High Molecular Weight)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나이트로아민 고폭발물이다. 화학적으로 RDX와 관련되어 있다.
79) 핵소겐(RDX :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은 시클로나이트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약 TNT보다 폭발력이 1.6배 크고 점화속도는 1.3배 빠른 강력한 폭약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부터 전쟁무기로 사용되었다.
80) 나노그램(nanogram, 약어 ng) : 미터법의 질량단위로 10억분의 1그램을 말한다.

## 라. 생존장병 환자 상태 및 시신 검안

생존한 환자의 상태와 시신을 검안한 결과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다. 생존 환자는 골절, 열창[81] 및 타박상이 다수였다. 시신의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적었으며, 정황을 고려할 때 전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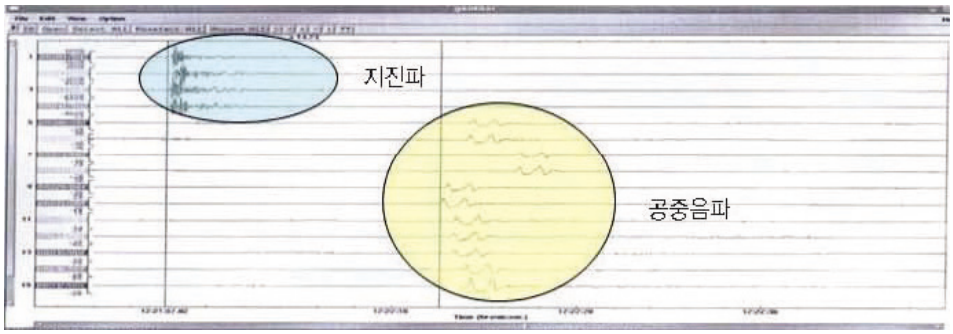
특히 사망자들이 침실, 휴게실, 화장실 등에서 체육복, 근무복, 속옷 등 평상시 일과 이후의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볼 때 정상적인 일상생활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생존 환자와 다수의 시신에서 좌 · 우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함체와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골절, 열창 및 좌상[82] 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버블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과 일치했다.

## 마. 폭발 유형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측정한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다. 그리고 수중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

〈표 3-15〉 사건 당일 감지된 지진파 및 음파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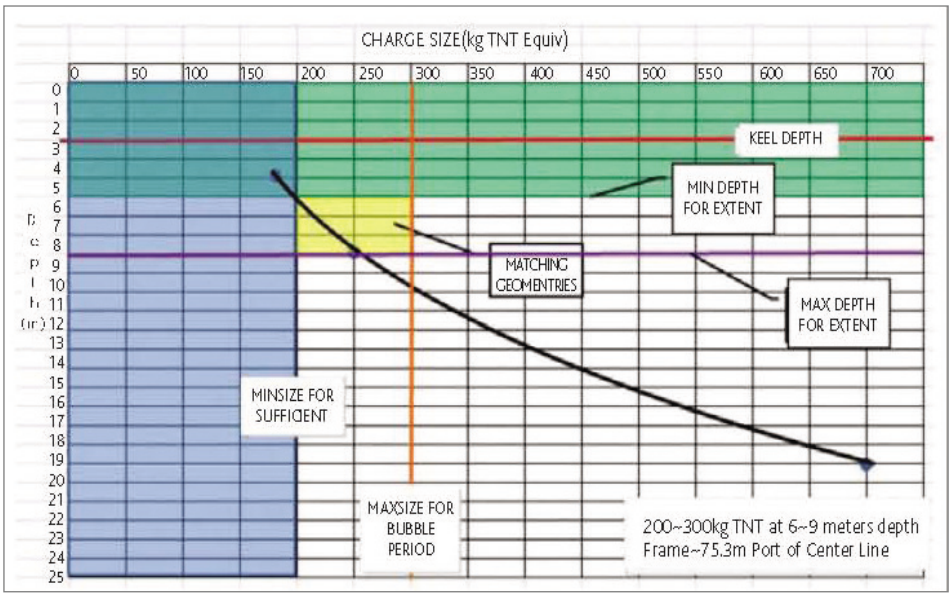

81) 열창(裂創) : 열상(裂傷)과 같은 말로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말한다.
82) 좌상(挫傷) : 외부로부터 받은 둔중한 충격으로 인해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내부의 조직이나 내장이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

폭발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1차로 미국팀이, 2차로 한국팀이 각각 시뮬레이션(simulation) 실험을 했다.

그 중 미국팀의 1차 실험 결과에 의하면 천안함과 유사한 손상을 가능케 하는 폭발의 폭약량은 TNT 폭약량 200~300kg,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하단에서 좌현 3m, 수심 6~9m로 판단되었다.

한국팀의 2차 시뮬레이션에 의한 폭발유형 분석 결과 함수·함미 절단면 분석을 통해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하단에서 좌현 3m 부근으로, 폭발위력은 TNT 250~360kg, 폭발수심은 6~9m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16〉 미국팀의 천안함 폭발 유형판단 실험 결과[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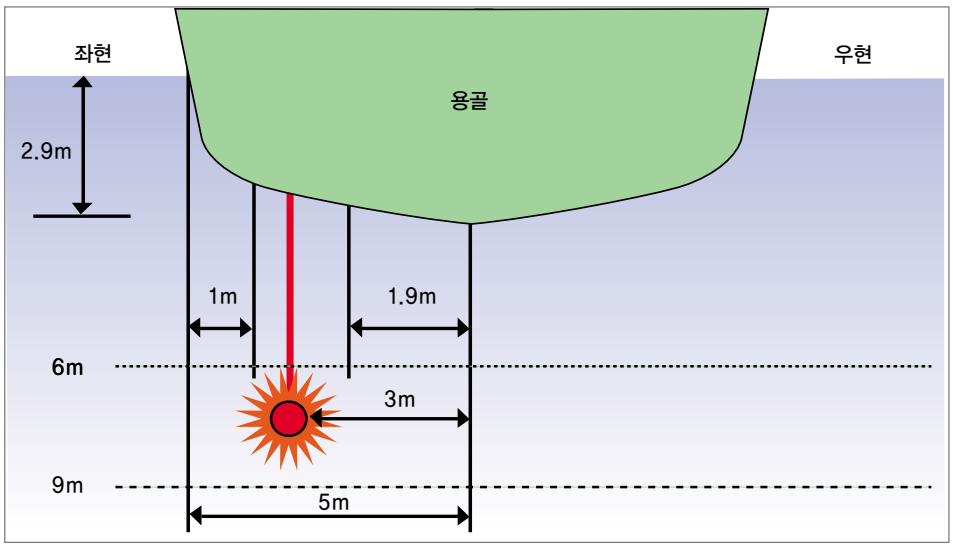



흡착물질 분석결과 천안함 함체와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흡착물질은 동일성분이며, 대부분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흡착물질은 알루미늄 첨가 수중 폭약의 폭발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83) 미국팀에서 제시한 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참고적으로 표의 용어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Depth : 수심, Charge Size : 폭약량, Keel Depth : 흘수, Min Depth for Extent : 최소 수심, Matching Geometries : 조건충족범위, Minisize for Sufficient : 버블주기에 상응하는 최소 폭약량, Maxsize for Bubble Period : 버블주기에 상응하는 최대 폭약량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고성능 폭약 250kg이 탑재된 어뢰가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좌현으로 3m 떨어진 지점에서 비접촉 폭발하면서 침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5〉 폭발 가능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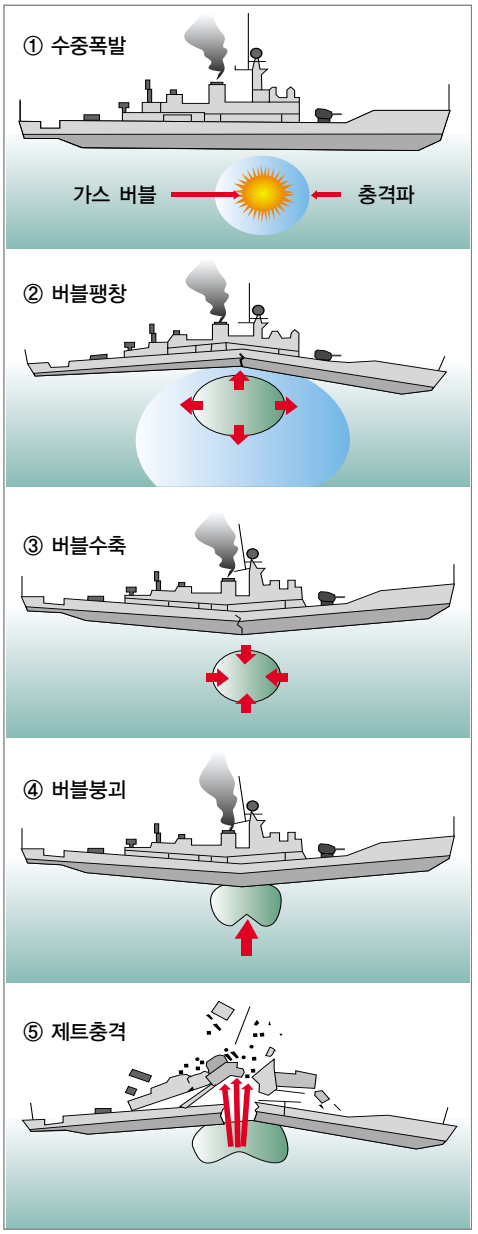



### 바. 수중폭발 함체충격 해석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한 3차원 탄소성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근접 수중폭발 조건, 즉 TNT 폭약 360kg이 수심 7m 및 9m에서 각각 폭발할 경우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로 TNT 폭약 360kg이 수심 7m에서 폭발할 경우 천안함의 실제 손상 상태와 매우 유사한 손상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3-26〉 충격파 및 버블효과




〈그림 3-26〉에서 제시된 '충격파 및 버블효과'와 같이 최초 충격파가 도달해 'Punching Shear'[84]라고 불리는 전단(剪斷)현상에 의해 가스터빈실 좌현 함저 외판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어 버블의 팽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 다시 위쪽으로 극심하게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예측된 좌현쪽의 손상결과는 3D레이저 스캐닝에 의해 얻은 실제 손상상태와 정성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다.

또한 실제 가스터빈 받침대와 발전기 받침대,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함저 외판 및 우현 외판이 분리되지 않고 붙은 채로 떨어져 나간 것도 해석의 파괴양상과 일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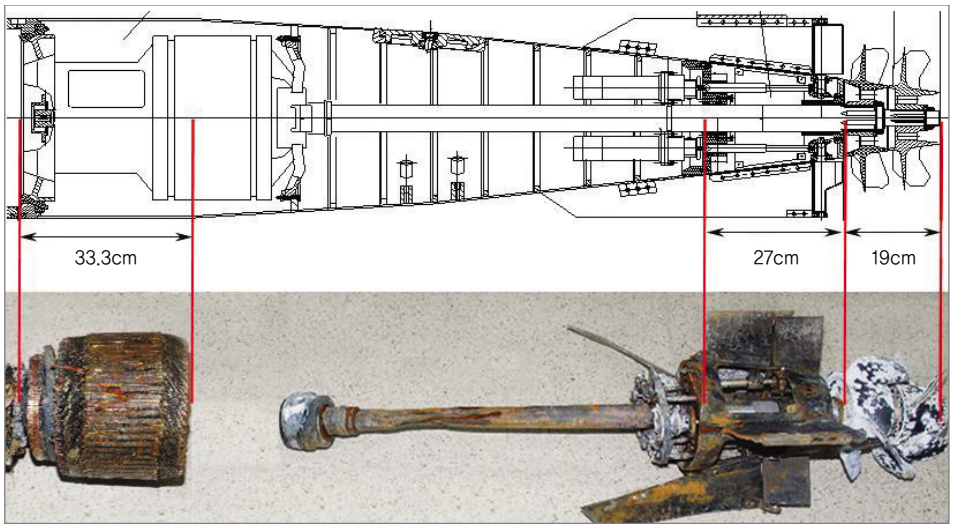
84) Punching Shear(전단현상) : 물체 단면의 일정부분에 수직방향으로 큰 힘이 급격하게 작용하여 물체를 절단하는 현상을 말한다.

## 사. 어뢰 추진동력장치 분석

민 · 군 합동조사단은 특수그물망을 이용해 침몰해역의 잔해물을 수거 중이던 5월 15일 침몰해역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외부폭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물을 수거했다. 〈그림 3-27〉과 같이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이다.

수거된 추진동력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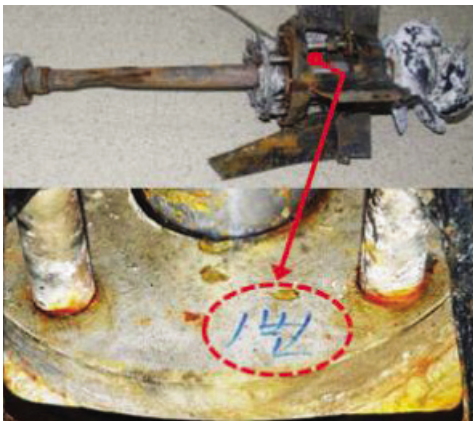
〈그림 3-27〉 CHT-02D 어뢰 설계도와 증거물 크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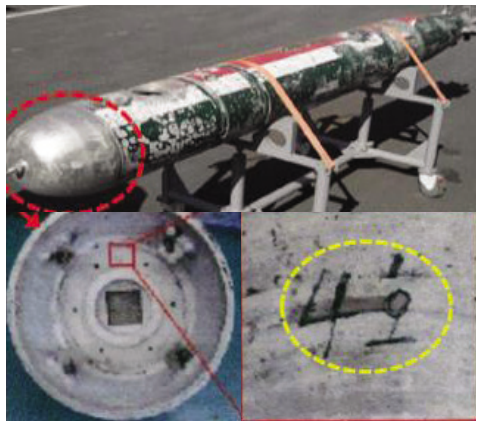

또한,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수집된 흡착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천안함 함체에서 수집된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진체 후부 안쪽에 표기된 '1번' 이라는 한글표기는 2003년에 포항 근해에서 습득된 북한의 시험용 어뢰 표기방법과도 유사했다.

어뢰 추진동력장치 및 북한 경어뢰 한글표기




추진체 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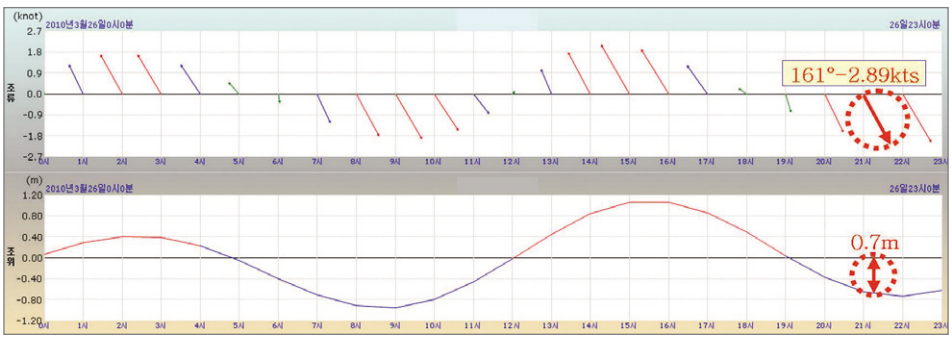
2003년 포항 근해에서 습득한 어뢰 해드캡

## 아. 침몰해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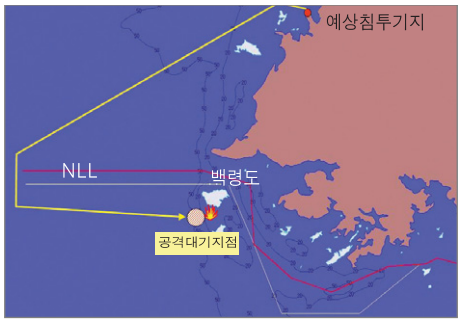
평상시 백령도 근해 조류는 최대 5.3노트로 강한 편이지만 사건 발생시각(26일 21:22)의 조류는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2.89노트로 규명되었다. 조류가 북한 잠수함(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속도 및 항해형태(스노클 · 수중) 조정을 통해 제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동조사단과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은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 및 도주경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천안함을 공격했던 북한의 잠수함(정)은 〈그림 3-28〉과 같이 백령도 서쪽 외해로 우회하는 경로를 따라 침투해 천안함을 공격한 후 같은 경로를 따라 복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운용 시 어뢰 속도(최소 30노트 이상) 및 유도방식(음향 · 항적추적)을 고려할 때 조류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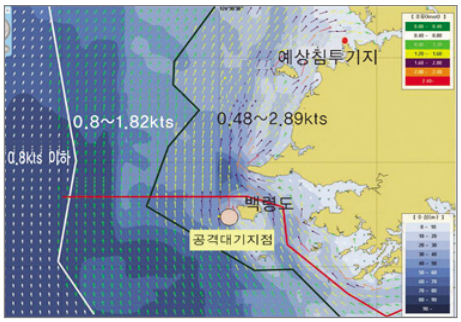
〈표 3-17〉 사건 당일 (2010. 3. 26) 조류 및 조위도



〈그림 3-28〉 북한 잠수함(정) 외해 침투 시 예상 침투로 및 조류 속도




예상침투로




조류(속도)

## 자. 조사 결과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함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부상자 상태 및 시신검안,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폭약성분 분석, 수거된 어뢰부품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

〈표 3-18〉 CHT-02D 실물사진 및 제원

| 직 경 | 21인치(53.4cm) | 길 이 | 7.35m |
|---|---|---|---|
| 폭 약 | 250kg | 중 량 | 1,700kg±10kg |
| 항주거리 | 10 ~ 15km | 추적방식 | 음향항적·음향수동 |

## 4.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 활동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 결과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어뢰에 의한 가능성으로 좁혀짐에 따라 어뢰 공격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연합사령부와 협의해 다국적 연합정보팀 구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4일 한국의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본부 유관부서의 정보분석관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의 해군전문가를 포함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을 구성해 5월 20일까지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운영했다.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활동은 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존하는 합동조사단과 달리 정보획득 및 분석체계에 입각한 분석이었다. 따라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활동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이 중점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천안함을 침몰하게 한 공격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공격수단, 무기체계, 공격방법을 식별하는 것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은 로미오급,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에 가해진 것과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 잠수함(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사건 발생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사건 발생일자를 전후해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넷째, 5월 15일 폭발지역 인근에서 쌍끌이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

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거된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유사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 및 항적 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중(重)어뢰다.

이상과 같은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해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

**어뢰 추진체에 적혀 있는 '1번' 표기의 의미**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국어대사전』에는 '호'나 '번'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순서를 표기할 때는 '번'을 사용하고 사물의 종류를 구별할 때 '호'를 사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배급소나 버스 정류장 등 줄을 서거나 순서가 필요한 곳에서는 '번'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1호 별장', '15호 관리소'(수용소), '10호 대상' 등으로 표기한다. 또한 공장에서 미사일을 생산할 때는 미사일의 종류가 다르면 '1호'나 '2호' 미사일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종류끼리는 '1번', '2번' 식으로 구별한다고 한다.

최근 '연평도 포격도발'에 사용된 북한의 포탄에서도 '번'이란 표기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표기된 글씨가 폭발 시 열에 의해 타버린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 5. 시사점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민 · 군 및 외국인 전문가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 운용함으로써 최단시간 내에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민 · 군 및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 편성이다. 국방부는 최초 국가안보 및 군사보안을 고려해 군 단독의 조사단을 편성했으나 정치쟁점화를 차단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민 · 군을 통합하고 외국의 전문

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로 비교적 조기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피격당해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둘째, 국제적인 공조체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제사회에도 충격적인 사건이며 또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방국과 중립국에서 조사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전문가가 조사단에 합류했다. 이로써 조사단은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조사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셋째, 조사요원의 사명감 있는 조사활동이다. 조사단에 편성된 민간인 전문가는 독도함에서 합숙이라는 불편을 감수하며 국가적 사건해결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사활동에 매진했다. 외국에서 참가한 전문가도 조사활동 전 과정에 걸쳐 문제해결을 위한 길잡이 역할과 조력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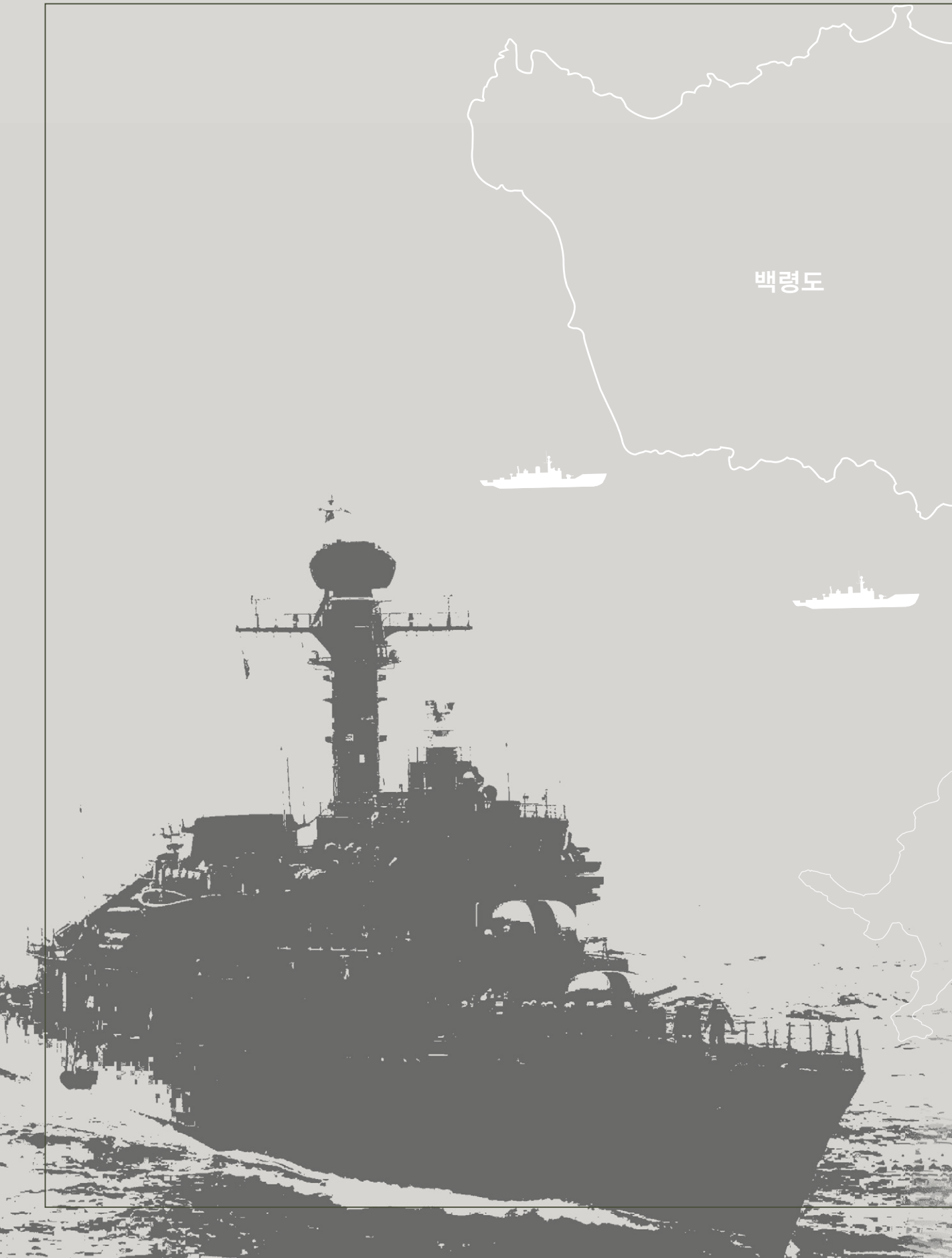
넷째,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조사활동 기간 중 합동조사단은 3차례의 중간발표와 5월 20일 종합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 9월 10일에는 조사활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국문판 · 영문판)를 발간 · 배포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중대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조사활동 역시 많은 것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사건 초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합동조사단은 종합발표 시(5월 20일)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실물 크기의 그림을 제시해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합동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천안함 사건해역에서 건져 올린 어뢰의 추진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설계도는 CHT-02D 어뢰의 것이 맞지만 발표 보조용으로 제시한 실물크기의 그림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PT-97W 어뢰의 그림을 제시하는 실수가 있었다."

한편 합동조사단의 종합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백령도

제 4 장

# 정부의 대응

제1절_정부의 대응기조 및 조치
제2절_국가안보태세 점검
제3절_대북조치와 북한의 반응
제4절_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

# 제 1 절 | 정부의 대응기조 및 조치

천안함 침몰 이후 정부의 대응 및 조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및 해당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주재 및 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침을 내렸고,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했다. 특히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대통령과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담화 및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발표했다.



## 1. 대응기조와 원칙

이명박 대통령은 4월 중 두 차례의 라디오 · 인터넷 연설과 5월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冒頭) 연설[85]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와 원칙을 밝혔다.

### 가. 진정성 있는 사고 수습과 희생자 최고 예우

대통령은 3월 27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백령도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선체인양과 진상조사를 독려하며 인명 구조에

85) 부록 4-1,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연설문 참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관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희생 장병과 유가족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추모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 명확한 사건 원인 조사

대통령은 3월 28일 외교안보장관회의와 4월 5일 라디오 · 인터넷 연설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되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증거와 투명성, 그리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사건 조사를 위한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정부는 먼저, "조사과정이 왜곡된다거나 미리 결과를 내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열린 조사' 원칙을 견지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투명성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는 합동조사단에 주요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 · 호주 · 영국 · 스웨덴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다. 결과에 대한 단호한 대처

'천안함46용사'들의 시신이 수습된 후 대통령은 4월 19일 라디오 · 인터넷 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22일 군 원로 초청 모임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러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강력한 대북제재조치가 담긴 대국민 담화와 함께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의 대북제재조치로 이어졌다.

### 라. 국가안보태세 재점검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여 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국가안보태세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우리의 안보시스템과 안보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강조했다.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2010. 5. 4, 국방부)

5월 4일 국군통수권자로서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특수전 등 비대칭전력을 고려한 전력 구축, 합동성 강화, 군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의 한시적 구성, 안보특별보좌관 신설, 위기상황센터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의 기능 강화도 천명했다. 또 천안함 사태라는 국가적 안보위기를 맞아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역량을 끌어 올리는 기회로 삼았다.

## 2. 정부의 조치

### 가. 천안함 침몰 직후

천안함 침몰 직후,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천안함 침몰 당일부터 3월 28일까지 4차례의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동향 등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가운데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탐색구조 작전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사건 현장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표 4-1〉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 구 분 | 일 시 | 주 재 | 참 석 | 회의 내용 |
|---|---|---|---|---|
| 1차 | 3. 26. 22:00 | 대통령 | • 대통령실장 · 총리실장<br>•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br>• 국정원장<br>• 외교안보 · 홍보수석 | • 구체적 상황파악<br>• 실종자 구조 위한 조치 등 |
| 2차 | 3. 27. 07:30 | | • 1차 회의 참석자<br>• 합참의장<br>• 행정안전부 제1차관<br>• 정무수석 | • 신속한 원인파악 주력<br>• 정부기관 상황전파 및 비상 근무태세 유지 등 |
| 3차 | 3. 27. 16:00 | | • 2차 회의 참석자 | • 구조작업 진행상황<br>• 현지 기상환경 및 수중작업 환경 관련 필요한 조치 |
| 4차 | 3. 28. 11:00 | | • 2차 회의 참석자 | • 국방부 등의 조치사항 확인 및 점검 |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했다. 즉 외교안보장관회의 · 국무회의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대통령 및 일본 수상과의 전화 통화, 라디오 · 인터넷 연설, 국가 원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회동, 백령도 사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필요한 조치와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위해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감사원은 대비태세의 이행 확인을 위해 특별직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희생자들을 순직이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고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특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하여 국가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대통령의 안보분야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안보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 1)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3월 28일부터 외교안보수석실의 국방비서관을 중심으로 천안함 침몰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통령의 지시와 결심을 적극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최초 천안함 침몰사태를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원인을 미리 예단하지 말고 북한의 공격, 내부폭발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과학적인 조사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실종자 구조, 사건 원인 1차적 판단, 경계 및 대비태세 유지 등 종합작전을 위해 민 · 관 · 군의 가용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발생 초기 실종자 구조에 소방방재청과 민간단체의 구조장비 및 인력 등 가용전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함수 · 함미가 침몰한 해역 2곳에서 동시에 통합전력이 운용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서해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미국의 전투함과 구조함도 구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표 4-2〉 대통령실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

| 구 분 | 주 관 | 참 석 | 회의 내용 |
|---|---|---|---|
| 회의기조 | 천안함 사태 주요 계기 대비 선제적 대응 방침 수립 | | |
| 1차 회의<br>(4. 13) | 외교안보<br>수석비서관<br><br>정무수석<br>비서관 | • 청와대 : 국방 · 정무 · 언론 · 메시지기획 비서관, 행정관(국방 · 언론 · 정무)<br>• 국방부 : 정책기획관 · 인사복지실장 · 대변인 · 합조단 대변인 | • 함미 인양에 따른 희생자 수습 등 현안 집중논의 |
| 2차 회의<br>(4. 24) | | • 청와대 : 국방 · 대외전략 · 기획관리 · 정무 · 언론 · 메시지기획 · 행정자치 · 의전 비서관, 행정관(국방 · 언론 · 정무)<br>• 국방부 : 국방정책실장 · 인사복지실장 · 정책기획관 · 대변인 · 합조단대변인 | • 함수 인양 대비 사건 원인 추측 등의 대응 논의 |
| 3차 회의<br>(5. 19) | | • 청와대 : 국방 · 대외전략 · 기획관리 · 정무 · 언론 · 메시지기획 · 행정자치 · 국정 홍보 · 뉴미디어 비서관, 행정관(국방 · 정무)<br>• 국방부 : 국방정책실장 · 국제정책차장 · 대변인 · 합조단 대변인<br>• 외교통상부 : 평화외교기획단장 · 대변인 | •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공보 · 대응 방향 논의 |

대통령실은 천안함 사태의 총괄적 지휘를 위해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천안함 사태 관련 해당 비서관을 비롯하여 외교 · 통일 · 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하는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이후 이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의 대응 전반에 관한 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국방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무비서관실과 홍보비서관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제반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판단과 지시를 전달했다. 특히 국방비서관실 · 정무비서관실 · 홍보비서관실의 행정관들로 구성된 '천안함 실무TF'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공보 · 정무 · 온라인 동향 등을 점검하여 보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방부의 대응시스템이 점차 정착되면서 사건발생 2주여 일 동안 노출되었던 군의 보고체계 및 공보 부실 등의 문제가 대부분 극복되었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는 6월 이후부터 언론 및 온라인 의혹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안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확대 운영되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초기단계에서는 천안함 사태를 국가적, 범정부적 차원의 위기관리보다는 국방차원으로 좁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보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천안함 탐색구조를 위한 민 · 관의 자산 장비의 투입 지연, 천안함 구조를 지원한 후 조업복귀 중 침몰된 '금양호'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 전사자 장례 및 포상과정에서 업무 혼선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 2) 국무총리실 및 해당 부처

국무총리실은 사건 발생 직후 총리실장이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3월 28일 국무총리는 백령도 사건 현장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성인봉호를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 장병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희생자 예우에 대한 정부방침을 정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애도기간과 애도일'을 선포했다.

그러나 별도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기구나 체계가 운용되지 않아 대통령실의 지침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관련 부처는 범정부적 위기에 대한 자발적 대응보다는 국방부의 대응 지원이나 협조 수준에 머물렀다.

천안함 구조 및 탐색단계와 전사자 처리과정에서 유관부처 및 기관이 보여준 주요 협조사례는 〈표 4-3〉과 같다

〈표 4-3〉 천안함 사태 관련 부처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주요 협조사례

| 운용/통제 기관 | 지원/협조 내용 | 관리부처 | 비고 |
|---|---|---|---|
| 해양경찰청 | • 구조 및 경계 | 국토해양부 | • 해군과 적극적 협조 및 지원 |
| 해양환경관리 공단 | • 방제선 등 지원 | 국토해양부 | •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
| 소방방재청 | • 구조 · 탐색 인력/장비 | 행정안전부 | • 자발적 참여요청 후 지원 |
| 민간업체 | • 인양장비 등 중장비 | 국토해양부 | • 대통령실 조기 확보 조치,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
| 지방자치단체 | • 어선 탐색 지원 | 농수산 식품부 | • 선주들이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 요청 후 지원 |
| | • 금양호 관련 처리/보상 등 | 농수산 식품부 | • 국방부 주관 업무 처리, 요청 후 협조 · 지원 |
| | • 전국 분향소 설치 지원 | 행정안전부 | • 국방부에서 정식 공문 요청 후 협조 · 지원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지진파 감지 및 분석 | 지식경제부 | • 자발적 업무 처리 |
| 한국해양연구원 | • 해양조사선(장목호), 무인탐사선(해미래) 지원 | 교육과학 기술부 | • 자발적 참여 지원 |
| 국립해양조사원 | • 해도, 해저지형도, 해양관측장비 지원 | 국토해양부 | •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
| 전문건설협회 | • 인양전문요원 및 장비지원 | 국토해양부 | • 해군에서 협조 후 지원 |



## 나.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되자 5월 24일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명비에 헌화 및 묵념한 후 호국영령실 앞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이 대북조치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5 · 24조치」로 통칭되는 이 성명은 UN안보리 회부 등 외교통상부의 조치, 남북교류협력 중단 등에 관한 통일부의 조치, 한미군사합동훈련 등이 망라된 국방부의 군사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조치는 5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 · 확정되어 5월 24일 발표된 것이다.

### 1)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대통령은 5월 24일 오전 10:00 호국의 상징인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86]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2010. 5. 24)

대통령은 담화문 서두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언급한 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서 "북한 선박은 더 이상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는 중단될 것"이라며 대북조치를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을 국내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UN안보리에 회부하여 응분의 대가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튼튼해져야 하며,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86) 부록 4-2, 대통령 담화문 참조.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북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의 성명 발표와 조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 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UN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행위로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87]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 합동기자회견(2010. 5. 24)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는 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하여 나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87) 부록 4-5-1, 외교통상부 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참조.

있어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또한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는 상응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UN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국제사회가 기존의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제1718호와 제1874호를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 비확산 협의체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88]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 3) 통일부장관의 성명 발표와 조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그 동안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온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데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이에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89]

첫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이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셋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하며,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 다만 생산 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용한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 ·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

88)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우려국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관련 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으로, 2003년 6월에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 아시아 등 11개국 국가가 참여하여 출범되었다.

89) 부록 4-5-2, 통일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참조.

### 4) 국방부장관의 성명 발표와 조치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90]

첫째,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 우리의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 남북불가침 · 상호 비방 및 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우리 군은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 · 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 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넷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 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90) 부록 4-5-3, 국방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참조.

# 제 2 절 | 국가안보태세 점검



천안함 사태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안보특별보좌관 신설,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의 확대 개편과 기능 강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지위 격상, 군사대비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 1. 국가안보기구 보강

### 가.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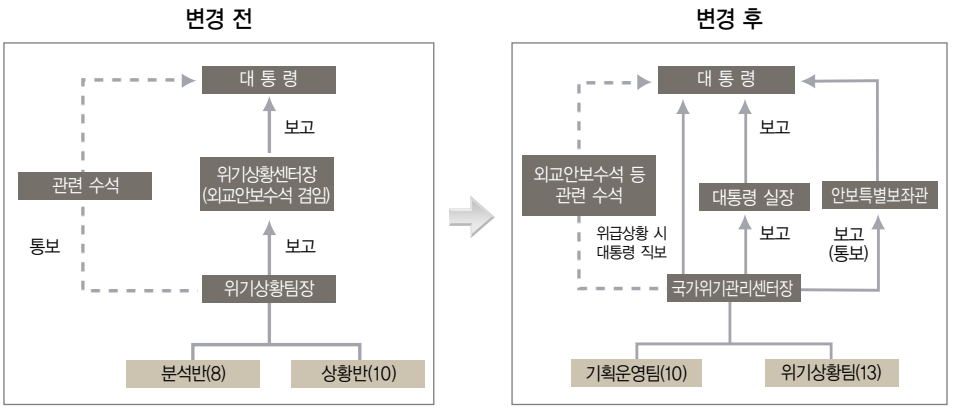
천안함 사태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통령의 위기관리 등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안보특별보좌관 직제 신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천안함 사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상시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면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대통령의 차후 결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보분야 특별보좌역의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예비역 대장급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초대 안보특별보좌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역임했던 이희원 예비역 육군 대장을 임명했다.

## 나.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의 확대 및 기능 보강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종합적 ·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상황센터의 확대와 보강, 업무절차의 개선, 상황전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91]로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을 확대 및 보강함으로써 위기사태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함께 위기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즉 국가위기발생 시 대통령실 관련부서에서 정책적 대응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시 위기상황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표 4-4〉 천안함 사태 후 개선된 국가위기상황 시 보고체계




기존의 위기상황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였으나 새로 개편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위에는 현역 장성을 보직했다. 이는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작전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현역 장성을 별도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안보수석이 보다 중요한 정책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획운영팀과 위기상황팀도 확대하여 개편했다. 기획운영팀은 전문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보강했고 위기상황팀도 신속·정확한 상황 처리를 위해 일일 상황근무요원을 보강했다.

91) 2010년 10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을 통제하여 전반적인 위기관리를 총괄지휘하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되면서 보고체계도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대통령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안보특별보좌관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국가위기 상황발생 시 초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보고와 상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2.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과 운영

### 가. 구성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총괄점검회의) 구성은 5월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연설을 통해 제기되었다. 총괄점검회의의 구성 목적은 전반적인 안보태세를 재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의 안보분야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이었다.

총괄점검회의 위원은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총괄점검회의는 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의장(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간사위원(안보특별보좌관 겸직), 그리고 국가안보태세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위원(예비역 장성과 민간 안보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나. 운영 및 결과

총괄점검회의는 2010년 5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0회의 전체회의, 25회의 분과회의, 4회의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회의의 추진방향, 분과별 토의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전체회의(5월 28일)에서는 제1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분과별 검토분야, 분과위원장 임명과 구성원 편성, 분과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총괄점검회의는 국방부장관 · 합참의장과의 연석회의(제3차 전체회의)와 육 · 해 · 공군 보고청취(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전비태세를 점검했고,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과의 연석회의(제5차 ·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외교 및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한편 총괄점검회의는 〈표 4-5〉와 같이 3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야별 점검에 들어갔다. 제1분과 회의는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위협 및 우리의 안보역량 평가,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제2분과 회의는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변국의 대한반도

〈표 4-5〉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 점검분야(해당분과) | 주요 점검내용 |
|---|---|
| 북한 위협평가와 우리의 안보역량<br>(제1분과) | • 북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위협양상<br>• 위협 우선순위 평가<br>• 비대칭전 준비<br>• 군 전략구조문제 평가 |
| 국내외 안보환경 평가 및 대책<br>(제2분과) | • 국민의 안보의식<br>• 북한의 대남정책 실태 |
|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br>(제3분과) | •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br>• 국방정책 추진 실태<br>• 합동성 강화, 장병복지 등 선진화 추진 실태 |




정책, 국내외 안보환경 평가,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 우리의 안보의식 수준을 진단했다. 제3분과 회의는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비태세 수준 및 정책, 국방개혁을 포함한 군의 선진화 추진상황, 국가 및 군의 위기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총괄점검회의에서 점검한 결과를 안보태세 진단 내용과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9월 3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안보태세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국가위기관리 능력 및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의 필요성 증대이다. 셋째,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이다. 넷째, 국방선진화를 위한 군 내부의 문제점 극복 노력이 절실하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할 전략의 수립이다. 둘째, 국방선진화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의 적극적 추진이다. 셋째, 한 · 미 군사협력

시스템의 강화이다. 넷째, 위기 · 전시사태에 대한 관리체제 및 정보능력 강화이다. 다섯째, 적정수준의 병력 및 전문성 확보이다. 여섯째,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정신전력 강화이다. 일곱째,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이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에 관한 주기적인 진단과 점검이다.

총괄점검회의의 최종보고서 가운데 국방개혁 관련 분야의 개선방안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기타 건의 및 대책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했다.

## 3.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재편과 운영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안보분야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통령은 이런 인식 하에 우리의 현실과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즉 정부는 2010년 1월 15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방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발했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를 7월 1일부로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정식 출범시켰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위촉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4개 소위원회로 편성되어 장기전략, 군 구조 획득체계, 국방예산, 국방운용에 대한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안보현실 진단과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국방개혁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 4. 군사대비능력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에 시한부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6월까지 시한부로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여 작전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합참에서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합동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을 중지 또는 조정하고,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후 1개월 간 집중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합참은 각 작전사별로 자체 훈련 및 평가가 끝나면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이하 전비태세검열실)로 하여금 이들 부대에 대한 검열 및 평가를 불시에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각 작전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훈련을 통해 행동화 숙달과 함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적용하여 전투준비태세를 보완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군은 정신 재무장과 적개심을 고취시켰고, 작전사별로 다양한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하여 대응책을 발전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했다. 또한 대대에서 군단에 이르는 각급 부대들도 단계별 훈련을 완성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적 도발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군은 그동안 북한의 전면전 위협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 주안을 두고 전력증강 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침투 및 국지도발, 비대칭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군사력 건설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침투 및 국지도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전력 보강소요를 식별하고 이를 반영한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합참에서는 해군의 대잠능력과 서북도서 대응전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 3 절 | 대북조치와 북한의 반응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통일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신규 대북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강제진입 차단, 한미연합해상 및 대잠수함훈련, PSI 역내 · 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은 성명 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의 조치를 비방하며 그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 1. 남북교류협력 중단

남북교류협력 중단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인 ·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였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여러 번의 남북교류협력 조정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대북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이다.

### 가.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 간 해상항로대를 설

정 · 운영하고 쌍방 당국의 승인 하에 국적선 운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북한의 육해운성 간 해사통신망도 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운체계를 통해 〈표 4-6〉과 같이 북한선박은 2010년 4월까지 우리 영해를 편도기준으로 2,066회 운항했다. 특히 200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허용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건수는 853회에 이르렀다.

남북 간 선박운항으로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에 따른 운항거리 단축과 운항비용 절감 등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손실은 제주해협 통과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와 남북교역 물품 운송 수입 등의 감소로 연간 약 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표 4-6〉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현황 (단위 : 회, 편도기준)

| 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4 | 계 |
|---|---|---|---|---|---|---|---|
| 남-북 간 | 6(3) | 31(25) | 223(40) | 252(44) | 533(61) | 345(4) | 1,390(177) |
| 북-북 간 | 39(39) | 97(97) | 138(138) | 147(147) | 184(184) | 71(71) | 676(676) |
| 계 | 45(42) | 128(122) | 361(178) | 399(191) | 717(245) | 416(75) | 2,066(853) |

※ '05.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의 운항현황이며, ( )안은 제주해협 통과현황임.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금지는 북한이 남북 간 선박운항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남북해상항로대가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였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우리 선박의 북한해역 운항도 불허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국 국적선의 남북 간 운항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남북 간 물자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포춘 호(파나마 선적)는 인천-남포 간을 지속적으로 운항하며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사업 정리에 이용되고 있다.

## 나.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대북투자 금지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 중 남북교역 중단과 신규 대북투자 금지는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일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 도발행위의 재정적 근원을 차단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특단의 조치였다.

2009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규모는 약 51억 달러이며 이중 남북교역 규모는 약 16억 8천만 달러로서 약 33%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은 농수산물, 의류 · 가전제품 위탁가공 등 남북교역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약 2억 9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이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사용되지 않고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남북교역을 중단했다.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의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6월 14일 개정하여 북한으로 반출되거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동시에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 물품이 우회교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7일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세관을 현장점검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도 불허했다. 즉 신규 투자사업 및 기존 사업 변경은 물론 투자를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대북 송금도 불허했다. 이로써 교역과 투자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정부와 민간이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121개의 입주기업이 가동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55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정상운영하기로 하는 유연성도 발휘했다.

### 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 왕래인원은 총 742,300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9년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 등 북한체류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은 매우 미흡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 당국 간에 체결되어 2005년 8월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정부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제도 확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북한의 무책임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보호를 책무로 하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영하기로 한 개성공단과 최소한의 시설관리 인력 체류가 필요한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문을 금지했다. 이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양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은 「5 · 24조치」 발표 이전에 전원 귀환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체류인력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 규모만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인도적 지원 물자 모니터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북은 신변안전이 확인된 이후 선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로 했다.



## 라.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정부는 〈표 4-7〉과 같이 2000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2조 8천억을 지원해왔으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각종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했다.

〈표 4-7〉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4 | 합계 |
|---|---|---|---|---|---|---|---|---|---|---|---|---|
| 정부차원 | 2,035 | 975 | 2,650 | 2,607 | 2,672 | 3,147 | 2,273 | 3,488 | 438 | 461 | 13 | 20,759 |
| 민간차원 | 387 | 782 | 576 | 766 | 1,558 | 779 | 709 | 909 | 725 | 376 | 114 | 7,681 |
| 총액 | 2,422 | 1,757 | 3,226 | 3,373 | 4,230 | 3,926 | 2,982 | 4,397 | 1,163 | 837 | 127 | 28,440 |

※ 정부차원 지원('00~'07)에는 식량차관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영 · 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했다. 즉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의 대상은 북한 지도층이며 그 목적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하고 국제적 규범을 어겨온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2. 대북 군사조치

### 가. 대북 심리전 재개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 함정 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에 대한 기습적인 어뢰 공격은 서해 우발충돌 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전방지역 대북확성기 설치 장면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우리의 국가원수와 고위급 인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방과 중상을 계속해 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및 상호 비방 · 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경고 및 대응조치 차원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4일 이후 '자유의 소리' 방송을 일일 9시간씩 시행하고 있으며, 7월 14일부터는 방송시간을 4시간 연장하여 총 13시간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해 확성기 세트를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방지역 1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단작전 시행을 위해 6개의 전단작전기지를 준비 완료했다.

향후 본격적인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부의 대북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북한의 태도 변화, 추가 도발행동 여부, 전략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및 강제진입 차단

남북은 2004년 5월 28일 남북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2005년 8월 10일에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관련 수정 · 보충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를 통해 정부는 북한상선에 대해 남북 해상항로대를 개방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정부는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거나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다. 한미연합해상 및 대잠수함 훈련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 · 미는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해 유화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북한의 무모성과 호전성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인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호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 · 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한미연합합동기동훈련(훈련명: 불굴의 의지, Invincible Spirit)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서는 수상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반잠수정, 작전헬기와 F-15K · F-16 · F-4 전투기 등이 참가했고, 미국에서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와 F-15 ·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 훈련에서는 잠수함 침투대응훈련, 연합방공훈련, 공중전술훈련, 해양차단작전, 대잠자유공방전, 연합공격편대군 훈련

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 · 미 양국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동해에서 해상대특수전부대훈련을 실시했다. 한 · 미 양측의 참가전력을 살펴보면, 수상함 18척, 잠수함 1척, 항공기 50여 대 등이 참가했다. 이 훈련에서는 해상공방전, 연합 탐지훈련, 반잠수정 추적 및 대응, 항만방어, 대잠추적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한 · 미 양국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해에서 한미연합대잠수함전 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는 한 · 미 양측에서 수상함 13척, 잠수함 2척, 항공기 8대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잠수함 추적, 함정의 음탐장비에 의한 적 잠수함 탐지훈련, 자유기동공방전, 적 공중도발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 군은 단독으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에서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훈련은 북방한계선 근방부터 태안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훈련에는 최영함을 비롯하여 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 등 투입된 해군 전력이 탐지된 가상 적 잠수함에 대해 폭뢰를 투하하고 어뢰를 발사하여 격침시키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이렇듯 한 · 미 양국은 이들 훈련을 통해 강화된 경계태세와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으며, 적의 도발에 대한 합동즉응태세 및 통합작전태세를 제고시켜 나갔다.

### 라. PSI 역내 · 외 해상차단훈련

우리 군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 외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했다.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케인즈에서 실시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2명이 참가했다.

한국 주도의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항 및 인근해역에서 한국 · 미국 · 일본 · 호주 등 아태지역의 PSI 참여 국가의 참가 하에 실시하였으며, 참가전력으로는 함정, P-3C 해상초계기, LYNX · UH-60 헬기, 해군 · 해경 승선팀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했다.

## 3. 북한의 반응 및 정부의 대처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음을 밝혔고, 5월 24일에는 정부의 대북조치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연일 성명 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리의 조사결과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92]

첫째,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5월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및 인민무력부장 전통문, 5월 2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천안함 조사발표가 '특대형 모략극' 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증 확인을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의 논평 및 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날조라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6월 3일과 6월 5일 『조선신보』 등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소개하고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둘째, 북한은 전쟁 운운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통보하는 등 초강경 위협 발언을 지속했다. 5월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 괴뢰패당의 보복 시 남북관계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주장했다. 5월 25일에는 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 당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남북불가침합의를 파기하여 앞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5월 27일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 전면 철회' 를 천명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6월 12일에는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 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대북심리전에 대해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5월 24일 전선중부지구사령관 공개경고장에서는 "심리전 재개 시 직접 조준사격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5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셋째,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천안함과 관련한 대대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벌였다. 먼저, 6월 1일~9일 간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한 · 미 모략책동 규탄 군중대회' 를 개최했고, 6월 25일~30일 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반미 군민대회를 개최하여 천안함 사

92) 부록 8,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한의 언론보도 참조.

건은 '반북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로동신문』 등 주요 언론의 보도와 발표를 통해 대남 · 대미 비난을 지속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 십분 활용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천안함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5월 18일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 선전국 격문, 5월 2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 이어 6월 1일에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의 「남녘의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고함」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천안함 사건은 '남조선의 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 논설 등을 통해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외신 기자회견(2010. 5. 28)

북한은 이례적으로 5월 28일 국방위원회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이 천안함 사건의 UN안보리 회부를 망설인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또한 UN안보리 회의 개최 이후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북한은 7월 9일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7차례의 유엔사-북한군 대령급 접촉에 참석하였으나 국방위의 검열단 현지조사 및 조 · 미 공동검열단 구성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북한은 UN안보리 의장성명을 명분삼아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한편, '핵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동시에 구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5 · 24조치」를 의연하게 실행하면서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서도 5월 21일 국방부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우리의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은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제 4 절 |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



천안한 사태 이후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정부는 정상 외교, 한반도주변 4국 외교, UN 외교, G8 정상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93] 외교장관회담, 군사외교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G8 정상선언문 채택, ARF 외교장관 회담 의장성명 채택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 1.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전

### 가. 정상 외교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부터 민 · 군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5월 20일까지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전화통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93) 아세안지역안보포롬(ARF)은 아시아태평양지역 26개국 및 유럽연합 의장국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지역 내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직후 구축함과 구조대 등을 파견해 실종자 수색을 도운 미국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과 4월 1일 전화 통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경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미국은 우리 군의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선체인양, 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를 위한 함정과 인력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했다. 특히 5월 18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합조단의 조사활동에 전적인 신뢰를 전달하는 등 긴밀한 군사 및 외교적 협력을 통해 동맹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가 진행되던 4월 11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4월 30일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 외교를 펼쳤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의연하고 냉정한 대처에 경의를 표하면서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준비를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주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보내준 각국의 관심과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해 내고자 미국 · 영국 · 호주 · 스웨덴 등 다국적 국가의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 나. 주변 4국 외교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면담, 주미대사관을 통한 국무부 · 국방부 ·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접촉, 정부의 고위급 인사 방미 및 국무부 인사 면담 등을 통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상호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총괄했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W. Bosworth)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성 김(Sung Kim) 6자회담 특사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여 천안함 사태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용준 차관보가 5월 14일 한 · 미 차관보급회의에,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4월 20일 대북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커트 캠벨(Curt M. Campbell) 동아태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과 합동조사단 조사경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처에 있어 양국 간 공조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천안함 인양 및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미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에 미국은 한 · 미 양국 간 함체 인양과 원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력을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협조를 정부에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처럼 한 · 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인규명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사결과에 따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가정적 상황을 예단하여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적 입장 표명에 있어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었다. 이에 외교통상부도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주한 일본외교단에 미리 설명해 주는가 하면, 대통령 담화문 및 3개 부처 조치 발표문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

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 외교를 전개했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논평 등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4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전달했다. 4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자 간 채널을 통해 한국에 위문과 애도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5월 2일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15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이전에 기술적 설명을 포함한 사전 브리핑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에 주한 무관단 참석 또는 본국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등 중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장신썬(張鑫森)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한 중국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무력도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러시아 정부는 4월 1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도 사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한 무관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러시아 측과 정보 공유를 긴밀히 했다.

## 2.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 가. 정상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지를 보내왔다.

이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전후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총리, 러드 호주 총리, 메드베데프(Dmitry A. 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제공조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 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국제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의 의연하고 냉정한 대처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러드 호주 총리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공조 과정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밝힌 UN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5월 29일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과 대북제재 추진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을 설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정부가 화물검사특별법 제정 등 북한의 인적 · 물적 · 금융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UN안보리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5월 29일 한 · 일 · 중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천안함 사태 접근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우리 정부와 공동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특별대표를 한국에 파견하여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및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원자바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자국의 입장을 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한 · 러 정상통화를 갖고 우리측 대응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건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요지의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국 정상 또는 국제기구의 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나. 주변 4국 외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정부는 우리의 대응조치를 미국에게 사전 설명하고, 그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백악관 명의의 지지성명을 신속히 발표하고, 향후 한 · 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유지 의사를 대내외에 밝혔다.

5월 26일 개최된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유명환 장관은 「5 · 24조치」 등 정부의 대응 입장을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우리의 단호하고 신중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 미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5월 26일 열린 한 · 미 · 일 3자협의에서 위성락 본부장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일본 외무성의 사이키(齊木昭隆) 아시아 · 대양주 국장을 각각 면담하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 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5월 25일 우다웨이 6자회담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과 접촉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단합된 목소리를 감안하여 중국 측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를 전달했다.

러시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물적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파견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방한한 러시아 전문가팀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위성락 본부장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94]

94) 부록 9.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주변 4국의 언론보도 참조.

### 다. 군사 외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및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인 5월 26일 국방부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62개국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하여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취해진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합참의장도 6월 3일 주한 외국무관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의문점을 해소시켰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북한산 어뢰와 피격된 천안함을 주한 외국무관들이 견학하도록 하는 등 군사외교를 펼쳤다.

## 3. UN안보리 회부 이후

### 가. 정상 외교

천안함 사태는 명백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이를 국제무대에 가져가 북한에 무력도발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4일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를 첨부한 주UN 한국대사 명의로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천안함 사태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ASS : Asia Security Summit)[95]인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제기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3월 26일 밤 우리 해역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은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우리의 함정을 침몰시켰으며, 이는 심각한 군사도발임”을 천명했다.

95) 아시아안보회의(ASS)는 통칭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 국방장관과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방분야 최고위급 대화체로서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다.

또한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한국 정부가 일으킨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북한에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 영국 · 호주 · 스웨덴 등과 함께 하는 국제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북한이 제조한 어뢰 추진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용인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대통령은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 일본 · 중국 등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UN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 · 미 정상회담(2010. 6. 26, 캐나다 토론토)

또한 한 · 미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UN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및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 이어 신임 칸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UN안보리의 천안함 사태 처리과정에 있어 양국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UN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6월 26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G8 정상선언문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실질적으로 규탄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G8 정상선언문 제34조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적시하고, 그러한 맥락에서(in this context) 천안함에 대한 공격행위를 규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북한의 무력공격 규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천안함 공격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한국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G8 국가들의 단합되고도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나마를 공식방문하고, 6월 29일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3차 한 · 중미통합체제(SICA)[96]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SICA 회원국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특별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대통령은 6월 30일부터 3일 간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여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멕시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 나. 주변 4국 외교

UN안보리 회부 이후 천영우 제2차관과 박인국 주UN 대사는 UN 무대에서 미국 ·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며 북측에 무력도발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안보리 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96)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는 중앙아메리카의 민주화 · 현대화를 위해 구성한 국제기구이다. 중미통합체제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사회 · 정치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많은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이러한 분쟁요인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생태학적 통합추진을 위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모여 1991년 12월 결성한 국제기구이다.

위성락 본부장은 캐슬린 스티븐스(Doris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를, 이용준 차관보는 캠벨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UN안보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UN안보리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한 · 미 양국은 6월 5일 샹그릴라 대화 시 한 · 미 국방장관 회담, 6월 26일 G20회의 시 한 · 미 정상회담, 6월 25일에서 7월 2일까지 위 본부장의 캐나다와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UN 이외의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갔다.

천안함 사태의 UN안보리 회부 이후 한 · 일 양국은 6월 7일 외교장관 통화, 6월 19일 제10차 한 · 일 차관전략대화, 6월 18일 한 · 일 아주국장 협의 등을 통해 UN안보리 조치 추진과정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 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을 지속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G8 정상선언문 채택에도 일본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중국 및 러시아를 설득하여 G8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러시아는 6월 25일 G8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상선언문에 합의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단합된 목소리 전달에 동참했다. 이후 UN안보리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 · 러 외교장관 간 통화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UN안보리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 위성락 본부장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천영우 제2차관이 양제츠 외교부장을, 박인국 주UN 대사가 리바오동(李保東) 주UN 중국대사를 각각 면담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엄중히 대응했다. 이는 UN안보리의 당연한 책무이며 북측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 중장기적인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UN 무대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 다. 군사 외교

UN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 6월 4일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본회의 주제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의도, 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변국간 협력 필요성, 국제법상 북방한계선의 타당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참가국 대표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그동안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오던 중국 · 몽골 · 베트남 · 스리랑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 · 일(7. 2), 한 · 스페인(7. 5) 국방정책 실무회의 참가를 계기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 확보와 대북공조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방부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정보본부장 회의에 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참석하여 24개국에서 참가한 대표들을 대상으로 장관 기조연설, 합참의장 주관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브리핑, 피격된 천안함 견학, 합동조사단의 현장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태지역 정보본부장 회의 참석자 기념촬영(2010. 6. 9, 서울 그랜드 하야트 호텔)

국방부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결과가 다국적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 4. UN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이후

### 가. 합동조사단의 UN안보리 브리핑 및 의장 성명 채택

우리 정부는 2010년 6월 4일 주UN 대사 명의의 UN안보리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UN안보리가 천안함 사태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UN안보리 의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민 · 군 합동조사단이 UN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월 14일 합동조사단은 UN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대사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조사과정에 대한 동영상 상영, 질의 · 응답 순서로 약 1시간 20분간 브리핑했다.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에는 박정이 육군중장과 윤덕용 교수(공동단장)를 비롯하여 국내전문가 11명과 미국 · 영국 · 스웨덴 · 호주 · 캐나다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UN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한 이후부터 UN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천안함 사건과의 무관' 및 '국방검열단 파견' 등의 주장을 담은 주UN 북한대사 명의의 서한을 3차례(6. 8, 6. 29, 7. 6)에 거쳐 UN안보리 의장 앞으로 전달했다. 또한 6월 14일 우리의 브리핑 직후 같은 장소에서 주UN 북한대사가 UN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에 관련하여 북한측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설명은 명확한 사실 근거없이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날조된 것으로 부정하고 북한 검열단의 파견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과학성과 객관성을 높이 평가받은 우리측 브리핑과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 · 군 합동조사단 브리핑이 끝난 이후 우리 정부는 6월 16일부터 7월까지 UN안보리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UN안보리 조치가 채택되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는 한 · 중 정상회담, 한 · 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및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했다. 러시아와도 정상 간 통화, 외교장관 간 통화를 갖고 UN안보리 조치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UN안보리는 7월 8일 주요국 간의 협의 후 의장성명 문안에 합의하고 이어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UN안보리 전체 이사국에게 의장성명 문안을 회람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천안함 사태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했다.[97] 한편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미국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재확인한 유엔군사령부(UNC)의 특별보고서를 7월 23일 UN안보리에 제출했다.

UN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 관련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2010. 7. 9, 미국 뉴욕)

97) 부록 4-6. UN안보리 의장 성명서 참조.

## 나.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안보사안으로 여기고 동북아의 주요 안보포럼인 ARF 참석을 계기로 북측에 강력하고도 단합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의장국 베트남과 성명문안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는데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전인 6월 15일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는 현지 신임 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면담하여 천안함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98] 의장국이자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베트남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와 비공식 협의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무력공격을 규탄하고 추가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우리측의 문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7월 24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성명은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의 인명손실에 애도를 표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공격을 실질적으로 규탄한 UN안보리 의장성명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7월 21일 채택된 EAS(East Asia Summit)[99] 외교장관 회담 및 'ASEAN+3'[100]외교장관회담 성명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UN안보리 의장성명의 지지를 명기했다. 뿐만 아니라 6월 29일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선언문」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규탄하며, 향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98) ASEAN(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 경제 ·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남아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고, 준회원국으로는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가 있다.

99) EAS는 '동아시아 정상'으로 2005년 12월 1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어 16개국이 참가했다. 2010년 현재 회원국은 ASEAN+3, 인도 · 호주 · 뉴질랜드 · 미국 · 러시아 등 18개 국가로 늘어났다.

100) 'ASEAN+3'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3개 국가, 즉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지칭한다. ASEAN+3의 첫 정상회담은 1997년에 열렸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이 기구의 중요성이 증진되었다.

## 다. 대미 외교

UN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한 · 미 양국은 북한이 조속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적 도발을 하지 않으며, 비핵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한 · 미 양국은 7월 21일 양국 간 처음으로 개최된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공고한 대비태세 및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 ·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의 외교 · 국방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및 재도발 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7월 20일 한 ·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된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에 합의했다.[101] 이에 따라 양국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항공모함 등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 등 일련의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공고한 한 · 미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클린턴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와 사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재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이행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측은 7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를 비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추가도발 및 적대행위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102]

한편 10월 8일 한 · 미 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처음 열린 제42차 한 · 미안

101) 부록 4-7, 한 · 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서 참조.
102) 부록 4-8,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 공동성명서 참조.
103) 한 · 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 · 미 국방장관과 국방 · 외교 관계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한 · 미 양국 간 최고 안보협력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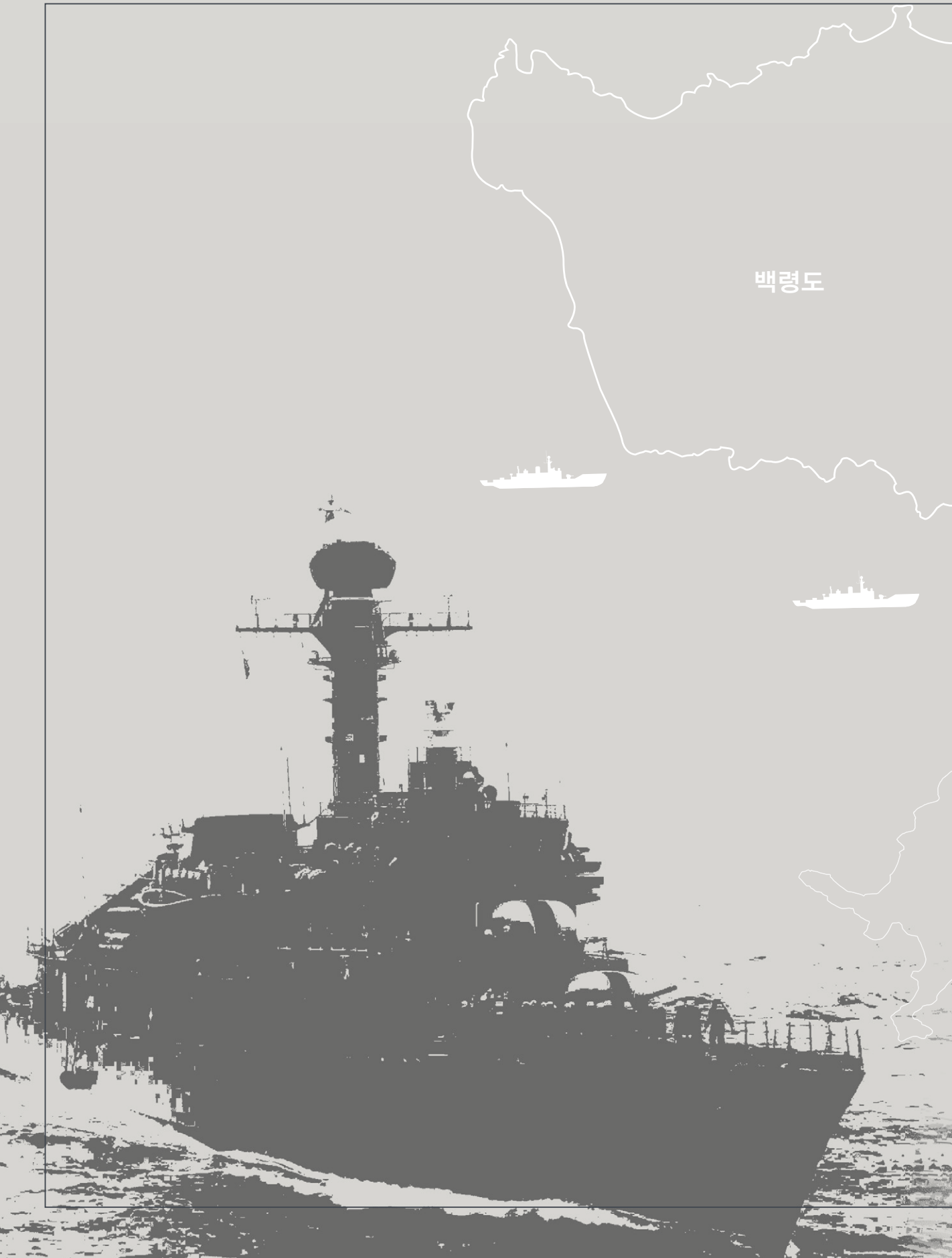
보협의회의(SCM)[103]에서 지난 7월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이 북핵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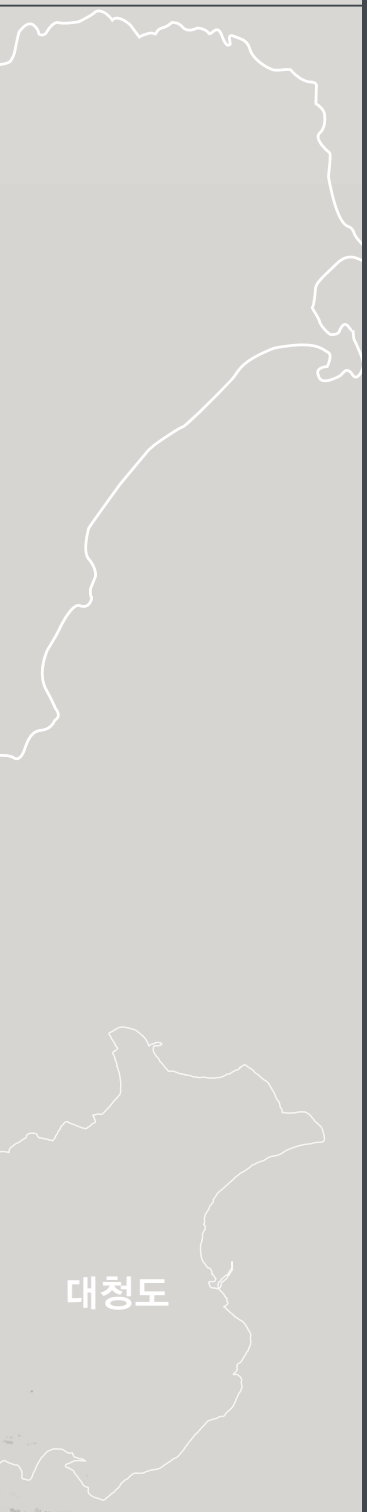
또한 SCM에서 한 · 미 양국은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협의체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위원회에서 미국의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과 탄도미사일 방어능력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 · 미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훈련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 · 미), 3자(한 · 미 · 일), 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 강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제42차 SCM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2010. 10. 8, 미국 워싱턴 D.C.)

이렇듯 천안함 사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공고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금번 천안함 사태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공고한 한미동맹은 향후 한반도 안보질서를 안정화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




제 5 장

# 국민과의 소통 노력

제1절_언론 공보

제2절_국회 활동

제3절_국민 설명

# 제 1 절 | 언론 공보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은 초기단계부터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우리 군이 수행한 단계별 공보활동과 언론관련 조치에 대하여 공보상황일지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되새겨야 할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공보환경에서 수행된 군의 제반 공보활동을 통해 공보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 1. 언론 및 공보 환경

국방부에는 평소 26개 매체 36명의 취재인원이 상주하는데,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1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41개 매체 200여 명, 제6해병여단 37개 매체 170여 명, 국군통합병원 8개 매체 4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 달하는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26일 22:24에 YTN은 긴급뉴스로 "백령도 서해상에서 초계함 침몰 중"이라는 자막으로 최초상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각 언론사는 국방부, 합참, 해군의 공보 계통으로 확인 문의를 하는 한편, 정치부 또는 사회부 기자를 중심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는 등 취재인원을 대폭 보강했다.

〈표 5-1〉 제대별 군 공보조직과 임무

| 구 분 | 인 원 | 임 무 | 비 고 |
|---|---|---|---|
| 국 방 부<br>대변인실 | 14명 | • 합참 및 해군 공보기능 조정 · 통제<br>• 대언론 브리핑 진행<br>• 주요 언론 질의 답변 등 | 국방관련사항 조치 |
| 합 참<br>공보실 | 6명 | • 군사작전 및 탐색구조작전 브리핑<br>• 언론 질의 답변 | 군사사항 조치 |
| 해 군 | 35명 | • 인사 · 군수지원 분야 위주 설명<br>• 언론 질의 답변, 현장취재 지원 | 현장보도본부 운영<br>(제2함대사/백령도) |

이러한 언론환경에 비해 군의 공보환경은 〈표 5-1〉과 같이 기존의 공보조직과 인원으로 위기상황의 공보조치를 수행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우리 군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제2함대사령부 및 제6해병여단에서 각 제대별 공보환경과 실정에 맞게 임무를 분담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공보환경에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합참과 해군의 공보활동 전반에 걸쳐 조정 · 통제하는 가운데 주요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공보전략회의를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언론해명과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공보상황조치를 수행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은 상황발생 및 초동조치, 탐색 및 구조작전, 선체인양작전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군사사항에 대한 언론질의 답변 등의 공보조치를 수행했다. 해군은 제2함대사령부와 제6해병여단 현장에 보도본부를 구성 · 운영하면서 인사 · 군수지원 분야 위주의 대언론 설명과 함께 각종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현장 공보조치에 주력했다.

## 2. 공보활동

### 가. 최초상황 및 초동조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 22:24에 YTN의 긴급보도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23:30 국방부 기자단에게 최초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어 27일 00:15에 출입기자들에게 제2차 보도자료와 함께 사건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었다. 00:23에는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 준장 이기식)이 기자실에서 침몰 중인 함정 및 인원 구조상황에 대하여 최초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의 최초상황 브리핑(2010. 3. 27)

그러나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취재기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3월 27일 09:40에 합참 공보실장이 기자실에서 현장상황 일부와 생존장병 구조상황과 관련하여 브리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단은 군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언론사별로 정보획득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고, 동시에 미확인된 추측성 기사를 양산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같은 날 18:05에 기자실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관리와 구조작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확인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초기 언론대응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 군과 언론의 갈등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나. 탐색 및 구조작전

탐색 및 구조작전에 들어서면서 국방부는 합참 차원의 대언론 공보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대변인(원태재) 주도의 공보활동을 수행했다.

3월 28일부터 국방부 대변인실은 일일 2차례씩(10:30, 15:00) 정례브리핑을 실시

탐색구조작전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는 국방부 대변인과 합참 정보작전처장(2010. 3. 28)

했다.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은 "대언론 브리핑시에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모형, 요도 등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관계자를 배석시켜라"고 지시했다. 3월 28일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작전처장이 국방부 기자실에서 탐색 및 구조작전 전반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해난구조대(SSU) 요원이 배석하여 해상구조작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시에는 다양한 보조재를 활용함으로써 기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YTN은 첫 공식브리핑을 실시한 3월 28일부터 생중계를 하였고, 3월 31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 그리고 유선뉴스전문방송 MBN 등이 생중계에 합류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3월 28일 17:30경에는 국방부장관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사건상황 전반에 걸쳐 설명함과 동시에 구조작전과 관련하여 "현장상황이 매우 어렵고 새로운 정보제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를 신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함실종자가족협의회'는 4월 3일 21:45 해군 제2함대사령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위험한 선체 내부 진입 및 수색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협의회의 대승적 결정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히고, "실종자 수색작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선체인양작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다. 함체인양작전

군의 함체인양작전 기간 중 국방부는 언론사 간의 특종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건 발생 2주차부터 브리핑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했다. 즉 기존의 1일 2회(10:30, 15:00) 브리핑을 오전에는 기자실에서 질의응답식의 브리핑 형식으로 오후에는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함체인양작전 관련 국방부장관 기자간담회(2010. 4. 4)

4월 4일 15:00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브리핑룸에서 '4일 00:00'부로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이어 합동조사단장이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규명 및 개선 · 보완대책

을 강구하기 위해 발족한 민 · 군 합동조사단의 향후 활동계획 전반에 걸쳐 설명했다. 특히 당시 브리핑에서 인양한 함미부분의 절단면을 그물망에 씌워진 상태로 270m 떨어진 지점에서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같은 날 20:05에 백령도 현지방문을 마친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사건 발생시각의 규명은 천안함 인양이 예상되는 2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한편, 사건 원인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4월 7일 10:30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국군수도병원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어서 개최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생존 장병들의 공개 기자회견은 SBS를 주관 방송사로 하여 26개 매체 50여 명의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진행된 가운데 대부분 방송매체가 전국에 생중계했다.

천안함 생존장병 공개 기자회견(2010. 4. 7)

이날 공개 기자회견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생존 장병에 대한 사전교육을 일체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TOD 동영상의 추가 공개를 포함한 사건 발생시각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생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 및 응답을 통해 군의 의혹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보도는 사건 발생시각의 규명을 위해 추가로 제시한 자동저장 TOD 동영상(DVR)에 대해서도 그동안 군이 은폐했던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생존 장병의 환자복 차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했다.

4월 12일 언론에서 군의 은폐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함미의 이동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천안함 함미가 높은 파도와 풍랑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백령도 해안방향으로 수심 25m 해저지점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당시 공보관계자들은 수중에서 이동할 것으로 언론에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함미가 1/3정도 수면 위로 올라 온 상태에서 이동하게 됨으로써 현지에서 고정취재 중이던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반적인 과정이 노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작전현장과 공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재를 탓하며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4월 13일 이처럼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정무 ·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고 국방부 고위 관리와 청와대 비서관급이 참여하는 '천안함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언론 · 정무 ·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운영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공보지침을 마련하여 군의 언론관련 조치를 지원했다.

4월 14일 10:30 국방부는 브리핑룸에서 함미 함체의 인양절차와 절단면 공개 형태, 그리고 취재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20:28에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4월15일 09:00에는 함미인양작전이 개시됨을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사건 원인 규명에 대한 의지표명과 함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삼 당부했다.

민 · 군 합동조사단장의 함미인양 현장조사 결과 발표 (2010. 4. 16)

4월 15일 함미인양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백령도 사건 현장에는 신문과 방송 각 16명씩 총 32명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이 생중계로 인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09:52에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국방부 공보과장이 함미 부분 1차 탑승 조사인원 규모가 총 38명임을 공지하였고, 이어 15:10에는 해군본부 공보과장이 영현 수습 및 이송과 안치 절차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같은 시간 각 방송사들은 함미 인양이 완료된 상황에 이르러 실종자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실종자 전원의 개인신상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4월 16일 11:00에 천안함 함미인양작전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장관이 담화문 형식으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데 이어서 윤덕용 민 · 군 합동조사단장이 함미인양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합참 정보작전처장과 해난구조대(SSU) 전문요원이 함수인양작전의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39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천안함 희생장병의 계급과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비장한 어조로 "침몰원인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 결과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4월 24일 함수인양작전은 현장 취재기자단이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취재하는 가운데, 15:00에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해난구조대(SSU) 요원이 함수인양작전의 과정을 설명하였고, 다음날 14:00 브리핑룸에서 합동조사단장이 함수 인양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라. 영결식 및 안장식

함수인양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희생장병들에 대한 영결식 및 안장식이 진행되었다. 4월 25일 11:40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이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장병에 대한 장의행사계획과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를 비롯한 각 시 · 도 분향소의 운영과 46용사에 대한 합동묘역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4월 27일 10:30 해군의 영결식 및 안장식 계획에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제2함대사령부와 서울광장 등에 마련된 군 · 시민 분향소 조문현황 및 주요 인사들의 조문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군 내외 주요인사와 일반 시민들의 조문행렬에 대한 보도는 4월 29일 영결식까지 이어졌고,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천안함46용사' 합동영결식은 내 · 외신 기자들의 현장취재로 보도되었으며, 안장식과 관련해서도 전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 마.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5월 6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연돌 등에서 어뢰제조에 사용되는 화약성분인 핵소겐(RDX :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소겐이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부정확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거론하는 것은 사건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동조사단이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5월 13일 10:30 국방부 대변인은 "민 · 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들에 대해 7년 전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 샘플과 비교 분석 중"이라고 밝혔고, 5월 18일에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쌍끌이 어선 등을 동원해 천안함 파편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침몰원인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인 어뢰 프로펠러(추진장치) 파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5월 20일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는 민 · 군 합동조사단 대변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윤덕용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발표(2010. 5. 20)

민 · 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제 CHT-02D 어뢰 뒷부분 추진부와 군이 확보한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현장에는 내외신 매체가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취재하였으며, 전 방송사가 생중계로 보도했다.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외교 · 통일 · 국방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 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국방부장관의 감사원 감사 요청에 따라 5월 3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된 감사는 5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실시되었다. 감사원 감사가 연장됨에 따라 언론에서는 책임자 문책범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사 결과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이후 6월 8일 감사

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합참의장과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된 대규모 문책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잇따랐다.

6월 10일 감사원은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다음날 언론은 일제히 '군의 보고 지연과 보고내용 변조, 문서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도 높게 질타하는 보도가 이어졌다.[104] 국방부는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의 위기관리체제 운영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국방부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음을 시사했다.[105] 이어 6월 13일에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면서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고, 이튿날에는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사. UN안보리 회부

6월 4일 UN안보리 회부 이후 정부는 북한에게 무력도발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안보리 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6월 14일 합동조사단이 UN안보리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를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을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6월 11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8가지 의문점을 적시한 서한을 UN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를 비롯한 15개 이사국에 보냈다.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이후, 북한 측은 참여연대의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서한을 지적하면서 한국 내부에서조차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사건은 UN안보리에서 남북한 간의 공방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104)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내용은 법률적 의미의 '변조', '조작'이 아님을 밝혀둔다.

105) 군의 조치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군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작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휘관 활동은 규정과 교범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작성된 규정·계획·메뉴얼 등은 당시 상황에서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6월 27일 캐나다 헌츠빌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 비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6월 29일에는 국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대북규탄 제재 결의안이 처리되었다. 7월 9일 UN안보리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공격행위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언론은 의장성명 전문을 공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확대 보도했다.

## 3. 언론관련 조치

### 가. 언론관련 조치체계 구성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은 초동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추측보도 및 오·왜곡보도가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군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방부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제대별 임무 및 언론환경 등을 고려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제2함대사령부, 제6해병여단 현장보도본부 등으로 구분하여 언론관련 조치체계를 구성했다.

언론관련 조치의 요체는 실시간 모니터, 사실(Fact) 확인, 대응논리 및 공보방향 설정, 타 매체 확산방지 등 제반 상황관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합참과 해군본부를 조정·통제하는 한편, 브리핑 진행과 주요 언론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추측, 오·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합참은 최초상황 및 초동조치, 탐색 및 구조작전, 함체 인양작전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작전 관련사항에 대한 대응조치에 주력했다. 해군본부는 인사 및 군수지원 분야 위주로 언론에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해군작전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답변과 현장 취재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대별 및 현장취재 환경을 고려하여 해군본부의 보도본부와 대언론 브리핑 지원반, 제2함대사령부와 제6해병여단의 현장보도본부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수행했다.

언론관련 조치는 최초상황 및 초동조치가 이뤄졌던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합참 공보실 주도로 수행되었고, 상황이 확산되면서 3월 28일부터는 국방부 대변인

실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초동상황조치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과의 협조는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되었으나, 제2함대사령부와 백령도 현장에 구성된 탐색구조단과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초기 언론관련 조치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탐색 및 인명구조 당시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하여 언론이 현장 생중계로 먼저 보도한 후 국방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4월 4일 이후부터 언론관련 조치는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나.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 운영

사건발생 직후부터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오 ·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대응조치 및 해명자료의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체가 필요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방향 설정 등의 전략적 상황관리의 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언론관련 조치를 위하여 우선 정책실장(장광일) 주관으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체 회의를 운영했다.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로 승격시킨 '공보전략회의'를 국방부차관 주관하에 전투협조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 회의는 언론보도 이슈 및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과 답변 내용 검토, 브리핑 중점 및 대응방향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설정하는 주요 회의체로 운용되었다.

'공보전략회의'는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합참의장 주관으로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급, 합참 본부장급, 정보작전처장, 국방부 대변인, 합참 공보실장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공보과장의 진행으로 운영되었다.

4월 11일 이후 '공보전략회의'는 '전략대화'로 회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회의장소도 합참 전투협조회의실에서 합참 지휘부회의실로 옮겨 운영했다. 4월 12일부터는 '전략대화'의 회의 운영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즉 회의 운영을 오전 브리핑 결과와 다음날 브리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오전은 합참의장 주관의 '전략대화'의 방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국방정책실장 주관 하에 과장급 및 주요 처장 등

이 참석한 '공보전략실무회의'로 운영했다.

4월 13일 청와대는 정무 및 외교안보 수석이 주재하는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언론 · 정무 · 국방비서관 및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TF를 운영했다. 동 대책회의를 통해 포괄적인 대응조치와 공보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실무TF는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언론관련 조치를 하도록 지원했다.

4월 15일부터 국방부는 '전략대화' 중심으로 회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이 회의는 주로 합참의장 주관 하에 브리핑 전략검토회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전략대화' 회의체는 4월 25일까지 지속되었고, 이후부터는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했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의 노력을 통합하여 조직적으로 언론관련 조치를 위해 국방부 정책실장 주관의 '대북조치 전략회의'가 운영되었다. 대변인실은 '대북조치 전략회의'에서 언론상황 평가, 인터넷 주요 이슈 모니터, 공보조치사항 전파, 공보조치 계획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언론 및 온라인 등을 통한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5월 25일부터 '천안함 관련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이 회의는 국방비서관이 주재하고,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계기별로 천안함 의혹대응 및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공보원칙이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혹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해명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해군본부의 경우는 위기 및 긴급상황 시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당시 참모차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군이 언론관련 제반 대책수립과 언론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초기 전략적인 언론대응 조치가 제한되었다. 뒤늦게 4월 13일부터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주관 하에 '공보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매일 분야별 언론쟁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모색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이후 국방부, 합참 및 해군이 구성하여 운영한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 현황은 〈표 5-2〉와 같다.

〈표 5-2〉 언론관련 조치 회의체 현황

| 기 간 | 주 관 | 회 의 체 | 장 소 |
|---|---|---|---|
| 3. 27~3. 30 | 국방부 정책실장 | • 정책실 자체회의 | 정책실장실 |
| 3. 31~4. 6 | 국방부차관 | • 공보전략회의<br>–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 전투협조회의실 |
| 4. 7~4. 25 | 합참의장 | • 공보전략회의<br>– 국방부차관, 실장급, 대변인<br>– 합참본부장급, 정보작전처장<br>* 전략회의→전략대화(4. 11 이후) | 합동참모본부<br>지휘부회의실 |
| 4. 13~4. 25 | 해군본부<br>전력분석평가단장 | • 공보전략회의 | 전력분석평가<br>단 장 실 |
| 5. 24~6. 30 | 국방부 정책실장 | • 대북조치전략회의 | 정책실장실 |



## 다. 오 · 왜곡보도 관련 조치

언론은 사건 초기 정확한 정보전달의 부재상황과 군의 조사과정 및 수습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오 · 왜곡보도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국민들의 혼란방지와 국익을 위해 신중한 보도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한 오 · 왜곡보도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오 · 왜곡보도에 대한 언론관련 조치를 위하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등에 의한 입장자료 배포 또는 사실관계 해명,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적대응조치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했으나 이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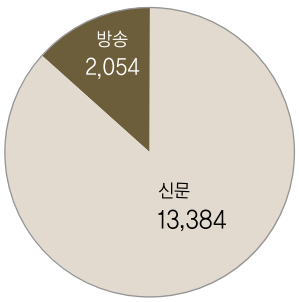
## 4. 언론보도 분석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된 7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의 신문 10개사(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와 방송 4개사(KBS, MBC, SBS, YTN) 언론보도에 대한 기사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106]

### 가. 매체별/언론사별 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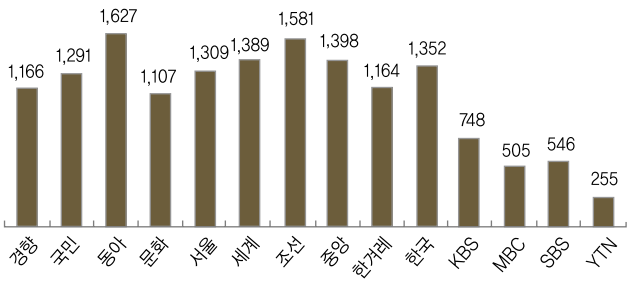
기간 중 기사 건수는 총 15,438건으로서 신문이 13,384건, 방송이 2,054건이다. 특히 신문 중에는 타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발행지면이 많은 동아일보(1,627건), 조선일보(1,581건), 중앙일보(1,398건) 순으로 기사 건수가 많았다.

〈 매체별 기사 수 〉




총 기사수 : 15,438건

〈 언론사별 기사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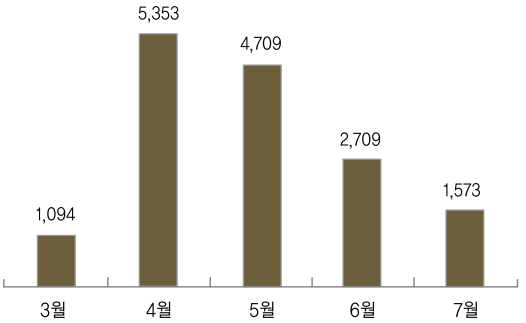



### 나. 월별/지면별 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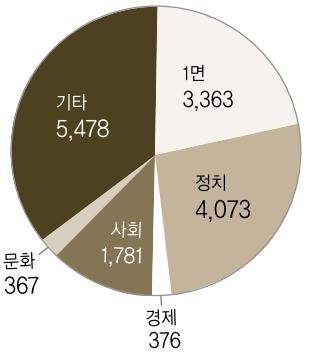
월별 기사 건수는 4월에 5,3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면별로는 1면에서 3,363건을 다루었고, 정치면 4,073건, 기타 여러 지면에서 5,478건을 다룰 정도로 가용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6) 언론보도 분석은 국방부의 용역사업으로 인포마스터(주)에서 2010년 3월 26일부터 4개월간 14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월별 기사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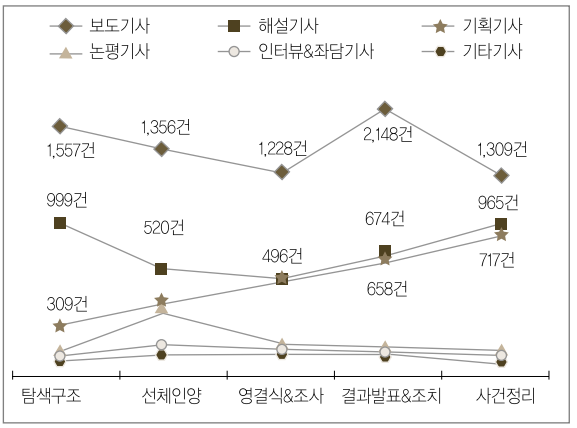

〈 지면별 기사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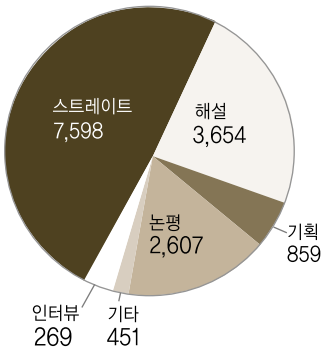

## 다. 기사 유형별 분포/분석

기사 유형 분포는 사건 조사결과발표 이후 해설기사와 논평기사의 보도량이 타 유형의 기사대비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기사 유형별로는 스트레이트 기사[107] 7,598건, 해설기사 3,654건, 논평기사 2,607건이었다.

〈 기사 유형별 분포 〉




〈 유형별 기사 수 〉




## 5. 시사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언론 공보는 초기상황에서 정보부재에 따른 언론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된 가운데 오 · 왜곡보도가 증가되면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07) 사실(fact) 위주의 객관적인 보도기사를 말한다.

이는 위기상황 시 군 작전상황에 대비한 상황관리 능력의 부족, 전략적 언론관련 조치 미흡 등 공보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제를 남겼다.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 및 해군 공보관계자들은 어려운 공보환경 속에서 언론브리핑과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상황에서 천안함 자체가 침몰되어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명쾌한 답변이 어려웠다. 이는 결국 언론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면서 군을 불신하는 부정적인 보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의 공보활동은 초기상황의 공보조치는 물론, 전략적인 언론관련 조치가 미흡하였고, 언론의 속보 · 특종 취재에 대한 경쟁과 다양한 취재원에 의한 돌출적인 보도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언론과의 정상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국방부 · 합참 · 해군 · 백령도 현장 간의 시 · 공간적 간격과 실종자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된 언론과의 갈등 상황은 공보활동의 제한사항이자 문제점이었다.

또한 군은 초기 상황에서 선제적 공보조치를 위한 회의체를 실효성 있게 구성하여 운영하지 못했다. 사건 5일째가 되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공보전략회의'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언론관련 조치와 공보방향이 설정되면서 비로소 군의 대언론 공보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은 새로운 언론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보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군)는 우선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언론과 상생하는 관계형성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위기상황 시 전략적 회의체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직위자 및 공보요원들에게 대언론 브리핑 요령 및 공보조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공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가 국민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정부(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교훈을 주었다. 이제 정부는 언론과의 성숙한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사보안도 준수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 국회 활동



국회 활동은 정부 행정부처가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활동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국회 활동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국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 1. 국회 국방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27일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요청으로 시작된 국방위원회[108]는 이후 3월 29일, 4월 14일, 19일, 3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열렸다.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피격사건 경위 및 실종자 수색현황 등을 보고받고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우리 군의 위기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국방위원회의 질의에 앞서 국방부장관과 군 주요 당국자들은 사건발생 경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국방부의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국방위원의 질의 내용은 〈표 5-7〉과 같다.

108) 국방위원은 김동성, 김무성,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 김학송(위원장), 문희상, 박희태, 서종표, 심대평, 안규백, 유승민, 이윤성, 이진삼, 임태희 등 총 16명이다.

〈표 5-7〉 국방부 보고 및 국방위원회 질의 내용

| 일자 | 국방부 보고 내용 | 국방위원회 질의 내용 |
|---|---|---|
| 3. 27 | 천안함 원인미상 침몰 관련 상황<br>(합참 정보작전처장) | • 국방부/합참의 사건 발생 직후 조치사항<br>– 구조전력 사건해역 이동<br>– 부상자 후송<br>– 서북해역 경계전력 증강 배치<br>• 전군 군사대비태세 외 |
| 3. 29 | 해군함정 침몰 관련 보고<br>(합참 합동작전본부장) | •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br>• 실종자 수색현황<br>• 함미부분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br>• 군사대비태세 발령<br>• 피격현장에서의 초동조치<br>• 구조현장 상황 외 |
| 4. 14 | 최근 북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br>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조치<br>(합참 합동작전본부장) | •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br>• 합동조사단 구성<br>• 최초 상황보고의 혼란 이유<br>• 북한의 공격으로 판명 시 우리 군의 대응<br>• 함미 부분의 절단면 공개<br>• 실종자 가족지원대책 외 |
| 4. 19 | 천안함 피격사건 수습 및 후속 조치/<br>링스 헬기 해상 추락 및 불시착 사고<br>(합참 합동작전본부장) | • 천안함 피격사건 경위/사건 원인<br>• 희생자들에 대한 전사처리<br>• 북한의 공격으로 판명 시 자위권 행사 가능성 · 대응전략<br>• 합참 상황근무자의 보고체계 문제점<br>• '국방개혁 2020' 보완 필요성 외 |
| 4. 30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조치<br>(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조사<br>• 원인규명 시 주변국과의 협조<br>•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br>• '국방개혁 2020' 보완 필요성<br>• 합참 지휘통제실 근무체계 개선 외 |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부원인에 의한 폭발, 기뢰 · 어뢰에 의한 외부폭발 등의 침몰 원인과 실종 장병 구조과정에서의 해군의 초기대응 미숙, 사건초기 지휘 공백 등의 초동조치에 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침몰원인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함체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초동조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

했지만, 사건 발생 시각, 상황보고 체계 등에 대한 군 발표의 혼선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내용은 〈표 5-8〉과 같다.

〈표 5-8〉 국방위원회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주요 질의 | | 국방부 답변 내용 |
|---|---|---|
| 침몰원인 | 사건 원인 | 천안함 사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발생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함체가 인양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
| | 내부 폭발 | 함정에서의 장병들에 대한 엄정한 신상관리, 탄약고 열쇠의 2중적 관리, 안전순찰제도 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승조원들의 의도적 사고는 희박하다. |
| | 기뢰 폭발 | 북한이 6 · 25전쟁 당시 소련에서 수입한 기뢰 3,000여 개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했는데, 비록 지금은 많은 기뢰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물속에 있는 기뢰를 100% 수거하기는 쉽지 않다. 조류에 의해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1970년대 북한의 서해 상륙작전에 대비해 백령도 앞바다에 폭뢰를 개량해 육상에서 버튼을 누르면 폭발하는 기뢰를 설치했지만 2008년도에 그 지역을 탐색해 거의 다 수거했다. |
| 초동조치 | 실종장병 구조 시 해군의 초기대응 미숙 | 천안함은 사건 발생 후 급격히 침수되었으나 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교들은 극한 상황 하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였으며, 이후 군 · 경 · 관의 협조 작전으로 함수에 남아있던 5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다만 탐색구조전력을 최단시간 내에 출동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 속도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 | 사건 초기 지휘 공백 | 천안함 침몰과정에서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초기보고가 지연된 것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겠다. 그러나 합참의장에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참의장은 당일 대전에서 열린 '합동성강화 토론회' 참석 후 복귀 도중 지휘통제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최초보고를 받고 작전지침을 하달했다. |
| |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 사건 발생시각의 혼선문제를 포함하여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위기조치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 |
| | 비밀 공개 | 교신일지, 해군 전술지휘통제시스템 전체를 공개할 경우 아군의 전력 현황, 적 위협 대응태세, 지휘 및 보고체계 등 아군의 전반적인 작전수행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므로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했다. |

한편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미국 상하원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속속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한 달이 지나도록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의 채택을 서두르는 여당에 맞서 야당이 사건의 진상과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다며 '선 진상규명 후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국회는 6월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 속에서 가결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서 먼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죄는 커녕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북한의 중대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국제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 국회 본회의

국회는 본회의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4. 2)과 대정부질문(4. 7~8, 6. 15)을 실시했다. 4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 내용과 의원은 〈표 5-9〉와 같다. 본회의에서는 실종자 구조, 유언비어 확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 천안함 피격사건의 대응조치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군 기강 해이, 군의 초기대응 부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방부장관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2010. 4. 8)

대응조치 관련 질의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시각과 상황보고 체계 등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기도 했음을 인정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해명했다.

〈표 5-9〉 국회 본회의 질의 의원 및 내용

| 일자 | 질의 의원 | 질의 내용 |
|---|---|---|
| 4. 2 | 김동성, 문학진, 박상은, 박선영, 이종걸, 전병헌, 정옥임 | • 최초 사건 발생시각<br>• 피격 원인 및 현장 상황<br>• 실종자 구조 노력<br>• 한주호 준위 사망 관련 보상<br>• 북한의 잠수정 동태 외 |
| 4. 7 | 서갑원, 이한성, 조영택, 진성호, 최구식 | • 피격 원인 및 현장 상황<br>• 실종자 구조 노력<br>• 초기 사건수습 노력<br>•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확산 문제<br>• 군 기밀의 언론 노출 문제점 외 |
| 4. 8 | 김동성, 김옥이, 김충환, 박선숙, 박선영, 신학용, 이종혁, 정두언, 황진하 | • TOD 동영상 공개<br>• 대청해전 보복으로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br>•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필요성<br>• 군사기밀의 유지와 국민의 알권리 상충<br>• '국방개혁 2020' 수정 외 |
| 6. 15 | 송영선, 윤상현, 이석현, 정미경, 정옥임, 조원진, 최재성, 황진하 | •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결과<br>• 군 기강 해이<br>• 군의 초기대응 부실<br>• UN안보리 대북제재 효과 의문 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일부 군사적인 판단과 조치사항에서는 감사원의 관점과 해석을 달리했다. 즉 국방부는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대별 임무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사적 판단과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본회의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내용은 〈표 5-10〉과 같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6월 29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북 규탄 결의안의 핵심적인 사안을 수정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이 투표결과 부결됨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6월 23일 제출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투표인원 23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70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되었다.[109] 국회가 의결한 결의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09) **찬성 의원(16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송훈석

〈표 5-10〉 본회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주요 질의 | | 국방부 답변 내용 |
|---|---|---|
| 대응 조치 | 최초 사건발생 시각 |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다. 군은 상황보고 시 최초 · 중간 · 최종보고의 절차가 있으며, 최초보고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오차가 생겼다. |
| | 실종자 구조 | 3월 26일 21:28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포술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대청도에 위치한 고속정에 출동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어서 인천 해경과 관공선 선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따라서 군 · 경 · 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한 작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구조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상악화와 수중환경이 열악하여 구조작업이 지연되었다. |
| | 피로 파괴설 | 천안함은 1988년에 건조되었는데, 이는 해군의 군함 중에서 낡은 것이 아니고 대략 중간급 이상 되는 함정이다. 낡아서 파괴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배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정비 · 검토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 |
| | 유언비어 확산 | 사건발생 초기 상황보고 지연, 보고내용의 부정확, 초동조치의 미흡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했다. |
| |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은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한 · 미간에 이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의한 접근방법보다는 조건에 의한 접근방법을 중시했어야 했다. 우리 군은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착실히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 감사원 감사 결과 | 군 기강 해이 | 허위보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선 상황보고 체계를 보완한 다음, 이를 정상 가동시켜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 |
| | 군의 초기대응 부실 | 경계태세 및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에 있어서는 예하 작전사 및 참모계통 조치에 의해 초기 대응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보고 지연,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군 발표의 혼선, 보고체계의 미숙, 지휘 공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현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0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기권 의원(3인)** 유성엽 이정현 정장선

##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순국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며, 아울러 순국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영구히 기릴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긴밀한 국제공조 속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야기한 북한에 대하여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치된 국제적 대응수단 마련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실천한 故한주호 준위, 그리고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 98호 선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제반 조치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를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천안함 사건이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문제인 만큼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모든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기존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천안함 사태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0년 6월 29일

한편 통일부는 6월 14~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단호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6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내부 및 남북관계 동향을 보고하고 「5 · 24조치」와 교역 관련 우리 기업의 구제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3.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국회는 4월 28일 의결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110]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군의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의결된 이후 한 달 동안이나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정상화되지 못하다가 5월 24일에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5월 28일(2차), 6월 11일(3차), 6월 25일(4차) 등 총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 4차 회의는 여야위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당(민주당 · 민주노동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구성 취지와 달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5월 24일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박정이 육군중장이 먼저, 사건발생 이후 실시된 인명탐색 구조작전에서부터 함체인양작전, 합동 영결식과 안장식, 쌍끌이어선을 투입한 탐색활동 등의 주요 경과를 보고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보고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어뢰의 피격으로 판단했다. 판단근거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 분석 결과, 함체변형 형태, 관련자 진술내용 분석, 사체 검안 결과, 지진파 ·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다.

6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수원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발생 이

110)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7일까지 2개월로 했다. 김동성, 김영우, 김옥이, 김학송(위원장), 김효재,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유승민, 윤상현, 이정희, 이진삼, 정장선, 정진섭, 최문순, 홍영표(야당 간사), 황진하(여당 간사)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10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2인이었다.

후 상황보고 · 전파 및 위기관리태세, 군사대비태세 등을 점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감사결과에서는 전투준비태세와 상황보고 · 전파, 위기대응조치 등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있어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의 현안보고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합동조사단 현안 보고 및 특별위원회 질의 내용

| 일자 | 현안 보고 내용<br>(합동조사단) | 질의 내용<br>(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 5. 24 | 천안함 사태 주요 경과/<br>민 ·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br>(민 · 군 합동조사단장) |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 · 군 합동조사단 결과<br>• KNTDS상 나타나는 함정의 위치 표시시간<br>• 프로펠러의 안쪽으로 휘어짐 문제<br>• 버블제트의 물기둥 문제<br>• 대북 심리전 재개 등 후속조치 외 |
| 6. 11 | 천안함 피격사건 감사결과 보고<br>(감사원 제2사무차장) | • 천안함 피격사건 감사원 감사결과<br>•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방부 입장<br>•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400페이지 보고서 존재 여부<br>• 북한 잠수정 동태, 국방부 위기조치반 소집 여부<br>• 어뢰 설계도의 존재 형태<br>•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 회복 문제 외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조사결과 및 감사결과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고폭탄 250kg이 폭발했는데 어뢰부품이 남을 수 있는가?", "우현 프로펠러의 역회전 손상은 좌초가 아닌가?", "21:15의 '15'에 볼펜으로 'ㄴ' 자를 그려 넣어 '45'로 고친 것이 아닌가?" 등의 질의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 전파, 사건 후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진상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상황을 판단하고 작전을 조치하는 지휘관 및 참모 활동이 단순히 규정과 규범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관련 규정과 당시의 제대별 임무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내용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특별위원회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 주요 질의 | | 국방부 답변 내용 |
|---|---|---|
|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 고폭탄 250kg이 폭발했는데 어뢰부품이 남을 수 있는가? | 어뢰가 함체에 닿기 전에 수중폭발하면 폭발점에서 부터 뒤로 밀리면서 파괴 정도가 덜해 프로펠러 등 잔해를 남긴다. |
| | 생존자 58명 가운데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없고 견시병이 조금 튀었다고 하는 정도인데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정도의 버블효과라면 엄청난 물기둥에 의한 충격을 감지 못할리 없지 않는가? | 배 밑 정중앙에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 위로 솟구치는 물기둥이 일어 날 수 있지만 폭발 수심과 위치에 따라 물기둥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 | 우현 프로펠러의 역회전 손상은 좌초가 아닌가? | 문제의 프로펠러는 스웨덴 가메와사(社)에서 만든 것인데, 스웨덴 전문조사팀의 조사결과 우현 프로펠러가 계속 회전하는 채로 가라앉으면서 강한 관성력이 작용해 안쪽으로 휜 것으로 밝혀졌다. |
| | 21시15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 넣어 '45'로 고친 게 아닌가? | 사건 초기에는 인명 구조작업에 집중하느라 사고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45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작성됐다가 나중에 정리단계에서 21분이 됐다. 초기에 혼란이 있었다. |
| 감사원 감사결과 | 상황보고/전파 | 당일 지휘통제반장이 2함대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보고를 접수(21:45)하고, 정확한 내용을 장관,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
| | 사건 후 위기대응조치 |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함대사에서는 고속정 편대의 긴급출항과 함께 대청도 동남쪽에 있던 속초함을 현장으로 긴급 이동토록 지시하였으며, 인천해경과 관공선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 위주의 조치에 주력했다. 이후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경계태세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 | 군사기밀 관리 | 작전수행과 관련된 군사기밀 노출 시, 북한은 아군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대응 및 공격 전술을 보완할 것이며, 이는 향후 우리 군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작전수행 장병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역장병 대상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사관련 사항 중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되어서는 안 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정립하겠다. |

## 4. 기타 활동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 국방위원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도 각 당 지도부 설명, 국회 서면자료 제출, 국회의원의 군부대 및 사건현장 방문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북한의 천안함 공격대책 특별위원회',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각 당 대표 등을 방문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경위, 실종자 수색현황, 천안함 인양작업 상황, 사건원인 조사결과 및 군사대비태세 등을 설명했다. 그 현황은 〈표 5-13〉과 같다.

〈표 5-13〉 각 당 지도부 설명 현황

| 일자 | 대상 | 설명 내용 |
|---|---|---|
| 3. 30 | 민주노동당 최고회의(이정희 의원)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보고 |
| 4. 6 |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황진하 의원) | 천안함 피격사건 경위, 실종자 수색현황, 함체 인양작업 |
| 4. 13 | 한나라당 대표(정몽준 의원) | 천안함 피격사건 경위 및 사후 수습대책 |
| 5. 6 | 한나라당 대표(정몽준 의원) |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조사 상황, 위기대응체계 점검 · 개선 방향 |
| 5. 20 |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 |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보고 |
| 5. 20 | 자유선진당 대표 등 지도부 |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보고 |
| 5. 23 | 한나라당 북한의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1차회의) | 천안함 피격사건 향후 대책 보고 |
| 5. 25 | 한나라당 북한의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2차회의) | 천안함 피격사건 향후 대책 보고 |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1,222여 건을 제출했다. 내용별로는 천안함 침몰원인 573건, 천안함 및 희생자 구조작업 163건, 희생자 예우보상 31건, 후속 군사대비태세 131건, 기타 324건이었다. 국방부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요구자료를 제출하였고, 요구자료가 비밀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대면보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군부대 및 사건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고 및 설명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국회의원의 군부대 및 사건현장 방문 지원 현황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국회의원 군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 지원 현황

| 방문장소 | 일자 | 방문 국회의원 | 방문 및 견학 내용 |
|---|---|---|---|
| 해 군 제2함대 사령부 | 3. 28 |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학송, 이윤성 | 천안함 실종자 가족 방문 |
| | 3. 31 | 서종표 | 천안함 실종자 가족 방문 |
| | 3. 29 | 이종걸 | 천안함 실종자 가족 방문 |
| | 4. 2 | 노회찬, 조승수 등 10인 | 천안함 실종자 가족 방문 |
| | 4. 27 | 김학송 등 6인 | 천안함 함체 확인 및 조문 |
| | 5. 19 |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위위원 홍영표 등 4인 | 천안함 함체 확인 |
| | 6. 10 | 이정희 | 천안함 함체 확인 |
| | 6. 23 | 박상은 | 천안함 생존장병 면담 |
| | 6. 23 | 최문순 | 천안함 생존장병 면담 (함장/당직사관/음탐사/견시병) |
| | 8. 20 | 신학용 | 천안함 생존장병(3명) 면담 |
| | 9. 3 | 박영아 | 천안함 함체 확인 |
| 백령도 | 4. 11 | 김장수, 박상은, 정몽준, 정병국, 황진하 | 천안함 피격사건 현장 |
| | 6. 7 | 최문순 | 사건 당일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녹화영상 확인 |
| | 7. 12 | 최문순 | TOD 운용병사와 물기둥 목격 초병 면담 |
| 국방부 | 6. 10 | 이정희 | 인양 어뢰추진체 확인 |
| | 6. 11 | 김효재 | 인양 어뢰추진체 확인 |
| | 7. 5 | 최문순 | 인양 어뢰추진체 확인 |
| 합 참 | 4. 23 |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위위원 문희상 등 7인 | 천안함 피격사건 상황 청취 |
| 해군 호텔 | 6. 21 | 최문순 | 생존장병(음탐사/견시병) 면담 |

## 5. 시사점

국회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방위원회, 본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첫째, 군 지휘부가 사건초기에 현장 지휘보다 국회 회의 및 각 정당 보고 등에 빈번하게 출석함으로써 현지 상황 파악과 구조작업 등 후속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방부 및 군의 주요 당국자들은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4월 말까지 본회의 3차례, 국방위원회 5차례에 참석하였으며, 각 정당 보고 및 국회의원에 대한 대면 설명을 연일 실시했다.

둘째,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을 누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회의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거나, 해당 의원에게 보안 관련 규정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대면 보고한 군 기밀사항이 각종 언론과 인터넷상에 유출되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의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사기밀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반면 사건 초기에 군사보안을 이유로 TOD 영상 등 정보를 지나치게 차단하여 군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셋째, 인터넷 등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의혹으로 재확산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피격원인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문제가 동시에 충족되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기밀누설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안보상황이나 대형 사건 · 사고 발생 시 최소한 정부 당국의 초동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요 당국자의 국회 및 정당의 대면보고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주요 당국자의 잦은 국회출석으로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관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 제 3 절 | 국민 설명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확산을 막고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국민 담화, 온라인 홍보,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다. 정부는 사건발생 초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를 약속하면서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호소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온라인 홍보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로는 정책설명회를 중심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 1. 대국민 담화

사건 발생 이후 첫 대국민 담화는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국방부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상황과 구조작업 여건을 살펴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함정을 인양하여 사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불필요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5일 제38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그러나 초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천안함 교신일지, TOD 영상 공개, 천안함 침몰시각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부

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중되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4월 13일 최초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주관으로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언론, 국민, 실종자 가족, 군 내부, 국제사회와의 소통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종장병 탐색구조작업, 함체 인양작업, 희생자 예우 및 보상, 합동조사단의 활동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장관은 4월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초보고의 지연, 초동조치의 미흡 등으로 불신과 의혹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4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희생 장병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예우방안 및 장례절차와 후속 대책을 밝히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4일 건군 최초로 주관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군이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국민이 군을 더욱 신뢰하고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5월 24일 정부의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정부가 국내에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이 단합한 가운데 강경한 대북조치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북한에게는 무력공격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완벽한 증거를 들어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장 · 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의 활발한 대내 · 외 언론활동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외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의 외교적 대응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북한의 조속한 책임 인정 및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5 · 24조치」 이후 장관 및 주요 인사들의 대내 · 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과 「5 · 24조치」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이후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주요 내용은 〈표 5-15〉와 같다.

〈표 5-15〉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정부의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

| 일자 | 발표자 | 담화 주요 내용 |
|---|---|---|
| 3. 27 |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 • 신속한 구조작업<br>• 사건 원인 규명은 함체 인양 후 가능<br>• 불필요한 추측성 보도 자제 |
| 4. 5 | 대통령 제38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 | • 정확한 원인 규명<br>• 사건 원인에 대한 섣부른 예단 자제<br>•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 |
| 4. 16 | 국방부장관 대국민 담화 | •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br>• 국제공조 통한 객관적 · 과학적 조사 실시<br>• 단호한 후속 조치 및 감사원 직무감찰 실시 |
| 4. 19 | 대통령 제39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 | • 침몰원인 끝까지 조사<br>• 결과에 대한 단호한 대처 |
| 4. 25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건 원인 조사<br>•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치<br>• 국가안보대비태세 점검 |
| 5. 4 |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연설 | • 군의 개혁과 선진화<br>• 국가안보대비태세의 점검<br>•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 |
| 5. 24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br>• 단호한 대북조치 시행<br>•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
| 5. 24 | 외교통상부 · 통일부 ·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 | • 외교통상부의 대북 조치<br>• 통일부의 대북 조치<br>• 국방부의 대북 조치 |

## 2. 온라인 소통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언론의 추측성 기사와 함께 다수의 의혹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게시됨에 따라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들이 널리 유포되었다. 피격사건 원인, 사건발생시각, TOD 동영상, 새떼에 대한 사격 진위 여부, 실종자 구조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련 기사 및 게시 글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폭주했다. 근거 없

는 주장들은 다음(Daum)의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Twitter)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111]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인터넷 댓글로 올라온 유언비어들이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타 부처 출입 기자들에 의해 추측성 기사화되거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혹으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함이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대응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방부의 온라인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온라인 홍보전략의 변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즉 국방부는 자체보유 매체에 콘텐츠를 만든 후 네티즌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원하는 '기다리는 홍보전략'에서 탈피하여 '찾아가는 홍보전략'을 〈표 5-16〉과 같이 구사했던 것이다.

〈표 5-16〉 찾아가는 홍보전략

- 다음(Daum)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 공식입장 게재
- 온라인 방문객의 성향과 연령 고려한 홍보콘텐츠 개발
- 천안함 사태 국면별 홍보콘텐츠 개발

첫째, 다음(Daum)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112]를 통해 국방부 공식입장을 직접 게재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이후 11차례에 걸쳐 국방부 공식입장을 아고라에 등록했다.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3만여 명이 조회하여 아고라에 게시된 정부부처의 글 중 최다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고라에 대한 국방부의 주요 대응현황은 〈표 5-17〉과 같다.

1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대표적인 SNS로는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중 트위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자 그룹에 짧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배포하는데 이용되는 온라인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112) '네티즌과의 대화'는 인터넷 다음에서 정부기관, 정당, 시민단체 등과 네티즌과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아고라 게시판으로, 국방부는 2009년 6월 5일 정식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

〈표 5-17〉 다음 아고라에 대한 국방부의 주요 대응 현황

| 일자 | 제목 | 내용 | 조회수 |
|---|---|---|---|
| 3. 30 | "예비역 10년차 전탐 사입니다" | • 작성자 : 과거 천안함 침몰지역 근무 당시의 경험을 근거로 5가지 의혹을 제기<br>• 국방부 : "국방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5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 105,810 |
| 3. 31 | "항해사가 본 천안함 침몰원인은 침수다" | • 국방부 : 작성자가 제기한 3가지 의혹(침수로 인한 침몰, 장교들 침수대책회의, 함미 의도적 미발견)에 대해 사실관계 해명 | 93,565 |
| 4. 1 | "군사기밀 공개불가.... 군, 핵심 7대 의문에 쉬쉬" | • 한겨레 기사 : 7가지 의문 제기<br>• 국방부 : 한겨레가 제기한 7가지 의문 해명 | 63,869 |
| 4. 2 | "전역한지 11년된 해군병이 적습니다" | • 작성자 : 항해일지, 통신기록 공개, 생존자 인터뷰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후타실에 장병이 위치한 의혹 등을 제기<br>• 국방부 : 통신일지가 군사기밀인 관계로 공개가 어려운 점과 생존장병들의 상태 등을 해명 | 58,568 |
| 4. 14 | "천안함…, 국방부 정말 왜 이러나" | • 국방부 : 천안함의 내부구조와 무기탑재 상황 전면공개에 따른 동일 함정 근무 해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절단면 부분공개는 불가피함을 밝힘 | 32,434 |

둘째, 인터넷 홍보 시 국방부 운영 홈페이지 및 블로그 방문객들의 성향과 연령을 고려하여 홍보콘텐츠를 차별화했다. 먼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는 '정책현안', '언론보도 바로보기' 등에 언론보도 해명자료와 각종 담화문

발표내용을 게재하여 국방부 공식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책홍보의 기본 플랫폼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고 한주호 준위 추모 팝업창'을 게재하고 해군의 사이버 추모관과도 연결함으로써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정책고객 서비스(PCRM)[113]를 통해 약 34,550명에 이르는 국방부 정책고객에게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이후 주요 진행 상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방부 홈페이지 '정책현안' 코너

사이버 추모관



Tip

## 한주호 준위의 살신성인

1975년 해군에 입대해 35년간 UDT에 몸담은 UDT의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베테랑 수중 파괴 전문가, 고(故) 한주호 준위, 그의 신념은 **"군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야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역 2년을 앞두고 2009년 3월 소말리아 파병에 최고령자로 지원했던 한 준위는 전역을 1년 앞둔 2010년 3월 30일에도 침몰된 천안함에 갇힌 아들 같은 후배들을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한 준위는 이날 오후 2시 35분에 함수 진입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투입돼 작전을 펼치다 오후 3시경 의식불명에 빠졌다.

"조류가 세지만 어떻게라도 해봐야 한다"며 몸 안사리고 나흘째 연이어 바다 속으로 뛰어든 것이 화근이었다. 동료들은 곧바로 한 준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미 해군 구조함인 샐버함으로 이송했다. 한 준위는 감압실(치료 챔버)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5시경에 순직했다.

노병은 떠났지만 그의 신념은 우리 곁에 남아있다. 한 준위의 값진 희생을 가슴에 묻고 실종장병들에 대한 필사적인 구조작업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한 참군인, 한 준위는 '서해의 전설'이 되어 국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해군본부 자료 제공)

113) 정책고객 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는 국방정책에 관심이 많은 예비역, 방산업체 종사자, 국방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정책고객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방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메일(e-mail)로 보내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채널로 운영 중인 '동고동락', '군화신꼬', '열혈국방' 등 3개 국방 분야 블로그와 2개의 트위터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왜곡된 루머에 즉각 대응했다.

국방부 대표 블로그인 '동고동락'은 과거 군 경험을 함께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20~30대 예비역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예비역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들인 실종자 구조작전에서의 특수부대 활약상, 대형 크레인을 활용한 인양작전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게재되었다. '동고동락'의 주요 게재 현황은 〈표 5-18〉과 같다.

〈표 5-18〉 '동고동락' 주요 게재 현황

| 일자 | 제목 | 내용 | 조회수 |
|---|---|---|---|
| 3. 28 | "침몰한 '해군 초계함' 수색작업에 투입된 SSU요원들은 누구?" | 실종자들의 구조와 사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해군 해난구조대 요원들의 구조작업이 부각됨에 따라 해군 해난구조대원들의 과거 구조임무 수행사례 소개 및 우수한 능력을 홍보 | 48,019 |
| 3. 31 | "청해부대 파병 전 만났던 UDT 한주호 준위를 떠올리며" | 천안함 구조작업 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과거 청해부대 파병 등 솔선수범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군 생활 모습을 소개 | 10,094 |
| 4. 7 |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뭘까?" | 천안함 인양작업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군의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 | 6,049 |
| 4. 14 | "천안함 최종 인양작전 어떻게 이루어질까?" | 인양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함 인양작업의 각 단계 및 군함 인양작업의 어려움을 설명 | 5,654 |
| 4. 20 | "최근 불시착한 해군 '링스 헬기'는 어떤 임무를 할까?" | 천안함 사고와 링스 헬기의 잇단 사고를 연결시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링스 헬기의 임무를 소개하고 사건과 연관이 없음을 설명 | 17,413 |

'군화신꼬'는 직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테마블로그를 지향하는 블로그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주로 고 한주호 준위와 희생 장병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되었다. '군화신꼬'의 주요 게재 현황은 〈표 5-19〉와 같다.

〈표 5-19〉 '군화신꼬' 주요 게재 현황

| 일자 | 제목 | 내용 | 조회수 |
|---|---|---|---|
| 4. 2 | 'UDT의 전설' 고 한주호 준위를 가슴에 묻다. |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에 맞추어 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참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추모 분위기 조성 | 2,574 |
| 4. 7 | 고 남기훈 상사의 슬픈 귀환 | 고 남기훈 상사의 시신 발견과 관련하여 고인의 군생활을 떠올리며 애도 분위기 형성 | 2,976 |
| 4. 9 | 슬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생존장병 편) | 생존장병 기자회견과 실종자 가족과의 만남이 있은 후, 생존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군인가족의 입장에서 이들의 심적 부담감과 슬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 2,192 |
| 4. 19 |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 함미 인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망자 38명에 대한 애도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희생장병들의 귀환을 염원 | 1,594 |
| 4. 21 | "아빠, 이렇게 보내서 미안" (최한권 상사 딸의 편지 중) | 실종자 최한권 상사 딸의 편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희생장병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형성 | 1,377 |

'열혈국방'은 국방정책과 군사정보에 관심이 많은 군사 매니아와 40대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열혈국방'의 주요 게재 현황은 〈표 5-20〉과 같다.

〈표 5-20〉 '열혈국방' 주요 게재 현황

| 일자 | 제목 | 내용 | 조회수 |
|---|---|---|---|
| 3. 30 | "한국형 초계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천안함 사건 발생에 따라 초계함이 무엇인지 등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소개 | 1,504 |
| 4. 13 | 6 · 25와 UDT의 활약 | UDT 인양 활약상과 6 · 25전쟁 참전사 소개 | 1,260 |
| 4. 15 | "천안함 함미 인양, 사후조치는?" | 함미 인양 후 바지선에 탑재하는 과정 등을 소개 | 1,013 |
| 4. 16 |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국방부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 소개 | 1,213 |
| 4. 27 | "시련에도, 해군 청해부대는 간다" | 천안함 사건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소개 | 1,127 |

Tip

**'이름 없는 천안함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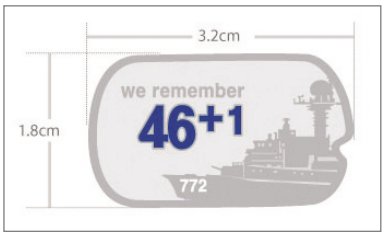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당시 김정운 상사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밤바다에 뛰어들어 파도에 떠내려가는 구명정들을 천안함 쪽으로 밀어냈다.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구명정으로 옮겨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상사는 자신이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전우들이 아직 바닷속에 있는데……."라며 인터뷰와 사진 공개를 거부했다. 살아와서 죄송하다며 이름 밝히기를 극구 사양하는 김정운 상사야말로 살아와줘서 고마운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2개의 계정을 열어 운영했다. 해군은 4월 말부터 트위터 활동을 개시하였고, 국방부는 5월 10일부터 국방부 트위터(www.twitter.com/ROK_MND)를 개설하여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미투데이, 유투브 등 국방부 소셜 미디어 채널은 5월 말까지 차례로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오보와 루머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유통에 기여했다. 청와대도 6월 7일 트위터(www.twitter.com/BluehouseKorea)에 공식계정을 열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셋째, 국방부는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국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마련했다. 3월 30일 한주호 준위의 순직으로 인터넷 여론이 추모 분위기로 변화됨에 따라 '동고동락', '군화신꼬' 등 국방 블로그에서는 한 준위의 활약상과 참군인상이 적극 홍보되었다. 4월 29일 열린 합동영결식 이후에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에 대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에 홍보중점을 두고, 추모뱃지 제작 등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전체 디자인 : 인식표(군인을 상징)
○세부 디자인 : 천안함 함수부분과 46+1, 'we remember'를 새김
○의미 : 침몰한 천안함과 희생장병 46명, 그리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고 한주호 준위를 우리는 기억한다는 의미
○크기 : 3.2×1.8 cm(니켈 도금칠, 양복상의 착용)

'추모뱃지'의 디자인 구성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국제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조사단의 객관적 · 과학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조사결과를 불신했다. 5월 23일 실시된 경향신문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합동여론조사에서는 27.3%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말부터 조직된 개인 밀리터리 파워블로거[114]들이 개인 인터넷 미디어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지지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면서 국방부의 입장은 네티즌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공감을 점차 얻게 되었다. 또한 7월 5일에는 '천안함 STORY'라는 별도의 천안함 홈페이지(www.cheonan46.go.kr)를 개설하여 국방부

'천안함 STORY' 홈페이지

및 각 군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네티즌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념적 ·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의혹을 일부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화하여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9월 13일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만화로도 발간되었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114)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한 준전문가로써 온라인 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은 물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군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해주는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이다. 대표적인 밀리터리 파워블로거(Military Power-Blogger)로는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빤스지기, 돌핀 등이 있다.

보고서에는 모든 침몰 가능요인을 망라하여 조사한 전 과정이 기술되었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입증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과학수사 · 함정구조 · 폭발물 · 정보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참석한 국내 · 외 전문가 전원이 동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검증되었다. 보고서는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함체를 인양하여 조사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로서, 결정적 증거물(Smoking Gun)인 어뢰 추진체를 수거하고 폭약성분까지 검출한 것은 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스크루 · 흡착물 · 물기둥 논란 등 소위 '핵심의혹'에 대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과 조사위원들이 직접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했다.

## 3. 정책설명회

정책설명회는 오프라인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천안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국민들에 대한 설명효과를 확대시켜 나갔다.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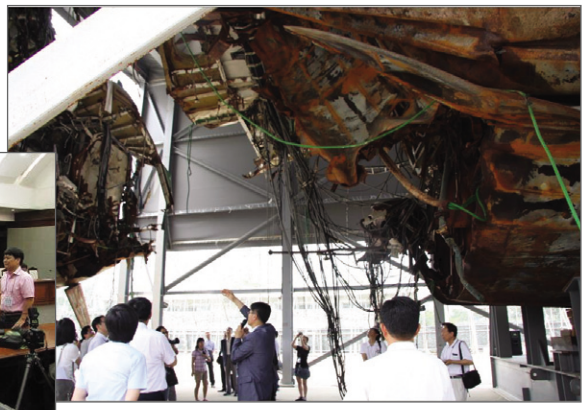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의 정책설명회는 해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국방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설명회는 실시되지 않았다. 사건현장에서 작전을 담당한 해군이 탐색구조작전, 함체인양작전, 전사자 · 실종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5월 20일 합동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방부는 정책설명회를 주도했다. 국방부는 언론사 정치 · 사회부장 및 논 · 해설위원을 포함하여 국가원로, 학계 · 문화계 인사, 고위공무원, 예비역 대표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정책설명회는 대상자를 국방부 청사로 초빙하여 합동조사단의 브리핑과 관련 동영상 시청,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체 실물 견학과 증거물 확인, 합동조사단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합동조사단은 브리핑에서 사건의 개요, 합동조사 과정 및 결과뿐만 아니라 흡착물, 스크

루, 어뢰 추진동력장치, 좌표, 물기둥, TOD, 연어급 잠수정, 절단면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제2함대사령부에서는 천안함 함수 · 함미의 처참한 절단면과 휴지조각처럼 구겨진 함체 등 천안함의 파손상태와 방탄헬멧, 장교용 권총집, '천안함' 이라고 쓰인 장병의 머그컵 등 천안함 용사의 흔적들을 견학했다.

민 · 군 합동조사단 설명



피격된 천안함 현장 견학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6월 23일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합동조사단의 발표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5월 22일 72%(코리아리서치)에서 75.3%로 소폭 상승되었다. 그 중 20대에서 64%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 고 응답한 반면, 5.6%는 미국이, 3.3%는 일본이, 1.9%는 중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방부는 정책설명회의 논점을 '상황적 의혹' 에 대한 해명에서 '과학적 의혹' 에 대한 해명으로 전환하여 조사결과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설명에 주력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인터넷 파워 유저, 대학생 캠프 참여자 등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정책설명회의 주요 현황은 〈표 5-21〉과 같다.

그러나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문적으로 반박했다.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는 천안함 함체에 흡착된 물질이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단순한 퇴적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1번' 어뢰 추진체가 진품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와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천안함 함체 절단

면, 생존 · 사망자 상태, 알루미늄 흡착물질, 어뢰 추진체 1번 글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사태는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함미 절단부 디젤 엔진실 선저하부의 스크래치와 찢어진 좌현 함 안정기의 손상이 좌초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표 5-21〉 천안함 피격사건 정책설명회 주요 현황

| 일 자 | 대 상 | 인원 (명) | 장 소 | 주관부서 |
|---|---|---|---|---|
| 5. 21 | 외신기자 | 31 | 국방부 | 공보과 |
| 5. 25 | 국민원로회의 | 37 | 청와대 | 청와대 |
| 5. 26 | 국방 · 외교 · 통일 정책자문위원 | 66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기본정책과 |
| 5. 27 | 언론사 정치 · 사회부장 | 25 | | 공보과 |
| 5. 28 | 군 원로 | 108 | | 예비역 TF |
| 5. 31 | 언론사 논 · 해설위원 | 25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공보과 |
| 6. 7 | 인터넷 파워 유저(20~30대) | 3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정책홍보과 |
| 6. 9 | 지자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 1,000 | 충남도청 | 합동조사단 |
| 6. 19 | 초등교감 · 문화예술계 | 10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문화정책과 |
| 6. 29 | 언론3단체 초청설명회 | 22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합동조사단 |
| 7. 1 | 대학생 캠프 참여자 | 10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정책홍보과 |
| 7. 8 | 트위터, 미투데이 이용자 | 5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
| 7. 15 | NGO 단체 회원 | 5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
| 7. 16 | 예비역 안보강사 | 107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정신전력과 |
| 7. 23 | | 8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
| 8. 17~19 | 예비역 장성 | 700 | 국방부 · 제2함대사령부 | 예비역정책과 |

또한 언론노조에서는 합동조사단의 공식 입장과 실제 스크루 상태의 상이, 합동조사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류를 지적하며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손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프레시안』 뉴스는 북한산 어뢰의 1번 표기, 흡착물질, 합동조사단의 함체절단 및 스크루 시뮬레이션 결과 등 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미디어오늘』 등 언론에서는 연어급 잠수정, 프로펠러 흡착물, 프로펠러의 휘어진 모양, 스크루, 멀쩡한 천안함 선실의 형광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 트위터 · 미투데이 이용자, NGO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명회에서 흡착물 · 스크루 · 어뢰추진동력장치 · 좌표 · 물기둥 · TOD · 연어급 잠수정 · 절단면 · 어뢰 추진체 1번 글씨 관련 등

주요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는 수중폭발 시 1번 글씨 잉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김광섭 재미 폭약전문가도 이승헌 · 양판석 교수가 실험한 시뮬레이션의 오류를 지적했다.

한편 8월 20일부로 국방부는 홍보 차원의 정책설명회를 국민안보교육을 위한 정책설명회로 전환했다. 사회 각 분야의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대부분 실시되었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과 네티즌의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국민안보교육 정책설명회는 해군본부와 제2함대사령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었다. 현역장병, 학생, 내 · 외국인 등 1일 평균 250명 이상이 전시된 천안함을 견학했다. 제2함대사령부는 합동조사본부의 지원으로 자체 설명 전담요원을 육성하여 〈표 5-22〉와 같이 학생 · 시민단체 등 방문대상별로 맞춤형 안보 투어(Tour)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5-22〉 대상별 안보 투어 프로그램

<table>
<tr><th>구분</th><th>초 · 중 · 고교 학생</th><th>대학생 · 일반시민 · 정부기관</th><th>정치인 · 언론인</th></tr>
<tr><td>10분</td><td rowspan="3"></td><td rowspan="3">① 안보영상(연평해전, 천안함)</td><td rowspan="3"></td></tr>
<tr><td>20분</td></tr>
<tr><td>30분</td></tr>
<tr><td>40분</td><td rowspan="2">② 천안함 견학</td><td rowspan="2">①-1 합동조사단 조사결과<br>* 침몰요인중심으로 설명</td><td rowspan="2">①-1 합동조사단 조사결과<br>* 침몰요인+쟁점·의혹 설명</td></tr>
<tr><td>50분</td></tr>
<tr><td>60분</td><td>③ 제1, 2연평해전전적비</td><td>② 천안함 견학</td></tr>
<tr><td>70분</td><td>④ 참수리-357정</td><td>③ 제1, 2연평해전전적비</td><td>② 천안함 견학</td></tr>
<tr><td>80분</td><td rowspan="2">⑤ 함정 견학</td><td>④ 참수리-357정</td><td>④ 참수리-357정</td></tr>
<tr><td>90분</td><td>⑤ 함정 견학</td><td>⑤ 함정 견학</td></tr>
</table>

9월 15일부터는 전쟁기념관 6 · 25특별전시장 내에 '천안함관'을 설치하여 결정적인 증거물과 채증 증거물들을 전시하고, 영상 슬라이드쇼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운용하였다.

**"천안함 현장 견학 한 번이 브리핑 열 번 보다 낫다"**

해군의 천안함 설명담당 김 소령은 잠수함과 초계함을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피격상태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 소령은 2010년 12월말 현재 1500회에 걸쳐 7만 5000명에게 천안함을 설명했다. 김 소령은 "견학이 끝날 때쯤이면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들의 90%이상이 생각을 바꾼다"며,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국민 간의 분열은 북한에게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줄 뿐이므로 천안함 견학을 통해 전 국민 100%가 안보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견학 참석자들이 "견학 한 번이 브리핑 열 번 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천안함 견학의 효과는 상당하다. 대학생 정예은 씨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이성진 씨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와서 보니 내 판단에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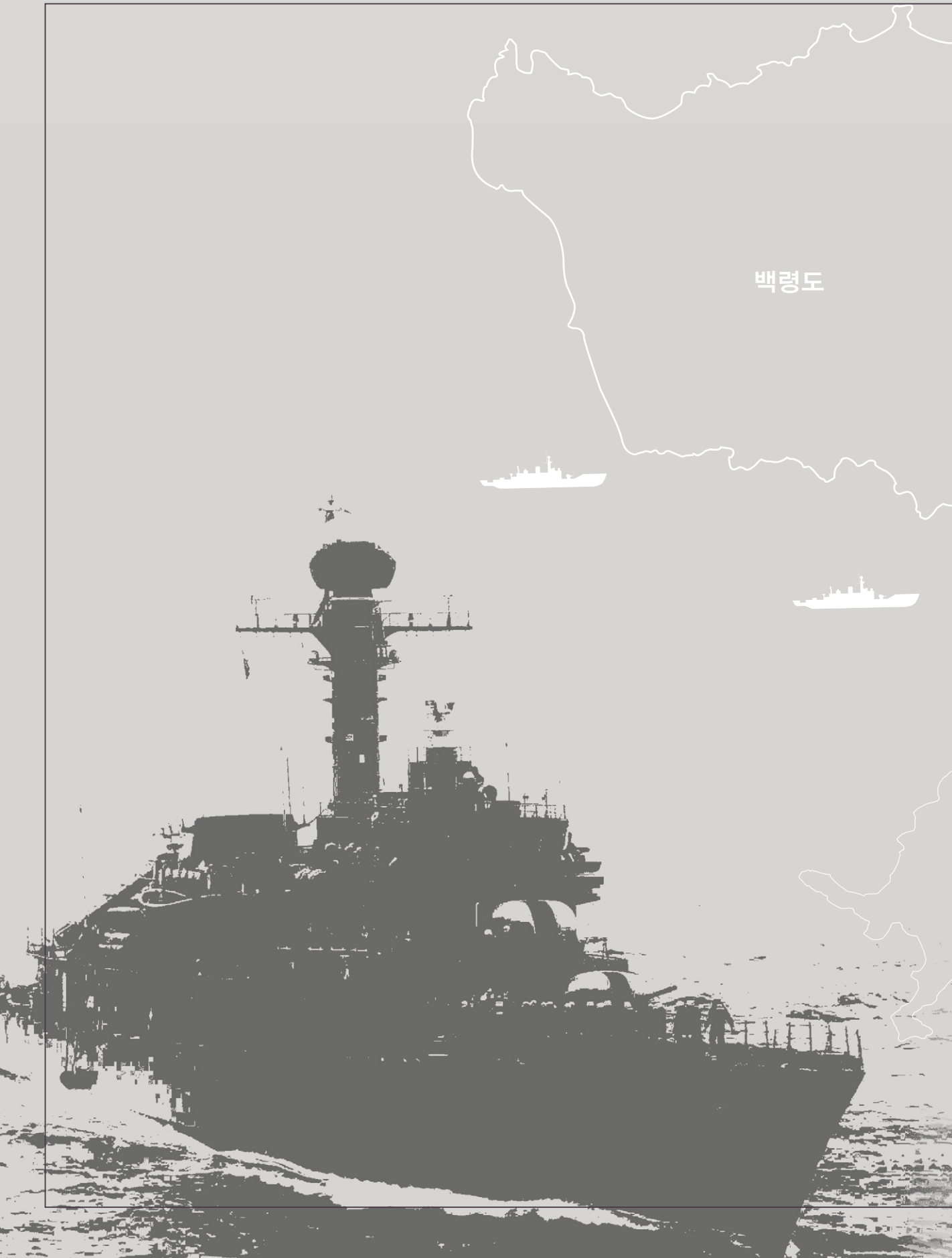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설명은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 온라인 홍보,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사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천안함 피격사건을 국가안보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대국민 담화는 각종 의혹과 불신으로 대국민 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대응조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온라인 홍보는 제기되는 의혹에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여 대응했다. 온라인 홍보를 오프라인으로 연결시킨 정책설명회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 이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각종 의혹의 확산을 막고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는 각종 의혹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 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사태초기에 불명확한 사실과 군사보안상의 제한으로 근거 없이 제기된 좌초론, 미국 잠수함 충돌론, 피로파괴론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주요 포털사이트는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한겨레』 등의 의혹 기사들을 게재하여 편향적인 여론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여론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사건 자체 못지않게 사후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기 시 범정부 차원의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와 정책설명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백령도

제 6 장

# 맺 음 말

# 맺음말



천안함 피격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이래 가장 큰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었다. 우리 영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은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였다.

정부와 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고, 민간자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 · 인양작전을 실시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 사후처리와 함께,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 · 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함체의 침몰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피격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UN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시인 ·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응분의 대가와 책임을 묻는 대북조치를 취하는 한편, UN안보리 회부 등 국제적으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우리 정부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허위조작에 의한 날조극이라고 비방했다. 그런가 하면 물증확인을 위하여 국방

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식의 맞불작전을 펴면서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기본축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사태 해결을 도모했다. 이로써 천안함 사태는 UN안보리에 회부되었고, UN안보리에서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UN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의 침몰과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무력 공격을 개탄하고, '천안함의 침몰' 이 역내 · 외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헌장과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건 책임자의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 를 촉구한 것으로써 북한의 책임을 사실상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아 초기 대응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다. 사건의 원인 조사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포함한 일부 의혹세력이 제기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국민 설명과정에서 피격사건 발생시각 번복,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자료의 단계적 공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사상 초유의 해군 함정 폭침이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을 경악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생과 그 처리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국가안보태세 전반에 걸쳐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하는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첫째, 국가안보태세의 재확립이다.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북한군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당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에 공공연히 '보복성전' 을 선언하며 위협했고, 우리 군 또한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전술토의를 실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해군은 기존 해상전 위주의 작전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잠수함(정)의 탐지에 제한사항이 있음을 간과했다. 그리고 사건 전후 정보감시체계에서 일부 북한 잠수함(정)이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노정된 것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군 내부에서 대북 경각심과 긴장감이 약화된 데에서 기인한 바 크다. 우리 군은 군사력 건설의 방향도 전면전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주안을 둠으로써 현존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특히 비대칭 전력이 증강되고 침투 ·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부족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남북 간의 관계개선으로 안보현실을 낙관시하며 북한의 위협실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안보의식에 혼란을 조장시켰다. 게다가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안보기구 및 국가위기관리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여 국론을 결집하고, 국가의 제반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굳건하게 해나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 대응 및 위기관리대응체계의 보완이다.

이번 피격사건에서는 최초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현장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천안함에서 청와대까지 최초 보고가 지연되었고, 사건 발생시각도 수차례 변경하여 발표함으로써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합참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의 초기 대응도 미흡했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탐색구조 및 인양작전이 지연되었다. 초기의 인명구조는 해양경찰함정 등 군 · 관 전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58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해군 탐색구조 전력은 진해에 위치함으로써 소해함인 옹진함 · 양양함과 구조함인 광양함 등이 현장 구조활동에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번 피격사건을 통해서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

어졌다. 청와대도 이 일을 계기로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이를 대통령실장 직속기구로 업무계선을 변경하여 신속한 상황보고와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체계는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비롯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용능력과 초동조치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보완하고, 이를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통합이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외교안보수석실(국방비서관실) 위주로 관리되고 타 비서관실의 인식 및 협조가 미흡했다. 초기에 해당비서관실의 협조 하에 기관 및 민간자산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동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비서실 간의 역할 분담 및 노력의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가위기상황 시 국무총리실에서는 선도적인 위기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상부지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부처 간의 노력을 통합하고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유기적인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서관실이나 부처에서는 군(국방부) 중심의 사고 후속조치로 판단하여 주도적이라기보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의 업무 추진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민 · 관 · 군 전력통합 및 협조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분향소 운용관련 조치, 금양호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소재, 장의행사 추진, 전사자 포상관련 검토과정 등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 국정수행과정에서 사태 관련 잦은 위원회 소집 및 대면 설명 등은 군 지휘부의 초기 현장지휘의 제한을 초래했고, 국회 설명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해가 요구되었다.

감사원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군 대응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동조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고 많은 의혹을 해소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 군사적 사안에 대한 일반적 감사 규정의 적용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비서관실별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반 노력을 통합하고, 상황발생 시 타 비서관실의 전문 인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 및 운영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부처에서는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주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국가자원활용시스템을 정비하여 민 · 관 · 군 자산 및 인력 통합운영과 협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희생자 예우 · 보상 및 생존자 관리이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장병과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하여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상한다' 는 방침을 정하고 국가적 위난사태의 후속조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전투함의 피격과 침몰' 이라는 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기존의 관행과 관례를 뛰어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의 순직에 대해 '전사' 처리하고 충무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또한 천안함 실종자에 대해서 전사 처리하였으며, 전사자 전원을 '천안함46용사' 로 호칭하고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순직과 전사의 명확한 구분 및 서훈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후처리과정에서 국방부는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생존장병 관리를 지원했으며,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 법률적 차원의 지원과 아울러 유가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취업 · 장학금 · 주택 등의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생존자 관리 차원에서 생존장병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안정화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국가적 위난사태에 따른 희생자의 예우나 보상, 나아가 생존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희생자의 서훈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수렴한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공무원의 보상 기준과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보상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에 운영된 통보관제도는 제도화되어야 하며, 유가족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존장병에 대한 안정화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사건원인 조사활동의 개선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최초에 국가안보 및 군사보안을 고려해 군 단독의 조사단을 편성했으나 정치쟁점화를 차단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하여 민 · 군을 통합하고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확대 · 편성했다.

합동조사단은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사 초기부터 천명한 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활동으로 비교적 조기에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혀냈다. 조사활동에는 미국은 물론 해양국가인 영국과 호주가 참여했고, 중립국인 스웨덴의 참여는 조사의 국제적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들로부터 대체로 신뢰와 지지를 받았고, 6월 14일 UN안보리 및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조사결과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대부분 국가들의 설득과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초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비롯하여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연구자까지도 반론을 제기하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발표시기가 '6 · 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었고, 종합발표 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뢰의 실물크기 그림을 잘못 제시함으로써 전체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기되는 의혹에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 조사활동은 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단기간에 조사활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우선 국가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활동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조사활동은 여론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사활동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사건에 대비한 조사방법이 정립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군사보안의 조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북조치에 따른 국제공조의 중요성 인식이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및 UN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력도발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한 대가와 책임을 묻고 다시는 북한이 불법적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5 · 24조치」를 단행

했다. 또한 정부는 정상회담, 주변 4개국 외교, UN안보리, G8 정상회담, ASEAN회의 등에서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기존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보다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한 · 미 2+2회담이나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G8 정상선언문 채택, ARF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채택 등의 성과로 가시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조를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중국은 안보리 문안 협상과 한미연합훈련 등 사안에 있어 북한에 대한 중립적 태도, 나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우리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문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조속한 천안함 사태의 종결과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는 등 우리와 일정부분 입장차를 노정했다. 게다가 국내의 일부 NGO는 UN안보리에 사건 조사결과보고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일부 학자들도 지속적인 의혹의 제기로 국제적 지지에 걸림돌이 되었다.

우리의 외교는 중대한 국가적 안보사안을 다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이익과 상충되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보다 전략적인 외교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 · 미 · 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장래문제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 러시아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협조가 긴요하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의 확보도 중요하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국내적 지지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민과의 소통 노력 강화이다.**

정부는 천안함이 피격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원인조사의 과정을 비롯한 전 과정에 신중을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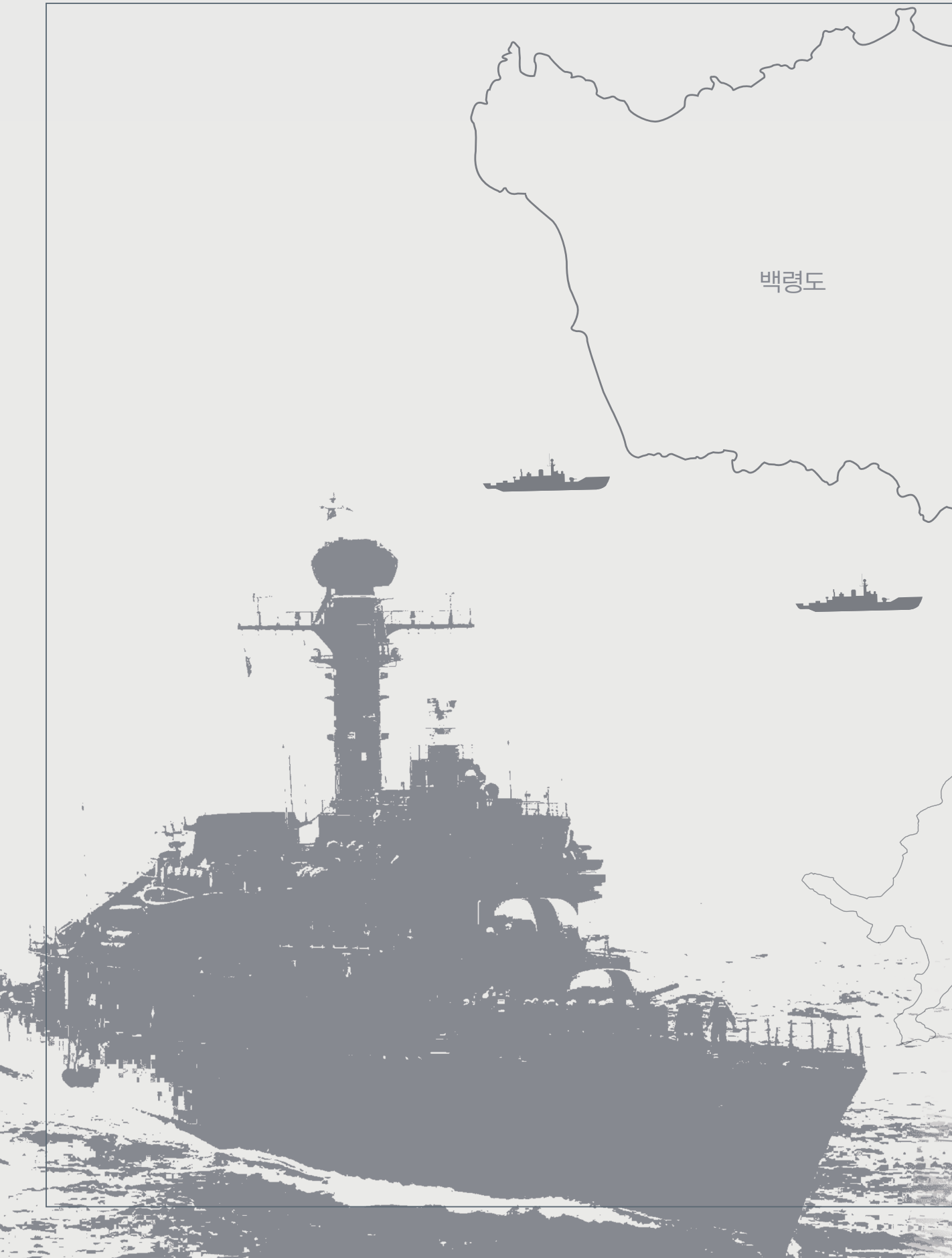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 공보관계자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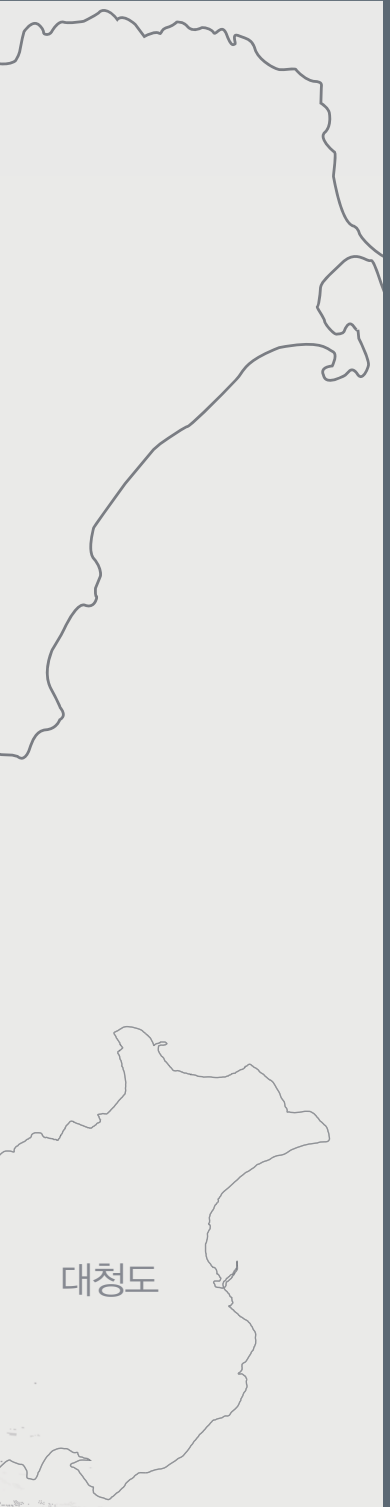
보의 부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응했다. 특히 사건 발생시각과 관련하여 열영상관측장비(TOD)의 영상자료를 제시하는 공보과정에서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불신을 야기했고,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취재경쟁에 선제적인 공보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

국회에서도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을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답변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군사기밀인 경우에 자료 제출이 제한되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초동조치 단계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국회에 출석함으로써 긴박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현장지휘에 제한을 받았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대통령 및 정부 요인의 대국민 담화, 온라인 소통, 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대국민 담화는 각종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에 대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조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온라인 소통은 홈페이지 · 블로그 ·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응했다. 그리고 정책설명회는 온라인 소통을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 합동조사간의 결과 발표 이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보 전반에 걸친 보완이 요구되었다. '선제적인 공보조치'를 통하여 국민과 언론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현안에 대한 브리핑은 사건의 주요 관계자와 공보 전문가의 협조에 의한 공보시스템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태의 진상과 진실에 대해 성실하게 알리고,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협조하는 성숙한 언론 · 공보 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백령도




# 부 록

## Appendix

**부록 1** 천안함 제원 및 주요부 명칭
**부록 2** 천안함 전사 · 산화자 명단
**부록 3** 천안함 피격사건 상황일지
**부록 4** 정부 담화문 및 국제기구 성명서
**부록 5** 희생자 추모활동
**부록 6** 민 ·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문
**부록 7** 주요 의혹과 사실관계
**부록 8**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한의 언론보도
**부록 9**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주변 4국의 언론보도

## 【부록 1】 천안함 제원 및 주요부 명칭

| 구 분 | | 제 원 |
|---|---|---|
| 함 정 명 | | 천안함(PCC – 772) |
| 임 무 | | 대함작전, 대공작전, 대잠작전, 선단호송작전, 탐색 · 구조작전, 함포지원 |
| 건조 | 회 사 명 | 코리아 타코마 |
| | 건조기간 | 1985. 12. 19 – 1988. 12. 29 |
| | 건조비용 | 280억 |
| 명명 및 진수일자 | | 1987. 7. 24 |
| 취역일자 | | 1988. 12. 31 |
| 톤 수 | | **중하** : 1,223톤 **경하** : 972톤 |
| 재 질 | 상부구조 | Aluminium (4.6 – 6.1mm) |
| | 하부구조 | Steel (7 – 11mm) |
| 속력 / 항속거리 | | **최대속도** : 32kts / 800NM **경제속도** : 15kts / 4,000NM |
| 크 기 | | **전장** : 88.32m **전폭** : 10m **흘수** : 2.88m |
| 승조원(정원) | | 91명(장교 : 9, 사병 : 82) |
| 주요무장 | | Harpoon 대함미사일, 어뢰, 76 · 40mm 함포 |
| 주요장비 | | 대함 사통레이더, 전자전 장비, 선체고정형 음탐기 |

## 【부록 2】 천안함 전사 · 산화자 명단

※계급은 추서 계급임

| 구 분 | 직책/계급/성명 | | | | | |
|---|---|---|---|---|---|---|
| 전 사 (40명) | 사 통 장 | 원사 | **남기훈** | 내기부사관 | 원사 | **김태석** |
| | 전자부사관 | 원사 | **문규석** | 음 탐 장 | 상사 | **김경수** |
| | 유 도 장 | 상사 | **안경환** | 내기부사관 | 상사 | **김종헌** |
| | 의 무 장 | 상사 | **최정환** | 행 정 장 | 상사 | **민평기** |
| | 내연부사관 | 상사 | **정종율** | 보 급 장 | 상사 | **강 준** |
| | 병기부사관 | 상사 | **박석원** | 전기부사관 | 상사 | **신선준** |
| | 내기부사관 | 중사 | **임재엽** | 통 기 장 | 중사 | **손수민** |
| | 전기부사관 | 중사 | **심영빈** | 내기부사관 | 중사 | **조정규** |
| | 조 리 장 | 중사 | **방일민** | 사통부사관 | 중사 | **조진영** |
| | 갑판부사관 | 중사 | **차균석** | 전기부사관 | 중사 | **박보람** |
| | 통신부사관 | 중사 | **문영욱** | 병기부사관 | 중사 | **이상준** |
| | 내연부사관 | 중사 | **서승원** | 보수부사관 | 중사 | **박성균** |
| | 내연부사관 | 중사 | **서대호** | 전기부사관 | 중사 | **김동진** |
| | 조 리 병 | 하사 | **이상희** | 갑 판 병 | 하사 | **이용상** |
| | 갑 판 병 | 하사 | **이재민** | 병 기 병 | 하사 | **이상민** |
| | 보 일 러 병 | 하사 | **이상민** | 조 리 병 | 하사 | **강현구** |
| | 전 자 병 | 병장 | **정범구** | 내 연 병 | 병장 | **김선명** |
| | 내 연 병 | 병장 | **박정훈** | 이 발 병 | 병장 | **안동엽** |
| | 갑 판 병 | 병장 | **김선호** | 조 리 병 | 상병 | **나현민** |
| | 보 수 병 | 상병 | **조지훈** | 보 수 병 | 일병 | **장철희** |
| 산 화 (6 명) | 전 탐 장 | 준위 | **이창기** | 전 기 장 | 원사 | **최한권** |
| | 보수부사관 | 상사 | **박경수** | 내기부사관 | 중사 | **장진선** |
| | 가스터빈병 | 상병 | **강태민** | 전 기 병 | 일병 | **정태준** |

※ 특수전여단 준위 한주호 : 함수 탐색 도중 실신 / 미 샐버함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전사 처리)

# 【부록 3】 천안함 피격사건 상황일지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3. 26 (금) | 21:22 | ○ 천안함, 백령도 서남방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37-55-45N, 124-36-02E)<br>* 민 · 군 합동조사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령도 관측소에서 진도 1.5 규모의 지진파 / 공중음파 탐지시각(21:21:58)을 근거로 사건 발생시각을 21:21:57로 최종 발표 |
| | 21:28 | ○ 제2함대사, 천안함 침몰 상황 접수<br>* 천안함 포술장이 제2함대사에 구조요청<br>○ 함미 완전 침몰 |
| | 21:30 | ○ 제2함대사, 대청도 고속정편대 출동지시 |
| | 21:31 | ○ 제2함대사, 해작사에 천안함 침몰 상황 보고 / 속초함 등 서해 경비전력 출동지시 |
| | 21:32 | ○ 제2함대사, 인천해양경찰서 및 관공선에 구조지원 요청 |
| | 21:42 | ○ 해작사, 해본 및 합참(21:43)에 천안함 침몰 상황 보고 / 서해 해상훈련 참가 전력 백령도 사건 현장 지원지시 |
| | 21:45 | ○ 제2함대사, 서북해역 경계태세 강화지시 |
| | 21:47 | ○ 해작사, 왕건함 백령도 사건 현장으로 출동지시 |
| | 21:51 | ○ 합참, 청와대에 천안함 침몰 상황 보고<br>○ 청와대,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 상황 최초보고 |
| | 21:53 | ○ 합참, 공군 조명기 · 구조헬기 출동지시 |
| | 21:57 | ○ 제2함대사, 대잠경계태세 발령<br>○ 제6해병여단, K-9자주포 등 비상대기태세 유지 |
| | 21:58 | ○ 고속정 235 편대, 현장 도착 / 인명구조 시작<br>* 최초 1명 구조(22:28) |
| | 22:01 | ○ 해작사, 광양함 · 강감찬함 · 최영함, LYNX 헬기 , P-3C 출동지시 |
| | 22:10 | ○ 대통령,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도착<br>○ 고속정 233편대, 현장 도착 |
| | 22:11 | ○ 합참, 천안함 침몰 상황을 합참의장에게 보고 / 국방부장관 보고(22:14) |
| | 22:15 | ○ 해양경찰-501함(RIB 2척), 현장 도착 / 인명구조 시작 |
| | 22:24 | ○ YTN 긴급 뉴스, "백령도 서해상에서 초계함 침몰 중" 보도 |
| | 22:30 | ○ 합참 ·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협조회의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3. 26 (금) | 22:31 | ○ 해본, 해난구조대 및 UDT 백령도 사건 현장으로 출동지시 |
| | 22:42 | ○ 합참의장, 지휘통제실 도착 |
| | 22:43 | ○ 공군 방공비상대기 전투기(KF-16 2대), 긴급 출격<br>○ 해양경찰-501함, 천안함 함수 포대 주위에서 19명 구조 |
| | 22:50 | ○ 관공선(214 · 227호), 현장 도착 / 인명구조 시작<br>* 환자 2명 백령도 후송(23:08) |
| | 22:55 | ○ 속초함, 백령도 북방(NLL 남방 3마일)에서 미식별 고속접촉물 포착 / 76밀리 함포 135발 사격(23:00-23:05)<br>* 미식별 접촉물 소실(23:11) / 새떼로 최종 확인(3. 27, 00:43) |
| | 23:10 | ○ 합참의장, 통합상황평가회의 주재(해 · 공작사령관) |
| | 23:13 | ○ 천안함 생존자(58명), 이함 완료<br>* 인명구조 참가 함정, 천안함 침몰 부근 해상 수색 |
| | 23:15 | ○ 해작사, 성인봉함 백령도 사건 현장 출동지시 |
| | 23:19 | ○ 해군참모총장,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 상황 및 구조작전 현황 보고 |
| | 23:20 | ○ 제2함대사 LYNX 헬기, 현장 도착 / 대잠탐색 실시 |
| | 23:30 | ○ 합참, 사건 보도자료 최초 제공(공보실장)<br>○ 청와대, 1차 외교안보장관회의 |
| | 23:35 | ○ 해양경찰-501함, 천안함 생존 장병 55명 구조 완료<br>* 구조 인원 해군에 인계(3. 27, 05:55) |
| | 23:48 | ○ 해양경찰청, 해상 경계강화 지시 |
| | 23:50 | ○ 해군 제6전단 P-3C, 현장 도착 / 주변 해상탐색 |
| | 23:58 | ○ 공군 조명기(1대), 현장 도착 / 조명지원 |
| | 23:59 | ○ 해군참모총장, 천안함장과 통화(침몰상황 확인) |
| 3. 27 (토) | 00:23 | ○ 합참, 언론사에 최초 브리핑(정보작전처장)<br>* 천안함 침몰 및 인명구조 상황 |
| | 00:25 | ○ 온천 일대 적 MIG-29 2대 식별 / 초기 대응(KF-16, F-15K)<br>* 제2함대사 대공경계 강화지시(00:31) |
| | 00:26 | ○ 해난구조대 등 선발대(SSU 4, UDT 1), 백령도 도착 |
| | 01:00 | ○ 해본, 탐색구조작전 지휘관 임명(정보화기획실장) |
| | 01:36 | ○ 합참,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강화지시 |
| | 01:43 | ○ 해본, 천안함 함체 인양방법 토의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3. 27 (토) | 02:25 | ○ 해양경찰–501함, 침몰해역 부근에 위치부표 설치 |
| | 03:22 | ○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백령도 지역 지진파 자료 접수<br>* 자료 : 지진파 감지시각(21:21:58) 통보 |
| | 03:30 | ○ 합참, 전군 경계태세강화 지시 |
| | 04:32 | ○ 해작사, 소해함(양양함 · 옹진함 · 김포함 · 고령함) 출동지시 |
| | 05:30 | ○ 제6해병여단, 백령도 해안 / 해상 수색정찰(상황종료시까지) |
| | 06:30 | ○ 청와대 위기상황센터, 지진파 자료 합참 통보 |
| | 07:30 | ○ 청와대, 2차 외교안보장관회의 |
| | 08:54 | ○ 해난구조대 증원요원(32명), 백령도 도착 |
| | 08:55 |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총 5척), 경계 증원 및 사건 현장 부근 탐색 |
| | 09:40 | ○ 합참, 구조상황 언론브리핑(공보실장) |
| | 10:00 | ○ 탐색구조단(SSU 60, EOD 8) , 백령도 장촌 해안 도착 / 전진기지 설치 |
| | 11:00 | ○ 미 구축함 2척, 서방해역 배치 / 경계강화 |
| | 13:10 | ○ 천안함 생존장병 48명, 제2함대사 도착(성남함) |
| | 13:30<br>-18:00 | ○ 탐색구조단 잠수요원 18명, 최초 탐색구조작전 실시<br>* 강조류로 탐색 불가<br>○ 국회 국방위원회 개최<br>* 천안함 침몰 및 조치사항 확인 |
| | 13:37 | ○ 천안함, 함수 완전 침몰 |
| | 14:47 | ○ 국방부장관, 백령도 사건 현장 순시<br>* 복귀 후 기자실 방문하여 사건 현장 상황 및 구조작전 의지 설명(18:05) |
| | 16:00 | ○ 청와대, 3차 외교안보장관회의 |
| 3. 28 (일) | 06:26 | ○ 제주함, 천안함 부유물 인양(비상식량 등 다수) |
| | 06:50 | ○ 탐색구조단, 수중탐색 실시<br>* 최초 침몰장소에 위치부표 설치(09:17) / 강조류로 퇴수 |
| | 10:32 | ○ 실종자가족 대표(11명), 백령도 사건 현장 방문(성남함) |
| | 11:00 | ○ 청와대, 4차 외교안보장관회의<br>*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 구성(외교안보 · 정무수석, 외교 · 통일 · 국방부 등) |
| | 12:08 | ○ 탐색구조단, 수중물체 확인차 잠수사 입수<br>* 강조류로 탐색 불가 / 퇴수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3. 28 (일) | 14:30 | ○ 광양함 · 성인봉함, 백령도 사건 현장 도착<br>＊ 탐색구조단, 광양함 · 성인봉함으로 전개 |
| | 14:41 | ○ 국무총리, 백령도 사건 현장 방문 |
| | 15:20 | ○ 제5전단 지휘부 및 잠수 증원요원(SSU 30, UDT 32), 백령도 도착 |
| | 15:37 | ○ 해덕호(어선), 함미구역에서 수중물체 접촉<br>＊ 확인결과 : 오래된 침선으로 확인 |
| | 19:10 | ○ 탐색구조단, 함미 · 함수구역 일대 잠수 / 탐색<br>– 시각으로 함수 식별하여 위치부표 설치(19:57)<br>＊ 민간인 잠수사 잠수병 발생/치료 |
| | 22:31 | ○ 옹진함, 현장 도착 / 탐색 실시<br>– 음파탐지기로 천안함 함미 위치 확인(37–55–40N, 124–36–06E) |
| 3. 29 (월) | 01:31 | ○ 양양함, 현장 도착 / 탐색 실시<br>– 음파탐지기로 천안함 함수 위치 확인(37–54–20N, 124–40–59E) |
| | 02:35 | ○ 해작사, 상황 발생시각 정정보고(21:30⇒21:15) |
| | 06:25 | ○ 양양함 · 옹진함, 탐색구조작전<br>– 잠수사 유도하여 위치부표 재설치 및 함체 침몰상태 확인<br>○ 김포함 · 고령함, 현장 도착 / 탐색구조작전 참가 |
| | 07:39 -21:50 | ○ 탐색구조작전<br>– 함미 · 함수 : 잠수사 인도용 3인치 유도줄 함체 연결 및 생존자 확인<br>(함미 · 함수 함체를 망치로 두드렸으나 반응 없음)<br>＊ 민간잠수사들이 잠수 시도 했으나 강조류로 퇴수 / 현장 철수 결정 |
| | 10:20 | ○ 미 샐버함 도착, 탐색구조작전 지원 / 한미 탐색구조작전 협조회의(성인봉함)<br>○ 국회 국방위원회 개최<br>＊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과 군의 위기대응태세 점검 |
| | 15:50 | ○ 중앙119구조대 심해잠수대원, 현장 도착(구조대장 등 6명) |
| | 17:00 | ○ 독도함, 탐색구조작전 현장 도착 / 지원 |
| 3. 30 (화) | 02:44 -15:12 | ○ 탐색구조작전<br>– 함미 : 좌현 Door 개방, 내부에 공기 주입<br>– 함수 : 함장실 Door에 위치부표 설치 |
| | 11:15 | ○ 해군참모총장, 탐색구조작전 지휘(독도함) |
| | 12:00 | ○ 대통령, 탐색구조작전 현장(독도함 · 광양함, 제6해병여단) 순시(12:00–14:45)<br>＊ 대통령과 실종자가족 면담(광양함)<br>○ 대통령 지시(국무회의)<br>＊ 사건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것<br>○ 국무총리(차관회의 주재)<br>– 탐색인양작전 및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등 토의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3. 30 (화) | 15:12 | ○ 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 함수 탐색 중 실신<br>– 미 샐버함으로 후송 / 치료 중 사망(17:00)<br>*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19:41) |
| | 16:18 | ○ 탐색구조단 지휘부, 성인봉함에서 독도함으로 전개 |
| | 18:40 | ○ 황해로호(국립해양조사원), 관측부표 설치 |
| 3. 31(수) - 4. 1(목) | | ※ 기상불량으로 탐색구조작전 중지(3. 31 – 4. 1)<br>○ 민 · 군 합동조사단 최초 편성(3. 31 – 6. 30)<br>– 총 82명(민 6, 관 17, 군 59)<br>○ 함체 인양작업용 민간선박(현대오션킹15001 · 삼아2200 등) 현장 도착 |
| 4. 2 (금) | 10:25 | ○ 대통령,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국군수도병원) |
| | 10:30 | ○ 백령도 현지기자단(18명), 천안함 침몰 해상 취재 |
| | 10:41 -24:20 | ○ 탐색구조작전<br>– 함미 : 좌현 수중촬영 및 좌현 출입구 유도줄 추가설치<br>– 함수 : 함교–함장실 간 유도줄 설치 |
| | 15:00 -15:17 | ○ 금양 98호 등 저인망 어선 10척, 천안함 실종자 탐색<br>* 백령도 어민들의 항의로 중단 / 철수<br>○ 국회 본회의 개최<br>*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 |
| | 21:13 | ○ 금양 98호, 백령도 서남방에서 조난<br>– 해군 · 해경, 실종자 수색 및 수중탐색(4. 2 – 4. 23)<br>* 수색결과 : 침몰선 확인 후 실종자가 없어서 수색 종료 |
| 4. 3 (토) | 08:00 | ○ 실종자 가족(35명), 사고현장 도착(부천함)<br>○ 민 · 군 합동조사단 증편(민 24명, 군 84명) |
| | 10:00 | ○ 故 한주호 준위 영결식(해군장 / 국군수도병원)<br>– 국무총리 주재 / 충무무공훈장 추서 |
| | 11:30 -18:45 | ○ 탐색구조작전<br>– 함미 : 좌현 출입구까지 안내줄 재설치 / 식당 침수 확인<br>* 함미 절단면에서 남기훈 상사 시신 최초 발견(18:07)<br>– 함수 : 좌현 출입문 개방(강조류로 내부탐색 취소) |
| | 15:00 | ○ 합참의장, 광양함 구조현장 방문 |
| | 21:45 | ○ 실종자가족협의회 기자회견<br>– 인명구조작전 중단 요청<br>* 국방부는 실종자가족협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00:00) |
| 4. 4 (일) | 07:00 -17:20 | ○ 해상 / 수중탐색<br>– 해상 : 최영함 · 미 함정 등 9척, LYNX 헬기<br>– 수중 : 옹진함 · 고령함 · 양양함 · 김포함 · 이어도호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4. 4<br>(일) | 10:00<br>-12:30 | ○ 함체인양 작업용 민간업체 현장 도착 / 인양 준비<br>– 함미 : 인양크레인(삼아2200), 작업바지 2척(88수중개발)<br>– 함수 : 인양크레인(대우3600), 작업바지 2척(해양개발공사)<br>※ 기상불량으로 인양작전 중지 / 대청도 피항<br>○ 국방부장관, 출입기자 간담회<br>* 정확한 사건 발생시각과 원인 등을 조사 중 임을 설명 |
| 4. 5<br>(월) | 07:00<br>-18:38 | ○ 해상 / 수중탐색<br>– 최영함 · 미 함정 등 12척, LYNX 헬기<br>* 발견사항 없음<br>○ 대통령, 제38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br>*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진상조사 천명 |
| | 12:05<br>-14:20 | ○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88수중개발) : 위치부표 추가 설치 / 함체 일부 식별<br>– 함수(해양개발공사) : 함체 침몰상태(묻힘) 확인 |
| 4. 6<br>(화) | | ※ 기상불량으로 인양작전 중지 / 대청도 피항<br>○ 대통령 지시(국무회의)<br>* 합동조사단 책임자를 민간 전문인사가 맡도록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 할 것 |
| 4. 7<br>(수) | 06:00<br>-23:10 | ○ 해상 / 수중탐색<br>– 옹진함 외 함정 10척<br>○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88수중개발) : 체인 유도줄 및 위치부표 설치<br>* 기관조종실에서 김태석 상사 시신 발견(16:00)<br>– 함수(해양개발공사) : 체인 유도줄 2줄 설치 |
| | 10:00<br>-11:52 | ○ 연합사령관 · 주한 미대사, 백령도 사건현장 방문(독도함) |
| | 10:30<br>-12:00 | ○ 합동조사단, 국군수도병원에사 1차 조사결과 발표 및 천안함 생존장병 합동기자회견 실시<br>* 사건 발생 개요 및 의문사항(피격시각 최종 발표) |
| 4. 8<br>(목) | 00:37<br>-06:10 | ○ 함미 · 함수구역 음탐탐색(옹진함 등 4척) |
| | 10:03<br>-14:00 | ○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 : 스크루 확인 및 선저에 체인 유도줄 추가 설치<br>– 함수 : 3번 체인 유도줄 설치 중 절단되어 회수<br>※ 오후 기상불량으로 수중탐색 / 인양작전 중지 |
| 4. 9<br>(금) | 06:00<br>-11:22 | ○ 함미 · 함수구역 음탐탐색(옹진함 등 4척) |
| | 09:15<br>-13:16 | ○ 함수구역 한미 SSU 연합 잠수(미 샐버함)<br>* 해저접촉물 : 암반으로 확인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4. 9<br>(금) | 11:03<br>-19:48 | ○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 : 1번 인양체인 설치<br>– 함수 : 체인 유도줄 보강(3인치로 교체) |
| 4. 10<br>(토) | 06:00<br>-21:33 | ○ 함미 · 함수구역 음탐탐색(옹진함 등 4척)<br>○ 한미 연합 수중 선체잔해 탐색<br>* 게 통발 등 다수 확인 |
| | 12:17<br>-20:55 | ○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 : 2번 인양체인 설치 준비<br>– 함수 : 1번 인양체인 설치 |
| | 21:00 | ○ 해군 영현후송처리팀 · 과학수사지원팀, 독도함 도착 |
| 4. 11<br>(일) | 06:00<br>-21:00 | ○ 함미 · 함수구역 음탐탐색(옹진함 등 3척) |
| | 07:12<br>-20:44 | ○ 민간업체 인양작업<br>– 함미 · 함수 : 인양체인 설치 장소 주변 정리 및 2번 인양체인 설치<br>* 대공쌍안경, 포대 출입문 인양 |
| 4. 12<br>(월) | 01:23<br>-20:45 | ○ 함미 인양작업(88수중개발)<br>– 2번 인양체인 결색<br>– 함미 수중 부상(15:10)<br>– 유실방지용 그물 설치 / 수중 이동(16:05)<br>– 백령도 남방(수심25m) 해저에 안치(20:45)<br>※ 기상불량으로 인양작전 중지 / 대청도 피항 |
| | 08:10<br>-15:00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2번 인양체인 결색<br>○ 합동조사단 재편성(한국인 49명, 외국인 24명)<br>* 민간 공동단장에 윤덕용 교수 위촉 |
| | 18:00<br>-19:10 | ○ 해양경찰 방제선(2척), 함미구역 유막 방제작업 |
| 4. 13<br>(화) | | ※ 기상불량으로 수중탐색 / 인양작전 중지<br>○ 청와대, 1차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br>* 희생자 수습방안 등 토의 |
| 4. 14<br>(수) | 12:20<br>-17:03 | ○ 함미구역 음탐탐색(양양함)<br>○ 국회, 제289회 임시국회 국방위 활동(4. 14–4. 30) |
| | 15:00<br>-21:50 | ○ 함미 인양작업(88수중개발)<br>– 3번 인양체인 결색(19:44)<br>– 인양준비 완료 / 함미를 해저에 재안치(21:50)<br>○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1번 인양체인을 작업바지에 결색(15:00)<br>○ 국방부장관,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조치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4. 15 (목) | 08:44 -23:06 | ○ 함미 인양작업(88수중개발)<br>– 합동조사단 함미 인양 현장조사팀 전개<br>– 해상위령제 실시<br>– 유실방지망 설치, 인공배수, 함미를 바지선에 탑재(13:12), 함내 진입하여 안전 검사 및 시신 수습<br>* 시신 36구 수습 / 제2함대사로 후송(00:26–01:25) |
| | 10:00 -16:50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1 · 2번 인양체인 결색 |
| 4. 16 (금) | 09:29 -20:15 | ○ 함미 정밀수색(희생자 가족, 합동조사단 등)<br>* 특이 발견사항 없음<br>○ 국방부장관, 담화문 발표(11:00)<br>*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br>○ 합동조사단, 함미인양 후 조사결과 발표(11:00) |
| | 10:06 -17:05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3 · 4번 인양체인 유도줄 설치 부근의 선저 주변정리 |
| | 16:08 -16:35 | ○ 청해진함(해미래), 함미구역 탐색 및 잔해물 수거<br>○ 해본, 전사장병에 대해 해군장으로 영결식 거행 결정 |
| | 22:45 | ○ 함미 탑재바지선, 백령도 출발 / 호송작전<br>* 제2함대사 도착(4. 17, 19:20) |
| 4. 17 (토) | 06:02 -18:30 | ○ 백령도 해상 / 해저 탐색(옹진함 · 미 샐버함 등) |
| | 10:40 -17:05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3번 인양체인 선저 통과 작업<br>○ 합동조사단, 제2함대사에 현장사무실 개소 |
| | 22:13 | ○ 제2함대사 LYNX 헬기, 소청도 서남방 해상 불시착<br>* 헬기 인양(4. 18, 광양함) |
| 4. 18 (일) | 02:00 -16:10 | ○ 백령도 서남방 해상 정밀탐색(옹진함 등 4척) |
| | 10:00 -20:00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3번 인양체인 결색 중 절단 |
| | 14:30 -16:35 | ○ 국방부장관, 제2함대사 방문<br>* 함미 확인 및 희생자 가족 위문 |
| 4. 19 (월) | 07:45 -08:00 | ※ 오전 기상불량으로 인양작전 중지 / 대청도 피항<br>○ 대통령, 39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br>*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관련 대국민 특별메시지 |
| | 14:20 | ○ 합참의장, 국군수도병원에서 천안함 부상 환자 위문 |
| | 15:08 -21:00 | ○ 백령도 서남방 정밀탐색(옹진함 등 3척)<br>○ 합동조사단, 국회 추천 전문가 3명 합류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4. 20 (화) | 05:55 -19:30 | ○ 백령도 서남방 정밀탐색(옹진함 등 3척)<br>＊ 연돌 추정 물체 식별<br>○ 국방부장관,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 |
| | 12:56 -20:15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3번 인양체인 회수 및 체인 유도줄 교체 |
| | 13:53 -15:30 | ○ 합참의장, 제2함대사 방문 |
| 4. 21 (수) | 06:00 -20:05 | ○ 함수 · 함미구역 정밀탐색(옹진함 등 3척) |
| | 11:30 | ○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 |
| | 14:52 | ○ 양양함, 함미 연돌 확인 및 부표 설치 |
| | 15:10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3 · 4번 인양체인 유도줄 설치 완료 |
| 4. 22 (목) | 05:54 -19:35 | ○ 함수 · 함미구역 정밀탐색(옹진함 등 3척) |
| | 13:52 -22:30 | ○ 함수 · 연돌 인양작업<br>– 함수 : 3 · 4번 인양체인 설치 완료<br>– 연돌 : 인양 완료 / 박보람 하사 시신 수습(21:21) |
| | 15:25 | ○ 여성가족부장관, 제2함대사 방문 |
| 4. 23 (금) | 09:00 -15:59 | ○ 함수 인양작업(해양개발공사)<br>– 함수 : 세우기, 유실방지망 2개 설치, 방제작업<br>○ 합동조사단 함수 인양 현장조사팀(50명) 전개 |
| 4. 24 (토) | 05:49 -20:00 | ○ 함수 · 함미구역 정밀탐색(양양함 등 3척) |
| | 08:00 -19:25 | ○ 함수 인양 / 호송작전<br>– 배수, 수면 부상, 바지선 탑재(12:15), 함수 내부 수색<br>＊ 박성균 하사 시신 수습 / 후송(제2함대사)<br>– 함수 호송 / 제2함대사 도착(4. 25, 21:47)<br>○ 청와대, 2차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책회의 |
| 4. 25 (일) | 06:28 -18:55 | ○ 침몰해역 수중 탐색(고령함 등 2척)<br>＊ 천안함 잔해 일부 수거 |
| | 12:00 | ○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
| | 14:00 | ○ 합동조사단, 함수 인양 후 조사결과 발표<br>＊ 수중 비접촉 폭발로 잠정 결론<br>○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 개소(제2함대사 등 340개소)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4. 26<br>(월) | 06:00<br>-19:29 | ○ 함수 · 함미구역 정밀탐색(양양함 · 형망어선 등 5척)<br>＊ 특이 접촉물 없음<br>○ 대통령,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헌화 및 분향 |
| 4. 27(화)<br>-<br>4. 28(목) | | ※ 기상불량으로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 중지<br>○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제2함대사령부 합동분향소 조문(4. 27)<br>○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4. 28 – 6. 27) |
| 4. 29<br>(목) | 10:00 | ○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제2함대사 / 해군장)<br>– 대통령 주재 / 화랑무공훈장 추서 |
| | 12:25<br>-16:00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평택함 · 미 샐버함, 어선 등 11척) |
| 4. 30<br>(금) | 08:30<br>-16:30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평택함, 어선 등 9척)<br>＊ 통신안테나, 가스터빈 인양 |
| 5. 1<br>(토) | 06:00<br>-19:30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평택함, 어선 등 11척)<br>＊ 하푼 미사일 2기 인양 |
| 5. 2<br>(일) | 05:22<br>-17:18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평택함 · 청해진함, 어선 등 6척)<br>＊ 천안함 마스트 인양(청해진함) |
| 5. 3<br>(월) | 10:51<br>-12:16 | ○ 대평 11 · 12호(쌍끌이어선), 운용시험<br>○ 감사원 감사(5. 3 – 5. 28) |
| 5. 4(화)<br>-<br>5. 6(목) | | ※ 기상불량으로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 중지<br>○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5. 4, 11:00 / 대통령 주재)<br>○ 연합정보TF 운용(5. 4 – 5. 20 / 34명) |
| 5. 7<br>(금) | 10:10<br>-19:20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청해진함 등 4척)<br>＊ 발전기, 청수펌프, 함체 일부 인양 |
| 5. 8<br>(토) | 09:55<br>-22:11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김포함 · 고령함)<br>＊ 함수 인양위치 해저 시료 채취 |
| 5. 9<br>(일) | 07:43<br>-15:32 | ○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옹진함 등 3척)<br>＊ 가스터빈 보호덮개 인양 |
| 5. 10<br>(월) | 14:00 | ○ 해본, 쌍끌이어선 투입 사전 협조회의(성인봉함) |
| | 14:30 | ○ 제6해병여단, 백령도 해상 / 해안탐색 종료(합참지시) |
| | 17:35<br>-19:31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3회)<br>＊ 알루미늄 조각 등 3점 수거 |
| 5. 11<br>(화) | 06:54<br>-15:31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5회)<br>＊ 알루미늄 조각 등 7점 수거 |
| 5. 12<br>(수) | 07:17<br>-19:46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7회)<br>＊ 철 구조물 등 10점 수거<b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위원회, 성금모금액 360여 억원 기증 |

| 일자 | 시간 | 상황 / 조치 내용 |
|---|---|---|
| 5. 13 (목) | 07:58 -16:18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8회)<br>＊ 전기레인지 등 24점 수거 |
| | 10:00 | ○ 대통령, 제1차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주재 |
| 5. 14 (금) | 08:26 -15:35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6회)<br>＊ 코팅된 도면 등 17점 수거 |
| 5. 15 (토) | 08:33 -17:02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5회)<br>＊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동력장치(09:25) 등 42점 수거 |
| 5. 16 (일) | 09:25 -12:12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5회)<br>＊ 관 개폐기 등 14점 수거 |
| 5. 17 (월) | 08:43 -11:57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5회)<br>＊ 소화펌프 커버 등 8점 수거 |
| 5. 18 (화) | 05:56 -00:12 | ○ 가스터빈실 인양작업(88수중개발공사)<br>– 인양체인 설치 |
| 5. 19 (수) | 06:37 | ○ 가스터빈실 인양작업(88수중개발공사)<br>– 인양 완료 |
| | 11:07 -13:25 | ○ 대평 11 · 12호, 잔해물 탐색 / 인양작전(4회)<br>＊ 군용 망원경 등 3점 수거<br>○ 청와대, 3차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br>○ 합동조사단<br>– 10개 국가 외교사절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비공개 브리핑 |
| 5. 20 (목) | 10:00 | ○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br>○ 해작사, 탐색구조단 해체 건의(합참) |
| | 12:00 | ○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 종료 / 탐색구조단 해체<br>○ 대통령,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작성지시 |

## 【부록 4】 정부 담화문 및 국제기구 성명서

● 4-1 대통령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연설문(2010. 5. 4)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와 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또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암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자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는 위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되어 왔습니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각 군 간의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전력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지휘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 군을 굳게 믿습니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습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복지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국민이 만든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위협과 도발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뚫고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샀듯이, 천안함 사태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 역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기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과 군의 협동작전은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정부를 믿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도 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전군 지휘관회의가 우리 군이 거듭나는 계기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휘관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든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런 막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휘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0년 5월 4일 대통령 이 명 박

● 4-2 대통령 담화문(2010. 5. 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

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통령 이 명 박

● 4-3 국무총리 담화문(2010. 4. 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 쪽이 찢겨나간 천안함 함수 인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던 심정은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계함에 몸을 싣고 신성한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다시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조국에 바치신 가족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슬픔을 무엇으로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뼈아픈 고통을 속으로 삭이면서, 애국 장병들의 희생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중대한 고비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사투를 벌인 우리 군과 금양 98호 선원을 비롯한 모두의 노력에도, 6명의 장병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욱 비통해하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천안함과 함께 산화한 여섯 장병 가족 여러분께 국무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천안함을 지킨 우리 장병들이야말로 조국의 바다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의 영웅들입니다. 정부는 이 시대 이 땅의 영웅들이 몸으로 보여준 숭고한 애국정신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도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호국영령들을 전사에 준해 명예롭게 예우하고, 1계급 추서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여 고귀한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엄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4월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장병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연한 자세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가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우리 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묻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 순국한 용사들은 미처 푸른 꿈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 차갑고 어두운 조국의 바다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 했던 대한의 아들들입니다. 이보다 더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오천만 국민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대한민국,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추모의 정을 모아 삼가 천안함 용사들의 영전에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 4-4 국방부장관 담화문(2010. 4. 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지난 3월 26일, 서해 NLL에서 경계작전을 수행중이던 천안함의 예기치 못한 침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다 희생된 천안함의 승조원들과 그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군의 탐색활동을 지원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98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실종된 승조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헌신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전우들과 관련하여 유가족 분들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하여 조치할 것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이들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함정이 침몰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보다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해내는 진정한 군인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군이 사상 초유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초보고가 지연되고, 일부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현 정부 들어 접적지역에서의 현장지휘관의 작전권한을 강화하고, NLL에서의 작전예규를 보완하는 등 즉응전투태세를 확립해 왔으며, 국방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는 한편, 사태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의 해난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안보 및 군사대비태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흡했던 초동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군 기강을 재정비하는 등 군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정부와 군의 노력을 믿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국의 푸른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천안함 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방부장관 김 태 영

##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 1. 외교통상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공격 행위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사무총장, EU,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월 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7월 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간 2+2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5월 16일 외교장관 회담 및 5월 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주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월 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우방국뿐만 아니라 EU, NATO, ASEAN 등 국제기구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및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또 다른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5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유 명 환

##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 2. 통일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오는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 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합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

합니다. 개성공단에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 현 인 택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3. 국방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조작과 비열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

을 수행하여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김 태 영

## ● 4-6 UN안보리 의장 성명서(2010. 7. 9)

2010년 7월 9일 개최된 제6,355차 안보리 회의에서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 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 및 기타 관련 서한"에 대한 안보리의 안건 검토 결과 안보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안보리 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다.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 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4-7 한 · 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서(2010. 7. 20)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은 동맹의 총체적 안보역량을 점검하고, 동맹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양국 국방장관은 향후 수개월 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연합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훈련은 7월 25일부터 동해에서 수일간 실시될 한·미 연합 해상 및 공중훈련이며, 미 조지워싱턴 항모, 독도함 및 F-22랩터 전투기 등을 포함, 한·미 연합전력이 훈련에 참가할 것입니다. 이후 실시될 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양국 장관은 2015년 12월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이와 연계된 주요 동맹 현안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동맹을 위한 새로운 계획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공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통한 확장억제 제공, 주한 미군 지속 주둔 및 현재의 병력수준유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연합전력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0년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7월 20일 서울

## ● 4-8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 공동성명서(2010. 7. 21)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태동시킨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해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 장관들은 6·25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관계의 기반이 돼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해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여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 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전쟁의 폐허로부터 몇 십년 내 이뤄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삼아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측은 한국 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했으며, 한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거버넌스 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했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 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 장관들은 오늘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는 데 공

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또 양국 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7월 21일 서울

# 【부록 5】 희생자 추모활동

● 주요 추모행사 일지

| 일자 | 내용 |
|---|---|
| 4. 2 | · 대통령, 故 한주호 준위 빈소(국군수도병원) 조문 |
| 4. 3 | · 故 한주호 준위, 충무무공훈장 추서 및 영결식(해군장 / 국군수도병원)<br>* 全 국무위원, 정 · 관계 인사, 군 장성 등 3,000여 명 참석 |
| 4. 15 | · 실종자 위령제(묵념 및 해상 헌화 / 독도함 함상)<br>* 실종자 가족, 인양작전 참가 전 장병 참석 |
| 4. 19 | ·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관련 대통령 대국민 특별메시지 발표(라디오 · 인터넷 연설) |
| 4. 24 | · 청와대, 국방부 관계관과 장례 및 보상 관련 대책회의<br>* '천안함 46용사' 전사자로 예우, 1계급 추서진급 및 화랑무공훈장 추서 |
| 4. 25 |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br>* 국가 애도기간(4.25~29) 및 국가애도일(4.29) 선포, 해군장(5일장)으로 장례식 거행<br>· 분향소 개소<br>* 합동 분향소 1(제2함대사령부), 군 분향소 90개소, 시민 분향소 52개소, 기타 197개소<br>·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 20여 명, 제2함대사령부 합동분향소 조문 |
| 4. 26 | · 대통령,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헌화 및 분향 |
| 4. 27 |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제2함대사령부 합동분향소 조문 |
| 4. 29 | · 영결식 거행(해군장 / 평택 제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br>* 주재 : 대통령 / 장례위원장 : 해군참모총장 |
| 4. 30 | · 위령제(백령도 사건 현장)<br>* 전사자 33가족 84명 참석 |
| 5. 1 | · 삼우제(대전현충원 내 '천안함46용사' 합동묘역)<br>* 전사자 12가족(37명) 참석 |
| 5. 13 | · 49제(제2함대사령부 법당:해웅사)<br>* 군종 특별교구장 자광스님 주관 하에 총 402명 참석 |

# 국내외 각계각층의 추모활동

## ■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의 추모활동

| | | |
|---|---|---|
| 01 | 02 | |
| 03 | | |
| 04 | 05 | 06 |
| 07 | 08 | 09 |

01. 4월 29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합동영결식
02.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03.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04. 평택 합동분향소에서 국무위원들과 조문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05. 국회 중앙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추모광장
06. 평택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07.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묵념하는 의원들
08. 충북도청 대회의실 분향소에서 분향하는 정우택 충북지사
09. 대구 시민분양소에서 묵념하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간부들

## ■ 軍 부대의 추모활동

| | | |
|---|---|---|
| 01 | 02 | 03 |
| 04 | 05 | 06 |
| 07 | 08 | 09 |
| 10 | 11 | 12 |

01. 평택 합동분향소에서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분향하고 있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02. 합동영결식에서 희생자 영정을 든 천안함 생존장병들
03. 국기게양식에서 묵념하는 장병들
04. 희생 100일째 평택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천안함 생존장병들
05. 軍 부대의 PC 바탕화면 추모글
06. 軍 부대의 추모 홈페이지
07. 軍 부대 위병소의 추모 현수막
08.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열린 희생자 진혼제에서 묵념하는 백령도 주민과 군 장병
09. 軍 복무를 마치고 평택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경례하고 있는 한 예비역 병장
10. 대전현충원 '천안함46용사' 합동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
11. 백령도 근해의 해상위령제에서 해상헌화하고 있는 유가족과 해군장병들
12. 軍 부대 추모방송 문구

# 국내외 각계각층의 추모활동

## ■ 일반시민의 추모활동

| | | |
|---|---|---|
| 01 | 02 | 03 |
| 04 | 05 | 06 |
| 07 | 08 | 09 |
| 10 | 11 | 12 |

01. 여의도 추모광장에 부착된 추모 글
02. 통도사에서 거행된 수륙방생 법회
03. 제2함대사령부 법당 해웅사에서 열린 49제
04.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박세환 재향군인회장과 임원들
05.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의 추모집회
06.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삼성그룹 사장단
07.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국화꽃을 헌화하고 있는 평택시 원정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생들
08.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초록우산 어린이 마라톤대회'에서 추모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어린이들
09. 故 신선준 중사가 졸업한 울산공업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의 애도 묵념
10.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 모자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퍼팅 준비를 하고 있는 양용은 선수
11.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배우 차승원과 빅뱅의 탑
12. 대전현충원에서 100일 추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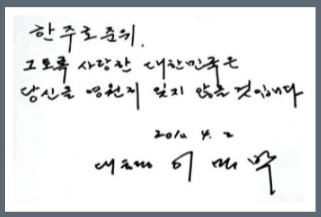
# 국내외 각계각층의 추모활동

## ■ 외국인 및 해외 추모활동

| | | |
|---|---|---|
| 01 | 02 | 03 |
| 04 | 05 | 06 |
| 07 | 08 | 09 |
| 10 | 11 | 12 |

01.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 일 · 중 정상회의에 앞서 묵념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02.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46용사' 묘역에서 헌화하고 있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 내외
03. 뉴욕 총영사관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
04.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천안함46용사' 명비에 헌화하고 있는 한미 외교 · 국방장관
05. 평택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황의돈 부사령관
06. 주미대사관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제임스 존스 美 국가안보보좌관
07.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천안함46용사' 명비에 헌화하고 있는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08.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거스 히딩크 축구대표팀 전 감독
09. 주중대사관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류우익 주중 대사
10. 브라질 상파울루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한인 교포들
11. 주케냐대사관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한인회 임원들
12. 주인도대사관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

■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추모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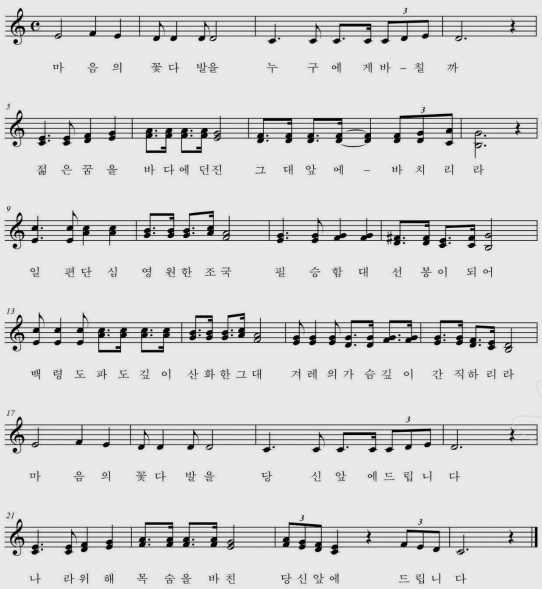
| | | |
|---|---|---|
| 01 | 02 | 03 |
| 04 | | 05 |
| | | 06 |
| 07 | 08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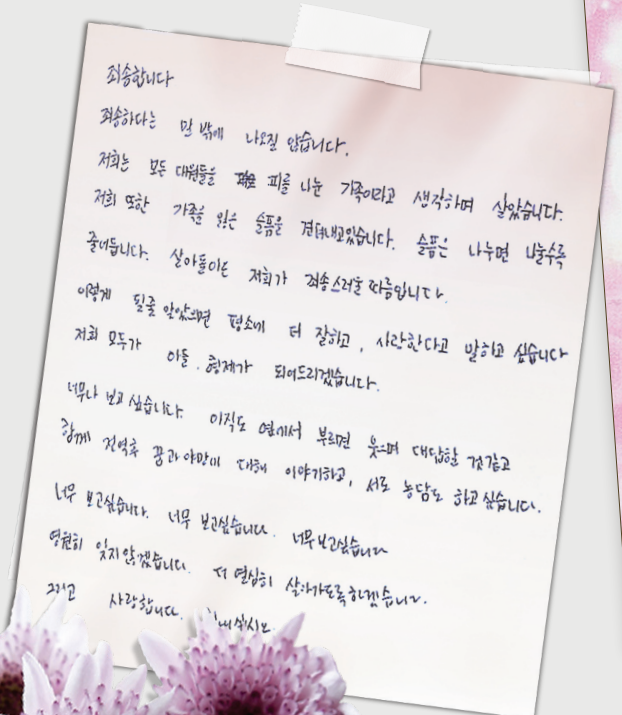
01. 4월 3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
02.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글
03. 헌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04.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05.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06. 참배하고 있는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07. 영결식에서 경례하고 있는 UDT대원들
08. 국립대전현충원 장교 제3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에서 참배하고 있는 UDT 전우회원들
09. 군부대에 설치된 추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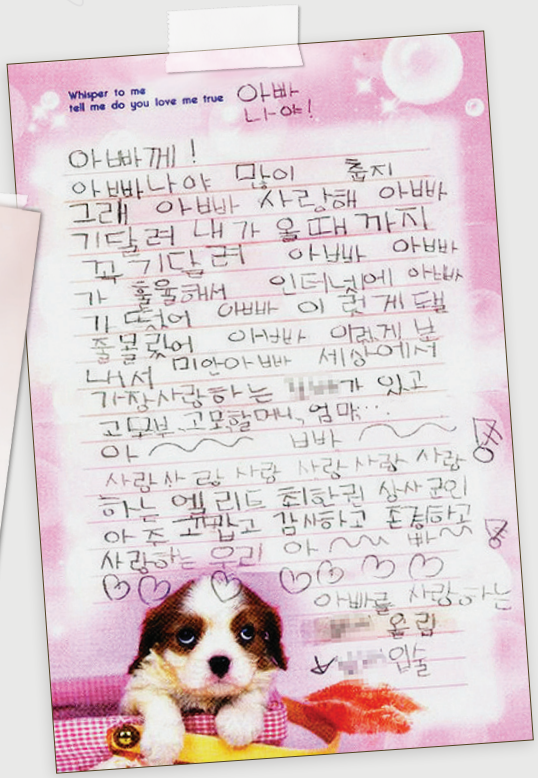
뜻을 생각하며
2010. 4. 25

## 마음의 꽃다발
(천안함 추모가)

작사.곡 전석환
명예해군11호



#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장병들의 생환을 염원하며 누리꾼 **김덕규**가 쓴 시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들을
즉시 귀환하라.

772함을 나와라.
가스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조종실 안경환 중사 나오라.
보수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요상 병장 응답하라.

거친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조종실 장철희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뎌라.
772함 수병을 귀환하라.

772함 수병을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을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남기훈 상사, 신선준 중사, 김종헌 중사,
박보람 하사, 이상민 병장, 김선명 상병,
강태민 일병,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정해준 이병, 박정훈 상병, 임재영 하사,
조지훈 일병, 김동진 하사, 정종율 중사,
김해석 중사, 최한원 상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방일민 하사, 박석원 중사,
이상민 병장, 차규석 하사, 정범구 상병,
이상준 하사, 강현구 병장, 이상희 병장,
이재민 병장, 안동영 상병, 나현민 일병,
조진영 하사, 문영욱 하사, 손수민 하사,
김선호 일병, 민평기 중사, 강 준 중사,
최정환 중사, 김경수 중사, 문규석 중사

호명된 수병을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우하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마흔 여섯 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 조국의 수호신으로 부활하소서

시조시인 · 문학박사 宇玄 **김민정**이 쓴 시

서해바다를 지켜오던 이 땅의 아들들을
가슴에 깊이 묻고 보내야만 하는 시간
진혼곡 나팔소리가 장엄하게 울려온다

무사하게 귀환하길 간절하게 기원했던
가족들의 절규에도 온 국민의 염원에도
싸늘히 돌아온 그대, 피지 못한 무궁화여

땅을 치고 가슴 찢고 실신하며 불러 봐도
하늘 울고 땅도 울어 이 땅 모두 적시어도
늠름한 그대 모습들 다시 볼 수 없구나

자상한 남편이고 효성 깊은 아들이며
다정한 애인이며 따스했던 아빠였던
대한의 아들들이여 의리 깊던 사나이여

국화꽃의 해상헌화 대함경례 받으면서
온 국민의 애도 속에 해군함정 기적 속에
천안함 사십육 용사 현충원에 잠드소서

사월의 햇살보다 더 화사한 젊음이여
사월의 봄꽃보다 아름다운 청춘이여
조국의 수호신으로 부활하여 오소서

이 땅의 오랜 평화 노심초사 지키려던
충무공의 후예답게 대한민국 아들답게
바다의 수호신 되어 우리 바다 지키소서

철통같은 안보의식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빈틈없는 조국수호 가슴 깊이 다짐하며
그대의 숭고한 희생, 남은 우린 기억하리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정착하며
국토를 통일하고 조국번영 이루는 일
산 자의 몫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 【부록 6】 민 · 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문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함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해저로부터 인양한 함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함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함체 손상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함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함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습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습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의 현상과 일치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습니다.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 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함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된 어뢰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40여척과 연어급을 포함한 소형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

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 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합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에 달하는 重어뢰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윤 덕 용

# 【부록 7】 주요 의혹과 사실관계

## 1. 천안함의 피격 시각과 위치

### □ 제기된 의혹

- 경향신문("밤 9시 22분 사고, 군 또 오락가락", 2010.4.2), 조선일보("또 당겨진 軍 발표 침몰시각", 2010.4.2) 등 다수의 매체에서 군이 천안함 피격시각을 21:45→ 21:30→21:25→21:22으로 바꾸어 발표함으로써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
- 「KBS 추적 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2010.11.17 방영)에서 관계자의 진술과 TOD 영상 방위각 등을 근거로 KNTDS상의 좌표위치와 천안함 피격위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

### □ 사실관계

● 사고 초기에 천안함의 사고발생 시각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군의 상황보고는 통상 최초→중간→최종보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최초보고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다보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그대로 발표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 최초 국방부는 피격시각을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시간인 21:45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이후 3월 27일 10:00에 해군작전사령부가 서면으로 정정보고한 21:30으로 국회보고와 언론에 발표를 했다. 4월 7일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격시각을 21시 21분 57초로 최종 확인했다. (본문 제2장 제3절 참조)

〈피격시각 추정 근거〉

① 해안초소 TOD에 녹화된 시각 – 21:23경
②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상의 천안함 발신신호 중단 시각 – 21:21:57
③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의 지진파 감지 시각 – 21:21:58
④ 천안함의 마지막 국제상선망 교신시간 – 21:19:30~21:20:03
⑤ 백령도 초병의 관측(폭 20~30m, 높이 100m의 흰색 섬광 불빛) 시각 – 21:23
⑥ 천안함 승조원(상병)의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시각 – 21:21:47

● 천안함이 피격된 위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위도 37-55-45N, 경도 124-36-02E 지점으로 판단했으며, 이 피격 원점지역의 해저에서 북한의 어뢰추진 동력장치는 물론 천안함 잔해가 다수 수거된 것은 이 지점이 정확한 피격위치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① KNTDS의 신호가 단절된 위치 : 위도 37-55-45N, 경도 124-36-02E
② 지진파 및 공중음파 발생 위치 : 위도 37-55-42N, 경도 124-36-02E

☞ 음속(초당 340m)은 지질상태, 대기온도차 등으로 인해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①, ②의 거리 차이 90m는 오차 허용범위 내에 있다.

● KNTDS의 전시화면에서 천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시각은 21:25:03이며, 이 때 천안함은 피격시각(21:21:57)보다 650m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천안함이 피격 이후에도 계속 북서진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천안함으로부터의 위치 송신이 중단된 이후에도 동일한 침로·속력으로 실제보다 약 3분간 더 기동한 것처럼 전시되는 전술지휘통제체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관계자의 진술과 TOD 영상 방위각에 비중을 두면서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가진 첨단과학장비인 KNTDS 좌표위치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성에 기초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 2. 천안함 흡착물질

### □ 제기된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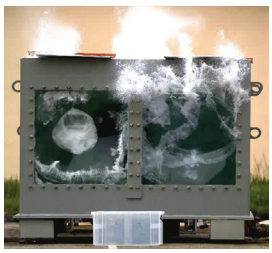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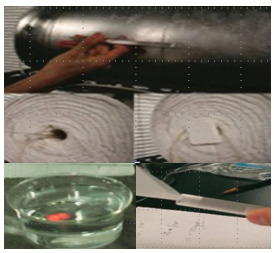
-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지질과학)는 "천안함 흡착물질이 폭발로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단순퇴적물인 '수산화알루미늄'(깁사이트, 녹)이다"라고 주장
- 정기영 안동대 교수(지구환경과학)는 천안함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고온의 폭발조건에서 생긴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섭씨 100도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비결정성 알루미늄 황산염수화물'로 보인다"고 주장
- 한겨레("천안함 흡착물, 산화 알루미늄 아니다", 2010.6.28), 경향신문("어뢰 흡착물 증거능력 갈수록 약화", 2010.7.2),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의 기자회견(2010.10.12), 「KBS 추적 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2010.11.17 방영), 일부 인터넷 등에서 이승헌, 양판석, 정기영 등의 학자가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흡착물이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고 보도

### □ 사실관계

● 흡착물질이 수산화알루미늄인 '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동조사단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폭발재'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ALxOy)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부식이 잘되지 않는 금속물질이며, 흡착물질은 알루미늄 소재뿐만 아니라 철, 페인트, 전선 등에도 흡착되어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이승헌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한 2010. 10. 11 현재 이들 흡착물질이 빗물 등에 씻겨 사라진 사실은 알루미늄 부식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녹'이라면 지금도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야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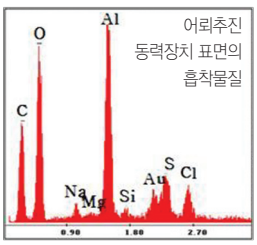
● 이승헌·서재정 교수 등 일부의 주장은 합동조사단에서 실시한 실험과 실험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동조사단에서 실시한 실험은 3,000℃ 이상의 고온과 20만 기압 이상의 고압, 수 십만 분의 1초 냉각 등 실제 폭발상황과 동일하게 실험하여, 버블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폭약에 혼합되어 있는 알루미늄이 비결정질의 알루미늄으로 생성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승헌 교수는 1,100℃에서 40분 가량 가열 후 2초 이내에 냉각시킨 것으로 단순히 알루미늄을 가열하는 담금질 수준으로 결정질 알루미늄이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결과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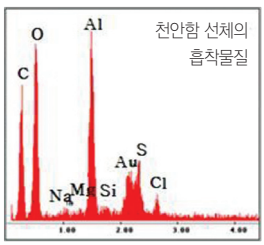
〈합동조사단과 이승헌 교수의 실험 비교〉

| 수중폭발(버블현상) | 합동조사단 실험 | 이승헌 교수 실험 |
|---|---|---|
| |  |  |
| • 3,000℃ 이상<br>• 20만 기압 이상<br>• 수 십만 분의 1초 내 냉각 | • 3,000℃ 이상<br>• 20만 기압 이상<br>• 수 십만 분의 1초 내 냉각 | • 1,100℃<br>• 40분 가열<br>• 2초 내 냉각 |

● 여러 학자들이 흡착물질의 성분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흡착물질이 6.4km나 멀리 떨어져 발견된 함수·함미와 연돌, 어뢰추진 동력장치 등에서 각각 발견되었고, 분석결과 발견된 여러 가지 물질들의 구조 및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어느 순간 이들 4개의 물체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이는 어뢰에 의한 외부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뢰추진 동력장치와 천안함 함체의 흡착물질 성분분석 결과 : 동일함〉






- 흡착물질 채집 : 함수 · 함미 · 연돌, 어뢰추진 동력장치 (10개소)
- 에너지 분광(EDS) 분석결과 : 동일한 폭약원소 검출 (C, O, AL)
- X선 회절(XRD) 분석결과 : 대부분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며, 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은 극소량만 나타남.

## 3. CHT-02D 어뢰추진체 내부에 씌어진 '1번' 글씨

### □ 제기된 의혹

-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국제정치학) 교수,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어뢰추진체 내부에 씌어진 '1번' 글씨가 폭발 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해 당연히 타서 없어졌거나 최소한 까맣게 변색되어야 한다"며 어뢰 폭발에 대하여 의혹 제기
- 북한은 국방위원회 기자회견(2010.5.28) 등에서 "북한은 무기에 기계로만 글씨를 새긴다. 글씨가 고열에 녹아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뢰는 조작되었다"라고 거듭 주장
- 경향신문(" '1번'에 대한 과학적 의혹을 제기한다"〈2010.6.1〉, "흡착물질·설계도·1번·물기둥…. 말바꾸기가 논란 자초"〈2010.7.2〉), 일부 인터넷 등에서 "일부에서 파란 유성매직 성분의 '1번'이라는 글씨체가 강력한 폭발에도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

###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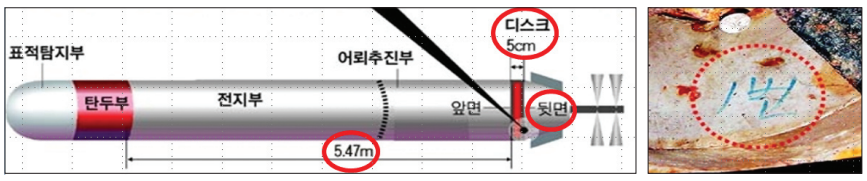
● 폭발 열에도 '1번' 글씨가 타지 않고 남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기 중의 폭발과 수중폭발을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번' 글씨는 폭발지점인 탄두부로부터 5.47m 이격되어 있고, 5cm 두께의 철재 디스크 뒷면에 쓰여 있으며, 섭씨 3℃의 바닷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

●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가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할 때는 3,000℃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지만 버블이 단열팽창하면서 주위의 물을 밀어낸 후 저온저압으로 변해,
- 버블 내 온도가 폭발 0.0071초 경과할 때 604℃로 하강하며, 0.1초가 경과되면 상온인 28℃까지 급격히 떨어지므로,
- '1번' 글씨가 씌어 있는 디스크 후면은 수온 3℃의 바닷물 속에서 단 1℃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1번' 글씨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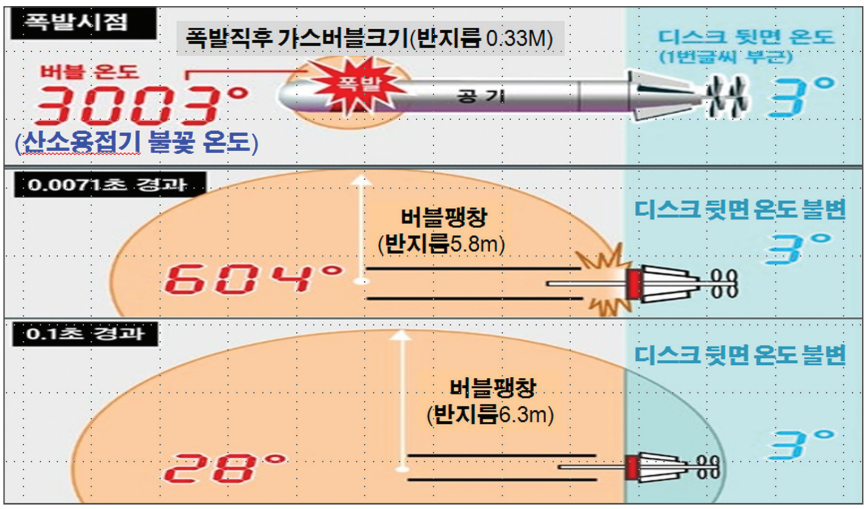
  ☞ 이 연구결과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23명에 의해 추인된 내용이며, 실제 '1번' 글씨뿐만 아니라 어뢰추진체 주변의 페인트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태호 교수 실험 결과〉

- 어뢰의 구성 및 디스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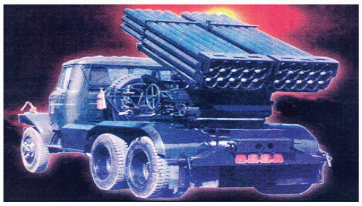


• 어뢰폭발 시 디스크 뒷면의 온도 변화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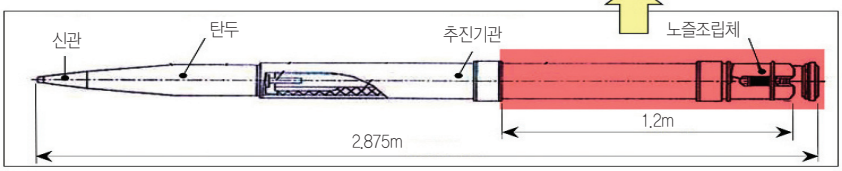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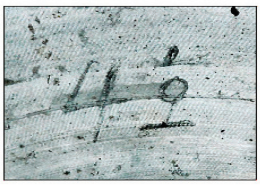

● 2010. 11. 23.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122mm 방사포탄 노즐조립체에서도 원 안에 유성매직으로 씌어진 흑색의 '①'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어뢰추진체 내부에 씌어진 '1번'과 표기 방법이 유사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3년 포항 앞바다에서 수거한 시험용 어뢰의 '4호'라는 표기는 검정색 색연필로 씌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무기에 손으로 글자나 숫자를 쓰고 있으며, 씌어진 글씨는 폭발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22mm 방사포의 노즐조립체와 비교〉



• 발견일시 : '10.11.24(수) 14:10경
• 발견장소 : 연평부대 신축 통합정비고 앞
• 발 견 자 : 연평부대 EOD반장



['03년 수거 시험용어뢰]
**검정색 색연필**

[CHT-02D 어뢰 추진체]
**청색 유성매직**

[122mm 방사포 노즐조립체]
**검정색 유성매직**

## 4. 우현 프로펠러의 휨 현상

### □ 제기된 의혹

- 이종인 알파기술 대표는 "우현 프로펠러가 앞으로 휘어진 것은 프로펠러가 고속 후진하면서 단단한 사주에 부딪혀 생긴 손상이다"라고 주장
- 참여연대는 "프로펠러가 회전 반대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성에 의해 프로펠러가 멈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 제기
- 한겨레21("또 하나의 의혹 스크루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2010.7.21〉)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보도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개 단체의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기자회견(2010.10.12)에서 "천안함 스크루에 긁힌 흔적이 있고, 추진축이 급정거했다면 축이 먼저 부러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의혹 제기

### □ 사실관계

● 천안함 프로펠러는 전진과 후진 시 프로펠러의 회전방향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는 가변피치 프로펠러이다. 따라서 역회전은 불가능하며 좌초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프로펠러의 날개(5개) 끝단부가 안쪽으로 동일하게 오므라든 형태의 변형은 발생할 수 없다.

● 또한 항해 중 좌초나 충돌 시는 프로펠러의 전체에 날개 파손이나 회전방향의 긁힌 흔적 등 커다란 손상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스크루의 부분적인 사소한 손상(일부 파손·긁힘 현상)은 함체의 침몰 및 인양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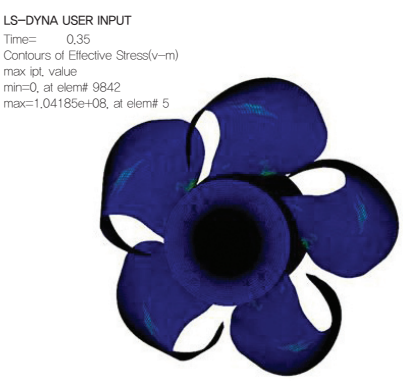
● 우현 스크루가 손상된 이유는 천안함 함체 하부에서 수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천안함 추진축에 연결된 기어박스 하부에 충격을 주어 감속기어가 손상됨으로써(실제 감속기어에서 추진축이 이탈되어 있음.) 짧은 시간에 추진축이 뒤로 밀림과 동시에 급격한 정지에 따른 관성력으로 수직·수평 충격력과 비틀림 충격력으로 스크루 날개 다섯 개가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좌현 축은 상대적으로 정지시간이 길어 적은 관성력이 작용함으로써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스크루 제작회사인 스웨덴의 「가메와」도 "스크루가 휜 원인은 추진축이 밀리면서 회전하던 스크루가 급정지해 관성력에 의해 일정한 모양으로 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2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충남대 노인식 교수) 결과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변형을 확인했다.

〈관성력의 작용으로 변형된 스크루〉

정상적인 스쿠루(우현)

관성력 작용(급정지, 추진축 밀림)




시물레이션 결과 변형된 형상

변형된 스크루(우현) 실제 형상

## 5. 어뢰추진체 내부에 붙어 있는 조개껍데기

□ 제기된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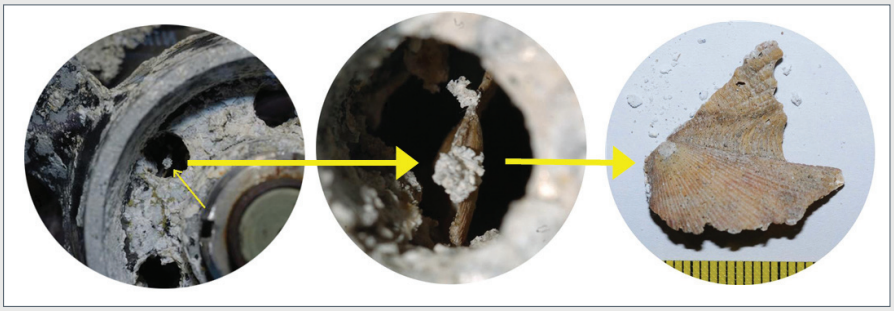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개 단체의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검증위)는 2010. 11. 3,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 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미뤄 정부가 공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하게 보여 준다. 조개 끝부분에서 발견된 흰색 침전물질은 조개가 이 물질의 생성 전부터 어뢰추진체 속에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가 증거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개를 떼어내 백색 침전물을 부숴 버렸다"고 비판
- 한겨레("천안함 이번엔 '침전물 조개' 논란"〈2010.11.5〉), 경향신문("어뢰 속 조개, 폭발 후 들어간 것"〈2010.11.5〉)에서 검증위의 주장과 국방부 반박 내용을 보도

□ 사실관계

●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보존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조개껍데기를 분리하여 한국 패류학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 한국 패류학회 회장 박영제 박사는 어뢰 스크루 구멍에 들어가 있던 조개는 생물 조가비가 아니라 부서진 조개껍데기(2.5㎝ × 1.5㎝)이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단가리비 껍데기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했다. "비단가리비는 우리나라 동해·남해·서해 모두에 서식 하는 종이며 껍데기 형태로 보아 백령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비단가리비인 것 같다"는 것이 한국 패류학회의 공식적인 소견이다.

〈스크루 구멍에 들어가 있는 조개껍데기〉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개껍데기에 붙은 흡착물의 성분분석 결과, 천안함 함체와 어뢰 추진체에 붙은 흡착물의 성분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조개껍데기가 어뢰 폭발 후 스크루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스크루 구멍은 어뢰 추진 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뚫어 놓은 것이며, 부서진 조개껍데기의 붙어 있는 상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어뢰가 폭발 후 해저면에 있던 조각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스크루 구멍 속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서진 조개껍데기에 흡착물이 붙은 것은 흡착물이 붙은 조개껍데기가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폭발 후 조개껍데기와 흡착물이 동시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붙을 수도 있으며, 조개껍데기가 구멍에 들어간 이후 스크루 주변에 묻어 있던 다량의 흡착물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보존 활동을 병행한 가운데 실시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증거인멸 행위'를 운운한 것은 아전인수식의 주장으로 납득할 여지가 없다.

# 【부록 8】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한의 언론보도

○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16일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함미인양 후 조사결과 발표’ 이후인 4월 18일 민주조선 등에서 군사론 평원의 글을 통해 “남한이 천안함의 북한 연루설을 조작했다”고 최초로 공식 비난

○ 이후 5월 20일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은 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남한의 날조극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보도 행태를 보임

## 1. 괴뢰들이 돌리고 있는 ≪북관련설≫의 진상을 밝힌다(2010. 4. 18, 민주조선)

주체99 (2010) 년 4월 18일 (일요일) 민 주 조 선

### 괴뢰들이 돌리고있는 《북관련설》의 진상을 밝힌다

지난 3월 26일 밤 조선서해 백령도와 대청도사이 근해에서는 《천안》호라는 1 400t급 괴뢰해군함선이 불시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침몰된 대형함선이 남측 군함이지만 숱한 실종자와 구조된 인원들의 대부분이 고달픈 괴뢰군살이를 강요당하여온 동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불상사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의 괴뢰군부호전광들과 우익보수정객들을 비롯한 역적패당은 함선침몰원인을 규명할수 없게 되자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발생한 불상사를 우리와 련계시켜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역적패당이 언론매체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내돌리고있는 《북관련설》이다.

《천안》호가 침몰된 후 한동안은 그 원인이 함선의 연유탕크나 탄약고, 기관실 등에서 일어난 자체의 《내부폭발》일수도 있고 수중으로 떠다니던 기뢰나 어뢰에 부딪쳐 일어날수 있는 《외적인 폭발》일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런가 하면 함선자체의 로후로 인한 《자연피로파괴》나 해저암초와의 충돌이 침몰원인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함선침몰에 대한 책임이 점차 괴뢰군부와 현 괴뢰당국에 쏠리게 되자 당황한 역적패당은 침몰수역이 《북과 가까운 곳》이고 침몰시점이 《북에 있어서 필요한 때》이며 침몰원인이 함선자체의 《내부폭발》이 아니라 《외부폭발》에 있는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우리와 련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그 《외부폭발》이 틀림없이 어뢰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하여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관련설》을 날조하여 류포시키고있다.

사건발생초기에는 제놈들의 이른바 《철통같은》 해상경계와 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진행되는 레이다감시 및 음향탐지체계에 우리의 그 어떤 잠수정 침투징후도 감지된것이 없다고 떠들어대던 역적패당이였다.

더우기 3월과 4월은 서해해상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조건에서 북의 어뢰가 남으로 내려올수 없을뿐아니라 수심이 얕고 나쁜 봄철기상수문상태가 지속되는 서해해상수역에서는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의 행동이 있을수 없다고 역적패당 스스로가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역적패당이 예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던 초기립장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북관련설》에 대해 떠들기 시작한것이다.

사건초기 북이 관련되여있다고 서뿔리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고 하던 리명박역도까지 얼마전부터는 《북관련가능성을 열어놓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명하라.》느니, 《북의 움직임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느니, 사고발생원인이 최종확인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겨냥한듯 한 불순한 잡소리를 줴치기 시작하였다.

《청와대》놈들도 《북의 공격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던데로부터 생존자들의 진술과 함선의 침몰상태를 보면 외부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북관련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군부호전광들은 제놈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를 우리와 련계시켜보려고 더 로골적으로 놀아대고있다.

놈들은 그동안 함선침몰원인으로 추정하여오던 《내부폭발설》과 《암초충돌설》, 《자연피로파괴설》 등을 애써 부정해버리고 우리와 련계된 《외부타격설》로 사건발생원인을 단정하면서 《북에 의한 어뢰공격가능성》이 더 실질적인 원인으로 될수 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지어 현재로서는 이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있다.》느니, 《북이 저지른 테로공격으로 판단하고있다.》느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우리를 걸고들고있다.

제입으로 함선침몰원인에 대해 해명할수 있는 이렇다할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공언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북관련설》을 내돌리고있는 역적패당의 가소로운 처사를 두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였다.

그러나 역적패당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북관련설》의 도수를 점점 더 높이면서 침몰원인을 날조하여 그 무슨 《응징》과 《단호한 행동》, 《국제사회를 통한 새로운 제재》까지 모의하고있는 조건에서 꾸미고있는 불순한 음모의 속내를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불순한 속내와 기도는 언제나 음흉한 목적을 전제로 한다.

하다면 역적패당이 추구하고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산생된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속내와 관련되여있다.

이번 침몰사건이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여론화되거나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역적패당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당면한 《6. 2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면할수 없게 되어있으며 그것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분렬과 통치력약화로 이어져 역적패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어있다.

함선침몰사건이후 리명박역도에 대한 지지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평가가 남조선정계, 사회계를 휩쓸고있는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반면에 이번 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련계시켜 《안보》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시킨 다음 그것을 명분으로 당면한 《6. 2지방선거》에 큰 악재로 되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불리하게 번져지고있는 현 정세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사분오렬되여가고있는 보수진영을 집결시킬수 있을것이라는것이 역적패당의 속계산이다.

바로 여기에 《북관련설》을 여론화시키는 역적패당의 검은 속내가 있다.

괴뢰들이 《북관련설》을 내돌리는데는 또한 고약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정당화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온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기도와도 관련되여있다.

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선핵폐기》를 전면에 내걸고 북남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여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우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있지도 않는 그 무슨 《내부사정》으로 오판하면서 오만하게 놀아대다가 지금은 극도의 자체모순에 빠져 허둥거리고있다.

지금 남조선각계에서도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전면도전하는 역적패당의 그릇된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이로부터 역적패당은 이번 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나고 제놈들의 유치한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심산에서 《북관련설》을 여론화하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이 《북관련설》을 내돌리는데는 또한 국제적인 대북제재분위기를 지속시켜 우리를 여러모로 압박해보려는 어리석은 속심과도 관련되여있다.

지금 역적패당은 마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가 그 무슨 효과라도 있는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상전의 반공화국체제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다.

우리앞에 펼쳐진 현실은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으로 주체철이 사품쳐나오고 비날론폭포가 쏟아지며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공화국의 모든 분야가 대비약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역적패당은 강성대국의 지평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허황한 《북관련설》을 내돌리고있는 역적패당의 또 하나의 불순한 음모가 있는것이다.

원래 궁지에 빠질 때마다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구실로 어리석은짓을 서슴지 않는것이 얼빠진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히틀러가 못된짓을 하였으며 《로구교사건》을 꾸미고 일본놈들이 중국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고 미국놈들이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였었다.

지금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역적패당이 이러한 력사의 전철을 밟으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역적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군사론평원

* 4월 1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되었다”는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북 관련설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보도

2.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 (2010. 5. 21, 로동신문)

##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는 괴뢰해군의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이미 역적패당에게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다가 끝끝내 침몰원인이 우리의 어뢰공격에 있는것처럼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무슨 《응징》과 《보복》, 국제사회를 통한 또 다른 《제재》까지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걸고들면서 이러한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리명박역도가 서있다는것이다.

여기에 아부와 맹종에 체질화된 김태영을 비롯한 괴뢰군부깡패들이 맞장구를 치고 류명환을 포함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이 입방아를 찧으며 부채질을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대북적대시정책궤도를 지키려고 모지름을 쓰는 미일침략자들까지 함께 놀아대고있다.

묻건대 유독 《천안》호침몰만을 굳이 우리와 련계시킨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련이어 발생한 괴뢰륙군사병의 죽음이며 괴뢰해공군전투기와 무장직승기들의 추락사고, 민간어선의 침몰사고는 왜 우리와 련계시키지 못하는가.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부풀린 고무풍선처럼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을 날조하여 크게 꾸민다 하여도 그것은 어차피 터지기마련이다.

분명한것은 《천안》호의 침몰사건이 모종의 정치, 군사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장교들은 살리고 사병 46명만 무참하게 죽이면서 꾸며낸 역적패당의 의도적이며 강도적인 《모략극》, 《날조극》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는것이다.

그러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감히 그 더러운 손끝을 우리에게 돌리고있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으로 《북풍》여론을 돌리는것은 력대 남조선괴뢰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쓰레기통으로 찾아간 《탈북자》들, 인간쓰레기들까지 이런 모략에 써먹고있다.

나라의 국방과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역적패당의 불순한 음모가 우리에 대한 분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련계되여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다.**

역적패당은 우리의 존엄높은 검열단앞에 함선침몰이 우리와 련계되여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

검열단앞에 내놓는 물증에는 단 한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리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모략극》,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우에 온 민족이 갈망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것이다.

우리가 취하는 강경대응조치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남조선사회에 대결분위기를 조장하고있는 역적패당에게 예상할수 없는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실천행동으로 될것이다.

**3.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공언한이상 조선서해를 포함하여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령해, 령공, 령토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광신자들의 도발로 락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이다.**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한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철의 의지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일당국과 그에 붙어 분수없게 놀아대는 어중이떠중이들에게도 앞뒤를 가려보며 행동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세계는 동족압살을 위해 꾸며낸 역적패당의 서투른 《모략극》, 《날조극》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99(2010)년 5월 20일
평 양

3. 역적패당이 조작한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론한다(2010. 5. 26, 민주조선)

주체99 (2010) 년 5월 26일 (수요일) 민 주 조 선 【4】

## 역적패당이 조작한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론한다

**1. 《북어뢰공격설》은 역적패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설이다**

**3. 《북어뢰공격설》은 《북풍》을 노린 위기탈출용이다**

**4.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가 공격했다"는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남한 군부의 날조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보도

# 【부록 9】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주변 4국의 언론보도

ㅇ 2010년 5월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

–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희망하면서 한국을 지지한다고 보도

–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공격 주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북 간의 긴장고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보도

## 1. 미국

### ● The Washington Post (2010. 5. 19)

– 한국 정부, 해군함정을 공격한 북한을 공식적으로 비난

**S. Korea to officially blame North for attack**

**Conclusion based on multinational analysis of warship wreckage**

BY JOHN POMFRET AND BLAINE HARDEN

South Korea will formally blame North Korea on Thursday for launching a torpedo at one of its warships in March, causing an explosion that killed 46 sailors and heightened tensions in one of the world's most perilous regions, U.S. and East Asian officials said.

South Korea concluded that North Korea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fter investigators from Australia, Brita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pieced together portions of the ship at the port of Pyeongtaek, 40 miles southwest of Seoul. The Cheonan sank on March 26 after an explosion rocked the 1,200-ton vessel as it sailed on the Yellow Sea off South Korea's west coast.

The officials,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South Korea has yet to disclose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said subsequent analysis determined that the torpedo was identical to a North Korean torpedo that South Korea had obtained.

Of the countries aiding South Korea in its inquiry, officials said that Sweden had been the most reluctant to go along with the findings but that when the evidence was amassed, it too agreed that North Korea was to blame. A spokesman for the Swedish Embassy declined to comment.

South Korea's conclusion underscores the continu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the intractable nature of the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must respond forcefully to the attack, analysts said, but not in a way that would risk further violence from North Korea, whose artillery could — within minutes — devastate greater Seoul, which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20 million. Lee is in his third year in office, and his party faces crucial local elections in June.

KOREA CONTINUED ON A10

CHOI JAE KU/ASSOCIATED PRESS

**A crane lifts the Cheonan, a South Korean naval ship, in April after it was sunk off the nation's west coast.**

### ● The New York Times (2010. 5. 23)

– 미국 정부,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공격을 북한 지도자가 승인했다고 결론

"정보 당국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위해 도발했다고 확신"

***Americans Conclude North Korean Leader Authorized Attack on South***

By DAVID E. SANGER

WASHINGTON — A new American intelligence analysis of a deadly torpedo attack on a South Korean warship concludes that Kim Jong-il, the ailing leader of North Korea, must have authorized the torpedo assault, according to senior American officials who cautioned that the assessment was based on their sense of the political dynamics there rather than hard evidence.

The officials said they were increasingly convinced that Mr. Kim ordered the sinking of the ship, the Cheonan, to help secure the succession of his youngest son.

"We can't say it is established fact," said one senior American official who was involved in the highly classified assessment,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by many of the country's 16 intelligence agencies. "But there is very little doub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military."

Nonetheless, both the conclusion and the timing of the assessment could be useful to the United States as it seeks to rally support against North Korea.

On Monday,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who has moved cautiously since the assault, is expected to call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condemn the attack and is likely to terminate the few remaining trade ties between North and South that provide the North with hard currency.

But those steps have little chance of proving meaningful unless China, which hosted Mr. Kim two weeks ago, agrees to join the condemnation and refuses to make up whatever revenue North Korea loses from any trade embargoes. China, North Korea's last true ally, has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to pressure the North too much, even when the North Koreans conducted nuclear tests, for fear of toppling the government and sending a flood of refugees across its border.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will be in Beijing when the South Korean action is announced, leading a delegation of 200 American officials, including roughly half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cabinet, in an annual "strategic dialogue" with Chinese leaders on a variety of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So far, at least in public, both American and South Korean leaders have been careful never to link Mr. Kim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in March, which killed 46 sailors. Officials said that was in part because of the absence of hard evidence — difficult to come by in the rigidly controlled North — but also largely because both countries were trying to avoid playing into Mr. Kim's hands by casting one of the worst attacks since the 1953 armistice as another pleck of lore about the Kim family taking on South Korea and the West.

The North's state propaganda surrounding that imagery has been used by the Kim family to sustain two generations of leader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Under the leading theory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Mr. Kim ordered the attack to re-establish both his control and his credentials after a debilitating stroke two years ago, and by

*Intelligence agencies believe Kim Jong-il aimed to bolster his dynasty.*

extension reinforcing his right to name his son Kim Jong-un as his successor.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attack, despite the presentation of forcensic evidence on Thursday — including parts of the torpedo found in the wreckage — that experts from three countries said established that the torpedo was launched from a North Korean submarine.

Although the American officials who spoke about the intelligence assessment would not reveal much about what led them to conclude that Mr. Kim was directly involved, one factor appeared to be intelligence that he appeared on April 25,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People's Army, with a military unit that intelligence agencies believe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attack.

Mr. Kim used the event to praise the group, Unit 586, the officials said, and around that time a fourth star appears to have been given to Gen. Kim Myong-guk, who officials believe ma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xecuting the attack. General Kim is believed to have been demoted to a three-star general last year, perhaps in response to the humiliation that took place after a North Korean ship ventured into South Korean waters. The North Korean ship was all but destroyed, and some analysts believe the attack on the Cheonan, which was in South Korean waters, was planned as retribution.

"Nobody is going to take overt credit for the sinking," said Jonathan Pollack, a professor at the Naval War College and an expert on North Korea's military. "But Kim's visit to this unit has all the hallmarks of congratulating them for a job well done."

The senior American officials,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 intelligence assessment is classified, said they ruled out the idea that General Kim or another military officer decided on his own to attack, but they did not explain how they reached that conclusion.

Victor Cha, a North Korea expert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and a former official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uring President George W. Bush's second term in office, noted that when Mr. Kim was on the rise three decades ago, "there were similar incidents designed to build his credibility" as a leader.

The Cheonan episode has posed some difficult choice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at a time when its national security team is preoccupied with Afghanistan, Pakistan and Iran.

In an intense series of back-channel discussions with Mr. Le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Obama, have praised South Korea for its calm response. Like the South Koreans, American officials fear that any military retaliation against the North could quickly escalate, leading to rocket attacks on Seoul, major casualties and a panic among investors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y worry that if North Korea gets through the episode without paying a price — one that American officials decline to define — it could embolden the North Korean military.

The North Korean defense commission, which rarely issues public statements, turned out a fiery-sounding warning last week, saying it would respond to any military retaliation with "all-out war."

## 2. 일본

- 讀賣新聞 (2010. 5. 21)
  - 역시 북한의 어뢰공격이었다(사설)
  - 황해총격전의 보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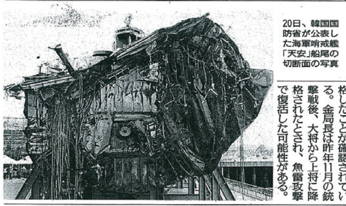
3 総合 14版 2010年(平成22年)5月21日(金曜日) 讀賣新聞

# 黄海銃撃戦の報復か

スキャナー SCANNER

北朝鮮の韓国に対する過去の主なテロ

| | 青瓦台襲撃事件 1968年1月21日 | ラングーン事件 83年10月9日 | 大韓航空機爆破事件 87年11月29日 |
|---|---|---|---|



20日、韓国国防省が公表した海軍哨戒艦「天安」船尾の切断面の写真

## 社説 やはり「北」の魚雷攻撃だった

韓国哨戒艦沈没

## 景気回復の持続力が心配だ

GDP改善

- 朝日新聞 (2010. 5. 21)
  - 한국함 격침, 북조선에 단호한 외교를
  - 일본 · 미국, 한국을 전면 지원

<2010・5・21>

# 日米、韓国を全面支援

## 韓国艦撃沈 北朝鮮に断固たる外交を

부록

3. 중국

● 人民日報(2010. 5. 21, 해외판)
–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천안'호 사건 관련 각국이 냉정히 처리하길 희망

外交部举行例行记者会

## 希望各方冷静处理"天安"号事件

**新华社北京5月20日电**（记者孙奕、王宇丹）外交部发言人马朝旭20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中方注意到韩方公布了有关"天安"号沉没事件的调查结果，中方主张各方应冷静克制，妥善处理有关问题，避免局势紧张升级。

马朝旭说，"天安"号沉没是一起不幸事件。事件发生后，中方已在多个场合对事件造成韩方人员伤亡向韩方表示哀悼和慰问。这充分体现了中方对韩国政府和人民悲痛心情的理解和同情。

他强调，中方一贯根据事情的是非曲直，公正、客观地对待和处理国际和地区事务，一贯主张并致力于维护本地区和平与稳定，推进六方会谈和半岛无核化进程，反对与此相悖的行为。

● 人民日報(2010. 5. 26, 해외판)
–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천안'호 사건 관련 각국이 상황악화를 피하길 희망

外交部举行例行记者会

## 希望"天安"号有关各方避免局势升级

**据新华社北京5月25日电**（记者徐博、郝亚琳）中国外交部发言人姜瑜25日在回答有关"天安"号事件提问时表示，中方真诚希望有关各方务必冷静克制，妥善处理有关问题，避免局势紧张轮番升级，这符合半岛南北双方的根本利益和有关各方利益。

在当日下午举行的例行记者会上，姜瑜说，中方注意到韩方发表的报告以及有关谈话，也注意到有关各方的反应。中方主张根据事情的是非曲直，公正客观地对待和处理国际和地区事务。在当前形势下，任何人采取任何措施都要有利于维护半岛的和平稳定，而不是相反。

她表示，作为半岛近邻，中方密切注视事态的发展。中方一贯致力于维护东北亚地区和朝鲜半岛的和平稳定，推进六方会谈和半岛无核化进程。"我们始终认为，对话比对抗好，缓和比紧张好。"

## 4. 러시아

● **Nezavisimaya Gazeta**(2010. 5. 21)

–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한반도 사태 "천안함 침몰과 더불어 외교도 침몰되어서는 안된다."

НЕЗАВИСИМАЯ

21.05.2010 | ПОЛИТИКА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Подталкивая к пропасти**

**Нельзя дать вместе с корветом утонуть и дипломатии**



«Чхонан» подняли для осмотра.
Фото Reuters

**Об авторе:**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Жебин -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андидат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Новость» почти двухмесячной свежести заполонила страницы веб-сайтов и печатных СМИ. Ее вынуждены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президенты и проч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КНДР виновна в гиб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рвета «Чхонан», разломившегося пополам 26 марта во время плавания в Желтом море. Таков вывод комиссии экспер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Австралии, Шве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зданной южнокорейцами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этого инцидента. На самом деле

Важно не дать вместе с корветом утонуть и дипломатии. Корейцам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чтобы горем 46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речь на трагедию миллионы таких же семей как на Севере, так и на Юге Кореи, к которой их подталкивают силы, пытающиеся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ускорить неизбежный, по их расчетам, но столько раз уже откладывающийся крах КНДР.

* 러시아 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Alexander Zhebin 박사는 한국이 발표한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논평

● **IZVESTIA**(2010. 5. 25)

– 북한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려는 한국을 위협

# Пхеньян пригрозил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ям

**Обстановк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нова обострилась.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Мен Бак объявил, что Сеул прекращает торговлю и мо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НДР. Ране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миссия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погибший корвет «Чхонан» был торпедирова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длодкой. В ответ Пхеньян пригрозил уничтожить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которые соседи используют для пропаганды среди военных Севера.**

**Екатерина Забродина**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любая межкорейская торговля и другие фор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имеют смысла», — заявил Ли Мен Бак в специальном обращ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две Кореи фактически обменялись новыми угрозам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хенья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как военную фазу и будет решите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се пробле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дал поня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е стремится к конфронтации, но непременно «воспользуется правом на самооборону».

Реши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настроен и Вашингтон. Наканун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Барак Обама объявил о пересмотре всей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также дал распоряжение Пентагону усилить координацию с Сеулом —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новой агрессии». Как уже писали «Известия», эксперты из США, Британии, Австралии и Швеци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на деталях торпеды, которую удалось поднять со дна Желтого моря, имеется севкорейская маркировка. По их мнению, 26 марта «Чхонан» был атакован именно подводной лодкой КНДР.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гибли 46 моряков.

Между тем в Пхеньяне выводы комиссии называют провокацией. Там намерены и дальше бороться с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атаками». Вчер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грозила нанести точечный удар по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ям,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лены в центр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разделяющей полуостров. «Мы требуем немедленно убрать средств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Север,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лены на строении 330-го охранного поста, и наказать виновных. Если требование н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и буд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овые средств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мы нанесем точечный удар для их ликвидации», — гласит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командующего частям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на центральном участке фронта.

Еще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военные двух стран отказались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целях. Но после гибели «Чхонана» южнокорейцы взялись за старое. И вот теперь им грозит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ля региона.

*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보도

## 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관진**(국방부장관)
- **간 사** : **윤영범**(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병기**(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 **위 원** : **이종헌**(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정수**(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정영진**(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박시종**(전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김은석**(전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류제승**(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철**(국방부 군비통제차장)
  **김용우**(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윤종성**(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경식**(전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
  **김홍균**(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
  **홍석인**(외교통상부 평화체제과장)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김홍희**(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심덕섭**(전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 집필위원회

- **위원장** : **최북진**(군사편찬연구소장)
- **간 사** : **장삼열**(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박광순**(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장)
- **위 원** : **백기인** 책임연구원(박사)
  **조성훈** 선임연구원(박사)
  **최용호** 책임연구원(박사)
  **남정옥** 책임연구원(박사)
  **이미숙** 선임연구원(박사)
  **김종숙** 책임연구원
  **신승원** 선임연구원
  **김창규** 육군 중령

## 자문위원회

- **위 원** : **남영준**(중앙대학교 교수)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정훈**(동아일보 논설위원)
  **차기환**(우정합동 대표변호사)
  **차두현**(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

##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 **인쇄일** : 2011년 3월 17일
- **발행일** : 2011년 3월 26일
- **발행처** : 대한민국 정부
- **편집·인쇄** : 인쇄의 창
  T. 02.793.4332